



정책자료 2021-01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지자체 연구기관 협동연구

인구정책연구실



BIG
DATA



■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진화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민연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정서린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김은숙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류영혜	광주전남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재정	부산복지개발원 책임연구위원
	서두산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원
	최승호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황명구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정책자료 2021-01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지자체 연구기관 협동연구

발 행 일 2021년 12월
 발 행 인 이 태 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ISBN 978-89-6827-791-7 93330
<https://doi.or.kr/10.23060/kihasa.f.2021.01>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추진 방법	6
 제2장 지역 인구 동태의 특성과 의미	 9
제1절 지역 인구 동태의 주요 특성	11
제2절 지역 인구 동태 관측의 의미	28
 제3장 지역별 인구 동태 특성	 33
제1절 강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35
제2절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41
제3절 광주전남: 광주전남연구원	75
제4절 부산: 부산복지개발원	105
제5절 충북: 충북연구원	113
 제4장 지역별 정책환경 SWOT 분석	 125
제1절 강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127
제2절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40
제3절 광주전남: 광주전남연구원	157
제4절 부산: 부산복지개발원	162
제5절 충북: 충북연구원	170



제5장 지역별 향후 연구 및 정책과제 제안	195
제1절 강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197
제2절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
제3절 광주전남: 광주전남연구원	208
제4절 부산: 부산복지개발원	214
제5절 충북: 충북연구원	236
제6장 종합 및 결론	249
제1절 종합: 지역 인구 변화 주요 특성과 중앙정부 정책 대응 고찰, 향후 정책 방향	251
제2절 차후 연구사항	268
참고문헌	271
부록	281
[부록 1] 세미나별 회의록	281
[부록 2] 종합세미나 발표자료	314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정례 세미나 진행 현황	7
〈표 2-1〉 선정 지역의 인구 규모, 인구 고령화 특성	17
〈표 2-2〉 선정 지역 인구 규모의 자연적/사회적 변화(2000~2019년)	23
〈표 3-1〉 전국 및 강원도 출생지표 현황(2015~2020)	37
〈표 3-2〉 강원도 18개 시·군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현황(2020)	37
〈표 3-3〉 강원도 20대 역외 전입·전출자 현황(2010~2020)	38
〈표 3-4〉 강원도 귀농·어·귀촌 인구 현황(2013~2020)	40
〈표 3-5〉 전국 대비 경상북도의 1세대당 인구수 추이	46
〈표 3-6〉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1세대당 인구수 추이(2015~2020)	48
〈표 3-7〉 전국 17개 시·도별 인구구성 추이(2015, 2020)	50
〈표 3-8〉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인구구성 추이(2015~2020)	52
〈표 3-9〉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인구구성 추이(2020)	54
〈표 3-10〉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인구소멸위험지수 추이(2015, 2020)	56
〈표 3-11〉 전국 17개 시·도별 조혼인율 추이(2015~2020)	58
〈표 3-12〉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조혼인율 추이(2015~2020)	59
〈표 3-13〉 전국 17개 시·도별 조출생률 추이(2015~2020)	60
〈표 3-14〉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조출생률 추이(2014~2019)	61
〈표 3-15〉 전국 17개 시·도별 합계출산율 추이(2015~2020)	62
〈표 3-16〉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합계출산율 추이(2014~2019)	63
〈표 3-17〉 전국 17개 시·도별 조사망률 추이(2015~2020)	64
〈표 3-18〉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조사망률 추이(2014~2019)	65
〈표 3-19〉 전국 17개 시·도별 자연증가율 추이(2015~2020)	66
〈표 3-20〉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자연증가율 추이(2014~2019)	67
〈표 3-21〉 전국 17개 시·도별 순이동 추이(2015~2020)	68
〈표 3-22〉 경상북도와 타 시·도 간 순이동 추이(2015~2020)	69
〈표 3-23〉 경상북도 성 및 연도별 순이동 추이(2015~2020)	72
〈표 3-24〉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순이동 추이(2015~2020)	74

〈표 3-25〉 최근 10년간 광주광역시 인구 추이	76
〈표 3-26〉 전라남도 인구 현황(2000~2020)	80
〈표 3-27〉 전라남도 인구의 사회증감 현황(2000~2019)	81
〈표 3-28〉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총인구 추계 결과(2017~2037)	82
〈표 3-29〉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유소년인구 추계 결과(2017~2037)	84
〈표 3-30〉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고령인구 추계 결과(2017~2037)	86
〈표 3-31〉 전라남도 22개 시·군별 인구추계 결과(2017~2037)	87
〈표 3-32〉 전라남도 22개 시·군별 유소년인구 추계 결과(2017~2037)	90
〈표 3-33〉 전라남도 22개 시·군별 생산가능인구 추계 결과(2017~2037)	92
〈표 3-34〉 전라남도 22개 시·군별 고령인구 추계 결과(2017~2037)	94
〈표 3-35〉 전국·부산·수도권·동남권 인구 추이(2010~2019)	106
〈표 3-36〉 전국, 부산 장래인구추계(2017~2047)	106
〈표 3-37〉 충청북도 등록인구 수·세대수·인구밀도·전년도 대비 인구 증가율	114
〈표 3-38〉 전국 및 충청북도 2040년 인구 전망	115
〈표 3-39〉 충청북도 11개 시·군별 인구 현황	117
〈표 3-40〉 충청북도 11개 시·군별 고령인구 비율	118
〈표 3-41〉 충청북도의 연령별 인구 분포(2020)	118
〈표 3-42〉 충청북도의 인구이동 변화(1998~2020)	120
〈표 4-1〉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기조 변화	133
〈표 4-2〉 강원도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부서 담당 사무	134
〈표 4-3〉 강원도 저출산 대응 정책 SWOT 분석	139
〈표 4-4〉 경북 지역의 SWOT 분석	155
〈표 4-5〉 전남 지역의 SWOT 분석	159
〈표 4-6〉 전국 및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인구 추이(1995~2020)	163
〈표 4-7〉 부산광역시 세대별 인구 변화	164
〈표 4-8〉 부산광역시 대상별 지출예산(2021)	166
〈표 4-9〉 부산광역시 분야별 예산 현황(2021)	167



〈표 4-10〉 부산광역시 65세 이상 인구의 연령구간별 증가율	168
〈표 4-11〉 부산광역시 50대 이상 연령별 비율(2021.7)	168
〈표 4-12〉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2007 → 2018)	170
〈표 4-13〉 충청북도의 청년인구 변화와 분포(2011, 2020)	172
〈표 4-14〉 충청북도 시·군별 노령화 지수와 장수도 비교	174
〈표 4-15〉 충청북도 1인 가구 변화(2015~2020)	175
〈표 4-16〉 충북 지역의 SWOT 분석	178
〈표 4-17〉 전국 및 충청북도의 경제활동인구 추이	181
〈표 4-18〉 충청북도 시·군별 경제활동인구(2018)	181
〈표 4-19〉 전국 17개 시·도별 1인당 생산/소득/민간소비 규모(2018)	183
〈표 4-20〉 충청북도 시·군별 지역 내 총생산(GRDP) 현황	184
〈표 4-21〉 충청북도 사업체별 현황(2019)	185
〈표 4-22〉 충청북도 문화공간 현황(2019)	186
〈표 4-23〉 충청북도 시·군별 의료기관 현황(2019)	189
〈표 4-24〉 전국 17개 시·도별 의료인력 비교(2019)	191
〈표 4-25〉 충청북도의 독거노인 현황(2019)	193
〈표 5-1〉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중심의 정책과제 개요	208
〈표 5-2〉 부산광역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별 주요 사업(Ⅰ)	220
〈표 5-3〉 부산광역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별 주요 사업(Ⅱ)	221
〈표 5-4〉 부산광역시 노인빈곤율(2018)	229
〈표 5-5〉 부산광역시 노인인구 현황(2015~2021.8)	231
〈표 5-6〉 부산광역시의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234
〈표 5-7〉 부산광역시 인구구조 유형별 특화사업	234
〈표 5-8〉 충북 영동군 사례	238
〈표 5-9〉 코로나 우울(블루) 극복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농장 현황(안)	241
〈표 5-10〉 충청북도 영역별 추진과제	248
〈표 6-1〉 기간별(2000~2001년, 2019~2020년) 권역별 인구 증감 현황	252



〈표 6-2〉 2000~2020년 전체 지역과 연평균 인구 증감률 0 미만인 지역의 인구 변화 특성	255
〈표 6-3〉 2000~2020년 기간별(1기간: 2000~2009년, 2기간: 2010~2020년) 전체 지역과 연평균 인구 증감률 0 미만인 지역, 연평균 인구 증감률 20% 이상인 지역의 인구 변화 특성	256
〈표 6-4〉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의 65, 75, 85세 이상 인구 비율(2000, 2020년)	259
〈표 6-5〉 2021년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내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정책 ...	263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2-1] 전국 및 17개 시·도별 인구 규모 변화 추세(2000~2020년)	13
[그림 2-2] 전국 및 17개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변화 추세(2000~2020년)	15
[그림 2-3] 전국 및 17개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변화(2000, 2020년)	16
[그림 2-4] 전국 및 상기 5개 선정 지역의 범주별 비율 변화 추세(2000~2020년)	20
[그림 2-5] 상기 5개 선정 지역의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추세(2000~2019년)	24
[그림 2-6] 상기 5개 선정 지역의 5세 단위 순이동 추세(2000~2020년)	26
[그림 2-7] 서울의 5세 단위 순이동 추세(2000~2020년)	28
[그림 2-8] 지역 인구 변화 대응 정책 추진 사례	29
[그림 3-1] 전국 17개 시·도별 지역소멸위험 추이	36
[그림 3-2] 전국 대비 경상북도 인구수 추이(2015~2020)	41
[그림 3-3] 전국 17개 시·도별 연평균 인구 증감률(2015~2020)	42
[그림 3-4]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연평균 인구 증감률(2015~2020)	43
[그림 3-5] 전국 대비 경상북도 세대수 추이(2015~2020)	44
[그림 3-6] 전국 17개 시·도별 연평균 세대 증감률(2015~2020)	44
[그림 3-7]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연평균 세대 증감률(2015~2020)	45
[그림 3-8] 경상북도 인구 및 세대수 연도별 추이(2015~2020)	47
[그림 3-9]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인구 및 세대수, 1세대당 인구수 연평균 증감률 (2015~2020)	49
[그림 3-10] 전국 17개 시·도별 인구구성 연평균 증감률(2015~2020)	51
[그림 3-11]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인구소멸위험지수 추이(2015, 2020)	57
[그림 3-12] 경상북도 전출입 및 순이동자 수 추이(2015~2020)	70
[그림 3-13] 경상북도 성별 순이동자 수 추이(2015~2020)	71
[그림 3-14] 경상북도 연령별 순이동자 수 추이(2015~2020)	72
[그림 3-15] 경상북도 성 및 연령별 순이동자 수 현황(2020)	73
[그림 3-16] 전라남도 인구 현황(2000~2020)	79
[그림 3-17]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인구성장률(전년 대비)	83
[그림 3-18]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자연증가율	83



[그림 3-19]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계 결과(2017~2037)	85
[그림 3-20] 전라남도 22개 시·군별 인구추계 결과(2017~2037)	87
[그림 3-21] 전라남도 연도별/지자체별 인구성장률	89
[그림 3-22] 전라남도 연도별/지자체별 유소년인구 비중	90
[그림 3-23] 전라남도 연도별/지자체별 생산가능인구 비중	92
[그림 3-24] 전라남도 연도별/지자체별 고령인구 비중	94
[그림 3-25] 광주광역시 연령 및 성별 인구피라미드(2010 대비 2019)	97
[그림 3-26]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별 인구 현황 및 인구이동(2019)	99
[그림 3-27]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합계출산율 및 노년인구 수	100
[그림 3-28] 전라남도 연도별 고령인구 비중(2015~2035)	102
[그림 3-29] 국내 20~30대 인구이동 현황(2019)	104
[그림 3-30] 수도권-부산 인구 추이(1995~2019)	105
[그림 3-31] 부산광역시 연령별 장래인구 추계 및 연도별 인구피라미드	108
[그림 3-32] 부산광역시 지역별 인구증감 현황(2010년 대비 2019년 증감 현황)	109
[그림 3-33] 부산광역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112
[그림 3-34] 충청북도 연도별 등록인구 수(2010~2020)	114
[그림 3-35] 전국 및 충청북도 인구구조 전망(2017, 2040)	116
[그림 4-1] 강원도 인구정책 5대 분야 및 주요 사업	130
[그림 4-2] 육아기본수당의 출산계획 영향(2020년 상반기)	131
[그림 4-3] 육아기본수당 정책목표 만족도(2020년 상반기)	132
[그림 4-4] 강원도 조직도 내 저출산 대응 정책 담당·관련 부서	136
[그림 4-5] 지역 내 인구 변화(2009, 2019)	165
[그림 4-6] 부산광역시 자치구 연령별 분포(2009, 2019)	166
[그림 4-7] 충청북도 행정구역 및 면적	180
[그림 4-8] 전국 대비 충청북도의 경제 규모 변화 추이(2010~2018)	182
[그림 4-9]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간호사 수(2017)	190
[그림 5-1] ‘인구특별대책추진단(안)’ 구상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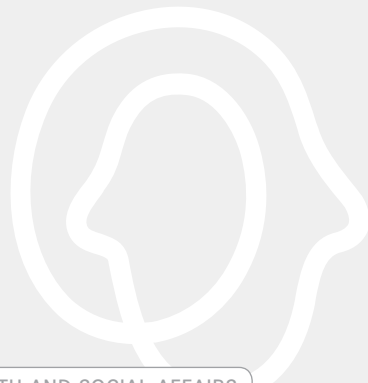


[그림 5-2] 인구의 사회적 증가 촉진을 위한 연구과제 지역 분류	203
[그림 5-3] 인구소멸 위기 로드맵 작성 단계(안)	204
[그림 5-4] 전라남도의 인구 유입 정책	212
[그림 5-5] 전라남도의 인구정책 플랫폼	213
[그림 5-6]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방향	216
[그림 5-7]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정책체계도	219
[그림 5-8] 부산광역시 청년 지역 활동 기반조성 흐름도	223
[그림 5-9] 부산광역시 인구 고령화 추이(2020~2045)	230
[그림 5-10]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영향	231
[그림 5-11] 부산광역시 구·군별 노인인구 비율 및 시설 현황	232
[그림 5-12] 부산광역시 구·군별 고령화율 편차	233
[그림 5-13] 정책대상별 필요한 서비스 맞춤형 연결	234
[그림 6-1] 기간별(2000~2001년, 2019~2020년), 권역별 인구 증감의 공간적 분포 ...	253
[그림 6-2] 2000~2020년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 규모 20% 이상 감소지역의 분포 ...	253
[그림 6-3] 2000~2020년 지역별 연령대별(5세 단위) 순이동 특성	258
[그림 6-4] 2000~2020년 지역별 65, 75, 8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추세	260
[그림 6-5]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2018.12)	261
[그림 6-6]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지역 인구 대응 정책	262
[그림 6-7] 관계부처 합동 제2기 인구정책 TF(2020년) 지역 인구 대응 정책	264
[그림 6-8] 관계부처 합동 제3기 인구정책 TF(2020년) 지역 인구 대응 정책	265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추진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가지표의 심각성 부각

-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인구 변동이 매우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특성이 상이하게 도출되고 있음
- 2019년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는 2016년 추계보다 인구 변동의 속도가 더 급격한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의 인구 변동은 변화의 속도가 가속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인구의 자연감소 시점도 2016년 추계보다 당겨 추계되었음
- 2019년 통계청 특별추계 결과, 2019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할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이후 이런 예측은 실제 지표에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음

□ 지역 소멸 담론의 확산

- 2014년 일본인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 도서가 번역 출간, 이에 영향을 받은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발행, 이후 지방소멸 담론의 확산 본격화

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지자체 연구기관 협동연구

- 지역의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라는 변화 추세는 매우 오래된 현상이었고, 지방소멸 담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이 시기 지역 인구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었던 것은 필연적 맥락
- 정부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범정부적 대응 종합계획으로, 경제, 노동, 복지, 교육, 국방, 지역 등 각 정부 부처의 핵심 정책을 포괄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그 영역의 방대함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인구 변동의 영역이 방대하고, 파급효과 및 정책적 대응 또한 방대한 영역에 걸쳐있음을 함의함
- 2019년 지자체 연구기관 순회 토론회 개최
 - 2020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2019년에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17개 지자체 순회 토론회를 개최함
 - 당시 각 지자체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토론회 추진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까지 지역 인구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이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인구문제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될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됨
 - 2019년 당시 이미 지역의 인구문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정책의제가 되었음

○ 실제로 17개 지자체 순회 토론회의 종합 내용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중요하게 반영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변동 현상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입이 필요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중앙정부 중심의 접근으로 지역별 인구구성 및 변동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로 인한 행정체계, 산업구조, 생활 인프라와 같은 자원의 배치와 분배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접근을 요구함

□ 국내의 각 지자체는 별도의 정책연구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정책을 연구하고 있음. 이에 지역 친화적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한 국책연구기관 및 지자체 연구기관과 협동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

○ 본 협동 연구는 다양한 국책연구기관 및 지자체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의 제 발걸을 목적으로 함

- 지역 인구 현안에 대하여 지역의 연구기관과의 협력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포괄적 인구정책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새로운 의제를 개발함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고령사

회 정책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하여, 지역 인구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기초자료를 구축함

제2절 연구의 추진 방법

□ 협력 연구기관의 선정

-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서 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총 5개 연구기관과 우선 협력 연구를 추진함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광주전남연구원, 부산복지개발원, 충북연구원
 - 지역 선정을 위하여 인구 규모, 출산 수준, 고령화 수준, 인구의 이동 등을 고려하여 지역을 선정하였음

□ 연구추진 방법

- 연구 목적을 적절히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 간 활발한 소통이 필요
- 정례 세미나를 3차례 진행하고, 최종 종합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 주제 설정, 진행과정 점검, 상호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연구를 추진하였음
 - 1차 세미나는 연구계획 공유, 향후 연구 추진방향 논의, 연구 추진일정 공유 등을 다룸
 - 2차 세미나는 연구 진행 과정 논의, 지역의 인구 특성 분석, 인구 특성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시사점, 지역별 현황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
 - 3차 세미나는 지역별 SWOT 분석, 지역별 분석 결과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

- 종합세미나는 지역별 정책 추진내용, 향후 정책 추진과제, 지역별 분석 결과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

〈표 1-1〉 정례 세미나 진행 현황

	일시 및 장소	참석	주요 논의내용
1차 세미나	○ 5월 11일(화) 14: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조사센터 회의실	○ 원내 · 이윤경, 장인수, 진화영 ○ 원외 · 민연경(강원) · 정서린(경북) · 민현정(광주전남) · 이재정(부산) · 최승호(충북)	○ 연구계획 공유 ○ 향후 연구 추진방향 논의 ○ 연구 추진일정 공유
2차 세미나	○ 6월 30일(수) 14: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조사센터 회의실	○ 원내 · 박종서, 장인수, 진화영 ○ 원외 · 민연경(강원) · 정서린(경북) · 민현정(광주전남) · 이재정(부산) · 최승호(충북)	○ 연구 진행 과정 논의 ○ 지역의 인구 특성 분석 ○ 인구 특성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시사점 ○ 지역별 현황 발표와 토론
3차 세미나	○ 10월 12일(화) 11:00 ○ Zoom 화상회의	○ 원내 · 박종서, 장인수, 진화영 ○ 원외 · 민연경(강원) · 정서린(경북) · 민현정(광주전남) · 이재정(부산) · 최승호(충북)	○ 지역별 SWOT 분석 ○ 지역별 분석 결과 발표와 토론
종합세미나	○ 11월 30일(화) 14: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 원내 · 박종서, 장인수, 진화영 ○ 원외 · 민연경(강원) · 정서린(경북) · 민현정(광주전남) · 이재정(부산) · 최승호(충북) · 김종훈(보사연) · 김희성(보사연)	○ 지역별 정책 추진내용 ○ 향후 정책 추진과제 ○ 지역별 분석 결과 발표와 토론

자료: 저자 작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지역 인구 동태의 특성과 의미

제1절 지역 인구 동태의 주요 특성

제2절 지역 인구 동태 관측의 의미

제2장 지역 인구 동태의 특성과 의미

제1절 지역 인구 동태의 주요 특성

1. 서론

- 전 국가적 인구 규모 변화와 비교하였을 때 나타나는 지역 인구 규모 변화의 다양성은 지역 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전 국가적 인구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상기할 때, 현재의 지역 인구 변화를 보다 정교하게 살펴보는 것은 실효성 있는 대응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의의가 있음.
- 특히, 인구 규모 감소, 인구 고령화 심화가 지속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17개 시·도의 인구 동태를 1) 규모 변화와 2) 구조 변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협력 연구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 이는 “**지역 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 위기와 대응**”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지역 협력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 바, 즉, 이러한 인구 위기가 고조된 지역의 대응이 보다 시급하다는 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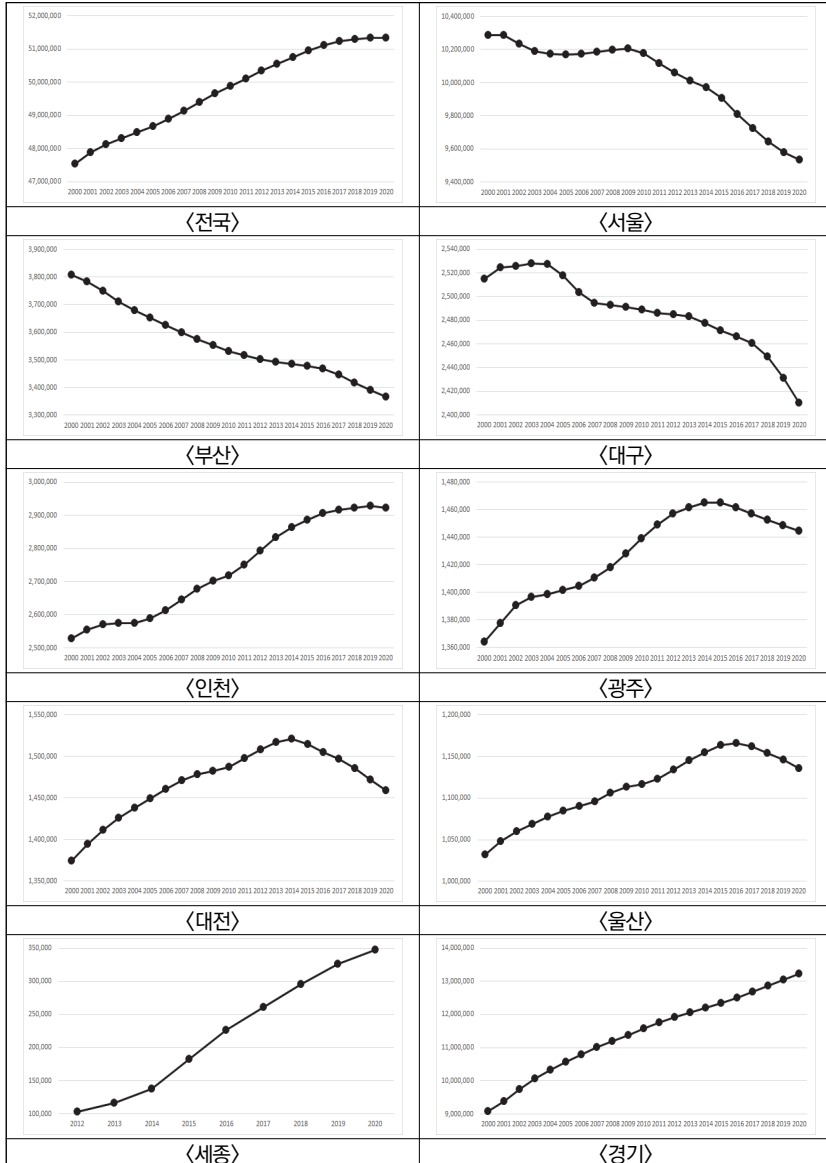
- 추가적으로, 상기 인구 변화 특성을 바탕으로 선정된 지역의 인구 규모 변화를 자연적, 사회적 변화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들 지역이 어떠한 인구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인구 위기의 특성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함.

2. 지역 인구 규모, 인구 고령화의 종단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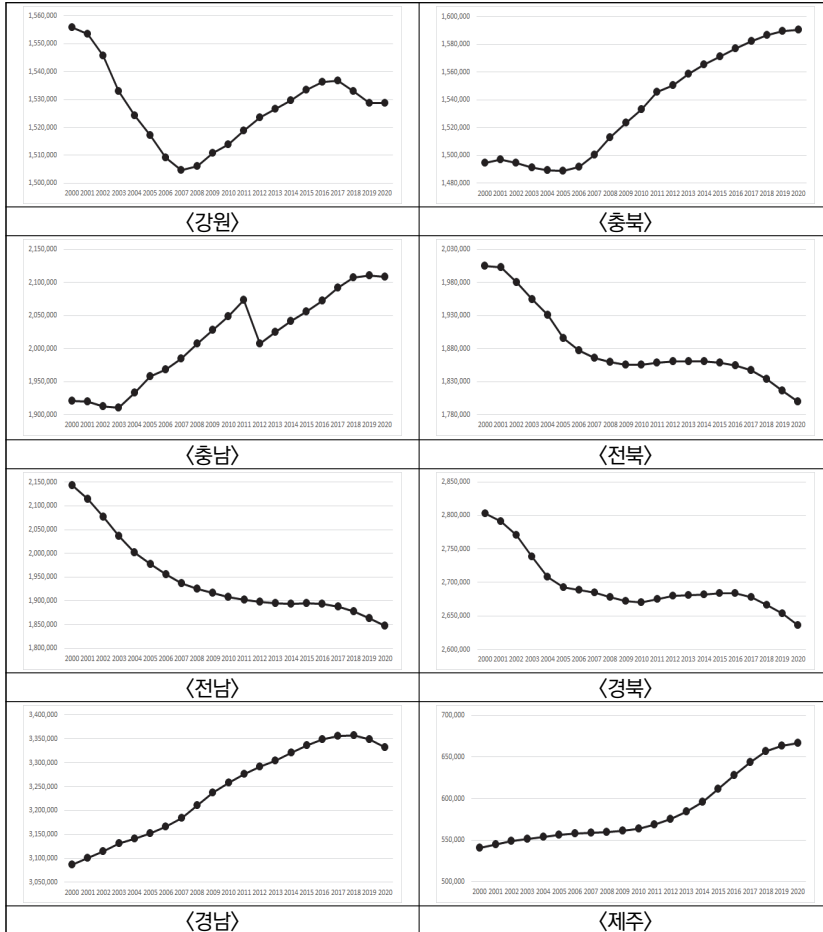
- 2000~2020년까지의 기간(관측기간) 동안, 전 국가적 인구 규모는 약 380여 만 명 증가하였지만, 지역 인구 규모는 동일 기간 내 증가/감소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 경기, 인천, 세종, 제주 지역의 경우 관측기간(세종의 경우 2012~2020년) 내 지속적으로 인구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지역들은 대체적으로 인구 규모 감소가 관측됨.
 - 인구 규모 감소 지역의 경우 관측기간 내 양상은 약간 다른 특성을 띠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부 지역(광주, 대전, 울산, 경남)은 증가 이후 감소 양상이, 또 다른 일부 지역(강원, 충남)은 감소, 증가가 반복되는 양상이, 충북의 경우 감소 후 증가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림 2-1] 전국 및 17개 시·도별 인구 규모 변화 추세(2000~2020년)

(단위: 명)



1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지자체 연구기관 협동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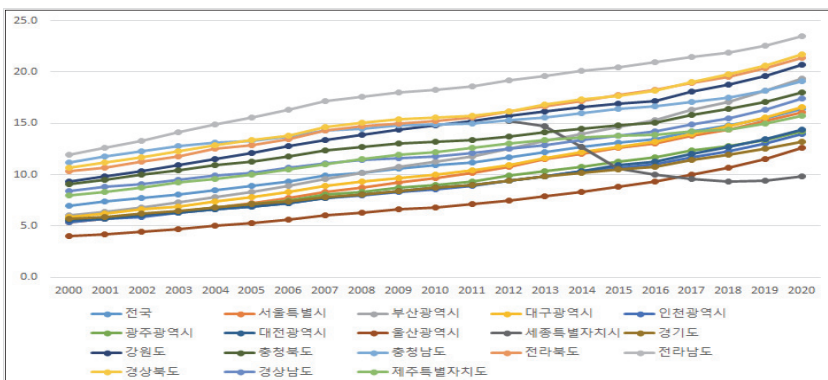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1h). 국가통계포털-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 에서 2021. 4. 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00~2020년까지의 기간(관측기간) 동안, 전국 및 17개 시·도 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세종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2020년 기준 수치 및 증가 속도에 있어서 지역 간 다소 차이가 나타남.

-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3.5%)이며, 경북(21.7%), 전북(21.4%), 강원(20.7%), 부산(19.4%), 충남(19.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2000~2020년 간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으로, 2000년 6.0%p에서 2020년 19.4%p로 약 13.4%p가 증가하였으며, 전남 11.6%p(11.9% → 23.5%), 강원 11.4%p(9.3% → 20.7%), 전북 11.1%p(10.3% → 21.4%), 경북 11.0%p(10.7% → 21.7%) 순으로 큰 증가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변화의 특징은 전반적인 지속 증가의 특성 속에서, 당초 이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역의 경우 그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빠르다는 데 있음. 전남, 전북, 경북, 강원 등 관측기간 초기에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역의 경우 증가 폭도 큰 특성이 이를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그림 2-2] 전국 및 17개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변화 추세(200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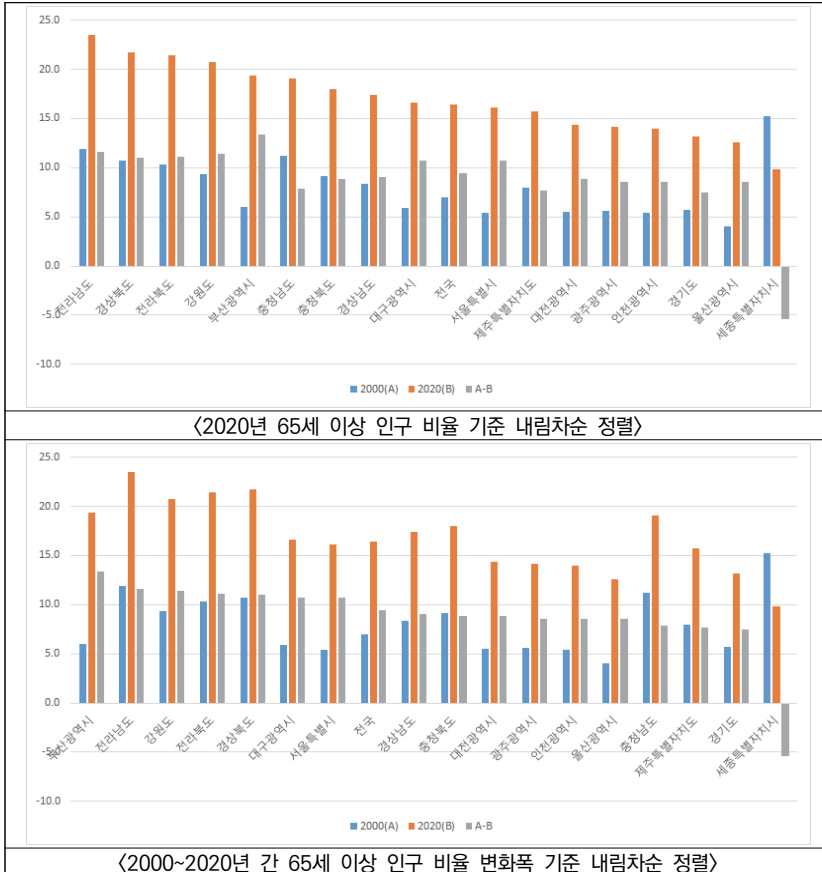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2021d). 국가통계포털-고령인구 비율(시도/시/군/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 에서 2021. 4. 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3] 전국 및 17개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변화(2000, 2020년)

(단위: %, %p)



자료: 통계청. (2021d). 국가통계포털-고령인구 비율(시도/시/군/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 에서 2021. 4. 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인구 규모 변화와 65세 이상 인구 비율로 표현되는 인구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특성을 포함하여, 연구 수행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기 다섯 개 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의 연

구기관을 협동 연구기관으로 선정함. 이들 다섯 개 지역의 관측기간 내 인구 규모 변화, 인구 고령화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선정된 지역은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인구 규모가 지속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었으며, 특히 최근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 관측됨.
- 다만, 충청북도의 경우, 선정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관측기간 동안 인구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띠고 있음. 이 지역은 정책 대응 및 지역 인구 변화에 대한 참고 지역으로서 선정하였음.

〈표 2-1〉 선정 지역의 인구 규모, 인구 고령화 특성

(단위: 명, %, %p)

지역	인구 규모 (2020년 기준)	2010~2020 인구 증감률	2015~2020 인구 증감률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20년 기준)	2010~2020 65세 이상 인구 비율 변화량	2015~2020 65세 이상 인구 비율 변화량
부산	3,391,946	-4.49	-3.529	19.4	8.1	4.8
전남	1,851,549	-2.886	-3.009	23.5	5.2	3
경북	2,639,422	-1.281	-2.346	21.7	6.1	4
강원	1,542,840	1.077	-0.43	20.7	5.9	3.8
충북	1,600,837	4.061	1.066	18	4.8	3.2

주: 1) 인구 증감률은 퍼센트 변화율($\frac{P_{endyear} - P_{startyear}}{P_{startyear}} \times 100$)임.

2) 시·도 정렬 기준은 2010~2020 인구 증감률(%)이며 오름차순으로 정렬함.

자료: 통계청. (2021h). 국가통계포털-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 에서 2021. 4. 25. 인출한 자료; 통계청. (2021d). 국가통계포털-고령인구 비율(시도/시/군/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 에서 2021. 4. 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선정 지역의 인구 동태 특성

가. 연령대별 인구 규모의 종단적 특성

- 이들 지역의 인구 규모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연령대별 인구를 구분하고 각 범주별 종단적 변화 특성을 살펴봄.
- 구체적으로, 구분 범주는 0~14세, 15~64세(생산연령인구), 65세 이상을 포함하여, 생산연령인구 중 핵심생산연령인구인 25~49세를, 고령화 특징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75세 이상, 85세 이상 인구 범주를 추가하여 구성함.
- 아울러, 이들 지역의 상기 연령대 범주별 인구 변화의 특성을 보다 자세하게 관측하기 위하여, 전 국가적 변화의 특징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함.
- 전국을 포함한 이들 다섯 개 지역은 공통적으로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율, 25~49세 핵심생산연령인구 비율, 0~14세 연령인구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75세 이상/8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이러한 변화 양상은 지역별로 약간 다른 특성이 관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전남, 경북, 강원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0~14세 인구 비율을 추월하는 시점이 2011년 이전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5~49세 핵심생산연령인구 비율은 2010년을 기점으로 더욱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소 폭은 경북, 강원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남, 경북, 강원은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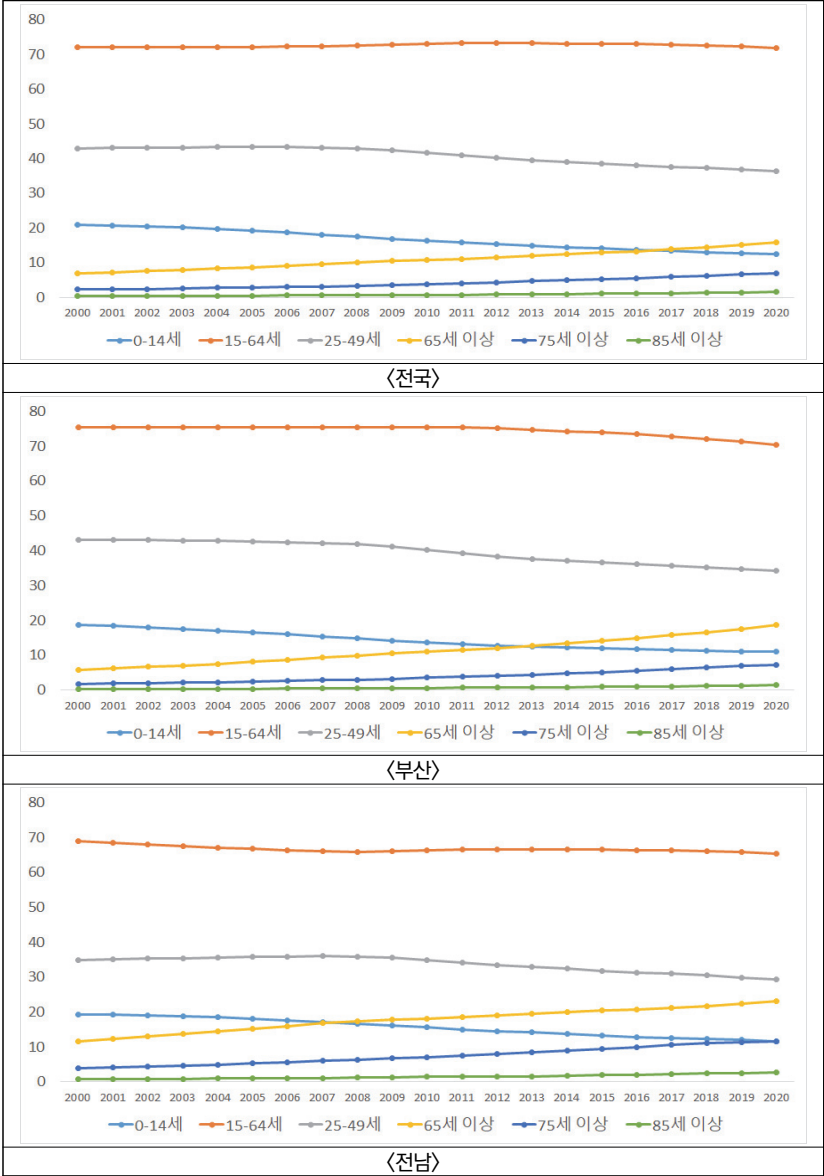
지역에 비하여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심화 특성에 따라 0~14세 인구 비율과 7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최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0~14세 인구 비율의 지속적 감소와 7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지속적 증가에 기인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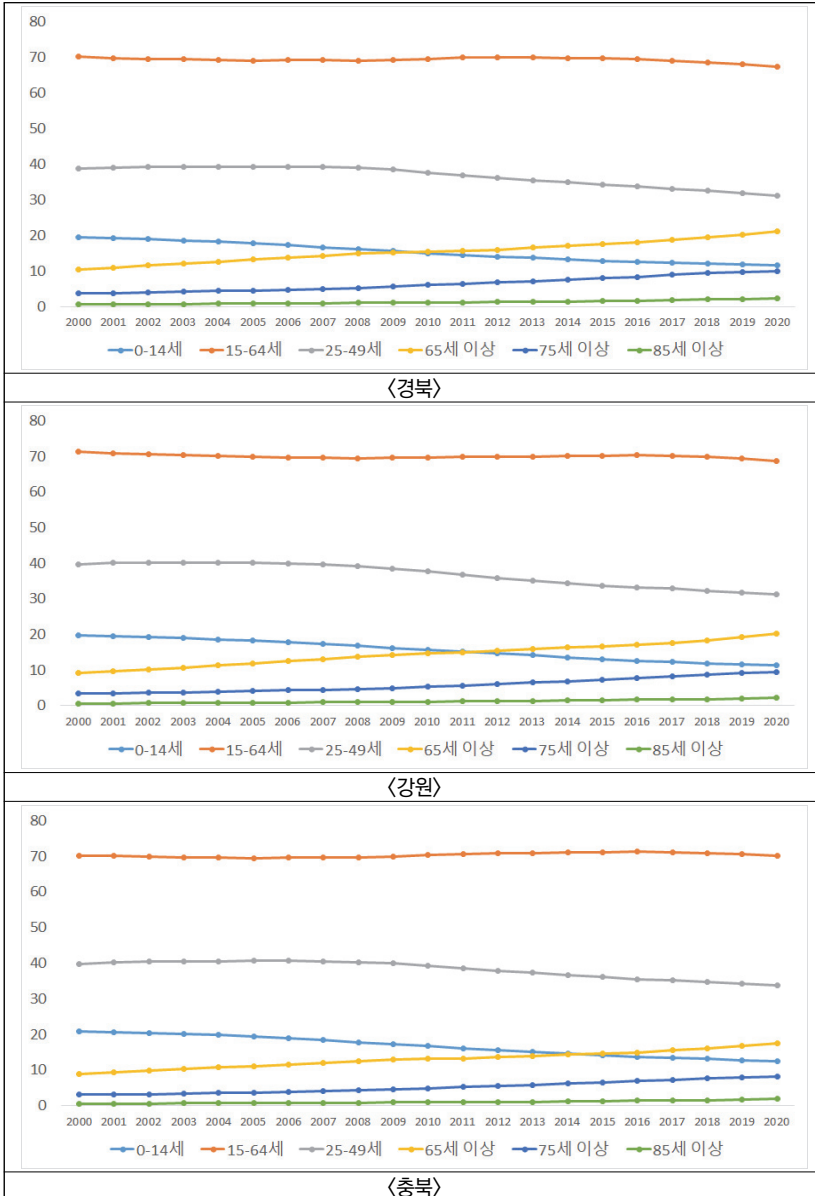
- 아울러, 모든 지역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0~14세 인구 비율을 추월하는 시점이 빠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이들 지역의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라 총부양비 중 노년부양비가 유소년부양비를 추월하는 시점이 상대적으로 빠름을 의미하는 동시에, 향후 총부양비 중 노년부양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전국 평균에 비하여 더욱 커지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음.

2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지자체 연구기관 협동연구

[그림 2-4] 전국 및 상기 5개 선정 지역의 범주별 비율 변화 추세(2000~2020년)

(단위: %)





자료: 통계청. (2021h). 국가통계포털-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 에서 2021. 4. 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선정 지역 인구의 자연적/사회적 변화

- 이들 지역의 2000~2019년 간 인구 규모는 충북(94,559.5명 증가)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동 기간 부산은 416,728.5명, 전남은 279,574.5명, 경북은 148,957.0명, 강원은 27,178.0명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동 기간 이들 지역의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를 활용하여, 자연적/사회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이들 지역의 인구 감소 양상은 사회적 감소가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선정 지역 중 인구가 감소한 네 개의 지역은 전남을 제외(전남의 경우 동 기간 자연적/사회적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으며, 사회적 감소 규모가 자연적 감소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하고 자연적 증가가 나타난 반면, 사회적 감소가 이를 압도하여 결과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부산은 동 기간 146,660명의 자연적 증가가 나타난 반면, 563,388.5명의 사회적 감소가 나타나 결과적으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416,728.5명의 인구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향은 강원(29,797명 자연적 증가, 56,975명 사회적 감소), 경북(49,877명 자연적 증가, 198,834명 사회적 감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반면, 충북의 경우 동 기간 유일하게 인구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인구 규모에 대하여 자연적 증가(75,439명 증가)가 사회적 증가(19,120.5명 증가)보다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 선정 지역 인구 규모의 자연적/사회적 변화(2000~2019년)

(단위: 명)

지역	인구 규모 변화	자연적 변화	사회적 변화
부산	-416,728.5	146,660	-563,388.5
강원	-27,178.0	29,797	-56,975.0
충북	94,559.5	75,439	19,120.5
전남	-279,574.5	-4,545	-275,029.5
경북	-148,957.0	49,877	-198,834.0

자료: 통계청. (2021h). 국가통계포털-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 에서 2021.4.25. 인출한 자료; 통계청. (2020b). 국가통계포털-출생아 수(시도/시/군/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1A01&conn_path=I2 에서 2021.4.25. 인출한 자료; 통계청. (2020a). 국가통계포털-시군구/성/연령(5세)별 사망자 수(1997~), 사망률(1998~)[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18&conn_path=I3 에서 2021.4.2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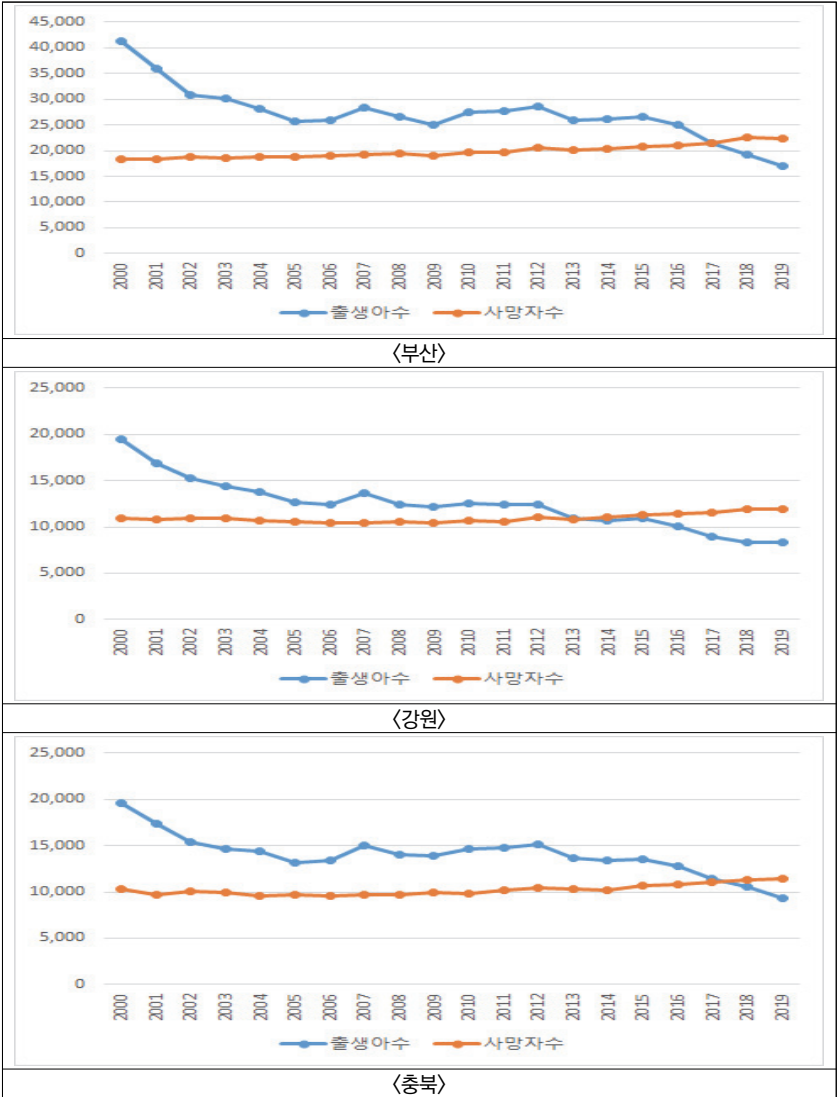
다. 선정 지역 인구의 자연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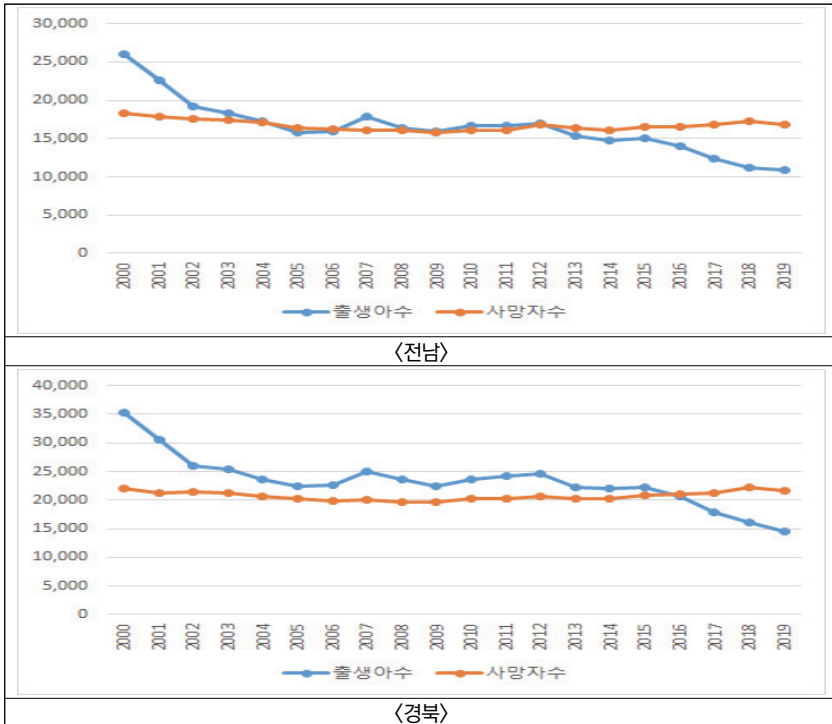
- 앞서 살펴본 이들 선정 지역 인구의 자연적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의 추세를 종단적으로 살펴봄.
- 5개 선정 지역은 모두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관측기간 내 모두 데드크로스(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것)가 나타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 출생아 수의 감소 기울기는 사망자 수의 증가 기울기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출생아 수의 감소는 모든 지역에서 최근 크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이러한 데드크로스의 시점은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남, 경북, 강원, 부산, 충북 순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지자체 연구기관 협동연구

[그림 2-5] 상기 5개 선정 지역의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추세(2000~2019년)

(단위: 명)





자료: 통계청. (2020b). 국가통계포털-출생아 수(시도/시/군/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1A01&conn_path=I2 에서 2021. 4. 25. 인출한 자료; 통계청. (2020a). 국가통계포털-시군구/성/연령(5세)별 사망자 수(1997~), 사망률(1998~)[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18&conn_path=I3 에서 2021. 4. 2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라. 선정 지역 인구의 사회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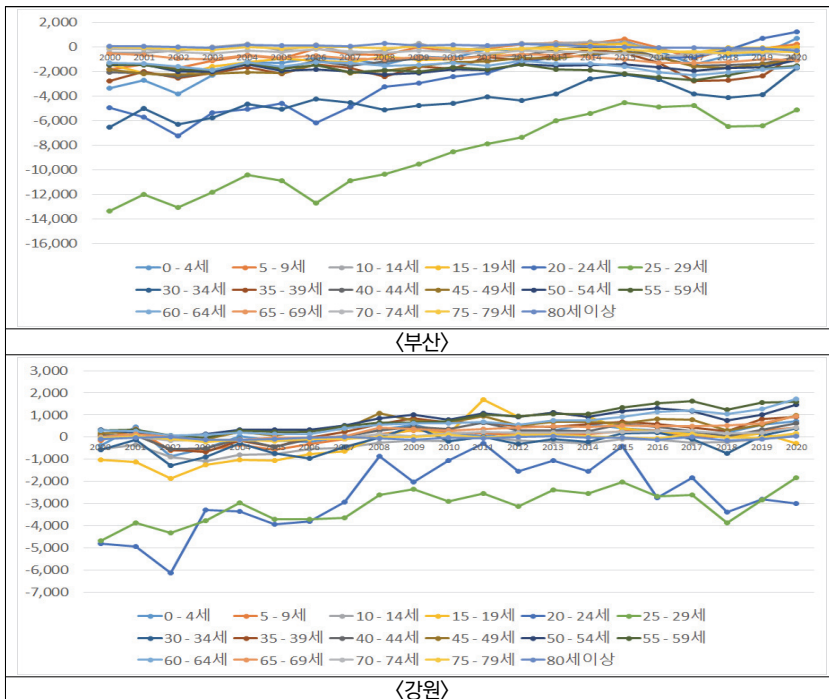
- 앞서 살펴본 이들 선정 지역 인구의 사회적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2000~2020년 5세 단위 연령대별 순이동의 추세를 종단적으로 살펴봄.
- 이들 지역의 5세 단위 연령대별 순이동의 추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20~24세(파란색 실선), 25~29세(녹색 실선)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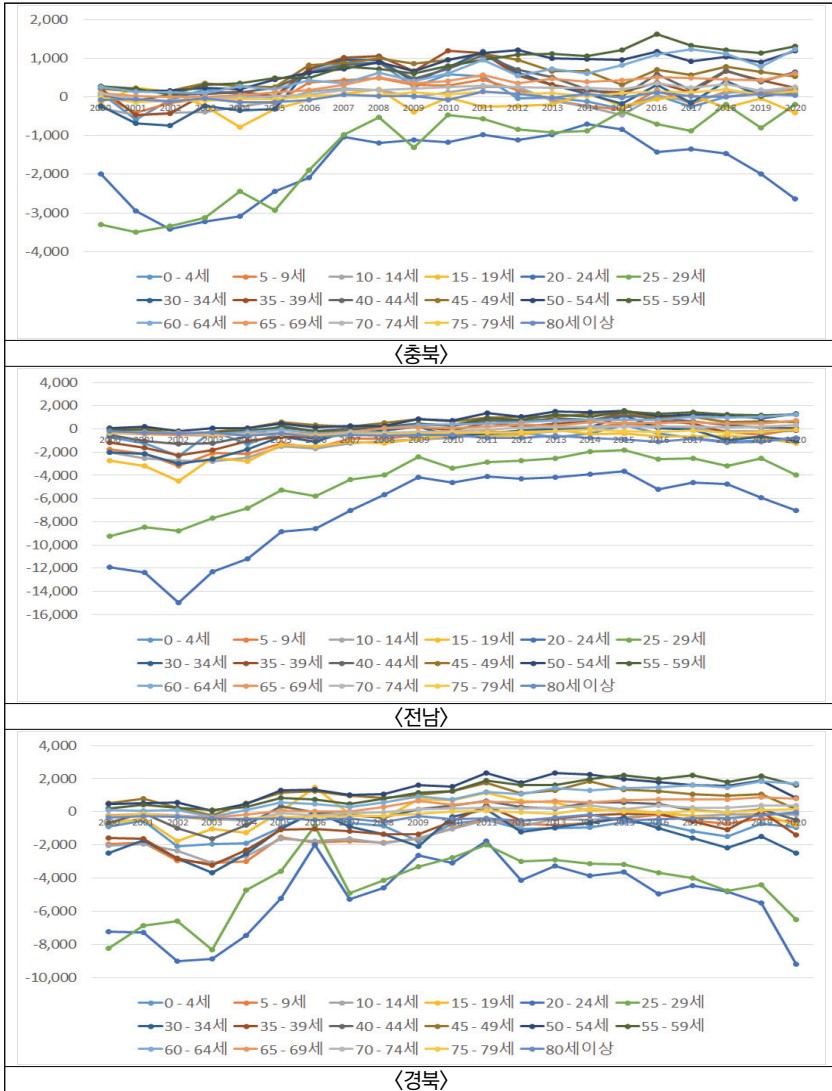
령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순유출 특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이러한 특성은 선정 지역 중 관측기간 내 유일하게 인구 규모 증가 및 사회적 증가가 나타난 충북에서도 관측됨. 특히, 충북은 최근 5년간 다른 연령대의 순유입에도 불구하고, 20~24세 연령대의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부산, 전남, 경북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관측기간 초반에 20~24세, 25~29세 연령대의 순유출이 매우 크게 일어난 데 더하여, 지속적으로 이들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매우 큰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2-6] 상기 5개 선정 지역의 5세 단위 순이동 추세(2000~2020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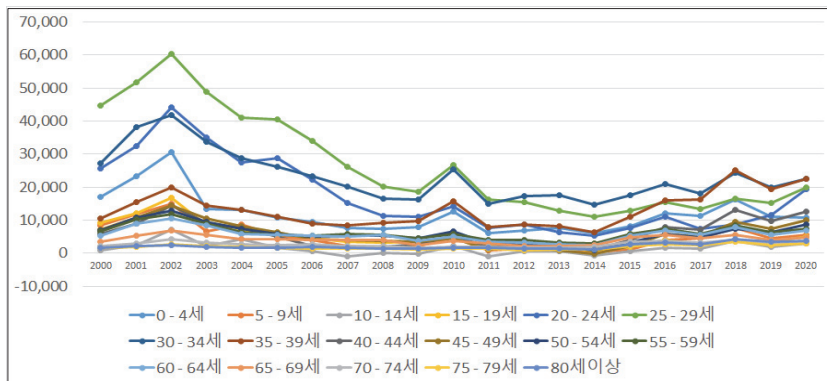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1g). 국가통계포털-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 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 에서 2021. 4. 2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이들 선정 지역의 5세 단위 연령대별 순이동은 동 기간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경기와 비교하여 볼 때, 판이하게 다른 특성이 관측됨. 즉, 경기의 경우, 이들 지역과 다르게 모든 연령층의 순유입이 관측되며, 특히 관측기간 초반부터(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순유입의 특성을 띠고 있음) 20~24세, 25~29세의 순유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7] 서울의 5세 단위 순이동 추세(2000~2020년)

(단위: 명)



자료: 통계청. (2021g). 국가통계포털-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 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 에서 2021. 4. 2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2절 지역 인구 동태 관측의 의미

- 지금까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지역의 다양한 인구 변화를 충분히 아우르지 못하고, 여러 지역사회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다분함.

- 최근의 인구정책 TF,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보완하는 측면에서 지역 공동화, 지역 인구 위기에 대하여 이전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2-8] 지역 인구 변화 대응 정책 추진 사례

3 지역공동화 선제대응 (국도정책반) 1 빈집 실태파악, 지자체 및 소유주의 빈집 정비·활용 유도방안 마련 2 생산·유통방식 고도화를 통한 농어업 경쟁력 제고, 청년 창업지원 확대 3 고령친화적 교통인프라·서비스 구축, 고령자 특성 감안한 안전한 교통정책 수립	구조 변화 3. 지역소멸 선제 대응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 거점도시중심 발전전략 수립 ▶ 지방이전 인센티브 강화 인구과소지역 압축도시화 추진 ▶ 도시기능 집약전략 수립 ▶ 이용도 낮은 인프라 정비 및 주변부 난개발 방지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 주변지역과의 상생기반 조성 ▶ 혁신도시 민간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관계부처 합동 제2기 인구정책 TF>	<관계부처 합동 제3기 인구정책 TF>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2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3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4 지역상생 기반 구축 5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0.8.27.). 「제2기 인구정책 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발표: (안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42059&menuNo=4010100 에서 2020.9.1. 인출한 자료, p.10; 관계부처 합동.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17> 에서 2021.7.1. 인출한 자료, p.38; 관계부처 합동. (2021.1.27.).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28-2.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286> 에서 2021.4.30. 인출한 자료, p.3. 일부를 그대로 제시함.

- 무엇보다도 지역 측면에서의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인구 변화 특성과는 다르게) 지역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인구 변화 특성을 관측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질적으로 중앙정부가 고려하여야 할 정책 수요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지역의 정책 수요를 학술적으로 정교하게 탐색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의 정책 추진 환경을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바, 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바로 지역 인구 동태를 심도 있게 관측하는 것임.
- 지역별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 인구 동태의 면밀한 관측은 지역 인구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게 이해되고 있음.
- 지역 인구 규모 변화 특성은 지역의 경기 변동 및 산업구조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지역의 인구 규모, 구조 변화 특성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자 동시에 이에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임. 앞서 살펴본 선정 지역의 다각적인 집계 변인들이 제시되어 있는 바, 특히 이들 다양한 집계 변인과 인구 동태 간 상호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할 것임. 이는 이들 요인 간 상호관계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제고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임. 이들 요인 간 상호관계에 대한 지속적 추적, 해석 또한 요구되는 바 이는 지역 인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데 있어 중앙·광역·기초 간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력 및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데 기인하고 있음.

- 특히, 본 연구의 선정 지역과 같이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동시에, 인구 고령/초고령화가 지속 심화되고 있는 인구 위기 지역에 대하여 중앙-광역-기초 간 협력 연계 체계를 바탕으로 한 각각의 역할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함. 특히, 자립적 지역 경제성장 기반조성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기조를 고려할 때(지역발전위원회, 2018), 이러한 인구 위기 지역의 활력과 재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의 강력한 역할을 바탕으로 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특히, 내실 있는 사후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환류 과정이 수반됨과 동시에, 지역 자구적인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임.
- 지역 인구 동태를 관측할 때 흔히 집계자료가 두루 활용되는데, 이 경우 이러한 자료가 관측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인구 변화를 어느 정도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러한 자료들을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측, 관리하는 작업도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함. 장인수, 우해봉, 박종서, 정찬우(2021)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역 인구 변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지역 인구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인 개인의 미시적 행태를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미시적 자료(가령,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등)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음.



제3장

지역별 인구 동태 특성

제1절 강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제2절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제3절 광주전남: 광주전남연구원

제4절 부산: 부산복지개발원

제5절 충북: 충북연구원

제3장 지역별 인구 동태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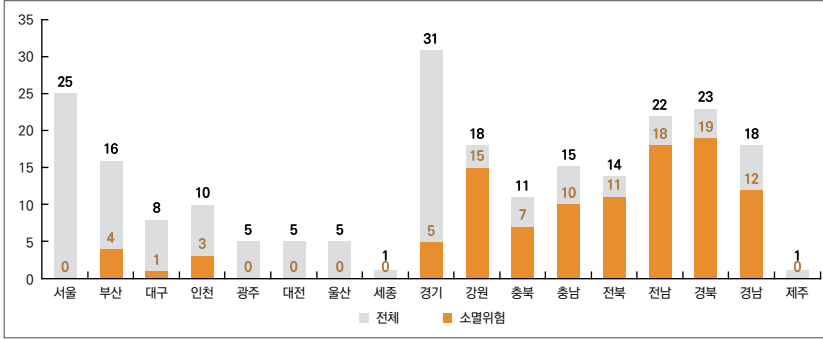
제1절 강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1. 강원도 인구 변화 특성: 3대 인구위기와 기회

가. 지역소멸

- 2020년 5월, 강원도는 춘천시와 원주시, 속초시를 뺀 15개 시·군이 ‘인구소멸위험지역’ 으로 나타나
 - 인구소멸위험지역 비율 83.3%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아
 - 경상북도 82.6%, 전라남도 81.8%
 - 2020년 강원도 동해시와 화천군 2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새롭게 진입함에 따라 충청북도와 함께 가장 많이 증가
 - 2019년 대비 2020년 전국적으로 인구소멸위험지역 8개 시·군 증가
 - 강원도 8개 군 지역 모두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나

[그림 3-1] 전국 17개 시·도별 지역소멸위험 추이



자료: 박태우, (2021.6.1.), 지방소멸 위험 '인구감소지역' 을 하반기에 공식 지정.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97508.html 에서 2021.6.4. 인출.

나. 인구 감소와 저출산

□ 2020년 강원도 인구는 약 154만 명으로 2010년 대비 0.8% 감소

○ 전국 대비 강원도 인구 비중은 2010년 3.03% → 2020년 2.98% 감소

○ 2015년부터 인구 자연감소(Dead-cross) 현상 지속

□ 2020년 강원도 합계출산율(1.04명)은 전국(0.84명)보다 높지만,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지속 감소

○ 강원도 합계출산율: 2015년 1.31명 → 2020년 1.04명 감소

○ 강원도 출생아 수: 2017년부터 10,000명 이하 유지,

2020년 7,800명

- 2019년부터 강원도 출생아 수 감소 폭, 전국 대비 소폭 완화

〈표 3-1〉 전국 및 강원도 출생지표 현황(2015~2020)

(단위: 명,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출산율 전국	1.24	1.17	1.05	0.98	0.92	0.84 (0.08↓)
강원도	1.31	1.24	1.12	1.07	1.08	1.04 (0.04↓)
출생아 수 강원도	10,929	10,058	8,958	8,351	8,283	7,800 (490↓)
조출생률 강원도	7.1	6.5	5.8	5.4	5.4	5.1

자료: 강원도, (2020). 2020년 강원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p.4. https://provin.gangwon.kr/gw/portal/sub05_01?articleSeq=166723&mode=readForm&curPage=40&boardCode=BDAADD02 에서 2021.6.2.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강원도 18개 시·군의 합계출산율 특성을 살펴보면, 군인이 많은 접경지역은 합계출산율이 높은 반면, 폐광지역은 1명 이하

- 철원군(1.65명) > 인제군(1.64명) > 화천군(1.57명) > 양구군(1.64명) 등
- 영월군(0.92명), 평창군(0.94명)은 합계출산율 1명 이하, 태백시(1.01명)는 강원도 평균 이하

〈표 3-2〉 강원도 18개 시·군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현황(2020)

(단위: 명)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합계출산율	1.02	1.03	1.00	1.05	1.01	1.05	1.34	1.13	1.05
출생아 수	1,675	2,146	964	422	176	414	366	308	179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합계출산율	0.92	0.94	1.11	1.65	1.57	1.47	1.64	1.25	1.18
출생아 수	121	144	154	349	195	171	255	127	117

자료: 강원도, (2020). 2020년 강원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p.4. https://provin.gangwon.kr/gw/portal/sub05_01?articleSeq=166723&mode=readForm&curPage=40&boardCode=BDAADD02 에서 2021.6.2.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청년 여성 인구 유출

□ 2020년 강원도의 시·도 간 순유입 인구는 5,457명(전출자 < 전입자)

○ 2010년 이후 2018년만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음.

□ 하지만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청년 인구에서만 4,829명 순유출

○ 전출인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2만 5,969명(33.8%)으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 30대 1만 3,545명(17.6%), 40대 9,355명(12.2%) 순임.

□ 최근 10년, 20대 청년 여성 순유출 인구는 남성보다 약 1.5배 높아

○ 2010~2020년 20대 청년 여성의 순유출 인구는 2만 9,126명, 남성은 1만 9,890명

○ 연령대별 타 시·도 전출 사유를 살펴보면, 20대는 ‘직업/일자리’가 50.2%로 가장 높아

〈표 3-3〉 강원도 20대 역외 전입·전출자 현황(2010~2020)

(단위: 명)

	20대 남성			20대 여성		
	시·도 간 전입	시·도 간 전출	순이동자	시·도 간 전입	시·도 간 전출	순이동자
2010	13,066	14,458	-1,392	8,380	10,942	-2,562
2011	12,989	13,823	-834	8,276	10,263	-1,987
2012	11,776	13,826	-2,050	7,812	10,424	-2,612
2013	12,014	12,945	-931	7,308	9,847	-2,539
2014	12,506	13,856	-1,350	7,485	10,221	-2,736
2015	14,690	14,550	140	8,008	10,579	-2,571
2016	11,902	15,053	-3,151	7,981	10,254	-2,273
2017	12,631	14,704	-2,073	7,890	10,265	-2,375
2018	11,025	14,933	-3,908	7,746	11,078	-3,332
2019	11,942	14,652	-2,710	8,094	11,035	-2,941
2020	12,390	14,021	-1,631	8,750	11,948	-3,198
합계	136,931	156,821	-19,890	87,730	116,856	-29,126

자료: 통계청, (2021g). 국가통계포털-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 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conn_path=I2 에서 2021.6.14.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라. 귀농·어·귀촌 인구 증가

- 2020년 강원도 내 등록외국인은 1만 7,332명(11.23%)으로 전국 (22.1%)의 절반 수준임.
 - 강원도 내 등록외국인 비중은 2010년 9.0% → 2020년 11.2%로 2.2%p 증가
 - 전국은 2010년 18.2% → 2020년 22.1%로 강원도보다 더 많이 증가
- 한편 강원도 내 외국인 주민은 외국인 주민 자녀(19.2%, 3,771명), 결혼이민자(17.8%, 3,502명)가 다수를 차지함.
- 2020년 강원도 내 귀농·어·귀촌 인구는 5만 6,100명으로 2013년 대비 약 2.1배 증가함.
 - 전국 귀농·어·귀촌 인구 대비 강원도 비중은 2013년 6.4%에서 2020년 10.2%로 3.8%p 증가
 - 2020년 기준, 전국의 귀농·어·귀촌 인구 10명 중 1명은 강원도로 이주하고 있음.
 - 강원도의 귀농·어·귀촌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귀촌 인구가 98.2%로 대다수를 차지함.

〈표 3-4〉 강원도 귀농·어·귀촌 인구 현황(2013~2020)

(단위: 명, %)

	전국			강원도			강원도 비중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2013	416,454	215,784	200,670	26,625	14,073	12,552	6.4
2014	451,417	232,853	218,564	27,963	14,274	13,689	6.2
2015	479,965	254,054	225,911	32,714	19,353	13,359	6.8
2016	489,513	257,856	231,657	29,035	15,818	13,214	5.9
2017	510,941	269,936	241,005	28,983	15,845	13,136	5.7
2018	541,854	287,517	254,337	51,478	27,437	24,038	9.5
2019	514,405	275,794	238,611	55,774	29,524	26,250	10.8
2020	549,953	294,173	255,780	56,100	30,079	26,019	10.2
합계 ¹⁾	32.1	36.3	27.5	110.7	113.7	107.3	-

주: 1) 귀농, 귀어, 귀촌인구 합계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각 연도), 귀농어·귀촌인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8/11/index.board 에서 2021.6.1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2절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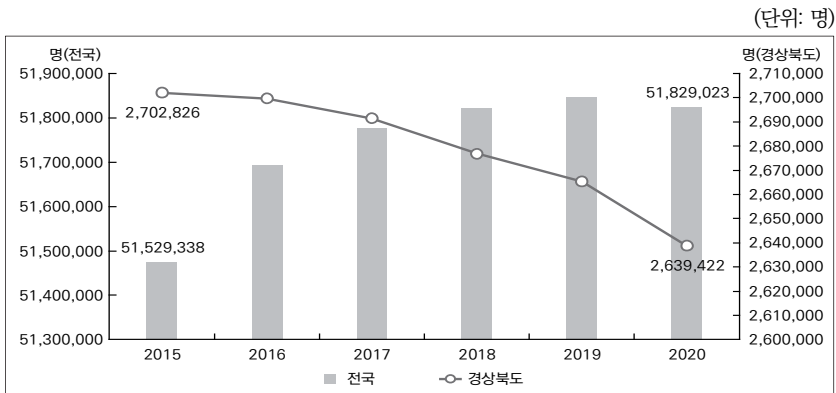
1. 인구 및 세대수 추이

가. 인구수

□ 전국 대비 경상북도 인구수 감소 추세

- 2015~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경상북도는 감소 추세

[그림 3-2] 전국 대비 경상북도 인구수 추이(201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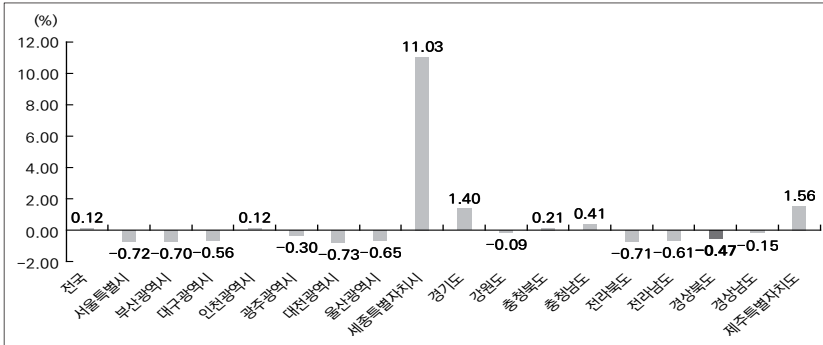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1v).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2 에서 2021.6.2.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경상북도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은 -0.47%이며, 특히 2020년은 전년 대비 증감률 -0.99%로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광역시(-1.05%) 다음으로 급감

[그림 3-3] 전국 17개 시·도별 연평균 인구 증감률(2015~2020)

(단위: %)



자료: 통계청. (2021v).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2 에서 2021.6.2.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최근 5년간 경상북도 내 인구 증가 시·군은 16.7% 불과

○ 2015~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4개 시·군이며,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예천군(4.48%)

- 그다음으로 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경산시(0.53%), 영천시(0.27%), 김천시(0.06%)

○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경상북도 평균(-0.47%)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5개 지역에 불과

- 김천시(0.06%), 구미시(-0.17%), 영천시(0.27%), 경산시(0.53%), 예천군(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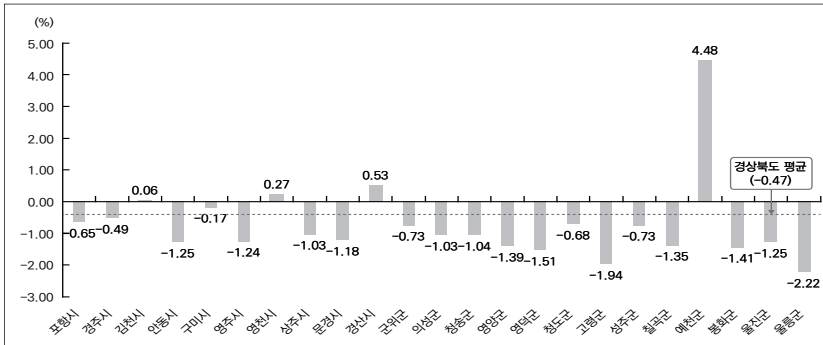
□ 급증하는 예천군, 급감하는 울릉군

○ 같은 기간, 연평균 인구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울릉군으로 -2.2%

- 그다음으로 인구 감소율이 높은 지역은 고령군(-1.94%), 영덕군(-1.51%), 영양군(-1.39%)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4]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연평균 인구 증감률(2015~2020)

(단위: %)



자료: 통계청, (2021v),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2 에서 2021.6.2.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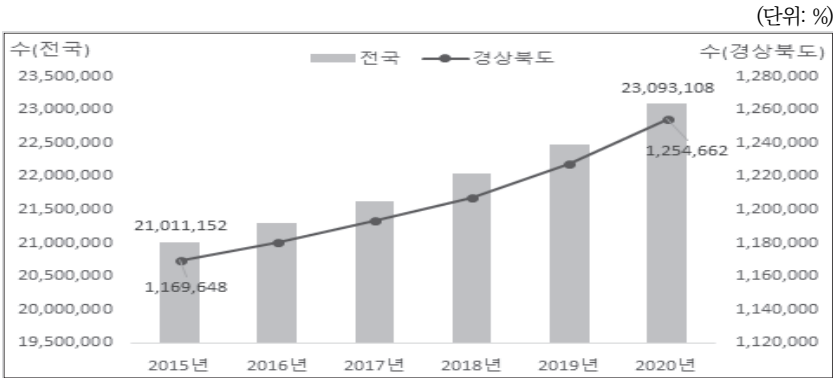
나. 세대수

□ 전국 대비 경상북도 세대수 증가 추세

- 2015~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세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역시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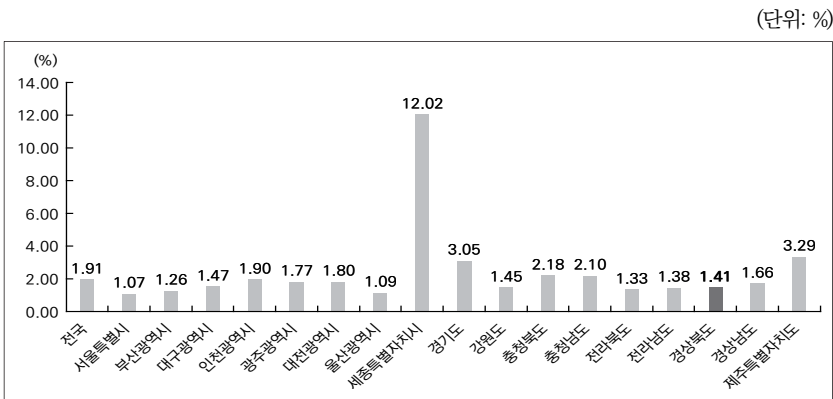
4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지자체 연구기관 협동연구

[그림 3-5] 전국 대비 경상북도 세대수 추이(2015~2020)



자료: 통계청. (2021w).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세대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conn_path=I2 에서 2021.6.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6] 전국 17개 시·도별 연평균 세대 증감률(2015~2020)



자료: 통계청. (2021w).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세대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conn_path=I2 에서 2021.6.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경상북도의 최근 5년간 세대수의 연평균 증감률은 1.41%로, 전국 평균인 1.91%보다 저조

□ 최근 5년간 경상북도 대부분의 시·군에서 세대수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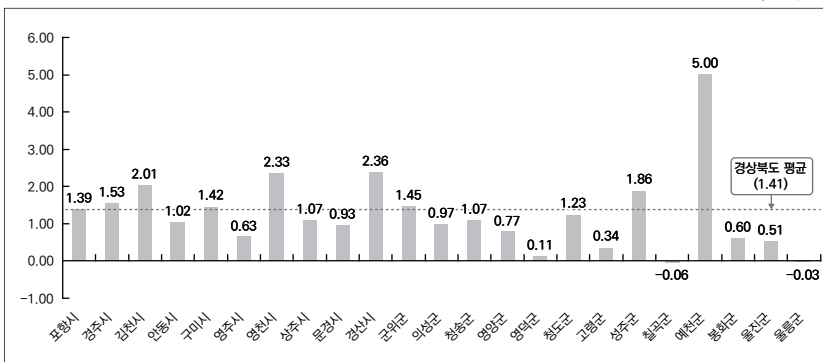
- 2015~2020년까지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최근 5년간 칠곡군과 울릉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세대수 증가 추세
- 최근 5년간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경상북도 평균(1.41%)을 상회하며 연평균 세대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5곳에 불과
 - 예천군(5.00%), 영천시(2.33%), 김천시(2.01%), 성주군(1.86%), 경주시(1.53%), 군위군(1.45%), 구미시(1.42%)의 순으로 나타남.

□ 급증하는 예천군, 급감하는 칠곡군

- 2015~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세대수의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예천군이 5.0%로 가장 급증한 반면, 칠곡군이 -0.06%로 가장 급감

[그림 3-7]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연평균 세대 증감률(2015~2020)

(단위: %)



자료: 통계청, (2021w).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세대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conn_path=I2 에서 2021.6.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인구수 및 세대수 특성

□ 감소하는 인구, 증가하는 세대

- 2015~2020년 최근 5년간 경상북도의 인구수는 감소하는 반면,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음.
- 그 결과 1세대당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국 평균(-1.76%)에 비해 경상북도에서 현저

〈표 3-5〉 전국 대비 경상북도의 1세대당 인구수 추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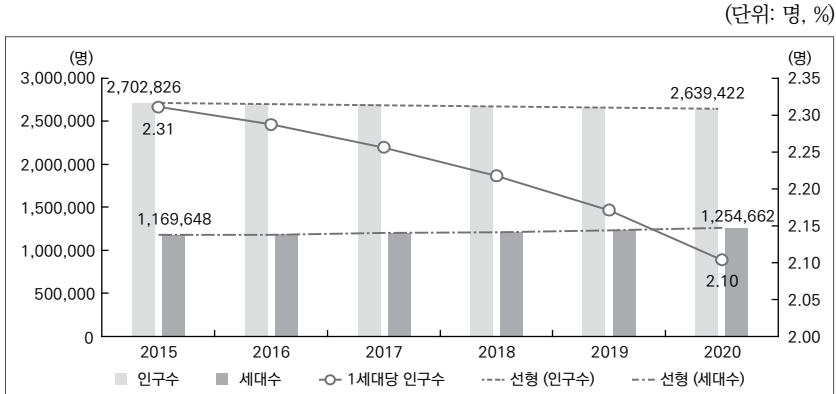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감률
인구 ¹⁾	전국	51,529,338	51,696,216	51,778,544	51,826,059	51,849,861	51,829,023	0.12
	경상북도	2,702,826	2,700,398	2,691,706	2,676,831	2,665,836	2,639,422	-0.47
세대 ²⁾	전국	21,011,152	21,294,009	21,632,851	22,042,947	22,481,466	23,093,108	1.91
	경상북도	1,169,648	1,180,643	1,193,261	1,207,351	1,227,548	1,254,662	1.41
1세대당 인구수	전국	2.45	2.43	2.39	2.35	2.31	2.24	-1.76
	경상북도	2.31	2.29	2.26	2.22	2.17	2.10	-1.86

주: 1세대당 인구수는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 및 주민등록세대 수를 활용하여 나눈 값임.

자료: 1) 통계청. (2021x).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 에서 2021.6.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통계청. (2021w).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세대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conn_path=I2 에서 2021.6.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8] 경상북도 인구 및 세대수 연도별 추이(2015~2020)



주: 1세대당 인구수는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 및 주민등록세대 수를 활용하여 나눈 값임.

자료: 1) 통계청. (2021x).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 에서 2021.6.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통계청. (2021w).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세대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conn_path=I2 에서 2021.6.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경상북도 23개 시·군 모두 1세대당 인구수 급감 추세

- 2015~2020년 최근 5년간 경상북도 23개 시·군 모두 1세대당 인구수가 감소
- 최근 5년간 1세대당 인구수의 연평균 증감률이 경상북도 평균(-1.86%)보다 낮은 지역은 전체 23개 시·군의 70%
- 인구수 급감 추세가 심각한 지역은 고령군(-2.28%)이며, 그다음으로 안동시(-2.25%), 울릉군(-2.19%)의 순으로 나타남.

〈표 3-6〉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1세대당 인구수 추이(2015~2020)

(단위: 명,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감률
경상북도	2.31	2.29	2.26	2.22	2.17	2.10	-1.86
포항시	2.47	2.44	2.40	2.35	2.30	2.23	-2.01
경주시	2.31	2.28	2.24	2.20	2.15	2.09	-1.99
김천시	2.31	2.29	2.26	2.22	2.16	2.09	-1.91
안동시	2.31	2.29	2.25	2.20	2.14	2.07	-2.25
구미시	2.50	2.49	2.46	2.43	2.38	2.31	-1.57
영주시	2.28	2.24	2.22	2.18	2.14	2.07	-1.85
영천시	2.14	2.12	2.07	2.03	1.99	1.93	-2.01
상주시	2.21	2.18	2.15	2.11	2.06	1.99	-2.08
문경시	2.19	2.16	2.12	2.07	2.03	1.97	-2.10
경산시	2.41	2.39	2.36	2.32	2.28	2.20	-1.79
군위군	1.98	1.94	1.91	1.87	1.84	1.78	-2.15
의성군	1.99	1.97	1.94	1.90	1.86	1.80	-1.98
청송군	1.98	1.95	1.92	1.87	1.83	1.78	-2.09
영양군	2.04	2.01	1.98	1.95	1.90	1.83	-2.14
영덕군	1.96	1.93	1.92	1.89	1.86	1.80	-1.63
청도군	2.03	2.01	1.98	1.94	1.91	1.85	-1.88
고령군	2.13	2.11	2.08	2.03	2.00	1.90	-2.28
성주군	2.10	2.07	2.02	1.97	1.92	1.85	-2.54
칠곡군	2.31	2.29	2.28	2.26	2.22	2.16	-1.30
예천군	2.09	2.09	2.10	2.11	2.08	2.04	-0.49
봉화군	2.06	2.03	2.01	1.97	1.92	1.86	-2.00
울진군	2.08	2.05	2.03	1.99	1.95	1.91	-1.75
울릉군	1.91	1.88	1.84	1.79	1.77	1.71	-2.19

자료: 통계청, (2021w).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세대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conn_path=I2 에서 2021.6.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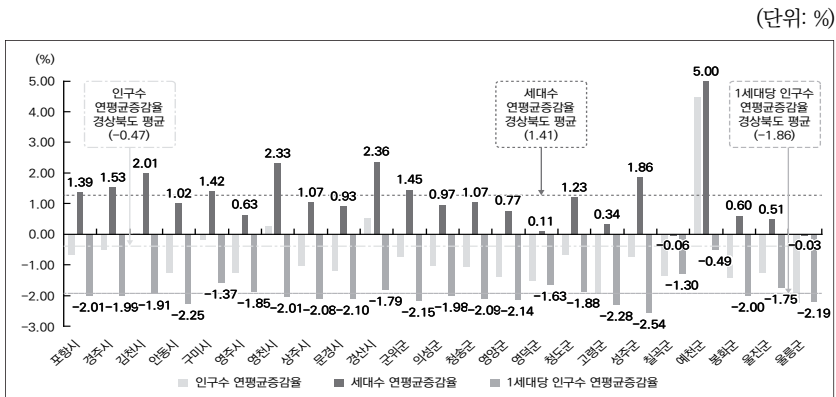
□ 감소하는 인구 대비, 증가하는 세대수

○ 2015~2020년 최근 5년간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인구 및 세대수, 그리고 1세대당 인구수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세대당 인구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인구와 세대수가 함께 증가 추세를 보이는 지역은 김천시, 영천

시, 경산시, 예천군 4개 지역이며, 이 가운데 예천군의 인구 및 세대수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3-9]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인구 및 세대수, 1세대당 인구수 연평균 증감률
(2015~2020)



자료: 통계청. (2021w).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세대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conn_path=12 에서 2021.6.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인구구성

□ 전국 평균보다 현저한 경상북도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

- 2015~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경상북도의 유소년인구(14세 이하) 및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증가 추세
- 경상북도 유소년인구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은 -2.57%, 생산가능인구의 연평균 증감률은 -1.26%로 전국 평균에 비해 감소 폭이 높은 반면, 고령인구의 연평균 증감률은 3.65%로 전국 평균보다 낮음.

○ 경상북도 생산가능인구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1.26%)은 부산광역시(-1.74%)에 이어 2번째로 감소 폭이 높음.

〈표 3-7〉 전국 17개 시·도별 인구구성 추이(2015,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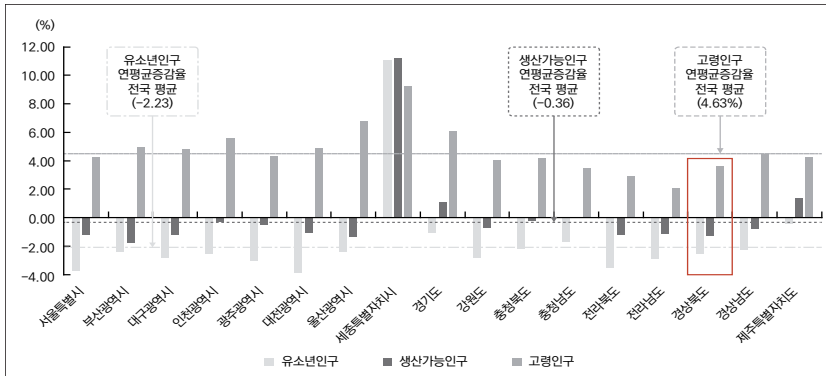
(단위: 명, %)

	유소년인구(14세 이하)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2015	2020	연평균 증감률	2015	2020	연평균 증감률	2015	2020	연평균 증감률
전국	7,061,513	6,307,659	-2.23	37,692,724	37,025,287	-0.36	6,775,101	8,496,077	4.63
서울특별시	1,201,105	995,397	-3.69	7,558,640	7,111,929	-1.21	1,262,436	1,561,139	4.34
부산광역시	410,488	363,164	-2.42	2,588,659	2,371,071	-1.74	514,630	657,711	5.03
대구광역시	329,453	284,858	-2.87	1,842,254	1,732,994	-1.22	316,122	400,494	4.85
인천광역시	411,642	363,137	-2.48	2,201,268	2,168,208	-0.30	312,905	411,483	5.63
광주광역시	227,392	194,798	-3.05	1,078,418	1,049,598	-0.54	166,389	205,666	4.33
대전광역시	224,747	184,449	-3.87	1,128,500	1,068,649	-1.08	165,528	210,784	4.95
울산광역시	174,556	154,483	-2.41	895,773	838,167	-1.32	103,205	143,367	6.79
세종특별자치시	42,411	71,602	11.04	146,074	249,348	11.29	22,399	34,881	9.26
경기도	1,906,270	1,806,962	-1.06	9,297,454	9,844,737	1.15	1,318,882	1,775,315	6.12
강원도	196,391	170,474	-2.79	1,091,445	1,052,675	-0.72	261,671	319,691	4.09
충청북도	219,080	196,295	-2.17	1,130,059	1,116,394	-0.24	234,813	288,148	4.18
충청남도	298,200	273,804	-1.69	1,438,235	1,442,037	0.05	341,214	405,188	3.50
전라북도	252,966	211,829	-3.49	1,283,221	1,206,072	-1.23	333,524	386,203	2.98
전라남도	245,971	212,331	-2.90	1,271,188	1,203,338	-1.09	391,837	435,880	2.15
경상북도	340,245	298,665	-2.57	1,882,947	1,767,042	-1.26	479,634	573,715	3.65
경상남도	482,785	429,622	-2.31	2,417,898	2,330,336	-0.74	464,019	580,258	4.57
제주특별자치도	97,811	95,789	-0.42	440,691	472,692	1.41	85,893	106,154	4.33

자료: 통계청, (2021x),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 에서 2021.6.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10] 전국 17개 시·도별 인구구성 연평균 증감률(2015~2020)

(단위: %)



자료: 통계청, (2021x).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데이터파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에서 2021.6.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전국 평균보다 심각한 경상북도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

- 2015~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예천군을 제외한 22개 지역 즉, 약 96%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14세 이하 유소년인구의 연평균 증감률 감소
- 같은 기간,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18개, 즉 전체 지역의 75%에서 감소
-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경상북도의 23개 모든 시·군에서 증가

□ 경주시와 칠곡군, 최근 5년간 인구구성에 빨간불

- 경주시와 칠곡군은 연령대별 인구구성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이 경상북도 평균에 비해 심각한 수준
- 즉, 2개 시·군은 14세 이하 유소년인구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최근 5년간 급감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증

〈표 3-8〉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인구구성 추이(2015~202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률(2015~2020)		
	여성 인구	생가능 인구	고령인구	여성 인구	생가능 인구	고령인구	여성 인구	생가능 인구	고령인구	여성 인구	생가능 인구	고령인구	여성 인구	생가능 인구	고령인구	여성 인구	생가능 인구	고령인구	14세 이하	15~64세	65세 이상
경북	340,245	1,882,947	479,684	333,025	1,874,966	492,417	325,609	1,853,396	512,681	316,485	1,831,997	529,349	308,133	1,888,388	549,415	288,665	1,767,042	573,715	-2.57	-1.26	3.05
포항시	70,935	383,465	65,214	69,305	379,174	68,296	67,774	373,106	67,774	366,881	67,024	64,404	360,620	62,001	62,658	352,298	87,960	-2.44	-1.68	6.17	
경주시	30,940	182,099	47,334	29,544	181,119	48,789	28,650	178,493	50,780	27,677	176,683	52,504	26,851	173,912	54,639	26,122	170,067	57,313	-2.95	-1.36	3.90
김천시	16,789	95,504	27,839	17,150	96,618	28,488	17,145	96,227	29,536	16,781	94,005	30,318	16,476	95,501	31,252	16,183	91,845	32,520	-0.73	-0.78	3.16
안동시	21,531	113,736	33,954	20,839	113,287	34,672	19,806	110,518	35,948	18,436	106,894	36,850	17,624	104,522	37,906	17,125	102,589	39,193	-4.48	-2.04	2.91
구미시	70,671	318,992	30,252	69,354	318,983	31,554	68,691	319,503	33,605	67,080	318,982	35,432	65,604	316,598	37,540	63,719	312,611	39,998	-2.05	-0.40	5.74
영주시	12,579	73,076	24,080	12,260	72,410	24,577	11,893	70,957	25,541	11,376	69,084	26,341	10,826	66,982	27,259	10,274	64,699	28,146	-3.97	-2.41	3.17
영천시	9,806	66,448	24,394	9,467	65,991	25,063	9,286	65,389	25,940	8,991	65,760	26,844	9,007	65,791	27,672	8,858	64,286	28,871	-2.01	-0.66	3.43
상주시	10,297	64,514	27,563	9,957	64,093	27,769	9,623	62,789	28,535	9,299	61,898	29,100	9,034	61,832	29,822	8,666	58,090	30,472	-3.39	-2.08	2.03
문경시	8,256	48,652	18,896	7,735	47,682	19,285	7,249	46,168	19,877	6,850	44,700	20,324	6,709	44,642	20,891	6,563	43,243	21,600	-4.49	-2.52	2.71
경산시	34,532	187,352	35,004	34,130	187,532	36,375	33,616	187,499	38,370	33,019	188,008	40,066	32,327	188,779	42,079	31,440	187,709	44,579	-1.86	0.04	4.95
군위군	1,413	14,202	8,511	1,389	14,112	8,670	1,339	13,978	8,898	1,263	13,673	8,983	1,207	13,460	9,176	1,140	12,655	9,461	-4.20	-2.28	2.14
의성군	3,467	31,357	19,653	3,401	30,717	19,896	3,285	29,900	20,289	3,157	29,217	20,570	3,114	28,476	21,005	2,959	27,287	21,478	-3.12	-2.74	1.79
청송군	1,940	16,010	8,434	1,852	15,849	8,600	1,796	15,437	8,773	1,684	15,037	8,957	1,608	14,673	9,135	1,513	14,149	9,382	-4.85	-2.44	2.15
영월군	1,481	10,585	5,832	1,439	10,396	5,878	1,364	10,152	5,963	1,288	9,984	6,084	1,255	9,620	6,118	1,172	9,242	6,278	-4.57	-2.68	1.48
영덕군	3,236	23,212	12,743	3,129	23,026	12,897	3,051	22,337	13,141	2,958	21,863	13,287	2,851	21,052	13,458	2,664	19,899	13,750	-3.82	-3.03	1.53
청도군	3,015	26,810	13,899	2,907	26,383	14,274	2,795	25,772	14,779	2,692	25,193	15,172	2,648	24,721	15,541	2,592	23,644	16,027	-2.98	-2.48	2.89
고령군	3,436	22,441	8,717	3,246	22,122	8,889	3,040	21,475	9,253	2,814	20,775	9,380	2,613	20,112	9,648	2,380	19,040	9,941	-7.08	-3.23	2.66
성주군	3,641	29,375	12,013	3,556	29,251	12,398	3,391	28,908	12,839	3,291	28,239	13,142	3,112	27,426	13,477	2,963	26,480	13,971	-4.04	-2.05	3.07
칠곡군	19,323	88,306	15,200	18,850	88,870	15,479	17,878	86,820	16,166	17,027	85,109	16,692	16,154	83,405	17,488	15,228	81,195	18,335	-4.65	-1.67	3.82
예천군	3,976	25,905	14,793	4,426	26,697	15,043	5,272	28,523	15,558	6,436	30,962	15,876	6,864	31,847	16,389	6,959	31,810	16,844	11.85	4.19	2.63
봉화군	2,971	20,286	10,551	2,791	20,042	10,706	2,692	19,621	10,946	2,550	19,253	11,040	2,372	18,556	11,222	2,255	17,672	11,567	-5.37	-2.72	1.86
울진군	5,827	33,404	12,654	5,583	33,490	12,665	5,286	32,854	12,854	5,007	31,956	13,073	4,767	31,191	13,356	4,611	30,462	13,643	-4.57	-1.83	1.52
울릉군	813	7,236	2,104	735	7,112	2,154	727	7,010	2,238	701	6,841	2,290	706	6,570	2,341	621	6,070	2,386	-5.25	-3.45	2.55

주: 읍·면·동별 인구는 0~14세, 생가능인구는 15~64세, 고령인구는 6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봄.

자료: 통계청. (2021.x).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06&omn_path=12 에서 2021.6.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전체 23개 시·군의 83%가 초고령사회

○ 2020년 기준, 경상북도의 고령화율은 21.7%로 초고령사회에 진입

-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은 의성군(41.5%)이며, 그다음으로 군위군(40.7%), 영덕군과 청도군이 각각 37.9%의 순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 평균(21.7%)보다 높을 뿐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군은 19개 지역으로 전체 23개 시·군의 약 83%

○ 2020년 기준, 경상북도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66.9%

-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가장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은 의성군(52.8%)이며, 그다음으로 군위군(54.4%), 영덕군(54.8%)의 순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 평균(66.9%)보다 낮은 지역은 17개 지역으로 전체 23개 시·군의 약 74%
- 한편, 경상북도에서 가장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구미시(75.1%)이며, 경산시(71.2%), 칠곡군(70.8%)의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경상북도의 유소년인구 비율은 11.3%

-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가장 유소년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은 군위군(4.9%)이며, 그다음으로 의성군(5.7%), 청송군(6.0%)의 순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 평균(11.3%)보다 낮은 지역은 17개 지역으로 전체 23개 시·군의 약 71%

- 한편, 경상북도에서 가장 유소년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구미시(15.3%)이며, 그다음으로 칠곡군(13.3%), 예천군(12.5%)의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전체 23개 시·군의 약 65%는 인구구성에 빨간불

○ 2020년 기준, 각 시·군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유소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경상북도 평균보다 낮으면서, 고령인구 비중은 높은 지역은 총 15개 지역으로 경상북도 전체 23개 시·군의 약 65%

-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표 3-9〉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인구구성 추이(2020)

(단위: 명, %)

	유소년인구 (14세 이하)		생산가능인구 (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합계	
경상북도	298,665	11.3	1,767,042	66.9	573,715	21.7	2,639,422	100.0
포항시	62,658	12.5	352,298	70.1	87,960	17.5	502,916	100.0
경주시	26,122	10.3	170,067	67.1	57,313	22.6	253,502	100.0
김천시	16,183	11.5	91,845	65.3	32,520	23.1	140,548	100.0
안동시	17,125	10.8	102,589	64.6	39,193	24.7	158,907	100.0
구미시	63,719	15.3	312,611	75.1	39,998	9.6	416,328	100.0
영주시	10,274	10.0	64,699	62.7	28,146	27.3	103,119	100.0
영천시	8,858	8.7	64,286	63.0	28,871	28.3	102,015	100.0
상주시	8,666	8.9	58,090	59.7	30,472	31.3	97,228	100.0
문경시	6,563	9.2	43,243	60.6	21,600	30.2	71,406	100.0
경산시	31,440	11.9	187,709	71.2	44,579	16.9	263,728	100.0
군위군	1,140	4.9	12,655	54.4	9,461	40.7	23,256	100.0
의성군	2,959	5.7	27,287	52.8	21,478	41.5	51,724	100.0
청송군	1,513	6.0	14,149	56.5	9,382	37.5	25,044	100.0
영양군	1,172	7.0	9,242	55.4	6,278	37.6	16,692	100.0
영덕군	2,664	7.3	19,899	54.8	13,750	37.9	36,313	100.0
청도군	2,592	6.1	23,644	55.9	16,027	37.9	42,263	100.0
고령군	2,380	7.6	19,040	60.7	9,941	31.7	31,361	100.0
성주군	2,963	6.8	26,480	61.0	13,971	32.2	43,414	100.0
칠곡군	15,228	13.3	81,195	70.8	18,335	16.0	114,758	100.0
예천군	6,959	12.5	31,810	57.2	16,844	30.3	55,613	100.0
봉화군	2,255	7.2	17,672	56.1	11,567	36.7	31,494	100.0

	유소년인구 (14세 이하)		생산가능인구 (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합계
울진군	4,611	9.5	30,462	62.5	13,643	28.0	48,716 100.0
울릉군	621	6.8	6,070	66.9	2,386	26.3	9,077 100.0

자료: 통계청. (2021x).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12 에서 2021.6.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경상북도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소멸위험 위기

- 인구소멸위험지수¹⁾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경상북도는 ‘주의’에 속하며, 전체 23개 시·군 가운데 4개 지역이 ‘고위험’, 15개 지역이 ‘위험진입’, 3개 지역이 ‘주의’
 - 위험지수 0.2 미만으로 ‘고위험’ 지역은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봉화군
 - 위험지수 0.2~0.5로 ‘위험진입’ 지역은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울릉군
 - 위험지수 0.5~1.0으로 ‘주의’ 지역은 포항시, 경산시, 칠곡군
- 2015년에는 ‘안정’ 1 ‘보통’ 2, ‘주의’ 5, ‘위험진입’ 15
- 2015년 대비 2020년 위험도가 증가한 지역은 12개 지역으로, 전체 23개 시·군의 과반수 이상
 - ‘안정’에서 ‘보통’으로 위험도가 상승한 지역은 구미시
 - ‘보통’에서 ‘주의’로 위험도가 상승한 지역은 경산시, 칠곡군
 - ‘주의’에서 ‘위험진입’으로 위험도가 상승한 지역은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울릉군
 - ‘위험진입’에서 ‘고위험’으로 위험도가 상승한 지역은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봉화군

1) 인구소멸위험지수란, 만 20~39세 가임여성인구 대비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의 비율로 산출하며, 수치가 1.5 이상이면 ‘안정’, 1.0~1.5는 ‘보통’, 0.5~1.0은 ‘주의’, 0.2~0.5는 ‘위험진입’, 0.2 미만은 ‘고위험’으로 판정함(이상호, 2018).

〈표 3-10〉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인구소멸위험지수 추이(2015, 2020)

(단위: 명, %)

	2015년 인구 및 인구소멸위험지수				2020년 인구 및 인구소멸위험지수				2015년 대비 2020년 위험도
	20~39세 여성(A)	65세 이상(B)	위험지수 (A/B)		20~39세 여성(A)	65세 이상(B)	위험지수 (A/B)		
경상북도	303,416	479,634	0.6	주의	259,167	573,715	0.5	주의	
포항시	61,435	65,214	0.9	주의	52,187	87,960	0.6	주의	
경주시	28,675	47,334	0.6	주의	23,601	57,313	0.4	위험 진입	↑
김천시	15,885	27,839	0.6	주의	13,546	32,520	0.4	위험 진입	↑
안동시	19,135	33,954	0.6	주의	15,056	39,193	0.4	위험 진입	↑
구미시	68,101	30,252	2.3	주의	55,941	39,998	1.4	보통	↑
영주시	10,495	24,080	0.4	위험 진입	7,934	28,146	0.3	위험 진입	
영천시	9,657	24,394	0.4	위험 진입	8,429	28,871	0.3	위험 진입	
상주시	8,802	27,563	0.3	위험 진입	6,843	30,472	0.2	위험 진입	
문경시	7,225	18,896	0.4	위험 진입	5,400	21,600	0.3	위험 진입	
경산시	35,268	35,004	1.0	보통	31,708	44,579	0.7	주의	↑
군위군	1,687	8,511	0.2	위험 진입	1,155	9,461	0.1	고위험	↑
의성군	3,570	19,653	0.2	위험 진입	2,779	21,478	0.1	고위험	↑
청송군	1,906	8,434	0.2	위험 진입	1,370	9,382	0.1	고위험	↑
영양군	1,293	5,832	0.2	위험 진입	945	6,278	0.2	위험 진입	
영덕군	2,959	12,743	0.2	위험 진입	2,186	13,750	0.2	위험 진입	
청도군	3,280	13,899	0.2	위험 진입	2,458	16,027	0.2	위험 진입	
고령군	3,014	8,717	0.3	위험 진입	2,084	9,941	0.2	위험 진입	
성주군	3,918	12,013	0.3	위험 진입	2,913	13,971	0.2	위험 진입	
칠곡군	17,819	15,200	1.2	보통	11,968	18,335	0.7	주의	↑
예천군	3,480	14,793	0.2	위험 진입	4,499	16,844	0.3	위험 진입	
봉화군	2,466	10,551	0.2	위험 진입	1,722	11,567	0.1	고위험	↑
울진군	4,785	12,654	0.4	위험 진입	3,775	13,643	0.3	위험 진입	
울릉군	974	2,104	0.5	주의	668	2,386	0.3	위험 진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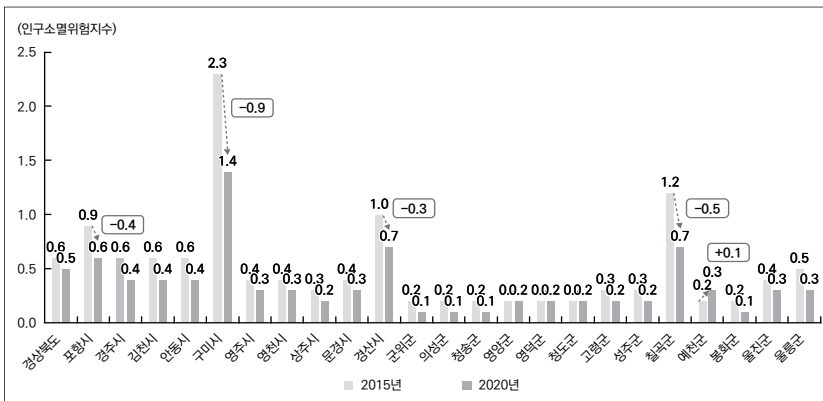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1x).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 에서 2021.6.

3. 인용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한편, 2015년 대비 2020년 인구소멸위험지수가 향상된 지역은 예천군으로, 0.2에서 0.3으로 호전
- 인구소멸위험지수가 급감하여 소멸 위기가 한층 우려되는 지역은 구미시(0.9%p 감소), 칠곡군(0.5%p 감소), 포항시(0.4%p 감소), 경산시(0.3%p 감소)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1]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인구소멸위험지수 추이(2015, 2020)

(단위: %)



자료: 통계청. (2021x).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데이터파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12에서 2021.6.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인구 동향

가. 혼인

□ 최근 5년간 조혼인율, 전국에서 가장 급감 추세

- 인구 천 명당 새로 혼인한 비율을 의미하는 조혼인율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은 전국 평균이 -6.6%로 감소 추세

○ 경상북도는 -8.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감소 폭이 큼.

〈표 3-11〉 전국 17개 시·도별 조혼인율 추이(2015~2020)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감률 (2015~2020)
전국	5.9	5.5	5.2	5.0	4.7	4.2	-6.6
서울특별시	6.5	5.9	5.5	5.4	5.0	4.7	-6.3
부산광역시	5.3	4.9	4.5	4.3	4.1	3.6	-7.4
대구광역시	5.1	5.0	4.6	4.5	4.1	3.5	-7.3
인천광역시	5.9	5.5	5.2	5.1	4.6	4.0	-7.5
광주광역시	5.4	5.1	4.9	4.6	4.3	3.8	-6.8
대전광역시	5.8	5.5	5.1	5.0	4.5	4.1	-6.7
울산광역시	6.4	6.0	5.4	5.1	4.7	4.2	-8.1
세종특별자치시	8.2	7.1	6.6	6.9	6.2	5.3	-8.4
경기도	6.0	5.6	5.2	5.2	4.8	4.4	-6.0
강원도	5.1	4.9	4.7	4.6	4.4	3.8	-5.7
충청북도	5.6	5.3	5.0	4.9	4.6	4.2	-5.6
충청남도	6.0	5.7	5.2	5.2	4.7	4.0	-7.8
전라북도	4.9	4.4	4.2	3.9	3.9	3.4	-7.0
전라남도	4.9	4.5	4.3	4.0	4.0	3.4	-7.0
경상북도	5.3	5.0	4.6	4.4	4.0	3.4	-8.5
경상남도	5.6	5.3	4.8	4.5	4.1	3.6	-8.5
제주특별자치도	6.0	5.9	5.7	5.5	5.1	4.5	-5.6

주: 조혼인율은 연간 혼인건수를 당해연도 주민등록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산출하였고, 2020년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2021m). 국가통계포털-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H&co_nn_path=I2 에서 2021.6.8.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최근 5년간 조혼인율, 예천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에서 감소 추세

○ 예천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의 최근 5년간 조혼인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칠곡군은 -15.66%로 가장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음.

- 감소 지역은 군위군(-12.52%), 고령군(-12.05%), 봉화군(-11.09%)의 순으로 나타남.

- 예천군의 경우도 증가가 아닌 현상 유지 수준

- 최근 5년간 경상북도의 조혼인율 연평균 증감률인 -8.50%보다 낮아 감소 추세가 현저한 지역은 10개 시·군에 달함.

〈표 3-12〉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조혼인율 추이(2015~2020)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감률 (2015~2020)
경상북도	5.3	5.0	4.6	4.4	4.0	3.4	-8.50
포항시	5.8	5.0	4.7	4.5	4.3	3.7	-8.60
경주시	4.8	4.4	4.0	4.4	3.8	3.4	-6.66
김천시	4.8	4.9	4.5	4.2	4.0	3.4	-6.66
안동시	4.6	4.3	4.0	3.7	3.4	3.0	-8.19
구미시	6.7	6.3	5.9	5.5	5.1	4.3	-8.49
영주시	4.0	4.1	3.7	3.6	2.8	2.7	-7.56
영천시	4.8	4.5	4.0	3.9	4.1	3.3	-7.22
상주시	4.0	3.4	3.2	3.4	3.0	2.7	-7.56
문경시	3.9	3.8	3.3	3.0	3.2	2.4	-9.25
경산시	6.1	6.0	5.2	5.0	4.6	3.8	-9.03
군위군	4.1	2.5	3.2	2.8	2.7	2.1	-12.52
의성군	3.4	3.5	2.8	2.7	2.9	2.5	-5.96
청송군	3.9	4.3	3.5	3.4	3.2	2.5	-8.51
영양군	3.7	3.9	2.6	3.1	2.9	2.7	-6.11
영덕군	3.9	4.0	3.6	3.4	2.8	2.3	-10.02
청도군	3.5	3.3	2.8	3.0	2.5	2.1	-9.71
고령군	3.8	3.7	3.5	3.4	2.7	2.0	-12.05
성주군	3.4	3.5	3.5	4.1	3.2	3.0	-2.47
칠곡군	8.2	7.8	6.7	5.5	4.4	3.5	-15.66
예천군	4.1	3.2	3.6	4.6	3.8	4.1	0.00
봉화군	3.6	3.7	2.7	2.5	2.6	2.0	-11.09
울진군	4.7	5.0	4.4	4.7	4.2	3.8	-4.16
울릉군	5.3	4.7	4.4	5.1	4.2	3.8	-6.44

주: 조혼인율은 연간 혼인건수를 당해연도 주민등록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산출하였고, 2020년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2021j). 국가통계포털-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1&conn_path=12 에서 2021.6.9.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출생

□ 타 시·도 대비 최근 5년간 조출생률 급감

- 인구 천 명당 새로 출생하는 아이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출생률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은 전국 평균이 -9.23%로 감소 추세
- 경상북도는 -10.00%로 전국 평균(-9.23%)보다 감소 폭이 크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 최근 5년간 출생아 비율이 급감하는 추세

〈표 3-13〉 전국 17개 시·도별 조출생률 추이(2015~2020)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감률 (2015~2020)
전국	8.6	7.9	7.0	6.4	5.9	5.3	-9.23
서울특별시	8.4	7.7	6.7	6.0	5.6	5.0	-9.86
부산광역시	7.7	7.2	6.2	5.6	5.0	4.5	-10.19
대구광역시	7.9	7.4	6.5	5.9	5.4	4.6	-10.25
인천광역시	8.8	8.1	7.0	6.9	6.3	5.5	-8.97
광주광역시	8.5	7.9	6.9	6.3	5.8	5.1	-9.71
대전광역시	9.1	8.3	7.2	6.3	5.7	5.1	-10.94
울산광역시	10.1	9.4	8.1	7.1	6.6	5.8	-10.50
세종특별자치시	14.8	14.6	13.4	12.5	11.7	10.0	-7.54
경기도	9.2	8.4	7.4	6.9	6.4	5.9	-8.50
강원도	7.1	6.5	5.8	5.4	5.4	5.1	-6.40
충청북도	8.6	8.1	7.2	6.7	5.9	5.4	-8.89
충청남도	9.0	8.3	7.5	6.8	6.3	5.7	-8.73
전라북도	7.6	6.8	6.1	5.5	4.9	4.5	-9.95
전라남도	8.0	7.4	6.5	6.0	5.8	5.3	-7.90
경상북도	8.3	7.7	6.7	6.0	5.5	4.9	-10.00
경상남도	8.9	8.1	7.1	6.3	5.7	5.1	-10.54
제주특별자치도	9.2	8.7	7.8	7.3	6.8	6.0	-8.19

주: 조출생률은 연간 총 출생아 수를 당해연도 주민등록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비율이며, 2020년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2021m). 국가통계포털-시도/인구동태전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H&conn_path=I2 에서 2021.6.8.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최근 5년간 조출생률, 예천군 급증 대비 고령군 급감

○ 2014~2019년 최근 5년간 조출생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23개 시·군 가운데 20개 시·군에서 감소 추세

- 감소한 지역은 고령군이 -13.42%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칠곡군(-11.50%), 구미시(-10.18%), 포항시(-9.44%)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증가한 지역은 예천군이 5.15%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의성군(1.27%), 울릉군(0.44%)의 순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경상북도의 조출생률 연평균 증감률인 -7.68%보다 낮아 감소 추세가 현저한 지역은 8개 시·군

〈표 3-14〉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조출생률 추이(2014~2019)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감률 (2014~2019)
경상북도	8.2	8.3	7.7	6.7	6.0	5.5	-7.68
포항시	8.7	8.9	7.9	6.9	6.1	5.3	-9.44
경주시	6.7	6.7	6.3	5.3	4.9	4.4	-8.07
김천시	7.3	7.4	8.0	7.5	7.2	6.3	-2.90
안동시	7.9	8.8	7.9	7.1	5.8	5.4	-7.33
구미시	11.8	11.4	10.3	8.9	8.0	6.9	-10.18
영주시	6.0	6.0	5.6	4.9	4.7	3.8	-8.73
영천시	7.2	7.2	6.3	5.9	5.0	6.5	-2.02
상주시	5.4	5.5	5.0	4.4	4.6	4.4	-4.01
문경시	7.1	7.0	5.9	5.3	4.2	4.4	-9.13
경산시	10.0	9.8	9.8	8.1	7.2	6.3	-8.83
군위군	4.6	4.0	4.2	4.2	3.4	3.3	-6.43
의성군	4.6	4.6	4.9	4.2	4.6	4.9	1.27
청송군	5.4	5.2	4.5	4.9	3.3	4.6	-3.16
영양군	5.8	5.0	4.2	4.6	3.7	4.4	-5.38
영덕군	5.3	5.5	4.2	5.4	4.0	4.8	-1.96
청도군	3.3	4.0	3.8	3.3	3.4	3.1	-1.24
고령군	7.4	7.4	6.0	5.1	4.3	3.6	-13.42
성주군	6.4	7.1	6.8	6.1	5.7	4.8	-5.59
칠곡군	10.5	11.2	10.7	8.6	7.4	5.7	-11.50
예천군	4.9	5.7	5.3	4.9	6.1	6.3	5.15
봉화군	6.1	5.8	5.4	5.1	4.7	4.4	-6.32
울진군	7.3	7.2	5.9	5.2	4.9	4.8	-8.04
울릉군	4.5	5.5	3.8	3.3	3.3	4.6	0.44

주: 조출생률은 연간 총 출생아 수를 당해연도 주민등록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
비로 나타낸 비율이며, 2020년은 자료 부재로, 2014~2019년 최근 5년간 자료를 토대로 작성.
자료: 통계청, (2021). 국가통계포털-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데이
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2 에서 2021.6.9.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도 단위 지역 중, 최근 5년간 경상북도의 합계출산율 감소 추세 심화

-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은 전국 평균이 -7.48%로 감소 추세
- 경상북도는 -7.34%로 전국 평균(-7.48%)보다 다소 양호한 수준 이긴 하나, 매년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
- 또한, 9개 도 단위 지역 중에서 경상남도(-7.94%) 다음으로 감소 추세 심화

〈표 3-15〉 전국 17개 시·도별 합계출산율 추이(2015~2020)

(단위: 명,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감률 (2015~2020)
전국	1.239	1.172	1.052	0.977	0.918	0.840	-7.48
서울특별시	1.001	0.940	0.836	0.761	0.717	0.640	-8.56
부산광역시	1.139	1.095	0.976	0.899	0.827	0.750	-8.02
대구광역시	1.216	1.186	1.067	0.987	0.932	0.810	-7.80
인천광역시	1.216	1.144	1.007	1.006	0.940	0.830	-7.35
광주광역시	1.207	1.168	1.053	0.972	0.913	0.810	-7.67
대전광역시	1.277	1.192	1.075	0.952	0.883	0.810	-8.70
울산광역시	1.486	1.418	1.261	1.131	1.084	0.990	-7.80
세종특별자치시	1.893	1.821	1.668	1.566	1.472	1.280	-7.53
경기도	1.272	1.194	1.069	1.002	0.943	0.880	-7.10
강원도	1.311	1.237	1.123	1.067	1.082	1.040	-4.53
충청북도	1.414	1.358	1.235	1.172	1.050	0.980	-7.07
충청남도	1.480	1.395	1.276	1.186	1.112	1.030	-6.99
전라북도	1.352	1.251	1.151	1.044	0.971	0.910	-7.61
전라남도	1.549	1.466	1.325	1.240	1.234	1.150	-5.78
경상북도	1.464	1.396	1.256	1.167	1.089	1.000	-7.34
경상남도	1.437	1.358	1.227	1.122	1.046	0.950	-7.94
제주특별자치도	1.477	1.432	1.305	1.220	1.145	1.020	-7.14

주: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당 출생아 수로, 2020년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2021m). 국가통계포털-시도/인구동태전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H&co nn_path=12 에서 2021.6.8.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 울릉군 급증 대비 고령군 급감

- 2014~2019년 최근 5년간 23개 시·군 가운데, 7개 지역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반면, 16개 시·군에서는 감소 추세
 - 증가한 지역은 울릉군이 4.95%로 가장 높고, 의성군(4.02%), 예천군(3.46%), 청도군(2.96%), 영천시(0.62%), 영덕군(0.57%), 청송군(0.26%)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감소한 지역은 고령군이 -8.52%로 가장 감소 폭이 크고, 칠곡군(-7.71%), 구미시(-7.31%)의 순
- 최근 5년간 경상북도 합계출산율의 연평균 증감률인 -5.01%보다 낮아 감소 추세가 현저한 지역은 10개 시·군

〈표 3-16〉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합계출산율 추이(2014~2019)

(단위: 명,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감률 (2014~2019)
경상북도	1.408	1.464	1.396	1.256	1.167	1.089	-5.01
포항시	1.404	1.475	1.352	1.217	1.117	1.014	-6.30
경주시	1.403	1.294	1.258	1.093	1.036	0.942	-6.60
김천시	1.406	1.419	1.515	1.432	1.414	1.271	-6.07
안동시	1.241	1.619	1.526	1.420	1.201	1.170	-5.36
구미시	1.384	1.440	1.343	1.201	1.110	0.984	-1.69
영주시	1.420	1.357	1.322	1.182	1.214	0.995	-3.80
영천시	1.438	1.554	1.412	1.353	1.180	1.549	-7.31
상주시	1.298	1.391	1.302	1.176	1.241	1.238	-5.18
문경시	1.502	1.571	1.382	1.304	1.084	1.190	0.62
경산시	1.308	1.457	1.521	1.300	1.182	1.065	-1.09
군위군	1.551	1.239	1.333	1.360	1.179	1.233	-5.16
의성군	1.462	1.505	1.652	1.404	1.630	1.761	-6.14
청송군	1.376	1.548	1.380	1.531	1.090	1.623	-2.17
영양군	1.446	1.517	1.277	1.485	1.170	1.437	4.02
영덕군	1.602	1.542	1.225	1.631	1.219	1.488	0.26
청도군	1.631	1.081	1.083	0.975	1.056	1.009	-2.50
고령군	1.446	1.710	1.460	1.306	1.156	1.037	0.57
성주군	0.872	1.674	1.640	1.541	1.486	1.314	2.96
칠곡군	1.619	1.583	1.541	1.292	1.185	0.964	-8.52
예천군	1.470	1.544	1.431	1.272	1.527	1.541	-2.22
봉화군	1.440	1.623	1.600	1.566	1.512	1.480	-7.71
울진군	1.300	1.647	1.430	1.255	1.210	1.236	3.46
울릉군	1.652	1.164	0.870	0.745	0.767	1.170	-2.17

주: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며, 자료 작성 당시 2020년은 자료 부재로 2014~2019년 최근 5년간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2021k). 국가통계포털-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데이터파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21.6.10.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사망

□ 최근 5년간 전국 대비 조사망률 증가 추세

- 당해연도 인구 천 명당 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는 조사망률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은 전국 평균이 1.79%로 증가 추세
- 경상북도는 2.21%로 전국 평균(1.79%)보다 높으며,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증가 폭이 높아, 최근 5년간 조사망률 증가 추세

〈표 3-17〉 전국 17개 시·도별 조사망률 추이(2015~202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단위: 명, %) 연평균 증감률 (2015~2020)
전국	5.4	5.5	5.6	5.8	5.7	5.9	1.79
서울특별시	4.3	4.4	4.4	4.7	4.6	4.8	2.22
부산광역시	6.0	6.1	6.2	6.6	6.6	6.8	2.53
대구광역시	5.3	5.5	5.5	5.7	5.7	6.0	2.51
인천광역시	4.7	4.9	4.9	5.2	5.2	5.4	2.82
광주광역시	5.1	5.0	5.2	5.4	5.3	5.4	1.15
대전광역시	4.6	4.6	4.7	5.0	5.1	5.2	2.48
울산광역시	4.2	4.2	4.2	4.6	4.6	4.7	2.28
세종특별자치시	5.4	4.7	4.4	4.3	3.7	3.8	-6.79
경기도	4.3	4.4	4.5	4.7	4.6	4.8	2.22
강원도	7.4	7.4	7.5	7.8	7.8	8.0	1.57
충청북도	6.8	6.8	7.0	7.1	7.1	7.3	1.43
충청남도	7.0	7.0	7.3	7.5	7.4	7.6	1.66
전라북도	7.4	7.6	7.7	7.9	8.0	8.2	2.07
전라남도	8.7	8.7	8.9	9.2	9.0	9.4	1.56
경상북도	7.8	7.8	7.9	8.4	8.2	8.7	2.21
경상남도	6.4	6.3	6.4	6.8	6.6	6.9	1.52
제주특별자치도	5.5	5.6	5.8	6.0	6.0	5.9	1.41

주: 조사망률은 연간 총 사망자 수를 당해 연도 주민등록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 비로 나타낸 비율이며, 2020년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2021m). 국가통계포털-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H&co nn_path=I2 에서 2021.6.8.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최근 5년간 조사망률, 봉화군 증가 대비 예천군 감소 추세

- 2014~2019년 최근 5년간 23개 시·군 가운데, 3개 군 지역에서
는 조사망률이 감소한 반면, 나머지 20개 시·군에서는 증가 추세
 - 감소한 지역은 예천군이 -2.39%로 가장 감소 폭이 크고, 그다음으로 울릉군(-1.63%), 고령군(-0.57%)의 순
 - 가장 증가 폭이 큰 지역은 봉화군이 4.05%이며, 영양군(3.40%), 영주군(2.96%)의 순
- 최근 5년간 경상북도 조사망률의 연평균 증감률(1.53%)보다 높아 증가 추세가 현저히 나타나는 지역은 12개 시·군

〈표 3-18〉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조사망률 추이(2014~2019)

(단위: 명,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감률 (2014~2019)
경상북도	7.6	7.8	7.8	7.9	8.4	8.2	1.53
포항시	5.5	5.8	5.7	5.6	6.0	6.1	2.09
경주시	7.9	7.9	8.0	7.7	8.7	8.4	1.23
김천시	8.9	8.8	8.6	9.1	9.6	9.2	0.67
안동시	8.8	8.9	8.9	9.2	9.6	9.6	1.76
구미시	3.6	3.4	3.7	3.9	4.1	4.0	2.13
영주시	8.9	9.2	9.2	9.8	10.1	10.3	2.96
영천시	9.5	10.3	10.7	11.3	10.7	10.7	2.41
상주시	11.5	11.2	12.2	11.8	12.6	11.7	0.35
문경시	10.3	11.1	10.6	11.1	11.8	11.8	2.76
경산시	5.6	5.5	5.6	5.7	6.1	6.0	1.39
군위군	12.8	14.9	14.6	14.5	16.7	13.4	0.92
의성군	15.8	15.9	16.3	16.8	17.7	16.9	1.36
청송군	13.3	12.4	12.9	14.1	14.0	14.5	1.74
영양군	14.3	15.1	13.9	13.5	13.2	16.9	3.40
영덕군	13.0	13.1	13.9	14.5	14.5	14.7	2.49
청도군	13.4	13.9	13.2	13.4	14.2	13.6	0.30
고령군	10.7	9.8	10.9	11.0	11.7	10.4	-0.57
성주군	11.0	12.1	12.2	12.1	12.8	12.5	2.59
칠곡군	5.8	6.3	5.8	5.9	6.1	6.3	1.67
예천군	12.3	12.5	13.1	13.9	12.9	10.9	-2.39
봉화군	11.4	14.1	13.2	12.5	14.7	13.9	4.05
울진군	10.5	11.4	11.3	10.6	11.0	10.6	0.19
울릉군	7.6	7.2	6.4	7.1	7.8	7.0	-1.63

주: 조사망률은 연간 총 사망자 수를 당해 연도 주민등록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비율이며, 자료 작성 당시 2020년은 자료 부재로 2014~2019년 최근 5년간 자료를 토대로 작성.

자료: 통계청, (2021). 국가통계포털-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2 에서 2021.6.9.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라. 자연증감

□ 2020년 기준, 경상북도 자연감소 현저

- 2015~2020년 최근 5년간 조출생률에서 조사망률을 제한 수치인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 최근 5년간 전국 평균은 2020년 처음으로 -0.6%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지역은 9개 시·도로 17개 시·도의 과반수 이상
- 경상북도는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20년 기준 -3.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라남도(-4.2%) 다음으로 감소율이 높아,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이 심각

〈표 3-19〉 전국 17개 시·도별 자연증가율 추이(2015~2020)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3.2	2.5	1.4	0.5	0.1	-0.6
서울특별시	4.0	3.3	2.3	1.3	1.0	0.2
부산광역시	1.7	1.1	0.0	-1.0	-1.5	-2.4
대구광역시	2.6	1.9	0.9	0.1	-0.2	-1.4
인천광역시	4.2	3.3	2.1	1.6	1.2	0.1
광주광역시	3.4	3.0	1.8	0.9	0.5	-0.3
대전광역시	4.5	3.6	2.6	1.3	0.6	-0.1
울산광역시	5.9	5.1	3.9	2.4	2.0	1.2
세종특별자치시	9.5	9.9	9.0	8.3	8.0	6.2
경기도	4.9	4.0	2.9	2.2	1.7	1.1
강원도	-0.2	-0.9	-1.7	-2.4	-2.4	-2.8
충청북도	1.9	1.2	0.2	-0.5	-1.3	-1.9
충청남도	2.0	1.3	0.2	-0.7	-1.1	-1.9
전라북도	0.2	-0.7	-1.6	-2.5	-3.1	-3.6
전라남도	-0.8	-1.4	-2.4	-3.2	-3.2	-4.2
경상북도	0.5	-0.1	-1.2	-2.3	-2.7	-3.8
경상남도	2.5	1.8	0.7	-0.4	-0.9	-1.8
제주특별자치도	3.7	3.1	2.0	1.3	0.8	0.0

주: 자연증가율은 조출생률에서 조사망률을 빼서 산출한 수치로, 2020년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2021m). 국가통계포털-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H&co_nn_path=I2 에서 2021.6.8.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최근 5년간, 경상북도 전체 시·군의 83%는 지속적인 자연감소 추세

○ 2014~2019년 최근 5년간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자연증가율 추이를 보면,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지역이 19개 시·군으로 전체 23개 시·군의 83% 차지

○ 한편, 구미시와 경산시는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포항시와 칠곡군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감소

〈표 3-20〉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자연증가율 추이(2014~2019)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상북도	0.7	0.5	-0.1	-1.2	-2.3	-2.7
포항시	3.3	3.1	2.2	1.2	0.1	-0.7
경주시	-1.2	-1.2	-1.7	-2.4	-3.8	-4.1
김천시	-1.6	-1.4	-0.6	-1.6	-2.4	-3.0
안동시	-0.9	-0.2	-1.0	-2.1	-3.8	-4.1
구미시	8.2	8.0	6.6	5.0	3.9	2.9
영주시	-2.9	-3.2	-3.6	-4.8	-5.4	-6.6
영천시	-2.3	-3.1	-4.4	-5.5	-5.7	-4.3
상주시	-6.1	-5.7	-7.1	-7.4	-8.1	-7.3
문경시	-3.2	-4.1	-4.7	-5.8	-7.6	-7.5
경산시	4.3	4.2	4.2	2.5	1.1	0.3
군위군	-8.2	-10.8	-10.4	-10.4	-13.3	-10.1
의성군	-11.2	-11.3	-11.3	-12.6	-13.2	-12.0
청송군	-7.9	-7.2	-8.4	-9.2	-10.7	-9.9
영양군	-8.5	-10.0	-9.7	-8.9	-9.5	-12.6
영덕군	-7.7	-7.6	-9.7	-9.1	-10.5	-9.9
청도군	-10.0	-9.9	-9.4	-10.1	-10.8	-10.5
고령군	-3.3	-2.5	-4.9	-5.9	-7.4	-6.8
성주군	-4.6	-5.0	-5.5	-6.0	-7.2	-7.7
칠곡군	4.7	4.9	4.9	2.6	1.3	-0.6
예천군	-7.4	-6.8	-7.9	-9.0	-6.8	-4.7
봉화군	-5.3	-8.3	-7.7	-7.4	-10.1	-9.5
울진군	-3.2	-4.1	-5.4	-5.4	-6.1	-5.8
울릉군	-3.1	-1.7	-2.5	-3.9	-4.5	-2.4

주: 자연증가율은 조출생률에서 조사망률을 빼서 산출한 수치이며, 자료 작성 당시 2020년은 자료 부재로 2014~2019년 최근 5년간 자료를 토대로 작성.

자료: 통계청. (2021). 국가통계포털-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cnn_path=l2 에서 2021.6.9.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인구이동

□ 최근 5년간, 경상북도 인구의 순유출 지속

○ 2015~2020년 최근 5년간 인구의 순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인구의 순유출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8개 시·도로 17개 시·도의 절반을 차지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 2020년 기준, 경상북도의 순유출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큼

○ 2020년 기준, 순유출 지역은 11개 시·도이며, 이 가운데 경상북도의 순유출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큼.

〈표 3-21〉 전국 17개 시·도별 순이동 추이(2015~2020)

(단위: 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0	0	0	0	0	0
서울특별시	-137,256	-140,257	-98,486	-110,230	-49,588	-64,850
부산광역시	-13,560	-21,392	-28,398	-26,759	-23,354	-14,347
대구광역시	-12,940	-9,260	-11,936	-14,242	-23,673	-16,835
인천광역시	9,538	5,777	-1,670	-67	-2,337	-15,748
광주광역시	-9,272	-7,898	-8,118	-6,216	-3,875	-6,083
대전광역시	-20,616	-10,631	-16,175	-14,753	-16,342	-11,097
울산광역시	-80	-7,622	-11,917	-12,654	-10,172	-13,584
세종특별자치시	53,044	29,816	34,690	31,433	23,724	13,025
경기도	94,768	133,617	116,162	170,094	134,666	168,373
강원도	4,773	1,892	2,035	-3,854	1,661	5,457
충청북도	1,438	5,011	2,262	5,149	2,565	3,454
충청남도	10,272	15,318	19,401	10,084	-794	741
전라북도	-2,830	-4,419	-7,206	-13,773	-12,748	-8,494
전라남도	3,936	-3,205	-3,047	-8,030	-8,788	-9,754
경상북도	-577	-3,151	-5,581	-9,225	-4,571	-16,978
경상남도	5,105	1,772	3,979	-5,810	-9,310	-16,658
제주특별자치도	14,257	14,632	14,005	8,853	2,936	3,378

주: 순이동은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빼서 산출함.

자료: 통계청. (2021). 국가통계포털-시군구별 이동자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_A01&conn_path=I2 에서 2021.6.10.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15개 시·도로의 순유출 현상 지속

○ 2015~2020년 최근 5년간 경상북도와 타 시·도 간 순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경상북도 인구의 타 시·도로의 순유출 현상 지속

- 특히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순유출이 최근 5년간 지속
- 최근 3년 이내 기간 동안 순유입 지역에서 순유출로 전환된 지역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한편,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은 순유입이 발생한 지역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에 불과

〈표 3-22〉 경상북도와 타 시·도 간 순이동 추이(2015~2020)

(단위: 명)

전출지별	전입지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경상북도	-577	-3,151	-5,581	-9,225	-4,571	-16,978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1,365	-1,851	-3,217	-4,442	-4,952	-5,949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295	116	200	174	-80	-812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3,072	1,939	2,483	2,499	6,904	734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209	32	-136	-489	-391	-428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88	104	45	-15	-14	-42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594	-776	-873	-912	-656	-1,159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73	1,357	1,489	2,751	1,281	2,176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574	-389	-556	-561	-461	-546
경기도	경상북도	59	-1,676	-3,654	-5,884	-4,884	-7,589
강원도	경상북도	-70	-222	113	-59	-269	-734
충청북도	경상북도	-366	-731	-569	-1,285	-537	-1,230
충청남도	경상북도	-957	-1,035	-1,339	-1,274	-986	-1,253
전라북도	경상북도	-62	-15	-51	63	19	-192
전라남도	경상북도	29	10	57	-43	-242	-116
경상남도	경상북도	-86	431	790	637	798	358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328	-445	-363	-385	-101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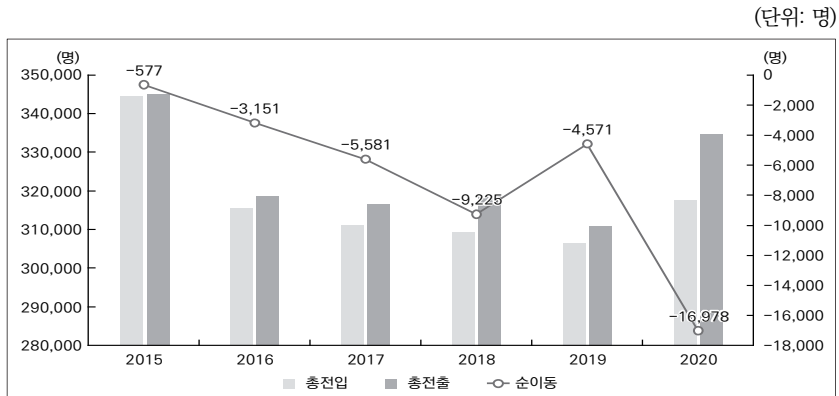
주: 순이동은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빼서 산출함.

자료: 통계청. (2021p). 국가통계포털-전출지/전입지(시도)별 이동자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3_A01&conn_path=12 에서 2021.6.11.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경상북도, 2016년 이후 순유출 규모 증가

- 2015~2020년 최근 5년간 경상북도 인구의 유출 폭은 증가 추세이며, 2018년 급증한 이후 2019년에는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2020년 더욱 큰 폭으로 급증
- 2020년 기준 약 17,000명의 인구가 순유출

[그림 3-12] 경상북도 전출입 및 순이동자 수 추이(2015~2020)



주: 순이동은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빼서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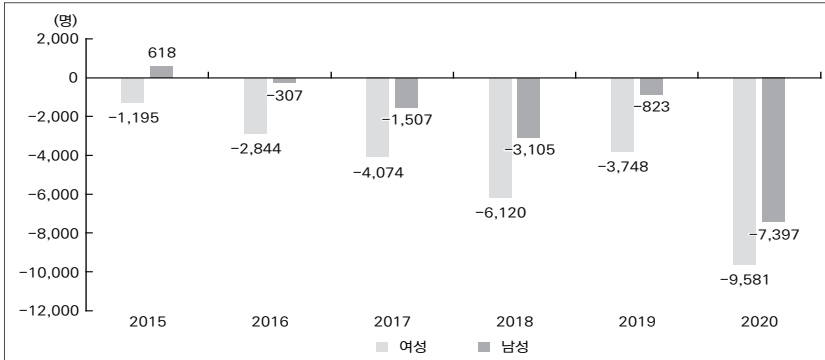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1). 국가통계포털-시군구별 이동자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_A01&conn_path=I2 에서 2021.6.10.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경상북도, 여성의 순유출 규모 증가

- 같은 기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순유출 규모 급증 추세
- 2018년 급증한 이후, 2019년에는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2020년 순유출 규모 확대
- 남성의 경우에도 2015년 순유입을 제외하면 매년 순유출이 증가하는 추세

[그림 3-13] 경상북도 성별 순이동자 수 추이(2015~2020)

(단위: %)



주: 순이동은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빼서 산출함.

자료: 통계청. (2021i). 국가통계포털-시군구/성별 이동자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_A02&conn_path=I2 에서 20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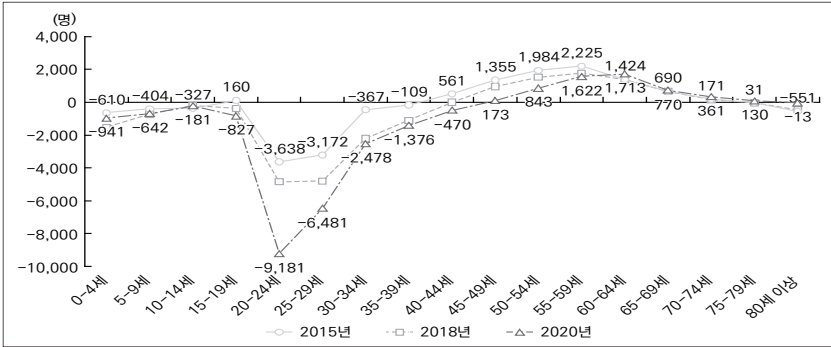
14.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경상북도, 30대 이하 순유출 및 40대 이상 순유입

- 2015~2020년 연령별 인구 순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30대 이하 및 80세 이상에서는 지속적인 순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40~44세는 2018년 이후부터 순유출이 증가한 반면, 45~79세는 순유입 규모가 큼.

[그림 3-14] 경상북도 연령별 순이동자 수 추이(2015~2020)

(단위: 명)



주: 순이동은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빼서 산출함.

자료: 통계청. (2021g). 국가통계포털-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conn_path=I2 에서 2021.6.14.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23> 경상북도 성 및 연도별 순이동 추이(2015~2020)

(단위: 명)

연령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계	-1,195	618	-2,844	-307	-4,074	-1,507	-6,120	-3,105	-3,748	-823	-9,581	-7,397
0-4세	-259	-351	-369	-329	-556	-625	-691	-784	-275	-453	-450	-491
5-9세	-150	-254	-161	-26	-270	-258	-315	-392	-124	-268	-369	-273
10-14세	-180	-147	-37	5	-168	-100	-150	-33	-89	-40	-146	-35
15-19세	-210	370	-294	234	-290	50	-338	-50	-361	229	-693	-134
20-24세	-2,104	-1,534	-2,969	-1,968	-3,101	-1,354	-3,531	-1,290	-3,903	-1,597	-5,891	-3,290
25-29세	-1,179	-1,993	-1,466	-2,197	-1,851	-2,137	-2,180	-2,581	-1,794	-2,628	-2,821	-3,660
30-34세	19	-386	-211	-756	-626	-974	-906	-1,281	-554	-919	-843	-1,635
35-39세	-175	66	-115	6	-277	-299	-545	-511	-78	71	-521	-855
40-44세	209	352	171	279	17	95	-5	-6	46	90	-152	-318
45-49세	542	813	495	731	549	529	489	487	528	539	166	7
50-54세	908	1,076	740	1,035	733	882	755	824	830	1,039	449	394
55-59세	915	1,310	805	1,169	1,009	1,173	773	1,041	907	1,247	656	966
60-64세	567	857	553	926	562	1,054	493	964	704	1,146	490	1,223
65-69세	271	419	186	540	295	431	210	524	278	582	297	473
70-74세	3	168	176	210	94	133	102	143	200	170	143	218
75-79세	39	-8	-19	-38	70	5	22	-53	61	45	82	48
80세 이상	-411	-140	-329	-128	-264	-112	-303	-107	-124	-76	22	-35

주: 순이동은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빼서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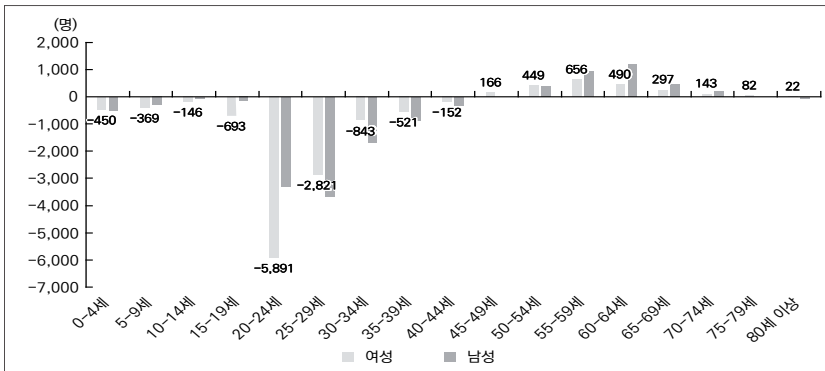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1g). 국가통계포털-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conn_path=I2 에서 2021.6.14.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경상북도, 20대 순유출 및 60대 순유입 현상

- 2020년 기준으로 경상북도는 44세 이하 인구에서 순유출, 45세 이상 인구에서 순유입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남녀 모두 20대 순유출이 높으며, 여성의 경우는 20~24세, 남성의 경우는 25~29세 비중이 높음. 한편, 순유입 인구는 55~64세 연령대 비중이 높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음.

[그림 3-15] 경상북도 성 및 연령별 순이동자 수 현황(2020)

(단위: 명)



주: 순이동은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빼서 산출함.

자료: 통계청. (2021g). 국가통계포털-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conn_path=I2 에서 2021.6.14.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최근 5년간, 경상북도 20개 시·군에서 순유출

- 2015~2020년 최근 5년간 인구의 순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순유출 경향을 보이는 지역이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20개 지역
 - 순유출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포항시, 구미시, 영주시, 영양군, 고령군 5개 지역

- 순유출 후 순유입으로 전환된 지역은 예천군 1곳에 불과하며, 지속적으로 순유입 추세에 있는 지역은 영천시와 경산시 2곳임

□ 2020년 기준, 경상북도에서 구미시의 순유출이 가장 큼

- 2020년 기준, 순유출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은 20개 시·군으로 구미시가 가장 현저하며, 그다음으로 포항시, 상주시, 칠곡군의 순
- 순유입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은 예천군, 경산시, 영천시 3개 시·군에 불과

〈표 3-24〉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순이동 추이(2015~2020)

(단위: 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상북도	-577	-3,151	-5,581	-9,225	-4,571	-16,978
포항시	-1,625	-4,186	-3,680	-3,972	-2,744	-3,527
경주시	-1,587	25	-961	-121	-537	-862
김천시	4,781	2,145	866	-1,473	513	-199
안동시	495	-354	-2,218	-3,460	-1,552	-329
구미시	-3,907	-2,874	-229	-2,040	-3,114	-4,424
영주시	-729	-152	-352	-1,091	-1,065	-1,267
영천시	217	292	636	1,527	1,245	155
상주시	13	91	-88	119	1,098	-2,604
문경시	123	-749	-992	-889	882	-302
경산시	1,746	-18	792	1,239	1,938	841
군위군	202	290	289	21	172	-297
의성군	-136	118	135	173	267	-185
청송군	125	111	-48	-57	-29	-48
영양군	-120	-27	-78	37	-154	-94
영덕군	-103	218	-159	-16	-399	-638
청도군	135	223	211	181	308	-110
고령군	-360	-201	-294	-541	-384	-692
성주군	261	401	198	-155	-338	-256
칠곡군	126	-275	-2,640	-2,229	-1,742	-1,997
예천군	-153	1,838	3,512	4,360	2,066	872
봉화군	47	-34	-28	-91	-375	-285
울진군	-35	97	-478	-640	-440	-217
울릉군	-93	-130	25	-107	-187	-513

주: 순이동은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빼서 산출함.

자료: 통계청, (2021). 국가통계포털-시군구별 이동자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_A01&conn_path=I2 에서 2021.6.10.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3절 광주전남: 광주전남연구원

1. 지역 인구 현황 및 인구구조 관련 주요 이슈

□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급속한 초고령화 그리고 인구 유출의 가속화

- 광주·전남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인구 자연 감소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과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과 시·도민 삶의 질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당면과제
- 기존의 단기적인 지원정책이나 개발정책에서 벗어나 보육, 고용, 복지, 산업 등을 융합한 종합적이면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는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으로 인구 변화에 적응하고, 감소세를 완화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기

가. 광주·전남 인구 현황

1) 광주광역시 인구 현황

□ 인구구조 변화

- 광주광역시 총인구는 2020년 기준 1,450,062명으로 전국 51,829,023명의 2.80%를 차지하고, 2014년 1,475,884명으로 정점 도달 이후, 지속 감소
 - 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로 지역 간 격차 심화 및 지역 경제성장 둔화

- 자치구별 인구는 북구가 430,579명(29.68%)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102,897명(7.10%)으로 가장 적음

〈표 3-25〉 최근 10년간 광주광역시 인구 추이

(단위: 명, %)

구분	인구수			전년 대비	증감률
	계	남	여		
2010	1,454,636	721,780	732,856	▲ 20,996	1.46
2011	1,463,464	725,606	737,858	▲ 8,828	0.61
2012	1,469,216	728,406	740,810	▲ 5,752	0.39
2013	1,472,910	730,216	742,694	▲ 3,694	0.25
2014	1,475,884	731,339	744,545	▲ 2,974	0.20
2015	1,472,199	729,662	742,537	▼ 3,685	-0.25
2016	1,469,214	728,137	741,077	▼ 2,985	-0.20
2017	1,463,770	725,295	738,475	▼ 5,444	-0.37
2018	1,459,336	722,581	736,755	▼ 4,434	-0.30
2019	1,456,468	720,740	735,728	▼ 2,868	-0.20
2020	1,450,062	717,348	732,714	▼ 6,406	-0.44

자료: 통계청. (2021x).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에서 2021.6.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0년과 인구구조를 비교해 보면, 30대와 40대 인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 사이 연령층은 감소
 - 최근 10년간 광주광역시 인구 증감률은 2011년에 0.61%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2020년은 -0.44%로 가장 크게 감소함
- 2020년 기준, 광주광역시 출생인구는 7,318명으로 전국 272,337명의 2.7% 수준이며, 출생 건수는 2012년 14,392명으로 정점 이후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다 2021년 9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상황

- 2018년에는 1만 명 이하인 9,105명으로 급감했으며, 2012년과 비교하면 7,074명(49.2%) 가량 감소
-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국 평균(0.84명)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

□ 이동 인구 현황

- 2019년 광주광역시의 순이동인구(전입인구-전출인구)는 3,875명 감소
- 전입인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대부분 전라남도과 수도권에서 전입하는 추세가 지속
 - 전라남도에서 전입한 비율은 49.5%에서 54.8%로 증가 추세
 - 수도권에서 전입한 비율은 23.1%에서 28.7%로 증가 추세
 - ※ 청년 및 7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으며, 주로 가족 및 직업 요인에 따라 전입
- 전출인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대부분 전라남도과 수도권으로 전출
 - 전라남도로 전출한 비율은 45.7%에서 49.2%로 증가 추세
 - 수도권으로 전출한 비율은 28.5%에서 32.5%로 증가 추세
 - ※ 청년의 전출 비중이 높으며, 주로 직업 및 가족 요인에 따라 전출

2) 전라남도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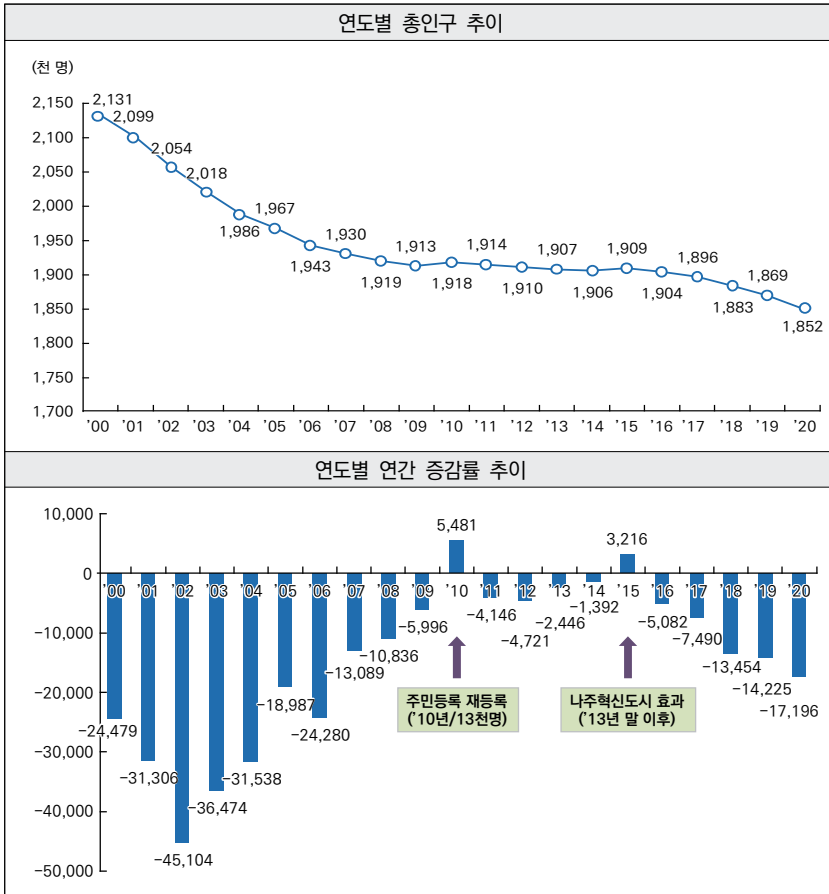
□ 인구 현황

- 전라남도 인구는 2020년 1,851,549명으로 2000년 1,918,485명 대비 12.2% 감소
 - 2013년부터 자연감소 인원이 증가하는 데드크로스(Dead-cross)가 발생했고, 출생아 수 감소와 2014년부터 초고령사회²⁾로의 진입으로 자연 감소세 가속
 - ※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14년 20.14%, 2017년 21.54%에서 2019년에는 22.61%, 2020년에는 23.45%로 증가
- 인구 증감률은 2000년 대비 -13.1%, 2010년 대비 -3.5%, 2019년 대비 -0.9%로 감소세 지속
 - 2019년 대비 인구 감소율은 감소지역 12개 시·도 중 울산광역시(-1.05%), 경상북도(-0.99%)에 이어 3번째 수준
 - ※ 광주광역시 -0.44%로 11번째 수준
 - 전라남도 인구는 전국 인구 대비 3.6% 수준이며, 전국 9위 규모
 - 가임여성 감소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아 자연감소의 주요 원인
- 전라남도의 인구 감소는 자연감소와 함께 사회적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가속화
 - 혁신도시 이전 효과가 반영된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사회적 인구 유출 발생

2)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임.

[그림 3-16] 전라남도 인구 현황(2000~2020)

(단위: 명)



자료: 전라남도. (2020.5.). 2020년 전라남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p.1. <https://www.jeonnam.go.kr/T6461183/boardView.do?seq=30&menuId=jeonnam0923030000&boardId=T6461183> 에서 2021.6.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26〉 전라남도 인구 현황(2000~2020)

(단위: 명)

연도	총인구	연간 증감	연도	총인구	연간 증감
2000	2,130,614	-24,479	2011	1,914,339	-4,146
2001	2,099,308	-31,306	2012	1,909,618	-4,721
2002	2,054,204	-45,104	2013	1,907,172	-2,446
2003	2,017,730	-36,474	2014	1,905,780	-1,392
2004	1,986,192	-31,538	2015	1,908,996	3,216
2005	1,967,205	-18,987	2016	1,903,914	-5,082
2006	1,942,925	-24,280	2017	1,896,424	-7,490
2007	1,929,836	-13,089	2018	1,882,970	-13,454
2008	1,919,000	-10,836	2019	1,868,745	-14,225
2009	1,913,004	-5,996	2020	1,861,549	-17,196
2010	1,918,485	5,481			

자료: 전라남도. (2020.5.). 2020년 전라남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p.1. <https://www.jeonnam.go.kr/T6461183/boardView.do?seq=30&menuId=jeonnam0923030000&boardId=T6461183> 에서 2021.6.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전라남도 인구의 사회증감 현황을 보면, 2010년 1만 명 가량 감소하던 추세가 완화되다가 2018년부터 약 8천 명 수준으로 다시 증가

- 가장 큰 전출 계층은 청년층(20~39세)이며 주요 전출지는 서울·광주·경기권으로, 취업·진학이 전출의 주요 사유로 유추됨
- 2019년 기준 인구이동은 전입이 224,489명, 전출이 233,271명으로 순이동은 -8,788명이며, 이 중 20~39세가 70~80% 차지
 - ※ 타 시·도에서 전라남도로의 전입자는 광주광역시 37,142명으로 38.4%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경기도 15,942명(16.5%), 서울 13,894명(14.3%), 전라북도 5,448명(5.62%) 순이며, 세종에서의 전입은 825명(0.85%)으로 가장 낮은 수준
- 2019년 기준 일부 연령층(40~74세) 인구 순유입(4,533명) 발생

〈표 3-27〉 전라남도 인구의 사회증감 현황(2000~2019)

(단위: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회증감	-10,061	-5,222	-5,054	-2,306	-596	3,936	-3,205	-3,047	-8,030	-8,788

주: 청년층 전출자 비율은 2015년(84.0%), 2016년(81.4%), 2017년(74.9%), 2018년(72.7%), 2019년(72.0%)으로 감소함.

자료: 전라남도. (2020.5.). 2020년 전라남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p.2. <https://www.jeonnam.go.kr/T6461183/boardView.do?seq=30&menuId=jeonnam0923030000&boardId=T6461183> 에서 2021.6.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광주·전남 인구 전망

1) 광주광역시 인구 전망

□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인구추계 및 전망

○ 최근의 인구 추세가 지속된다면, 출산을 하락과 지속적인 순이동 감소의 영향으로 광주광역시 인구는 지속적 감소가 전망됨.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5~2035) 결과, 2015년 150만 6천 명에서 정점을 이룬 후, 2035년 145만 7천 명으로 2015년 대비 3.2% 감소하며, 전국 대비 인구 비중 또한 2015년 3.0%에서 2035년 2.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2017~2037) 보고서(2020. 11.)에 의하면, 자치구별로 추계기간 초반에는 남구, 북구, 광산구에서 일시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동구와 서구는 추계기간 동안 감소 추세가 지속될 전망

〈표 3-28〉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총인구 추계 결과(2017~2037)

(단위: 명, %)

연도	합계	자치구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2017	1,495,392	101,492	307,225	219,308	449,660	417,707
2020	1,487,675	100,534	299,348	219,839	444,976	422,978
2025	1,451,797	95,969	291,698	218,213	430,960	414,957
2030	1,418,825	93,197	285,688	215,702	420,654	403,584
2035	1,383,371	91,699	279,812	212,560	410,039	389,261
2037	1,367,106	91,138	277,258	210,881	405,206	382,623
증감률(%)	-8.6	-10.2	-9.8	-3.8	-9.9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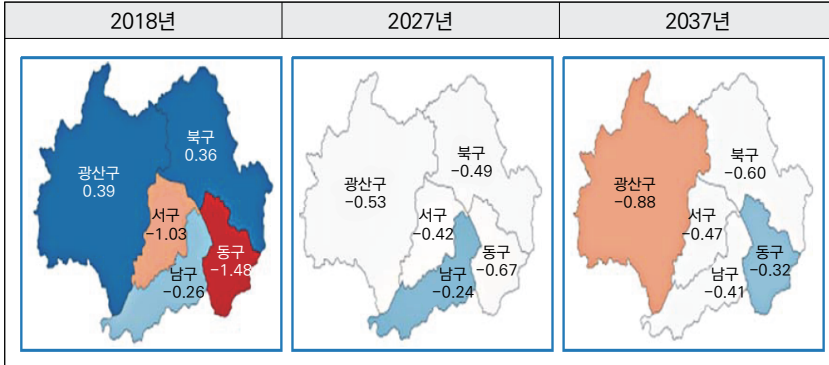
자료: 광주광역시. (2020.11.).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2017~2037년)[통계표]. p.38.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70106&pageId=ww194&searchSn=5 에서 2021.6.7.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광주광역시의 인구성장률은 추계기간 동안 마이너스(-) 인구 성장이 지속되나, 2037년 0.06%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전망

- 출생·사망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자연증가율은 2018년 0.0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마이너스(-) 자연증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
- 자치구의 경우, 남구는 2021년까지 성장 이후 2022년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
- 남구 이외의 4개 자치구는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는데, 동구와 서구는 인구 감소 폭이 감소한 반면, 북구와 광산구는 인구 감소 폭이 증가함.

[그림 3-17]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인구성장률(전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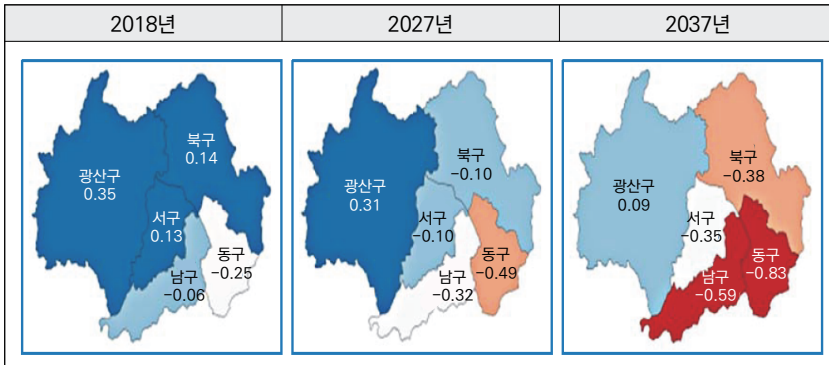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광주광역시. (2020.11.).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2017~2037년). p.15.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70106&pageId=www194&searchSn=5 에서 2021.6.7.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18]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자연증가율

(단위: %)



자료: 광주광역시. (2020.11.).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2017~2037년). p.15.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70106&pageId=www194&searchSn=5 에서 2021.6.7.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유소년인구(0~14세)는 2017년 21만 5천 명(14.4%)에서 2037년 14만 5천 명(10.6%)으로 감소 전망

- 2037년 유소년인구(0~14세) 구성비는 광산구 13.3%, 남구 10.1%, 북구 9.7%, 서구 9.6%, 동구 7.0%의 순으로 전망됨.
- 전반적으로 유소년인구 규모가 감소 추세로 남구가 -26.8%로 증감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며, 그다음으로 동구 -30.5%, 광산구 -32.1%, 북구 -33.0%, 서구 -37.3%의 순

〈표 3-29〉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유소년인구 추계 결과(2017~2037)

(단위: 명, %)

연도	합계	자치구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2017	214,718	9,244	42,607	29,001	58,891	74,975
2020	197,713	8,924	37,017	28,388	54,292	69,092
2025	169,352	7,733	30,826	25,371	46,342	59,080
2030	148,729	6,706	27,056	21,815	40,826	52,326
2035	143,750	6,424	26,399	20,949	39,258	50,720
2037	144,747	6,424	26,720	21,232	39,475	50,896
증감률(%)	-32.6	-30.5	-37.3	-26.8	-33.0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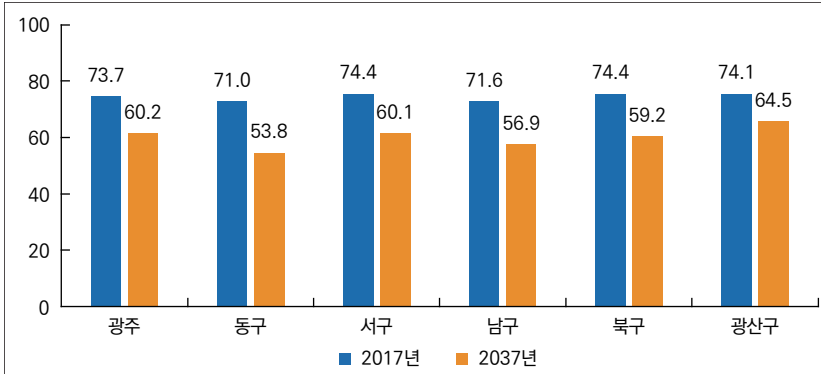
자료: 광주광역시. (2020.11.).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2017~2037년)[통계표]. p.50.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70106&pageId=ww194&searchSn=5 에서 2021.6.7.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7년 73.7%에서 2037년 60.2%로 13.5%p 낮아질 전망

- 2017년 생산연령인구 구성비가 광주광역시 전체(73.7%)보다 높은 자치구는 서구와 북구가 각각 74.4%, 광산구 74.1%의 순이며, 2037년에 광주광역시 전체(60.2%)보다 높은 자치구는 광산구가 64.5%로 유일하게 나타남.
- 생산연령인구 감소율은 동구가 -31.9%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 북구 -28.2%, 서구 -27.0%, 남구 -23.6%, 광산구 -20.2% 순으로 감소

[그림 3-19]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계 결과(2017~2037)

(단위: %)



자료: 광주광역시. (2020.11.).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2017~2037년)[통계표]. p.53.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70106&pageId=ww194&searchSn=5 에서 2021.6.7.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기대수명의 지속적 증가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17만 9천 명(12.0%)에서 2028년 20.9%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37년 29.2%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됨.

- 고령인구 비중은 2018년 동구(20.5%)를 시작으로 2027년 광산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20.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 전망
- 2037년 고령인구 비중은 동구에서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광산구의 경우 22.1%로 광주광역시 전체(29.2%)에 비해 7.1%p 낮은 수준으로 전망됨.
- 동구의 고령인구 비중이 19.3%로 가장 크게 증가하며, 북구 18.5%, 서구 18.4%, 남구 17.9%, 광산구 14.1%의 순

〈표 3-30〉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고령인구 추계 결과(2017~2037)

(단위: 명, %)

연도	합계	자치구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2017	179,281	20,216	36,106	33,221	56,369	33,369
2020	203,661	21,867	41,385	37,417	64,747	38,245
2025	260,793	25,717	53,734	47,355	83,328	50,659
2030	319,706	29,737	66,404	56,983	101,829	64,753
2035	377,313	33,946	78,937	66,082	119,161	79,187
2037	399,688	35,693	83,834	69,689	125,727	84,745
증감률(%)	17.2	19.3	18.4	17.9	18.5	14.1

자료: 광주광역시. (2020.11.).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2017~2037년)[통계표]. p.54.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70106&pageId=ww194&searchSn=5 에서 2021.6.7.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전라남도 인구 전망

□ 전라남도 시·군별 인구추계 및 전망

○ 전라남도의 2037년 총인구는 1,687천 명으로 2017년 1,795천 명 대비 108천 명(-6.0%) 감소 전망

- 전라남도의 인구는 매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2017년 대비 2037년 인구가 증가하는 지자체는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흥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신안군 등 11개로 나타나며 나머지 11개 지자체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됨.

〈표 3-31〉 전라남도 22개 시·군별 인구추계 결과(2017~2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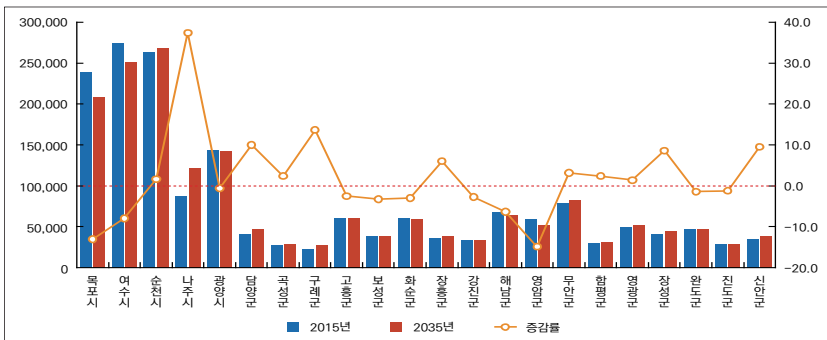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7	2020	2025	2030	2035	2037
전라남도	1,795,036	1,764,193	1,732,133	1,715,046	1,696,424	1,686,609
목포시	234,762	227,815	216,111	208,040	200,539	197,324
여주시	272,202	265,113	255,988	249,130	242,191	239,027
순천시	266,932	267,907	265,120	262,351	258,710	256,668
나주시	104,309	113,628	123,593	130,015	133,607	134,268
광양시	144,279	145,431	145,714	144,231	142,208	141,172
담양군	44,013	43,232	43,293	44,002	44,720	44,978
곡성군	28,998	27,647	26,597	26,656	26,941	27,021
구례군	24,471	23,817	24,376	25,010	25,660	25,892
고흥군	61,246	59,306	57,981	57,441	57,329	57,309
보성군	40,142	37,688	36,241	36,016	36,023	36,033
화순군	60,782	58,554	56,695	55,934	55,688	55,612
장흥군	36,011	34,082	33,557	34,084	34,391	34,445
강진군	33,889	31,718	30,296	29,937	29,731	29,668
해남군	67,557	63,763	61,180	59,921	58,848	58,448
영암군	57,833	54,854	51,495	50,204	49,211	48,864
무안군	81,416	80,252	77,970	76,817	75,534	74,923
함평군	31,053	29,458	28,958	29,187	29,518	29,640
영광군	49,878	48,663	47,741	47,121	46,681	46,496
장성군	41,508	41,523	41,667	42,312	43,045	43,301
완도군	48,454	47,144	46,098	45,428	44,782	44,510
진도군	29,510	28,399	27,479	27,073	26,811	26,724
신안군	35,791	34,199	33,983	34,136	34,256	34,286

자료: 전라남도. (2020). 2017~2037 전남 시군별 장래인구특별추계[통계표]. p.68~69. <https://www.jeonnam.go.kr/M4695/boardView.do?seq=1915574&menuId=jeonnam0508070000&boardId=M4695> 에서 2021.6.11.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20] 전라남도 22개 시·군별 인구추계 결과(2017~2037)

(단위: 명, %)



자료: 전라남도. (2020). 2017~2037 전남 시군별 장래인구특별추계. p.26. <https://www.jeonnam.go.kr/M4695/boardView.do?seq=1915574&menuId=jeonnam0508070000&boardId=M4695> 에서 2021.6.11.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전라남도는 2017년부터 마이너스(-) 인구 성장이 시작된 후 2027년까지 지속적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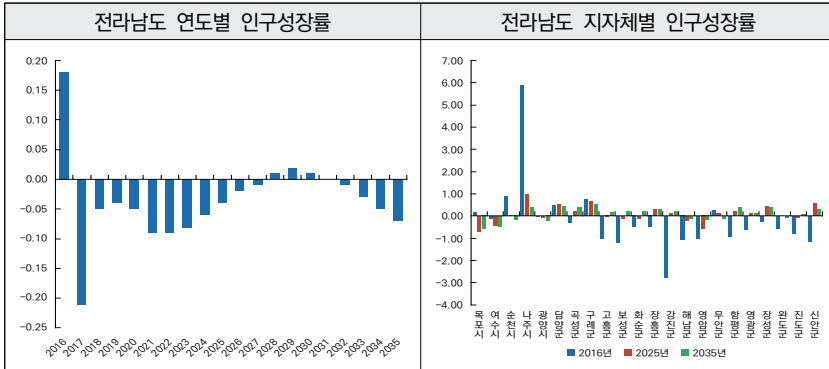
- 2028~2031년은 소폭 증가하나, 2032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

○ 나주시의 경우 혁신도시 효과로 인한 전입인구 증가로 인해 인구 성장률이 타 지자체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게 전망되며, 광주광역시에 인접한 담양군의 경우, 추계기간 동안 지속적인 인구 성장을 보임.

- 반면, 영암군은 조선업 악화의 영향으로 전출인구 증가에 따른 마이너스(-) 인구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순천시와 무안군의 인구 감소는 각각 2031년과 2033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전라남도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 현상이 늦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광양시의 경우 전라남도의 지자체 중 유일하게 모든 추계기간 동안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은 자연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그림 3-21] 전라남도 연도별/지자체별 인구성장률

(단위: %)



주: 전라남도의 연도별 인구성장률(좌측)은 2016~2035년을, 전라남도 지자체별 인구성장률(우측)은 2016년을 기점으로 2025년, 2035년으로 시점을 분류하여 차이를 살펴본 수치임.

자료: 전라남도, (2020). 2017~2037 전남 시군별 장래인구특별추계. p.29. <https://www.jeonnam.go.kr/M4695/boardView.do?seq=1915574&menuId=jeonnam0508070000&boardId=M4695> 에서 2021.6.11.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전라남도의 유소년인구는 2035년 179천 명으로 2015년 240천 명 대비 61천 명(-25.3%)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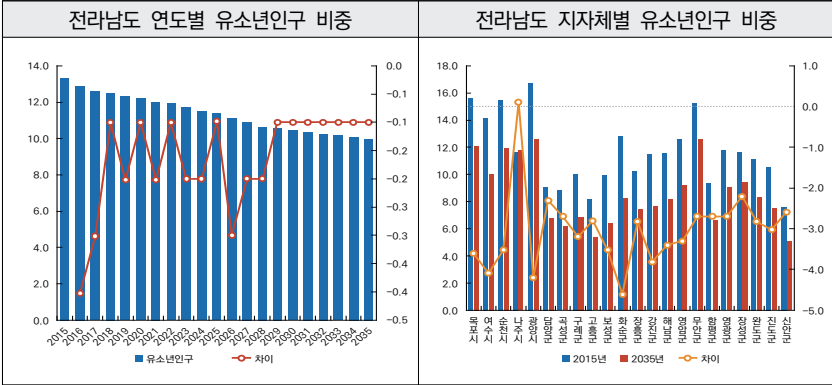
- 2035년 유소년인구 비중은 10.0%로 2015년 대비 3.3%p 감소 전망
- 2035년 유소년인구는 순천시가 32천 명으로 가장 많고, 곡성군이 2천 명으로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순천시 32천 명, 여수시 25천 명, 목포시 25천 명, 광양시 18천 명 등에서 유소년인구가 많으며, 곡성군, 구례군, 신안군, 함평군 등은 약 2천 명 수준의 유소년인구가 분포할 것으로 추계됨.

- 2035년 유소년인구 비중은 무안군이 12.6%로 가장 높고 신안군이 5.1%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나주시의 경우 유일하게 2035년 유소년인구 비중이 2015년 유소년인구 비중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3-22] 전라남도 연도별/지자체별 유소년인구 비중

(단위: %)



주: 전라남도의 연도별 유소년인구 비중(좌측)은 2015~2035년을, 전라남도 지자체별 유소년인구 비중(우측)은 2015년과 2035년으로 시점을 분류하여 차이를 살펴본 수치임.

자료: 전라남도. (2020). 2017~2037 전남 시군별 장래인구특별추계. p.42. <https://www.jeonnam.go.kr/M4695/boardView.do?seq=1915574&menuId=jeonnam0508070000&boardId=M4695> 에서 2021.6.11.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32〉 전라남도 22개 시·군별 유소년인구 추계 결과(2017~2037)

(단위: 명)

구분	2017	2020	2025	2030	2035	2037
전라남도	228,103	207,807	178,188	152,558	144,567	144,586
목포시	35,060	31,401	25,791	21,350	20,268	20,277
여수시	36,630	32,537	26,750	21,998	20,433	20,410
순천시	39,430	37,016	32,562	27,955	26,436	26,520
나주시	13,697	15,221	15,902	15,163	15,013	15,145
광양시	22,773	21,102	18,448	15,949	15,153	15,060
담양군	3,838	3,427	3,001	2,727	2,631	2,635
곡성군	2,327	1,935	1,594	1,428	1,376	1,387
구례군	2,317	1,933	1,642	1,415	1,366	1,379
고흥군	4,649	4,043	3,227	2,653	2,486	2,498
보성군	3,649	2,853	2,206	1,898	1,776	1,762
화순군	6,957	5,914	4,659	3,984	3,824	3,857
장흥군	3,440	3,004	2,565	2,232	2,180	2,201
강진군	3,481	2,848	2,245	1,893	1,772	1,757
해남군	7,396	6,232	4,929	3,984	3,554	3,506
영암군	6,737	5,754	4,692	4,019	3,664	3,609
무안군	11,991	11,343	9,809	8,343	7,989	7,983
함평군	2,704	2,150	1,833	1,562	1,483	1,484
영광군	5,645	5,120	4,513	3,986	3,726	3,704
장성군	4,664	4,286	3,818	3,483	3,350	3,353

구분	2017	2020	2025	2030	2035	2037
완도군	5,200	4,774	4,040	3,325	3,059	3,045
진도군	2,924	2,623	2,131	1,715	1,593	1,587
신안군	2,594	2,291	1,831	1,496	1,435	1,427

자료: 전라남도. (2020). 2017~2037 전남 시군별 장래인구특별추계[통계표]. p.43. <https://www.jeonnam.go.kr/M4695/boardView.do?seq=1915574&menuId=jeonnam0508070000&boardId=M4695> 에서 2021.6.11.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전라남도의 생산가능인구는 2035년 947천 명으로 2015년 1,187천 명 대비 240천 명(-20.2%) 감소 전망

- 2035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53.1%로 2015년 66.1% 대비 13.0%p 감소하며, 2035년 핵심경제활동인구(25~49세)는 396천 명으로 2015년 582천 명 대비 186천 명(-31.9%) 감소 전망

- 2035년 생산가능인구는 순천시가 155천 명으로 가장 많으며, 구례군이 35.5%로 가장 낮은 것으로 추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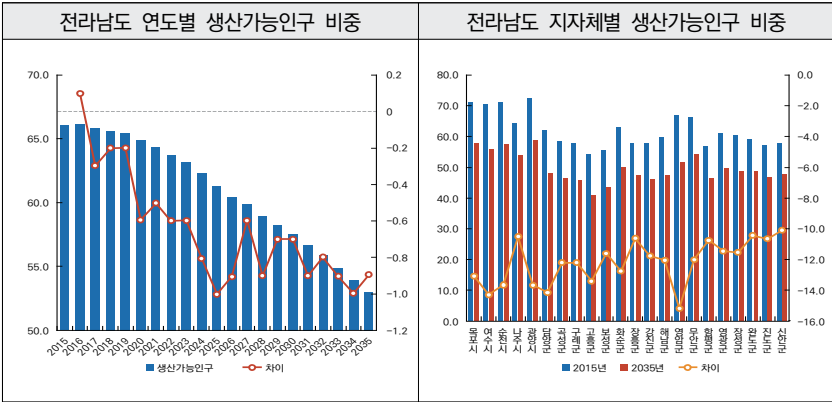
※ 순천시(155천 명), 여수시(141천 명), 목포시(122천 명), 광양시(85천 명) 등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많으나, 구례군, 곡성군, 진도군, 함평군 등에서는 13,000~15,000명 정도로 추계됨.

- 2035년 지자체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광양시가 58.8%로 가장 높고, 고흥군이 40.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광양시(58.8%), 목포시(58.2%), 순천시(57.5%), 여수시(56.0%), 무안군(54.4%) 등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고흥군(40.8%), 보성군(43.6%), 구례군(45.8%), 강진군(46.0%), 함평군(46.3%) 등은 생산가능인구가 40%대로 낮을 것으로 추계됨.

[그림 3-23] 전라남도 연도별/지자체별 생산가능인구 비중

(단위: %)



주: 전라남도의 연도별 생산가능인구 비중(좌측)은 2015~2035년을, 전라남도 지자체별 생산가능인구 비중(우측)은 2015년과 2035년으로 시점을 분류하여 차이를 살펴본 수치임.

자료: 전라남도. (2020). 2017~2037 전남 시군별 장래인구특별추계. p.45. <https://www.jeonnam.go.kr/M4695/boardView.do?seq=1915574&menuId=jeonnam0508070000&boardId=M4695> 에서 2021.6.11.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33〉 전라남도 22개 시·군별 생산가능인구 추계 결과(2017~2037)

(단위: 명)

구분	2017	2020	2025	2030	2035	2037
전라남도	1,181,784	1,148,843	1,078,573	1,010,335	921,976	880,543
목포시	165,803	158,815	144,089	132,682	119,326	113,384
여수시	189,592	181,801	167,283	153,643	137,903	130,717
순천시	189,714	188,894	179,121	167,624	152,246	145,266
나주시	67,728	73,817	77,742	78,513	75,609	73,309
광양시	104,791	105,101	101,640	95,230	85,983	82,259
담양군	27,435	26,435	24,890	23,464	21,847	21,015
곡성군	17,149	16,158	14,651	13,722	12,672	12,119
구례군	14,170	13,589	13,307	12,656	11,668	11,189
고흥군	32,551	30,778	28,427	26,060	23,629	22,506
보성군	21,985	20,281	18,510	17,220	15,743	15,028
화순군	38,634	36,997	34,370	31,542	28,546	27,258
장흥군	20,892	19,276	18,227	17,732	16,573	15,899
강진군	19,453	17,759	15,940	14,778	13,493	12,880
해남군	39,920	36,858	33,414	30,814	27,887	26,557
영암군	38,237	35,709	31,653	28,953	26,160	24,926
무안군	54,130	52,895	49,529	46,931	42,902	40,972
함평군	17,750	16,571	15,464	14,723	13,655	13,119
영광군	30,322	29,194	27,389	25,560	23,542	22,561
장성군	25,122	25,056	24,020	22,887	21,408	20,593
완도군	28,649	27,405	25,610	24,162	22,252	21,299

구분	2017	2020	2025	2030	2035	2037
진도군	17,104	16,278	14,964	13,998	12,812	12,233
신안군	20,653	19,176	18,333	17,441	16,120	15,454

자료: 전라남도. (2020). 2017~2037 전남 시군별 장래인구특별추계[통계표]. p.46~47. <https://www.jeonnam.go.kr/M4695/boardView.do?seq=1915574&menuId=jeonnam0508070000&boardId=M4695> 에서 2021.6.11.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전라남도의 고령인구는 2035년 658천 명으로, 2015년 370천 명 대비 288천 명(78.0%) 증가 전망

- 전라남도는 2012년에 초고령사회에 기 진입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 고령화율이 36.9%에 달해 2015년 대비 16.3%p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 2035년 고령인구는 여수시가 86천 명으로 가장 많고, 구례군이 13천 명으로 가장 적을 것으로 추계됨.

※ 고령인구 수는 여수시(86천 명), 순천시(82천 명), 목포시(62천 명), 나주시(42천 명) 등에서 높게 나타나며, 구례군, 진도군, 곡성군, 함평군 등은 13,000~15,000명 수준으로 추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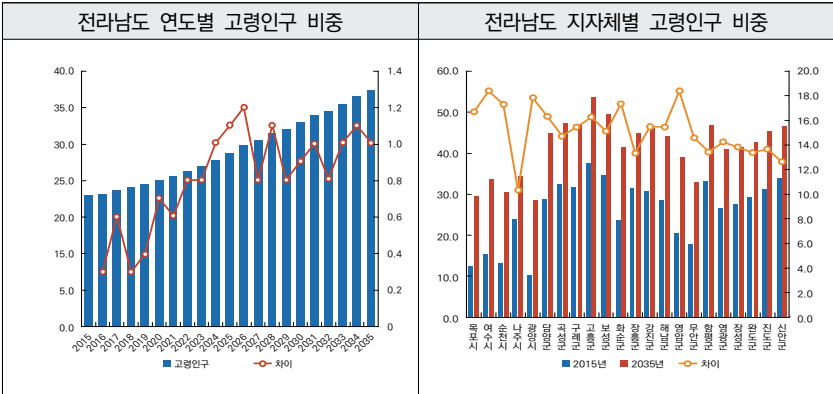
- 2035년 고령화율은 고흥군이 53.8%로 가장 높고, 5개 시와 영암군, 무안군을 제외한 15개 지자체에서 고령화율이 40.0%를 초과하며, 광양시가 28.6%로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됨.

※ 고령화율은 고흥군(53.8%), 보성군(49.9%), 곡성군(47.4%), 구례군(47.3%) 등에서 높으며, 광양시(28.6%), 목포시(29.7%), 순천시(30.6%), 무안군(33.0%) 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인구추계 결과 여수시는 2022년, 목포시와 순천시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28년 광양시를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22개 모든 지자체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24] 전라남도 연도별/지자체별 고령인구 비중

(단위: %)



주: 전라남도의 연도별 고령인구 비중(좌측)은 2015~2035년을, 전라남도 지자체별 고령인구 비중(우측)은 2015년과 2035년으로 시점을 분류하여 차이를 살펴본 수치임.

자료: 전라남도. (2020). 2017~2037 전남 시군별 장래인구특별추계. p.49. <https://www.jeonnam.go.kr/M4695/boardView.do?seq=1915574&menuId=jeonnam0508070000&boardId=M4695> 에서 2021.6.11.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34〉 전라남도 22개 시·군별 고령인구 추계 결과(2017~2037)

(단위: 명)

구분	2017	2020	2025	2030	2035	2037
전라남도	385,149	407,543	475,372	552,153	629,881	661,480
목포시	33,899	37,599	46,231	54,008	60,945	63,663
여수시	45,980	50,775	61,955	73,489	83,855	87,900
순천시	37,788	41,997	53,437	66,772	80,028	84,882
나주시	22,884	24,590	29,949	36,339	42,985	45,814
광양시	16,715	19,228	25,626	33,052	41,072	43,853
담양군	12,740	13,370	15,402	17,811	20,242	21,328
곡성군	9,522	9,554	10,352	11,506	12,893	13,515
구례군	7,984	8,295	9,427	10,939	12,626	13,324
고흥군	24,046	24,485	26,327	28,728	31,214	32,305
보성군	14,508	14,554	15,525	16,898	18,504	19,243
화순군	15,191	15,643	17,666	20,408	23,318	24,497
장흥군	11,679	11,802	12,765	14,120	15,638	16,345
강진군	10,955	11,111	12,111	13,266	14,466	15,031
해남군	20,241	20,673	22,837	25,123	27,407	28,385
영암군	12,859	13,391	15,150	17,232	19,387	20,329
무안군	15,295	16,014	18,632	21,543	24,643	25,968
함평군	10,599	10,737	11,661	12,902	14,380	15,037
영광군	13,911	14,349	15,839	17,575	19,413	20,231
장성군	11,722	12,181	13,829	15,942	18,287	19,355
완도군	14,605	14,965	16,448	17,941	19,471	20,166

구분	2017	2020	2025	2030	2035	2037
진도군	9,482	9,498	10,384	11,360	12,406	12,904
신안군	12,544	12,732	13,819	15,199	16,701	17,405

자료: 전라남도. (2020). 2017~2037 전남 시군별 장래인구특별추계[통계표]. p.50. <https://www.jeonnam.go.kr/M4695/boardView.do?seq=1915574&menuId=jeonnam0508070000&boardId=M4695> 에서 2021.6.11.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광주·전남 인구구조 변화와 특징

1) 광주·전남 인구 전망

□ 총인구·출생·고령인구 전망

- 광주·전남의 장래인구 전망을 보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출생 인구 감소, 급격한 초고령화의 추세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통계청 장래특별인구추계, 2019.6.27.)
-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대비 2047년 광주광역시 는 -15.52%, 전라남도는 -15.05%로 전망
 - 광주광역시: ('17) 1,495,392명 → 지속 감소 → ('47) 1,263,274명 예상
 - 전라남도: ('17) 1,896,424명 → 지속 감소 → ('47) 1,610,976명 예상
 - 전국: ('28) 51,941,946명 → 지속 감소 → ('47) 48,910,639명 예상
- 출생인구를 보면, 2023년부터 증가하여 2031년에는 10천 명 유지, 2047년에는 7천 명 예상
 - 광주광역시: ('23) 9천 명 → ('31) 10천 명 → 지속 감소 → ('47) 7천 명 예상

- 전라남도: ('23) 9천 명 → ('31) 10천 명 → 지속 감소 → ('47) 7천 명 예상

- 전국: ('21) 290천 명 → ('29) 360천 명 → 지속 감소 → ('47) 263천 명 예상

○ 고령인구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7년 광주광역시는 전체 인구의 36.6%, 전라남도는 46.8%

- 광주광역시: ('17) 179,281명 → 지속 증가 → ('47) 462,195명 예상 / 광주광역시 인구의 36.6%

- 전라남도: ('17) 385,604명 → 지속 증가 → ('47) 754,000명 예상 / 전라남도 인구의 46.8%

- 전국: ('17) 7,066,060명 → 지속 증가 → ('47) 18,787,212명 예상 / 전국 인구의 38.4%

2) 광주광역시 인구구조 변화와 주요 특징

□ 인구구조 변화

○ 광주광역시는 1988년 처음으로 100만 명(1,116,332명)이 넘으면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4년 1,492,948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

- 자치구별 인구 증가의 비율이 다르고, 도심 공동화 현상과 인구 전입 대비 전출이 과다해지는 등 인구 격차와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 광주광역시 15세 이하 인구는 감소하고, 5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년화가 진행 중

- 2010년과 2019년 인구구조를 비교하면 30~40대 인구가 가장 두터운 주류이지만 19세 이하 인구는 감소 추세
- 5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고령화로 진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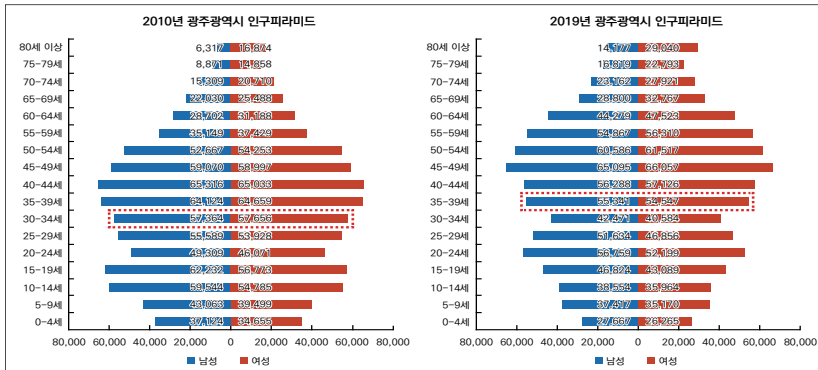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20~30대 중반 연령층이 30~40대 중반 연령층보다 적고, 0~4세 이하 영유아 인구가 적게 나타나 저출생 및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향후 30대 연령층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지 않거나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년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성비를 보면 40세 이상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구조를 보임

[그림 3-25] 광주광역시 연령 및 성별 인구피라미드(2010 대비 2019)

(단위: 명)



자료: 광주광역시, 경기산업연구원. (2020.5.). 광주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p.45. https://www.gwangju.go.kr/public/boardView.do?boardId=BD_0000000468&pageId=public13&searchSn=187 에서 2021.6.17.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부문별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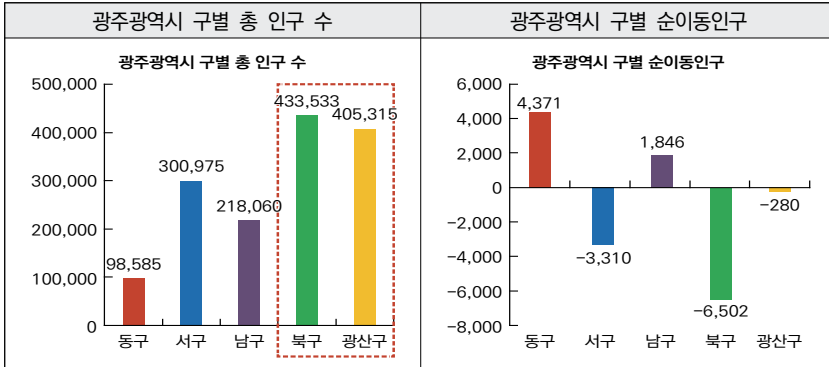
- 생산연령인구 현황을 보면, 1,065,029명(15~64세)으로 전국 대비 비율은 2.8% 수준이며, 지자체 내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72.8%
- 유소년인구 현황을 보면, 201,037명(0~14세)으로 전국 대비 비율은 3.1% 수준이며, 유소년인구 비율(13.8%)은 특·광역시 중 울산(13.9%) 다음으로 높음
- 청년인구 현황을 보면, 422,038명(19~39세)으로 전국 대비 비율은 2.9% 수준으로 지자체 내 청년인구 비율은 29.0%
- 고령인구 현황을 보면, 195,479명(65세 이상)으로 전국 대비 비율은 2.4% 수준으로 지자체 내 고령인구 비율은 13.4%로 특·광역시 중 3번째로 높음

□ 자치구별 인구구조

-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인구 분포를 보면, 2019년 당시 5개 자치구 가운데 북구가 433,533명(29.8%)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가 405,315명(27.8%), 서구 300,975명(20.7%), 남구 218,000명(15.0%), 동구 98,585명(6.8%) 순으로 자치구 간 인구 격차와 연령층 분포의 차가 큰 특징을 가짐

[그림 3-26]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별 인구 현황 및 인구이동(2019)

(단위: 명)



자료: 1) 통계청. (2021x).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 에서 2021.6.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통계청. (2021). 국가통계포털-시군구별 이동자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_A01&conn_path=I2 에서 2021.6.10.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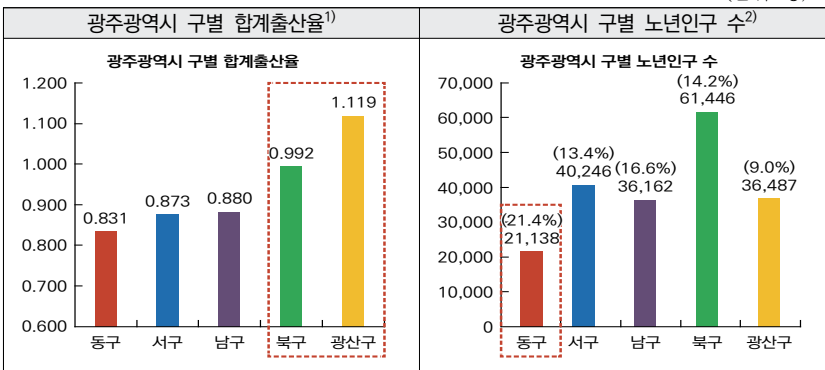
- 10년간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인구 분포를 보면, 남구는 0.55%, 광산구는 11.58%가 각각 증가했으며, 동구 5.61%, 서구 0.74%, 북구 7.14% 감소
- 자치구의 사회적 인구는 2009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2019년 동구와 북구가 증가
- 광주광역시 구별 순이동인구를 보면, 10년간 광산구에서 35,316명의 가장 많은 순이동이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던 동구와 남구는 2019년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남
- 이는 신규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신규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구별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주택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5개 자치구의 인구구조에도 차이가 있는데, 주민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광산구와 인구수가 많은 광산구와 북구의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년인구는 구도심인 동구 비율이 높고, 북구에 가장 많이 거주

- 구별 합계출산율은 광주광역시 평균이 0.97명이었던 2018년 기준, 광산구가 1.119명으로 가장 높고, 동구가 0.831명으로 가장 낮음

[그림 3-27]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합계출산율 및 노년인구 수

(단위: 명, %)



주: 1)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당 출생아 수로 2018년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함.
 2) 노년인구 수의 비율(%)은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별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에 대한 비율로 2019년 기준임.

자료: 1) 통계청. (2021u). 국가통계포털-합계출산율(시도/시/군/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1A17&conn_path=I2 에서 2021.6.1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통계청. (2021x).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 에서 2021.6.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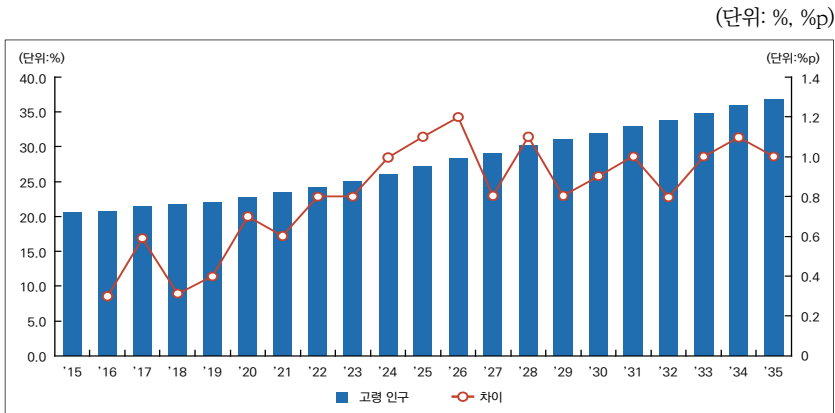
3) 전라남도 인구구조 변화와 주요 특징

□ 인구구조 변화

- 2021년 8월 기준, 전라남도의 인구는 1,838,353명으로 지난 2004년 인구 200만 명 선이 무너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인구 대비 3.5% 수준
 - 전라남도의 인구는 2000년 213만 명에서 2004년 200만 명 아래로 감소한 이후 2017년에는 190만 명 선이 무너졌으며, 2021년 기준 184만 명까지 감소하는 등 지난 21년 사이 약 29만 명 감소
 - 2010년과 2015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하기도 했으나, 이는 각각 주민등록 재등록과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효과로 인한 일시적 증가를 보였을 뿐 전반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분석됨
- 연령 분포를 보면, 영유아·청소년 및 장년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며, 청년인구의 비율은 전국 최저, 고령인구의 비율은 가장 높아 매우 취약한 인구구조
 - 청년인구는 426,603명(전라남도 인구의 23.0%), 고령인구는 432,929명(전라남도 인구의 23.4%)으로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진 추세를 보임
 - 평균 연령은 전국이 42.6세, 전라남도는 46.2세로 전라남도의 평균 연령이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높음
- 전라남도는 급속한 초고령화로 2014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35년 고령인구 비중은 36.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4년 7월 전라남도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의 비율이 20%에 달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

- 전라남도의 고령인구 비율은 2003년 14.1%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14년에는 20.1%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고령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산어촌 지역의 마을 쇠퇴가 매우 심각한 상황

[그림 3-28] 전라남도 연도별 고령인구 비중(2015~2035)



자료: 전라남도. (2018). 인구정책종합계획.

-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연령별 고용구조는 주로 시 지역에서 50대 미만의 취업자 비중이 높고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낮은 수준을 보였고, 군 지역의 경우는 시 지역과 반대 경향을 보임
 - 군 지역 중에서 화순군, 영암군, 영광군 등의 경우는 50대 미만의 취업자 비중이 중위권 이상을 차지하여, 다른 군 지역과 차별적인 결과를 보임
 - 이 같은 결과는 화순군의 경우는 전남대 의과대학의 이전이, 영암군의 경우는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입지로 인해 젊은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

- 많은 군 지역에서는 젊은 취업자 비율이 낮고, 장년 이상의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
-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연령별 고용구조 격차를 보면, 핵심생산인구(30~49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 취업자 비중에서 큰 차이가 나타남
 - 목포시의 핵심생산인구 취업자는 48.0% 수준이지만, 고흥군은 19.8%에 불과하여 두 지역 간 핵심생산인구는 28.2%p의 차이가 발생
 - 65세 이상 취업자 비중도 고흥군은 42.5%, 목포시는 8.7%로 33.8%p의 차이가 있음
 - 일반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가 정착된 지역에서는 청년 및 핵심생산인구의 취업자 비중이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저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의 취업구조는 고령층 취업자의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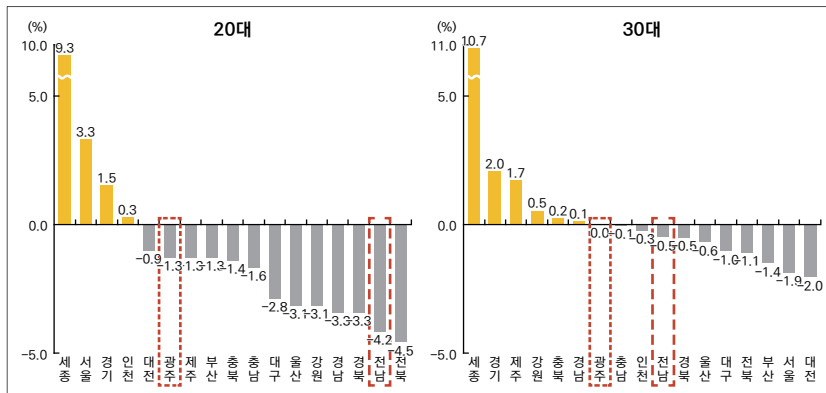
□ 인구 감소 요인

- 전라남도의 인구 감소는 자연감소와 사회적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속화되는 추세
- 자연감소 인원 증가에 따른 인구 감소가 진행되면서 전라남도는 사망 인원이 출생 인원을 초과하는 데드크로스(Dead-cross)가 2013년부터 발생
 - 출생아 수 감소, 초고령사회 진입(2014년)에 따른 자연 감소세 가속화
 - 65세 인구 비율: '14) 20.14% → '17) 21.54%, → '19) 22.61%

- 사회적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입보다 전출이 늘어나고 있고, 청년층 인구의 유출 비중이 매우 큼
- 혁신도시 이전 효과가 반영된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사회적 인구 유출 발생
 - 가장 큰 전출 계층은 청년층(20~39세)이며 주요 전출지는 서울·광주·경기관으로, 취업·진학이 전출의 주요 사유로 유추됨
 - 2019년 기준, 일부 연령층(40~74세) 인구 순유입(4,533명) 발생

[그림 3-29] 국내 20~30대 인구이동 현황(2019)

(단위: %)



자료: 통계청, (2021p). 국가통계포털-전출지/전입지(시도)별 이동자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3&conn_path=I2 에서 2021.6.11.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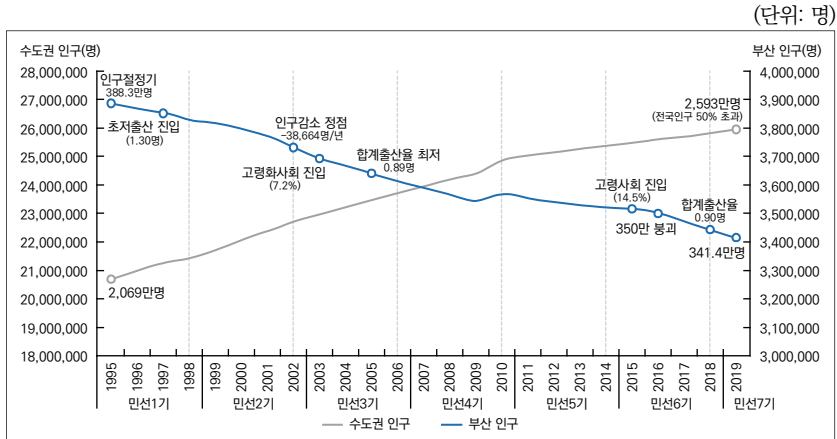
제4절 부산: 부산복지개발원

1. 부산광역시 인구추이 변화

가. 인구이동 추이 이전

- 전국 인구는 2011년 이후 증가 속도는 둔화되어도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며, 특히 수도권인 경우 2016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2019.12, 전국 비중 50% 초과).
- 하지만 부산 인구는 1995년(388만 명), 동남권은 2015년(805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중이며, 현재 341만 명인 부산 인구는 2030년대 후반기에 300만 명 선이 붕괴될 전망이다.

[그림 3-30] 수도권-부산 인구 추이(1995~2019)



자료: 김경수, 하정화, 이재정. (2019). 부산시 인구감소 대응방안. 부산: 부산연구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

〈표 3-35〉 전국-부산/수도권-동남권 인구 추이(2010~2019)

(단위: 만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인구¹⁾	5,052	5,073	5,095	5,114	5,133	5,153	5,170	5,178	5,183	5,185
증감률(%)	1.5	0.4	0.4	0.4	0.4	0.4	0.3	0.2	0.1	0.05
부산 인구	357	355	354	353	352	351	350	347	344	341
증감률(%)	0.7	-0.5	-0.4	-0.3	-0.2	-0.2	-0.4	-0.8	-0.8	-0.8
수도권 인구	2,486	2,499	2,513	2,526	2,536	2,547	2,559	2,568	2,580	2,593
전국 비중	49.2	49.3	49.3	49.4	49.4	49.4	49.5	49.6	49.8	50.0
동남권 인구	798	800	801	802	804	805	804	802	797	792
전국 비중	15.8	15.8	15.7	15.7	15.7	15.6	15.6	15.5	15.4	15.3

주: 1) 전국 인구수는 천 명 단위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 에서 2021.6.8.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36〉 전국, 부산 장래인구추계(2017~2047)

(단위: 만 명, %)

	2017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47	2017년 대비 증감	2047년 증감률
전국	5,136	5,178	5,191	5,193	5,163	5,086	4,957	4,891	-245	-4.8
부산	342	334	321	311	301	289	274	268	-74	-21.7

자료: 통계청. (2019.6.27.).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p.4.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555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EC%9E%A5%EB%9E%98%EC%9D%B8%EA%B5%AC%EC%B6%94%EA%B3%84 에서 2021.6.9.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부산광역시 지역 내 인구구조 변화

1) 저출산·고령화

- 2013년에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추월한 후 인구 간격은 지속 확대(전국은 2016년에 추월)됨

○ 이러한 원인은 유소년·학령·청년·생산연령인구가 총인구(2010년 대비 -4.3%)보다 빠르게 감소 중이며, 주된 감소 원인은 저출산과 청년층 유출 등에 기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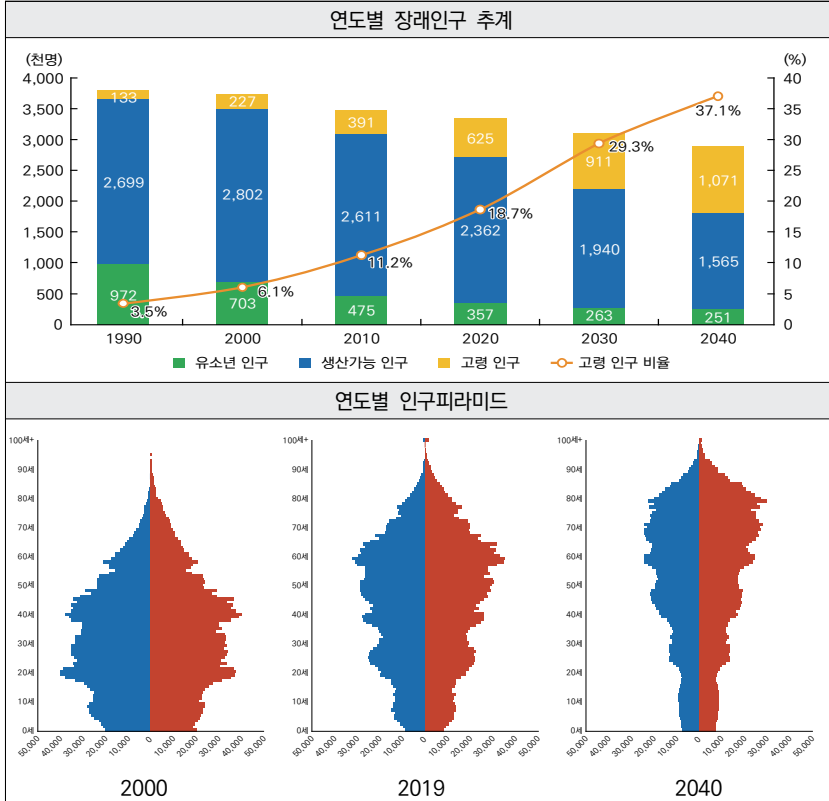
- 유소년인구(0~14세): 2010년 대비 -21%, 장래인구 비중 지속 감소 ('10) 14% → ('30) 8%
- 학령인구(6~21세): 2010년 대비 -28%, 장래인구 비중 지속 감소 ('10) 19% → ('30) 11%
- 청년인구(15~34세): 2010년 대비 -22%, 장래인구 비중 지속 감소 ('10) 28% → ('30) 19%
- 생산연령인구(15~64세): 2010년 대비 -10%, 장래인구 비중 지속 감소 ('10) 75% → ('30) 62%

○ 하지만 고령인구(65세 이상)는 기대수명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편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초고령사회로 진입

- 2010년 대비 54% 증가(2019년 62만 명, 고령화율 18%), 장래인구 비중 지속 증가 ('10) 11% → ('30) 29%

[그림 3-31] 부산광역시 연령별 장래인구 추계 및 연도별 인구피라미드

(단위: 천 명, %,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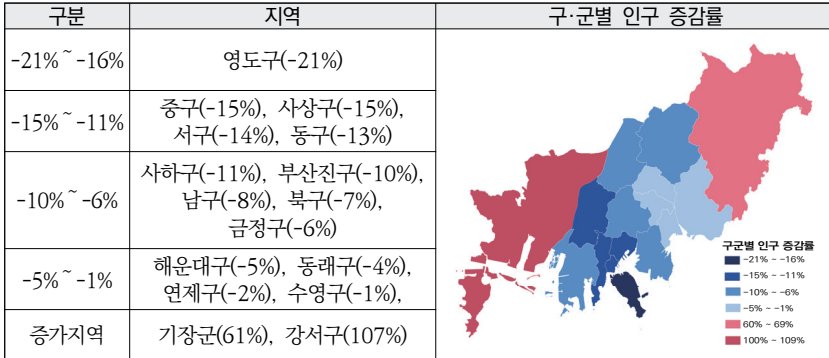


자료: 부산광역시. (2021).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 <https://www.busan.go.kr/nbtnewsBU/1498013> 에서 2021.8.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지역 내 변화

- 도시구조 다핵화, 외연 확산 및 도심 공동화로 구도심(영도구, 중구, 동구, 서구)의 인구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경제개발사업으로 기장·강서지역 인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경우 인접한 울산, 창원, 거제 지역 등 인근 산업단지로 출근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림 3-32] 부산광역시 지역별 인구증감 현황(2010년 대비 2019년 증감 현황)



자료: 부산광역시. (2021).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 <https://www.busan.go.kr/nbtnewsBU/1498013> 에서 2021.8.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부산광역시 인구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가. 과밀부산

- 부산광역시의 경우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나 인구밀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최소화와 아울러, 삶의 질 개선 등 긍정적 측면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광역시 인구밀도 순위(2018, km^2 당): 부산 4,416명/ 광주 2,980명/ 대전 2,813명/ 대구 2,773명/ 인천 2,764명

- 하지만 이에 따른 부정적 측면은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측면(도시 규모·재정 등)에서 경쟁력 저하가 예상됨
- 긍정적 측면으로서는 적정 인구수는 도시의 쾌적성 및 1인당 삶의 질적 수준 향상될 가능성이 있음

나. 적정인구

- 저성장·인구 감소시대 대응에 지속 발전 가능한 부산광역시 구현을 위해 도시 수용력을 고려한 적정인구와 개발용량 파악 및 이에 따른 도시 관리방향의 모색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인구 관련 연구를 통해 환경·생태·시설·서비스 수용력, 행·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한 수용 가능 인구와 개발용량을 산정하고 도시 수용력을 고려한 도시 관리방향을 도출해야 함

다. 균형인구

- 2030세대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 및 고령화 심화로 인한 도시 활력 저하에 대응하여 균형인구 관점에서 인구정책 추진이 필요
- 무엇보다 인구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유소년·청년층 회복에 정책의 중점을 두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
- 국내외 인구 이동성이 커지고 있어 해외이주자 수용정책의 적극 전개 추진
- 인구영향분석 등을 통해 생애주기·분야별 예산지원 현황을 분석, 균형 잡힌 지원정책을 전개함

라. 발전전략 전환

- 장기간 지속된 인구 감소 추세는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래인구 변화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 발전전략 모색

- 종전에는 인구 증가를 전제(도시계획인구 410만 명)로 양적 성장·인프라 지향, 분산·확장형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향후에는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를 전제로 삶의 질 지향, 스마트 축소형·통합형 정책 추진으로 전환

마. 새로운 정책과제 대응

- 학령인구 감소, 빠른 고령화, 1인 가구 및 외국인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정책과제 및 행정수요에 능동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
- 도심 유희시설(폐교, 공공시설, 산업시설 등)을 도심지역의 재활력 거점으로 조성토록 함
- 1인 가구의 복지·안전망 강화(고령·여성 중점), 외국인의 지역 정착 및 경제활동 지원
- 고령화 대응 스마트 헬스케어/고령친화식품산업 육성, 1인 가구 대응 공유경제 활성화

[그림 3-33] 부산광역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정책목표 포용적 도시발전전략을 통한 인구구조변화 적응력 강화		
전 략	과 제	주요 내용
인구변화 대응 도시패러 다임 전환	콤팩트 시티 조성	외연확산 → 도심 고밀개발토지복합이용 등 추진
	도시수용력 기반 도시계획 수립	양적성장 → 수용력 기반 삶의 질 중심 계획 수립
	인구변화 대응 정책 재정립	확장정책 → 인구감소고령화 대응 스마트축소 등
	유희시설 활용 지역 재활력화	유희 공공산업시설 등 청년복합활동 공간조성
생애주기별 균형정책 제도 도입	정책사각 생애주기 지원 강화	청년중장년 층에 대한 고용주거 지원 강화
	생애주기 균형을 위한 연구	생애주기 정책의 양적, 질적 균형성 검토 및 방향제
학령인구 및 생산연령 인구 감소대응	학교 재배치와 도시계획 연동	원도심내 학교 재배치, 유유학교시설은 공공활용
	생애 단계별 능력개발체제 구축	청년기 직업교육, 고령자 능력개발, 평생교육 등
	여성인력 활용 확대	고용안정성 높은 제조업 여성비율(30%) 확대
	신증년 경제활력 증진	경력형 일자리사업 및 사회공헌사업 확대
1인 가구 복지·안전망 강 화	생활지원센터 조성	1인가구 밀집지역 안전건강주거행정지원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	사회적가족 형성, 1인가구 상호돌봄 자원봉사
	호스피스 인프라 구축	고령1인가구 건병 위한 호스피스전문병동 조성
	공유경제 활성화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소비패러다임 변화 반영
초 고 령 사회 대응	노인복지 플랫폼 구축	노인일자리사업장 기반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
	간병서비스 공공관리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병서비스 제도와
	고령자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	소형주택 공급확대 및 고령자 접근성 편의성 제고
	고령친화 산업육성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고령친화식품산업 육성

자료: 부산광역시. (2021).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기본계획(2021~2025). <https://www.busan.go.kr/nbtnewsBU/1498013> 에서 2021.8.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5절 충북: 충북연구원

1. 충청북도 인구 현황

□ 등록인구

- 2020년 기준 충청북도 등록인구는 1,598,162명으로 736,09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 대비 인구밀도는 216명/km²로 나타남.

□ 인구 증가 변화

- 충청북도의 인구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년도 대비 인구 증가율은 2010년 1.5% 이후로 0%대를 순회하고 있음. 이는 인구수 증가의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구 자연감소와 합계출산율

- 2018년 사망자는 1만 1,334명으로 출생자 1만 586명을 앞질렀음.
 - 2018년부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시작됨으로써 인구의 자연감소 발생
- 충청북도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0.84명보다 높은 0.98명(전국 8번째)이었으나 10년 이상 감소세를 보였음.

□ 소인 가구 증가

- 낮은 인구 증가율 값에 비해 세대수 및 인구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임.

〈표 3-37〉 충청북도 등록인구 수·세대수·인구밀도·전년도 대비 인구 증가율

(단위: 명, 세대, 명//km², %)

구분	등록인구 수(명)	세대수(세대)	인구밀도(명/km ²) ¹⁾	전년도 대비 인구 증가율(%) ²⁾
2010	1,549,528	617,431	203	1.5
2015	1,583,952	669,503	214	0.4
2020	1,598,162	736,095	216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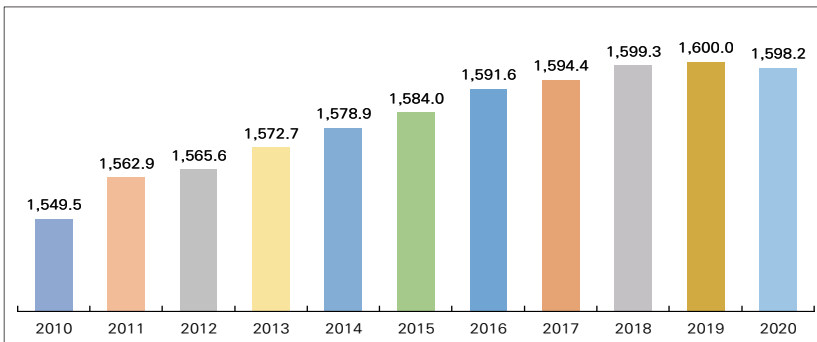
주: 1) 인구밀도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2) 전년도 대비 인구 증가율 = { (당해연도 총인구-전년도 총인구)÷ 전년도 총인구 } × 100

자료: 통계청, (2021e). 국가통계포털-세대당 인구수 및 인구밀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2&tblId=JT_B02&conn_path=I2 에서 2021.8.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34〕 충청북도 연도별 등록인구 수(2010~2020)

(단위: 천 명)



자료: 충청북도, (2021b).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충북: 충북연구원. p.29. 〈그림 I-5-5〉 재인용.

2. 충청북도 장래인구 전망과 구조

□ 2040년 인구 전망

○ 전국의 인구는 2017년 5,175.4만 명에서 2040년 5,219.8만 명으로 44.4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인구의 양적 확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인구 증가가 고령인구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은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충청북도는 2017년 159.3만 명에서 2040년 173.7만 명으로 14.4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전국 대비 충청북도 인구 비중은 2017년 3.08%에서 2040년 3.33%로 0.25%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40년 인구구조 전망

○ 충청북도의 인구구조는 2017년 8월 말 유소년인구 13.3%, 생산가능인구 71.1%, 고령인구 15.7%로 구성되어 있음.

○ 충청북도의 인구구조는 2040년에는 유소년인구 10.6%, 생산가능인구 54.0%, 고령인구 35.4%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됨.

- 유소년인구(-2.7%p)와 생산가능인구(-17.1%p)는 축소되고 고령인구(19.7%p)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전국에 비해 유소년인구(-0.2%p)와 생산가능인구(-2.4%p) 비중은 낮고, 고령인구 비중은 2.6%p 높은 수준임.

〈표 3-38〉 전국 및 충청북도 2040년 인구 전망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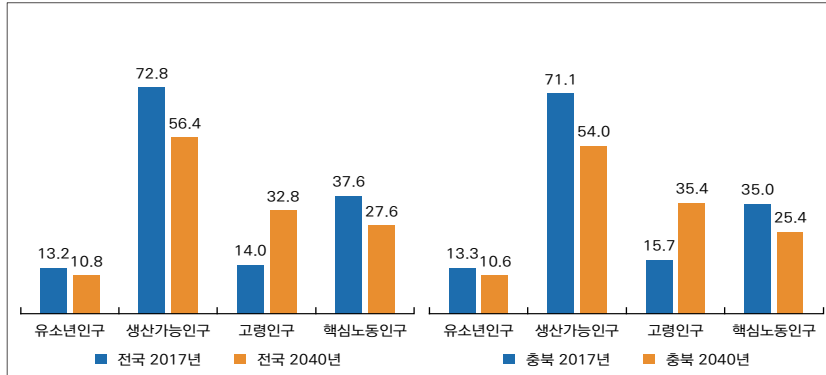
구분	전국			충청북도		
	2017	2040	증감	2017	2040	증감
총인구	5,175.4	5,219.8	44.4	159.3	173.7	14.4
유소년인구(0~14세)	682.5	564.7	-117.8	21.1	18.4	-2.7
생산가능인구 (15~64세)	3,767.1	2,943.1	-824.0	113.2	93.8	-19.4
고령인구(65세 이상)	725.7	1,712.0	986.3	25.0	61.5	36.6
핵심노동인구 (25~49세)	1,944.0	1,441.2	-502.8	55.8	44.1	-11.7

주: 2017년 인구는 2017년 8월 기준 주민등록인구를, 2040년 인구는 중위기준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우장명, 박종섭, 설영훈, 남윤명, 최시영. (2018). 농촌인구 감소대책 중점과제 발굴 연구용역. 충북: 충북연구원. p.14. 〈표 3〉 재인용.

[그림 3-35] 전국 및 충청북도 인구구조 전망(2017, 2040)

(단위: %)



자료: 우장명, 박종섭, 설영훈, 남윤명, 최시영. (2018). 농촌인구 감소대책 중점과제 발굴 연구용역.
충북: 충북연구원. p.15. <그림 5> 재인용.

3. 충청북도 11개 시·군별 인구 현황과 구조

□ 충청북도 11개 시·군별 인구 현황

- 충청북도 11개 시·군별 인구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도청 소재지인 청주시의 등록인구 수가 843,782명, 370,694세대가 거주하고 인구밀도는 897%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등록인구 수가 적은 지역은 단양군이 29,268명, 그다음으로 보은군이 32,522명으로 인구수 4만 명 미만의 값을 나타내고 있음. 충청북도 전체 군 지역 중 충북혁신도시가 입주하고 있는 음성군(94,179명)과 진천군(81,949명)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3-39〉 충청북도 11개 시·군별 인구 현황

(단위: 명, 세대, %)

구분	2010			2015			2020		
	등록인구 수	세대 수	인구 밀도 ¹⁾	등록인구 수	세대 수	인구 밀도 ¹⁾	등록인구 수	세대 수	인구 밀도 ¹⁾
충청북도	1,549,528	617,431	209	1,583,952	669,503	214	1,598,162	736,095	216
청주시	808,915	247,916	860	831,912	336,408	884	843,782	370,694	897
충주시	208,481	82,295	212	207,913	87,463	211	210,304	97,280	214
제천시	137,264	56,504	155	136,138	59,856	154	133,170	63,703	151
보은군	34,956	15,464	60	34,296	16,147	59	32,522	16,850	56
옥천군	54,025	22,309	101	52,404	22,967	98	50,792	24,338	95
영동군	50,523	21,767	60	50,693	23,586	60	47,706	24,393	56
증평군	33,533	13,762	410	36,671	15,790	448	37,136	17,579	454
진천군	62,094	26,005	152	67,981	29,750	167	81,949	38,379	201
괴산군	36,827	17,341	44	38,787	19,620	46	37,354	20,720	44
음성군	91,093	37,887	175	96,396	43,279	185	94,179	46,896	181
단양군	31,817	14,037	41	30,761	14,637	39	29,268	15,263	37

주: 1) 인구밀도란, 단위 면적 당 인구수를 측정하는 지표로 인구 분포의 밀집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용이한 지표임.

2)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으로, 주민등록인구 수의 경우 시·군 통합 이전의 자료(2010년도)는 두 값의 합을 사용함.

3) 2010년과 2015년의 경우 해당연도 말 기준의 수치를 토대로 작성하였고, 2020년은 8월 기준으로 작성한 수치임.

자료: 1) 통계청. (2021w).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세대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conn_path=I2 에서 2021.6.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통계청. (2021y).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N&conn_path=I2 에서 2021.6.4.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충청북도 11개 시·군별 고령화율

○ 충청북도의 고령인구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을 제외한 5개 군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괴산군과 보은군(34.4%)이며, 그다음으로 영동군(31.5%), 단양군(30.7%), 옥천군(29.7%) 순임.

〈표 3-40〉 충청북도 11개 시·군별 고령인구 비율

(단위: %)

구분	2010	2015	2020
충청북도	13.2	14.8	17.9
청주시	22.4	10.7	13.3
충주시	14.4	16.3	19.8
제천시	14.8	17.3	21.8
보은군	27.2	29.5	34.4
옥천군	21.5	24.7	29.7
영동군	24.6	26.9	31.5
증평군	13.1	14.0	17.2
진천군	15.4	16.2	16.4
괴산군	28.0	29.5	34.4
음성군	15.9	17.1	21.2
단양군	22.1	25.5	30.7

주: 1) 고령인구 비율 = (65세 이상 인구수 ÷ 전체인구수) × 100

2)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으로, 그 이전의 자료(2010년도)는 두 값의 합을 사용하였고, 2020년은 10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2021d). 국가통계포털-고령인구 비율(시도/시/군/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I2 에서 2021.8.10.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충청북도의 연령별 인구 분포

○ 2020년 기준 전국의 평균 연령은 42.9세, 구성비는 100.0%인데 반해, 충청북도의 평균 연령은 43.5세로 전국의 평균 연령 대비 0.6세가 높으며, 구성비는 104.5%임(통계청, 2021p).

○ 충청북도의 생산활동인구인 15~64세 인구수는 1,116,894명이며, 비생산활동인구 중 15세 미만 인구수는 197,718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83,550명으로 나타남.

〈표 3-41〉 충청북도의 연령별 인구 분포(2020)

(단위: 명, %)

구분	충청북도		전국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합계	1,632,088	100.0	51,829,136	100.0
0~4세	54,135	3.3	1,722,081	3.3
5~9세	70,381	4.3	2,264,595	4.4
10~14세	71,406	4.4	2,267,481	4.4

구분	충청북도		전국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15~19세	80,349	4.9	2,449,561	4.7
20~24세	112,671	6.9	3,364,804	6.5
25~29세	110,612	6.8	3,666,212	7.1
30~34세	96,749	5.9	3,301,331	6.4
35~39세	111,096	6.8	3,805,470	7.3
40~44세	114,380	7.0	3,906,665	7.5
45~49세	128,136	7.9	4,325,697	8.3
50~54세	137,809	8.4	4,372,054	8.4
55~59세	135,185	8.3	4,210,645	8.1
60~64세	128,155	7.9	3,885,297	7.5
65~69세	89,589	5.5	2,734,187	5.3
70~74세	62,384	3.8	2,027,679	3.9
75~79세	56,045	3.4	1,600,867	3.1
80~84세	42,272	2.6	1,120,781	2.2
85세 이상	30,734	1.9	803,729	1.6
15세 미만	195,922	12.0	6,254,157	12.1
15~64세	1,155,142	70.8	37,287,736	71.9
65세 이상	281,024	17.2	8,287,243	16.0

자료: 통계청. (2021o). 국가통계포털-연령 및 성별 인구(읍면동 및 시군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1N1503&conn_path=I2 에서 2021.8.10.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충청북도 시·군별 인구이동 현황

□ 연도별 인구이동

-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충청북도로 전입한 인구는 5,473,347명, 충청북도에서 전출한 인구는 5,243,420명으로 229,927명이 순전입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까지는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를 초과하였으나,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인구 순유입세를 유지하고 있음(단, 최근 증가 폭은 미세).

〈표 3-42〉 충청북도의 인구이동 변화(1998~2020)

(단위: 명)

구분	현황		
	전입인구	전출인구	순이동
합계	5,270,695	5,243,420	27,275
1998	232,414	226,872	5,542
1999	255,180	256,626	-1,446
2000	235,155	239,559	-4,404
2001	230,828	239,356	-8,528
2002	243,571	251,773	-8,202
2003	246,415	252,496	-6,081
2004	231,167	236,984	-5,817
2005	235,907	240,615	-4,708
2006	245,977	244,227	1,750
2007	253,433	247,741	5,692
2008	244,672	237,759	6,913
2009	232,872	230,351	2,521
2010	235,671	229,707	5,964
2011	228,594	220,515	8,079
2012	212,263	207,622	4,641
2013	215,973	212,860	3,113
2014	215,944	213,577	2,367
2015	214,626	213,188	1,438
2016	202,679	197,668	5,011
2017	197,177	194,915	2,262
2018	218,886	213,737	5,149
2019	211,396	208,831	2,565
2020	229,895	226,441	3,454

주: 순이동은 전입인구와 전출인구를 차감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2021). 국가통계포털-시군구별 이동자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_A01&conn_path=I2 에서 2021.6.10.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성별 인구이동

○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충청북도의 인구이동 변화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18,254명의 순전입이 있었고, 여성은 4,409명의 순전출이 있었음.

- 남성: 2,208,300명(총전입) > 2,190,046명(총전출)으로 순전입은 18,254명임.
- 여성: 2,205,041명(총전입) < 2,209,450명(총전출)으로 순전출은 4,409명임.

□ 연령별 인구이동

○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충청북도의 인구이동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순유출의 경우 15~19세와 20~29세에서 일어났으며, 순유입은 50~59세, 40~49세와 30~39세 순으로 나타남.

- 0~14세: 874,877명(총전입) > 869,439명(총전출)으로 순전입은 5,438명
- 15~64세: 3,279,438명(총전입) > 3,278,288명(총전출)으로 순전입은 1,150명
- 15~19세: 248,746명(총전입) < 250,734명(총전출)으로 순전출은 1,988명
- 20~29세: 987,893명(총전입) < 1,051,999명(총전출)으로 순전출은 64,106명
- 30~39세: 961,957명(총전입) > 947,567명(총전출)으로 순전입은 14,390명
- 40~49세: 610,688명(총전입) > 591,646명(총전출)으로: 순전입은 19,042명
- 50~59세: 354,778명(총전입) > 329,687명(총전출)으로 순전입은 25,091명
- 60~64세: 115,358명(총전입) > 106,655명(총전출)으로 순전입은 8,703명
- 65세 이상: 259,026명(총전입) > 251,769명(총전출)으로 순전입은 7,257명

□ 지역별 순이동 변화

○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충청북도의 지역별 순이동 변화는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로의 인구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순전입(1998~2016년)

- 경상북도(9,646명) > 경기도(8,733명) > 인천광역시(7,930명) > 부산광역시 > 전라북도 > 경상남도 > 전라남도 > 강원도 > 광주광역시

- 순전출(1998~2016년)

- 세종특별자치시(15,489명) > 서울특별시(14,099명) > 대전광역시(11,307명) > 충청남도(3,093명) > 제주특별자치시(623명)

○ 기간별로 보면 2010년 이전에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많았으나, 2010년 이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등 인근 지역으로의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998~2010년(누적)

- 순전입: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 전라북도 > 경상남도 > 인천광역시
- 순전출: 서울특별시 > 경기도 >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 2011~2016년(누적)

- 순전입: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상북도 > 전라북도
- 순전출: 세종특별자치시 >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 제주도

- 2016년 충청북도를 기준으로 순전입한 인구는 5,011명임.
 - 순전입: 경기(2,815명) > 서울(1,055명) > 인천(995명)
 - 순전출: 세종(2,918명) > 충남(359명) > 제주(181명)



제4장

지역별 정책환경 SWOT 분석

제1절 강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제2절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제3절 광주전남: 광주전남연구원

제4절 부산: 부산복지개발원

제5절 충북: 충북연구원

제4장 지역별 정책환경 SWOT 분석

제1절 강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1. 강원도 저출산 정책환경 SWOT 분석

가. 강원도 산업구조 및 경제활동, 보육 인프라 특성

□ 산업구조

- 2019년 강원도 사업체 수 비중은 숙박 및 음식점업(39,817개, 27.1%) > 도매 및 소매업(33,705개, 27.1%) 순으로 높음.
- 2019년 강원도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12만 1,123개로 전체 사업체의 82.5%를 차지함. 이는 전국보다 2.9%p 높은 수치임.
 - 5인 미만 사업체는 육아휴직수당 및 가족돌봄제도 사각지대에 있어 근무환경이 열악함.

□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 2018년 하반기, 25~34세 강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보다 낮게 나타남.
 - 25~29세 여성: 강원도(71.5%) < 전국(73.6%)
 - 30~34세 여성: 강원도(61.1%) < 전국(67.6%)

- 2018년 하반기 기준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여성 취업자 10명 중 6명은 근로환경이 불안정한 임시근로자(25.7%), 일용근로자(30.1%)로 나타남.
- 강원도의 취업자 여성과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전국의 2/3 수준으로 낮음.
 - 여성: 강원도(165만 원) < 전국(193만 원)
 - 남성: 강원도(265만 원) < 전국(310만 원)

□ 보육 인프라

- 2020년 강원도 보육시설 수는 999개소로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356개소, 32.1%), 민간어린이집(321개소, 32.1%)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2020년 강원도 내 영유아 천 명 당 보육시설 수와 공급률, 이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반면 정원충족률은 낮게 나타남.
 - 이용률: 강원도(62.6%) > 전국(58.7%)
 - 정원충족률: 강원도(72.9%) < 전국(76.4%)
 - 보육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유치원, 학원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강원도는 보육시설 공급률, 이용률이 전국보다 높음.
 - 강원도의 낮은 보육시설 정원충족률은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뿐만 아니라 광역 저밀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나. 강원도 저출산 대책 평가

□ 강원도 인구정책 및 저출산 대책 방향

- 강원도 인구정책은 (i)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저출산에 중점을 두고 있고, (ii) 출산율 상승 및 인구유입·정착 강화를 위해 정책 분야를 여성, 청년, 귀촌, 고령, 인식의 5개 분야로 재구조화함.
-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해 육아기본수당 등 전국 최초 사업을 시행 중임.

[그림 4-1] 강원도 인구정책 5대 분야 및 주요 사업

5대 분야	주요 사업
I. 여성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환경조성 (결혼·출산·양육)	· (결혼)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 전국 최초 · (결혼)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 (출산)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설치 운영 · (양육)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도입 ※ 전국 최초 · (양육)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 (일·가정양립)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 전국 최초
II. 청년이 머물고 일하는 지역건설 (정주여건 강화)	·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 · 청년 구직활동 지원 · 청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 전국 최초 · G-스타트업 창업지원 ·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
III. 귀농·귀촌·다문화 지역공동체 조성	· 귀농·귀촌 유치 · 소득형·출퇴근형·예술인형 산촌주택(임대) 조성 · 다문화가족 사회적 응·통합 프로그램 운영
IV. 소득기반 고령사회 조성	· (소득) 노인일자리 확대 · (건강) 맞춤형 치매 돌봄서비스 강화 · (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 (소통)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
V. 패러다임 전환 및 인식개선	· 미래세대 학생 대상 인구교육 강화 · 가족친화 인증기관 기업 확대 · 저출산 극복 강원네트워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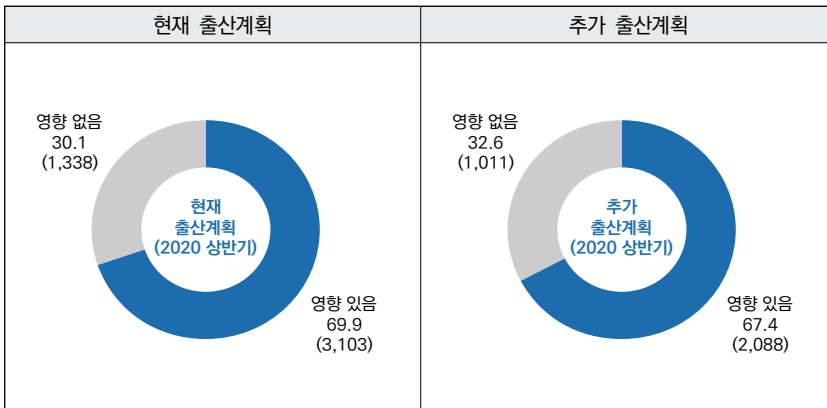
자료: 강원도. (2021). 2021년 강원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p.4. https://provin.gangwon.kr/gwportal/sub05_01?articleSeq=225071&mode=readForm&curPage=1&boardCode=BDAADD02 에서 2021.6.1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강원도 저출산 대책 추진성과

- 첫째, 2019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도입으로 보편적 출산·양육 여건 조성에 기여함.
 - 전국 최초로 2019년 이후 모든 출생 아동에게 육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2019~2020년 월 30만 원, 2021년 40만 원)를 4년간 지원함.
 - 현재 출산계획 영향(69.9%), 추가 출산계획 영향(67.4%), 자녀양육 부담경감(74.2%), 강원도의 좋은 환경조성 노력(69.9%) 등 효과 확인

[그림 4-2] 육아기본수당의 출산계획 영향(2020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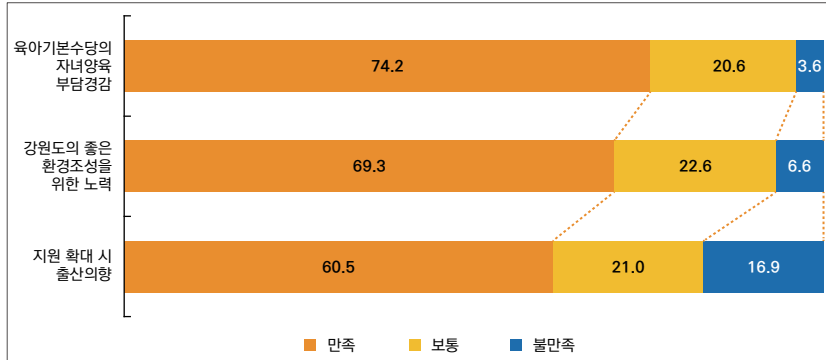
(단위: %, 명)



자료: 민연경, 이소영. (2020).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효과성 분석. 강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p.169. [그림 4-1] 재인용.

[그림 4-3] 육아기본수당 정책목표 만족도(2020년 상반기)

(단위: %)



자료: 민연경, 이소영. (2020).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효과성 분석. 강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p. 178. [그림 4-7] 재인용.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12.)에서는 지난 15년간의 저출산 대책이 서비스 인프라 위주 정책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금지원이 미흡함을 한계점으로 지적함.

○ 둘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를 위한 저출산 극복 사업으로 「4+1 생애주기별」 결혼 → 출산 → 양육 → 일·가정 양립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추진

○ 셋째, 여성과 청년, 귀농·귀촌,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정책대상을 포괄하고 있음.

□ 강원도 저출산 대책 한계

○ 2020년 12월에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정책 방향을 출산율에서 탈피해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개별화된 삶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수정함.

-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 정책목표: (i) 개인의 삶의 질 향상, (ii)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iii) 인구 변화 대응 사회혁신 3가지

〈표 4-1〉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기조 변화

구분	방향	주요 사업
1차('06~'10년)	- 저출산 극복·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제도적 기반 구축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지원 확대 -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 도입
2차('11~'15년)	-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책임 강화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11~) - 무상보육 실시('13~) 등
3차('16~'20년)	- 만혼·비혼 추세 심화에 따라 구조적 대응 시도	- 임금피크제 확대 등 청년일자리 확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3차 수정안('19년)	- 정책기조 변화: 출산율 → 모든 세대 삶의 질 제고	
4차('21~'25년)	- 개인 권리 향유 보장 및 인구구조 변 화 대응력 제고	- 일·생활 균형 사회 분위기 조성 - 청년층 노동권 실현 - 다양한 가족제도 수용 등

자료: 저자 작성.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중심으로 강원도 세부 사업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강원도의 저출산 대책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조성' 추진전략에 관해 (i) 모두가 일하는 위라벨, (ii) 성평등 노동 영역 2가지 측면에서 미흡함.

- 강원도의 저출산 대책은 (i) 노동을 전제로 한 성평등 돌봄 정책으로 돌봄책임 평등 배분에 대한 성역할 지원의 평등성이 요구됨. 즉, 여성을 '일하면서 돌보는 자'로 적극 상정 필요함 → 부성 출산휴가, 사전휴가 이용률 향상 등 적극 유도
- (ii) 돌봄을 전제로 한 성평등 노동정책 관점에서 강원도의 저출산 대책은 노동시장 참여의 성평등 정책이 미흡함 → 남녀 평등한 고용 안정성, 비정규직 모성보호 정책 등 필요

〈표 4-2〉 강원도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부서 담당 사무

추진전략	과	중앙	강원도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조성	모두가 누리는 위라벨	- 연차휴가·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보장 - 유연근무제(디지털 재택근무 등),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활성화 - 부모 모두 3+3개월 육아휴직 - 남성돌봄권 사회적 인식 확립 - 육아휴직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향상 등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지원 등
		성평등 노동	-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강원형 초등돌봄 서비스 구축 - 다함께 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확대 -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시간제, 영아종일제, 종합형 등) - 산후돌봄 지원 확대 등
		아동 기본권 보편적 보장	- 육아기본수당 지원 -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 3째아 이상 고교수업료·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대학교 등록금 지원 - 신혼부부 주거비용·주택공급 지 원 확대 등
모두 역량 발휘 사회	청년 삶의 기반 강화	성·재생 산권 보장	- 난임치료휴가 확대 - 임신부 건강관리, 안전한 난임시술 - 청소년 산모지원 - 의료서비스 취약지 지원 등
			-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의료취약지 산부인과·소아청소년 과 설치 운영 확대 등
			- 강원형 청년일자리·구직활동 지원 -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 - 청년 귀농·귀촌 지원 - 지역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 육성 - 제대군인 정착 지원 등
		여성 경력 유지	- 경력단절 여성 예방지원·취·창업 지원 - 경력단절 여성 고용사업주 지원 강화 등

자료: 1) 강원도. (2020). 2020년 강원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https://provin.gangwon.kr/gw/portal/sub05_01?articleSeq=166723&mode=readForm&curPage=40&boardCode=BDAADD02 에서 2021.6.2.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관계부처 합동.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ReleaseDetail.do?articleId=117>. 에서 2021.7.1.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강원도 저출산 정책 추진기반 특성

□ 강원도 인구정책 총괄부서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인구정책임.

- 2017년 7월, 강원도 저출산 대응 대책 전담조직으로 현 조직구조 내 인구정책팀을 신설함.
- 강원도의 저출산 대책 추진체계는 3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짐.
 - 첫째, 인구정책팀 담당 사무는 취합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업기획 및 실행 기능 미흡
 - 둘째, 저출산 대응 세부 사업이 여러 실국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유기적 연계 미흡
 - 셋째, 저출산 극복은 강원도 민선 7기 핵심 3대 공약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전담 조직의 위상이 낮음.

[그림 4-4] 강원도 조직도 내 저출산 대응 정책 담당·관련 부서



자료: 강원도청 홈페이지. (2021). 강원도 조직도(2021년 6월 기준). https://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3_04_03 에서 2021.8.10. 인출.

2. 강원도 저출산 정책환경 주요 특성 및 쟁점

가. 정책환경 주요 특성

□ 강점 극대화

- 첫째, 강원도의 인구정책 방향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를 위해 「4+1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추진 및 저출산 대표 정책으로 육아기본수당과 청년 취직 사회책임제,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 등 현금지원에 중점을 둔 경제적 부담경감 지원정책 추진
- 둘째, 출산율 상승 및 인구 유입·정착을 위해 인구정책 분야로 여성과 청년, 귀촌, 다문화 등 다양한 정책대상을 고려함.

□ 약점 개선

- 첫째, 인구구조 및 이동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강원도는 수도권 근접성과 자연·주거환경 이점으로 장년층의 순유입은 증가 추세인 반면 청년층의 순유출이 많아 인구 증가에 한계점으로 작용함.
- 둘째, 강원도의 높은 서비스업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여성의 높은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율은 근무환경과 안정성이 열악해 육아휴직수당, 가족돌봄 등 제도 사각지대 대상자를 높임.
- 셋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의 정책 방향을 기본으로 볼 때 강원도의 저출산 대책은 (i) 일-가정 양립 정책, (ii) 성평등 노동정책이 미흡함.

- 넷째, 강원도의 저출산 대책 담당 부서인 인구정책팀의 사업기획 및 실행 기능 부재, 관련 부서 다원화, 낮은 위상이 한계로 작용함.

□ 기회 활용

- 첫째, 강원도 내 귀촌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점은 인구 유입에서 기회 요인임.
- 둘째,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추진목표로 인구 과소지역의 압축 도시화로 인한 수도권-비수도권 양면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됨. 기존의 수도권 중심 정책에서 비수도권 지역 특성을 고려한 2-track 정책 추진을 기대함.
- 셋째, 2022년부터 중앙정부의 출생 아동 대상 영아수당 지급은 열악한 산업구조로 인해 강원도 도민의 월평균 임금이 전국의 2/3 수준인 강원도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 결과, 월평균 자녀양육 필요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중앙정부의 영아수당 지급은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수당,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과 함께 임계점을 초과하는 효과가 있음.
 - 이는 국가의 아동양육 책임 강화 및 국비 지원에 따른 강원도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예산지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위협 극복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타 시·도에 비해 근무 안정성이 열악한 강원도 내 여성들이 자녀돌봄 가중으로 경력단절 여성이 확대되고 있음.
 - 울릉군(-2.2%), 고령군(-1.94%), 영덕군(-1.51%), 영양군(-1.39%)의 순
- 2025년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화 의료돌봄 체계 강화’로 인한 정책 변화는 저출산 대책 방향 및 예산 마련에 대한 조정,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됨.

〈표 4-3〉 강원도 저출산 대응 정책 SWOT 분석

강점 요인(S)		약점 요인(W)	
- 강원도 인구정책 방향: 저출산 완화, 출산율 제고 - 정책 분야: 여성, 청년, 귀촌, 인식개선 포괄		- 청년층 순유출: 인구증가 한계점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의 정책지향점: 일·가정 양립정책, 성평등 노동 영역 미흡 - 저출산 대응 전담부서: 실행 기능 부재, 관련 부서 다원화, 위상 한계	
기회 요인(O)		위협 요인(W)	
-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 추진목표 : 인구 과소지역 압축 도시화로 인한 수도권 -비수도권의 양면대응 필요성 대두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녀돌봄이 가중된 경력단절 여성 확대: 강원도 심화 -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정책 방향 변화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 지역 인구 동태 관련 현안

가. 감소하는 인구, 증가하는 세대

□ 경상북도 및 대부분의 시·군에서 인구 감소 경향 현저

- 2015~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19개 시·군, 즉 약 83%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인구 감소
 - 울릉군(-2.2%), 고령군(-1.94%), 영덕군(-1.51%), 영양군(-1.39%)의 순
-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4개 시·군에 불과
 - 예천군(4.48%), 경산시(0.53%), 영천시(0.27%), 김천시(0.06%)의 순

□ 경상북도 및 대부분의 시·군에서 세대수 증가 추세

- 경상북도의 세대수는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전국 평균보다 낮음
- 2015~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인구 및 세대수, 그리고 1세대당 인구수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세대당 인구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인구와 세대수가 함께 증가 추세를 보이는 지역은 김천시, 영천시, 경산시, 예천군 4개 지역이며, 이 가운데 예천군의 인구 및 세대수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인구 분포에서의 지역 간 격차

- 2015~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도청 이전에 따른 영향으로 예천군의 인구가 급증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군은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
- 특히, 울릉군 및 고령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군에서 인구 감소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정주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나.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향 심각

□ 경상북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 현저

- 2015~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부산광역시 다음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율이 높음
- 같은 기간,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예천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의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연평균 증감률이 감소
 - 고령군(-7.08%), 봉화군(-5.37%), 울릉군(-5.24%)의 순으로 감소 경향 심각
- 같은 기간,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3개 시·군 가운데 18개 지역에서 감소
 - 울릉군(-3.45%), 고령군(-3.23%), 영덕군(-3.03%)의 순으로 현저
-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경상북도의 모든 23개 시·군에서 증가
 - 포항시(6.17%), 구미시(5.74%), 경산시(4.95%)의 순

□ 2020년 기준, 전체 23개 시·군의 83%가 초고령사회

- 2020년 기준, 경상북도의 고령화율은 21.7%로 초고령사회에 진입
 - 의성군(41.5%), 군위군(40.7%), 영덕군 및 청도군(37.9%)의 순
- 2020년 기준, 각 시·군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유소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경상북도 평균보다 낮으면서, 고령인구 비중은 높은 지역은 총 15개 지역으로 경상북도 전체 23개 시·군의 약 65%
 -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소멸위험 위기

- 인구소멸위험지수³⁾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경상북도는 ‘주의’에 속하며, 전체 23개 시·군 가운데 4개 지역이 ‘고위험’, 15개 지역이 ‘위험진입’, 3개 지역이 ‘주의’
 - 위험지수 0.2 미만으로 ‘고위험’ 지역은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봉화군
 - 위험지수 0.2~0.5로 ‘위험진입’ 지역은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울릉군
 - 위험지수 0.5~1.0으로 ‘주의’ 지역은 포항시, 경산시, 칠곡군

3) ‘인구소멸위험지수’를 구하는 공식은 만 20~39세 여성인구 수 ÷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이며, 수치가 1.5 이상일 경우 ‘안정’, 1.0~1.5는 ‘보통’, 0.5~1.0은 ‘주의’, 0.2~0.5는 ‘위험진입’, 0.2 미만은 ‘고위험’으로 판정함(이상호, 2018).

다. 인구 자연감소 경향 현저

□ 최근 5년간 조혼인율·조출생률·합계출산율은 감소하는 반면, 조사망률은 증가

○ 2015~2020년 최근 5년간 경상북도 조혼인율⁴⁾은 전국에서 가장 급속하게 감소

- 예천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의 최근 5년간 조혼인율은 감소 추세

○ 같은 기간, 경상북도 조출생률⁵⁾은 -10.00%로 전국 평균보다 감소 폭이 커서 출생아 수 감소가 두드러짐

- 고령군(-13.42%), 칠곡군(-11.50%), 구미시(-10.18%), 포항시(-9.44%)의 순

○ 같은 기간, 경상북도 합계출산율⁶⁾은 매년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

- 고령군(-8.52%), 칠곡군(-7.71%), 구미시(-7.31%)의 순

○ 같은 기간, 전국 대비 조사망률⁷⁾ 증가 추세

- 봉화군(4.05%), 영양군(3.40%), 영주군(2.96%)의 순

4) 조혼인율은 인구 천 명당 새로 혼인한 비율을 의미하며, 연간 혼인 건수를 당해연도 주민등록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산출함.

5) 조출생률은 인구 천 명당 새로 출생하는 아이의 비율을 의미하며, 연간 총 출생아 수를 당해연도 주민등록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산출함.

6)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함.

7) 조사망률은 당해 연도 인구 천 명당 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며, 연간 총 사망자 수를 당해연도 주민등록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산출함.

□ 2020년 기준, 경상북도 자연감소 현저

- 경상북도는 2016년 이후 인구의 자연감소 추세를 보이며, 2020년 기준 -3.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라남도(-4.2%) 다음으로 감소율이 높아,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이 심각
- 2014~2019년 최근 5년간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지역은 19개 시·군으로 전체 23개 시·군의 83%

라. 인구 사회감소 경향 현저

□ 인구 유출 규모 증가

- 2015~2020년 최근 5년간 경상북도 인구의 유출 폭은 증가 추세이며, 2018년 급증한 이후 2019년에는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2020년 더욱 큰 폭으로 급증

□ 경상북도, 여성·30대 이하 순유출 및 60대 순유입 증가

- 2015~2020년 연령별 인구 순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30대 이하 및 80세 이상에서는 지속적인 순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18년 이후부터 40~44세는 순유출이 증가한 반면, 45~79세는 순유입 규모가 큼.
- 2020년 기준으로 경상북도는 44세 이하 인구에서 순유출, 45세 이상 인구에서 순유입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남녀 모두 20대 순유출이 높으며, 여성의 경우는 20~24세, 남성의 경우는 25~29세의 비중이 높음. 한편, 순유입 인구는 55~64세 연령대의 비중이 높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음.

□ 최근 5년간, 경상북도 20개 시·군에서 순유출

- 2015~2020년 최근 5년간 인구의 순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순유출 경향을 보이는 지역이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20개 지역
 - 순유출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포항시, 구미시, 영주시, 영양군, 고령군 5개 지역
- 순유출 후 순유입으로 전환된 지역은 예천군 1곳에 불과하며, 지속적으로 순유입 추세에 있는 지역은 영천시와 경산시 2개 시 지역

마. 경상북도 산업구조 특성

□ 최근 7년간,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전체 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증가

- 2012~2019년 최근 7년간 경상북도 산업별 및 시·군별 사업체 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산업의 사업체 수는 199,547개소에서 236,807개소로 연평균 2.48%p 증가
 - 같은 기간 0.25%p 감소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전체 산업의 사업체 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10.53%p 증가
- 2012~2019년 최근 7년간 경상북도 산업별 및 시·군별 종사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산업의 종사자 수는 966,347명에서 1,150,047명으로 연평균 2.52%p 증가
 - 같은 기간 광업은 0.63%p,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18%p, 금융 및 보험업 0.71%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93%p 감소

□ 인구의 순유입 현상이 현저한 지역의 경우, 최근 7년간 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 폭이 경상북도 평균보다 높음

○ 순유출 후 순유입으로 전환된 예천군의 사업체 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15.71%p, 부동산업에서 11.32%p 크게 증가했으며, 종사자 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17.91%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2.83%p, 부동산업에서 10.83%p 증가

- 한편, 사업체 수의 경우 운수 및 창고업이 2.13%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0.90%p 감소했으며, 종사자 수는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2.18%p,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서 2.57%p, 운수 및 창고업 1.44%p, 금융 및 보험업 3.23%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3.45%p 감소

○ 지속적으로 순유입 추세에 있는 영천시와 경산시 역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최근 7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경상북도 평균보다 높음

2. 지역 인구 동태를 바탕으로 한 SWOT 분석

가. 내부환경 분석

□ 강점(Strength)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장기비전 수립 등 경북도정의 적극적 의지
 - 경북비전 2030, 지방소멸시대 경북의 지역 적응력 제고 방안, 경상북도의 급속한 인구 감소 원인 분석 및 대책 연구, 경상북도 양성평등 비전 2030 등 경상북도의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전략, 산업구조 장기비전과 관련된 정책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35곳)
 - 2020년 11월, 경상북도 내 35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총사업비 7,319억 원(국비 3,876억)을 확보하여 원도심 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 개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
- 경상북도 인구정책 제도적 기반 구축
 - 2019년 경상북도 아이여성행복국 인구정책과에서 발의·제정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는 경상북도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목적은 경상북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동 조례에 근거, 경상북도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경상북도 청년 지원 관련 조례 제정
 - 경상북도 청년의 지속적인 정착과 유입 청년 지원을 위해 2017년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및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

례', 2016년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3년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인구정책 전담부서 구성 및 예산 증가

- 경상북도는 '아이여성행복국' 아래에 정책대상별로 '인구정책과', '아이세상지원과', '여성가족행복과' 3개의 과를 구성하고 있음. 이 가운데 '인구정책과'는 '인구정책', '지방소멸대응', '이웃사촌 시범마을'이라는 경상북도가 직면한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3개의 전담부서를 조직
- 2021년 현재 '아이여성행복국'의 당초 예산은 경상북도 전체 예산의 8.4%로, 인구정책과 및 여성가족행복과는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했으며, 특히 인구정책과 예산은 전년 대비 32.6% 증가

□ 약점(Weakness)

○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

- 최근 5년간 경상북도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은 전년 대비 -0.9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감소 폭이 2번째로 큼

○ 유소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향 현저

- 최근 5년간 경상북도의 유소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감소 폭이 전국 평균보다 큼
- 특히, 최근 5년간 생산가능인구의 연평균 감소 폭은 전국 17개 시·도 중 2번째로 큼

○ 초고령사회 심화

- 2020년 경상북도의 고령화율은 21.7%이며,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19개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은 41.5%

○ 인구소멸 고위험(4곳), 위험진입(15곳)

- 2020년 기준 경상북도는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주의’로, 4개 지역이 ‘고위험’, 15개 지역이 ‘위험진입’, 3개 지역이 ‘주의’
- 2015년 대비 2020년 위험도가 심각해진 지역은 12개 시·군

○ 조혼인율·조출생률·합계출산율 감소 추세, 지속적인 자연감소

- 최근 5년간 조혼인율의 연평균 감소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감소 폭이 큼
- 최근 5년간 조출생률의 연평균 감소율은 전국 평균보다 감소 폭이 큼
- 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의 연평균 감소 폭은 9개 도 단위 지역 중 2번째로 큼

○ 순유출 인구 증가, 사회감소 현저

- 2020년 기준, 경상북도의 순유출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큼
- 2016년 이후 순유출 규모가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약 17천 명의 순유출이 발생함
- 특히 여성 및 30대 이하 연령 계층의 순유출 인구가 많으며, 순유입 인구는 50대 이상 비중이 높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음

나. 외부환경 분석

□ 기회(Opportunity)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수립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 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3대 목표를 위한 4개 추진전략과 20개 정책과제 설정
 - 4개 추진전략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으로 구성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저출생 극복 대책 마련 지향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하는 지역 인구 동태 및 관련 현안 분석을 통한 지역별 인구정책 의제 발굴 연구 진행
- 성평등 사회에 대한 공감대 확산
 - 1995년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위해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었으며, 동 법에 의거 성주류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고 있음.
-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소득 양극화, 고용불안, 저성장 등 양질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업·빈곤 등의 사회경제 문제 극복을 지향

- UN은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하고,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언했으며, 우리나라도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한 후, 2021년 현재 21,163개가 설립

○ 지구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 증대

- 코로나19, 기후 온난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심화되면서 탄소중립, 그린 뉴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추진
- 코로나19에 따른 재택·원격근무 급증으로, 지방 중소도시 이주 관심

○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변화

- 비대면 산업 생태계, 비대면 일상생활로의 급속한 전환 전망

□ 위협(Threat)

○ 코로나19, 위험사회에 대한 불안 확산

- 2019년 대비 2020년 연평균 취업자 수는 218천 명 감소, 실업자는 44천 명 증가함. 즉 코로나19 이후 실업률, 비정규직의 증가로, 여성과 청년의 실업 상승 등 고용불안이 확산

○ Gig 경제/플랫폼 경제 형태의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정

- 인터넷과 SNS의 확산으로 단기계약 형태의 일자리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 보편화되는 Gig 경제(gig economy),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자리 다양화 이면에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이 위협요인으로 지적

○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

-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혁신은 유사 직종의 성장이라는 긍정적 기대감보다 노동자의 대량 해고 및 상당수의 직종이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 야기

○ 수도권으로의 지속적인 집중화

- 특·광역시 중에는 서울과 부산, 대구, 도 지역에서는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인천, 경기지역의 인구 증가로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다. 전략과제 도출

□ 강점 기반 기회 활용(SO 전략)

○ 중앙정부의 정책 적극 활용, 국비 확보 증대

-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도시,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등 중앙부처 정책을 활용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제고 모색을 통해 인구 유입 유도 및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 조성

○ 지역 특성별 맞춤형 인구정책, 지방소멸 대응 정책 시행

- 경상북도가 향후 20년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 '제4차 경상북도 종합계획(2021~2040)'에 의하면 경상북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내실 있는 발전전략 마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넥스트 노멀 산업발전전략 마련,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한 장기적·거시적 발전 방향 정립
- 경상북도의 장기비전 방향과 연계하여, 장래인구 및 주거 수요를 고려한 지역 특성별 인구 늘리기 정책 모색

○ 성평등에 기반한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

- 고용과 사회참여의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성숙한 성평등 공동체를 통해 일과 삶, 삶이 조화로운 지역사회환경 조성
- 이를 위해 좋은 일자리 평등한 일터, 더불어 함께 하는 돌봄공동체, 안전하고 건강한 쉼터, 문화와 여가를 누리는 환경 조성, 성평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

□ 강점 기반 위협 대처(ST 전략)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다양화 모색

- 현재 경상북도에는 1,562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운영되고 있음. 현장 중심의 사회적 경제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상북도 실정에 부합한 사회적 경제 확산

○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생활지원을 통한 인구 유입 모색

- 지역에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를 지원
- 점차 비중이 높아지는 1인 가구의 생활기반별 맞춤형 대응방안 모색

□ 약점보완 기회 활용(WO 전략)

○ 디지털 경제 및 원격근무를 활용한 인구 유입 전략 수립

-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방에 거주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인구 유입

○ 생태 및 환경을 중시한 지역 발전전략 수립

- 기후 온난화의 심화와 코로나19의 변이 확산 등으로 인해 환경에 관한 관심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계 및 친환경 중심의 지역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인구 유입은 물론 정주인구의 삶의 질 제고

○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경북에서 성평등 경북으로 전환

- 경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경북형 가족친화인증제를 도입하여 기업주의 마인드를 제고하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증진
- 여성친화도시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확대

□ 약점보완 위협 대처(WT 전략)

○ 거주지 중심의 고령친화환경 조성

- 의료, 건강과 복지 중심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 일상생활 공간 내에서는 도보에 기반한 건강도시, 커뮤니티 버스 또는 웨건을 이용한 권역 간 이동 지원, 빈집을 활용한 고령자 거주 및 교류활동 증대

○ 시·군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단계별 차별적 대응

- 경상북도 권역별 발전전략과 인구관리를 통합적으로 추진
- 지방소멸 위험지역, 활력저하지역, 거점육성지역 등 지방소멸 위험지역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차별적 대응 마련 모색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기반한 지역 발전전략 모색

- 세계화와 함께 지방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경상북도 실정에 부합하는 발전전략 수립 필요

- 산업, 기술, 학제 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기반을 둔 초연결 사회로의 전환 모색

〈표 4-4〉 경북 지역의 SWOT 분석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내부환경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장기비전 수립 등 경북 도정의 적극적 의지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35곳) - 경상북도 인구정책 제도적 기반 구축 - 경상북도 청년 지원 관련 조례 제정 - 인구정책 전담부서 구성 및 예산 증가	-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 - 유소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향 현저 - 초고령사회 심화 - 인구소멸 고위험(4곳), 위험진입(15곳) - 조혼인율·조출생률·합계출산율 감소 추세, 지속적인 자연감소 - 순유출 인구 증가, 사회감소 현저
외부환경		
기회 (Opportunity)	강점기반 기회 활용 (SO 전략)	약점보완 기회 활용 (WO 전략)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수립 - 지역의 특수성 고려한 저출생 극복 대책 마련 지향 - 성평등 사회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지구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 증대 -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변화	- 중앙정부의 정책 적극 활용, 국비 확보 증대 - 도시재생, 문화도시,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등 - 지역 특성별 맞춤형 인구정책, 지방소멸대응 정책 시행 - 성평등에 기반한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	- 디지털 경제 및 원격근무 활용한 인구유입 전략 수립 - 생태 및 환경을 중시한 지역발전 전략 수립 - 가부장적, 남성 중심 경북에서 성평등 경북으로 전환
위협 (Treath)	강점기반 위협 대처 (ST 전략)	약점보완 위협 대처 (WT 전략)
- 코로나19 이후 위험사회에 대한 불안 확산 - 각 경제/플랫폼 경제 형태의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정 -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 - 수도권으로의 지속적인 집중화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다양화 모색 -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생활지원 통한 인구 유입 모색	- 거주지 중심의 고령친화 환경 조성 - 시·군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단계별 차별적 대응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기반한 지역발전전략 모색

자료: 저자 작성.

3. 정책환경 관련 주요 특성 및 쟁점

□ 지역별 거점도시 육성 및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지역생활권 조성

- 경상북도는 지리적으로 산간 지역이 많아 생활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제약
- 중심거점지역, 생활거점지역, 생활지역 등으로 지역을 세분화하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체계(콤팩트 시티)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 내에서 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빈집 등 유휴공간 활용, 지역공동체 조직 및 활성화 도모 필요
- 이를 통해 지역생활권 내, 중심거점지역과 생활거점에 서비스 기능 집약, 지역 간 연결 통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필요

□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보편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의한 산업 및 고용 형태의 변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가속화 대처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혁신기술의 일상적 보편화와 코로나19로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는 일자리 감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산업 생태계의 전환 필요
- 특히 청년과 중고령층의 실직과 소득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정책으로 지역 내 정주하며 일상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초고령사회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합의점 모색

- 유소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유출과 이로 인한 초고령사회로의 진전은 시간의 문제일 뿐 거스를 수 없는 경향

- 따라서 경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실질적 정책 방안 마련 필요

제3절 광주전남: 광주전남연구원

1. 전남 SWOT 분석

□ 인구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 시작

- 전라남도는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적극적 출산장려, 귀농·귀촌 인구 유입 확대, 청년 유입 및 유출 방지 정책 등을 적극 도입·운영해 왔음
- 전라남도는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이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저출산 극복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음
- 2018년부터는 인구문제를 출산장려 정책만이 아닌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입체적 인구정책을 시작함
 - 지방소멸의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총괄 조직(인구정책팀, 현재는 인구청년정책관실 3개 팀 운영)을 구성하고, 조례 제정(2018.12.27.)
 -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의 목적은 전라남도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개발·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 도민에게 인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에 기여를 목적

□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브랜드 사업 발굴·추진

- 현재 전라남도도는 새로운 인구 유입 흐름을 형성하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기존의 분절적 지원정책을 패키지화하여 촘촘한 생애주기별(출산, 보육, 진학, 취·창업, 결혼 등) 정책 추진을 도모
 - 지역 활력 증진과 인구 선순환 구조 마련을 목적으로 다양한 세대와 지역 특성을 발굴하여 자체 브랜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음
- 전라남도도는 기존의 출산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과 귀농·귀촌 세대 유입을 통한 건강한 인구구조 형성을 위해 전라남도의 자체 브랜드 시책사업인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전남 청년 퍼스트펍권 육성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전라남도의 인구 변화에는 사회적 인구 감소가 더욱 큰 장애요인임을 확인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대정부적 요구와 함께, 지역 인구감소의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생애주기별, 전라남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둠
 - 아울러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와 청년이 행복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의 일자리, 주거, 청년 자립 등의 지원을 적극 도입·확대

〈표 4-5〉 전남 지역의 SWOT 분석

SWOT 분석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es)
내부환경	- 풍부한 자연자원 - 청정한 거주환경 - 저렴하고 풍부한 식자재 - 미래수요에 따른 많은 기회 요소 - 저렴한 생활비 - 지역 애착 및 공동체성	- 부족한 의료인프라 - 지리적 여건 - 인력 수급 및 인재 육성 어려움 "사람이 없다" - 취약한 보육, 교육환경 - 부족한 생활편의 및 문화여가 인 프라 - 취약한 대학 환경 - 정보 및 미래 기회요소 부족 - 취약한 산업구조
외부환경		
기회 (Opportunities)	강화(S-O) 전략	보완(W-O) 전략
- 다양한 지역 매력도 - 자연자원 기반 미래산업 - 확대된 지원정책 - 인구감소 지역 지원에 관한 제 도화 - 지역 간 연대협력 촉진 - 워라밸이 있는 생활방식 선호 -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과 환경 중시 거주문화 - 고령화에 대응한 산업과 비지 니스	- 청정, 힐링, 웰에이징 미래산업 기반의 인프라 확충 -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 매 력 요소 발굴 및 수요 매칭 - 고령친화 거주환경 조성을 통 한 계속 거주와 귀농·귀어·귀 촌 촉진 - 읍·면 중심 콤포트화를 통한 생 활 SOC 등 확충 - 교육과 창업 연계 지원 확대 - 지역 애착 프로젝트 강화	- 정주여건 필요 인프라 확충 -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 구축 - 사회서비스 등 필요인력 확충 - 미래수요 반영 교육경쟁력 강화 - 지역정보 플랫폼 구축 - 지역특화대학 활성화
위협 (Treaths)	극복(S-T) 전략	방어(W-T) 전략
-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 마을소멸 등 과소화 - 낮은 재정자립도 - 높은 복지예산 비중 - 필요인력 수급 어려움 - 중앙의존적 정책설계 - 대응력 낮은 정책 - 지역 간 경쟁 - 필수인프라 유지관리 어려움 - 분산적 공간 계획 - 주민 간 갈등(원·신)	- 고령화 비즈니스 활성화 - 마을소멸 대응 공간 재편전략 수립 -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적극 발굴 - 지역 주도 인구정책 설계 및 실천 - 필수인프라 유지관리 계획 수립 - 지역 정착을 위한 주민 간 협력 체계 및 프로그램 확대	- 고령화 대응 공공수요 인력 육성 및 확충 - 공동체 기반 인프라 및 주민참여 형 안전망 구축 - 생활 단위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원발굴 및 생태계 조성 - ICT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 및 서비스 활성화 - 경로당 등 커뮤니티 공간 융복합 화 추진 - 관계인구, 고향사랑기부금제 등 지역 활성화 전략 마련

자료: 저자 작성.

2. 주요 특성 및 쟁점

□ 새로운 유입 흐름 형성 및 변화된 인구구조에의 대응 집중

- 출산을 제고 정책 외에 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전라남도 도민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 2040 젊은 세대의 경제적 자립, 결혼·육아에 대한 희망을 응원하고, 촘촘한 복지망을 갖춘 따뜻한 지역공동체 확대 조성
- 스마트 지역관리 기법의 도입을 통해 지역 활력을 재고하면서 고령 및 1인 가구 증가, 공동화 지역 확대에 부합한 지역계획, 공간재활용, 축소도시 등 효율적인 지역관리 체계 정비
- 관광객 유입 확대, 외국인 정착 유도 등 유동인구를 간접 인구화하여 지역경제 활력 주도

□ 생애주기별, 지역별 선택과 집중

- 청년 일자리 주거지원, 귀농·귀어·귀촌인 정착지원, 결혼·출산·양육 패키지형 지원 등 생애주기 간 정책 연계로 지역 활력을 높이고 인구 유입 선순환 구조로 전환
- 시·군 권역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구담 구축 및 인구정책 추진
 - (광주 근교권) 보육·교육·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담 및 귀촌벨트 구축
 - (농어촌 지역) 귀농·귀어·귀촌 정착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중점 추진
 - (시 지역) 주력산업 중심 시 지역은 일자리·보육·교육 지원 강화

□ **젊은 세대 유입·정착 지원으로 건강한 인구구조 형성**

- 인구 감소 대응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젊은 세대 유입 프로젝트 발굴
 -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운영(4대 분야, 100개 시책)
 - 전라남도 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2040세대 희망디딤공간 프로젝트 추진
- 청년층 농·어업 분야 진출 촉진을 위한 영농·영어 정착지원
- 귀농·산·어촌인 안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확대

□ **아이와 청년이 행복한 환경 조성**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친화형 환경 조성
- 아동의 건강한 성장·양육환경 마련
- 청년 자립 기반 마련 및 지역 정착지원

□ **양질의 일자리 지속 확대·창출**

-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추진하여 3대 고용지표 개선
- 청년 선호 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취업 연계 서비스 추진
- 혁신성장을 이끄는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 구축

□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 마을공동체 양성 및 지원기반 구축
- 사회적 경제 기업 성장 견인을 위한 육성 확대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도시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
- 어촌발전 선도 핵심사업 유치

제4절 부산: 부산복지개발원

1. 강점(Strength)

□ 인구 감소의 인지와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 부산광역시는 광역도시라는 특성상 비록 저출산이 심각하지만 젊은 층의 유출 등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인구 감소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저출산과 청년정책, 일자리 정책을 함께 고려

- 그동안 출산기금 마련 등 둘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최근 들어 출산 정책과 청년정책이 서로 연결된 정책인 점을 인식하기 시작함
- 이에 따라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저출산 정책과 청년정책을 함께 수립하여 일자리와 머물 자리(정주여건) 등 시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 지원
- 젊은 인구 유입과 기존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방지하는 정책들을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하였음
 - 청년들의 의견조사에서 일자리만 있다면, 부산광역시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주된 의견임

□ 특·광역시 중 고령화가 가장 빠름을 인식

- 부산광역시는 다른 인구정책과 동일하게 특·광역시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함
-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면서 고령화 문제를 지역 내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내 노인복지과만으로는 역부족임을 인식하여 부산시 노인복지기본계획 수립부터 관련 14개 부서가 동시에 이를 위한 대치를 실시함

〈표 4-6〉 전국 및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인구 추이(1995~2020)

(단위: 명, %)

구분	전국		부산	
	총 인구 수	(전년 대비) 증가율	총 인구 수	(전년 대비) 증가율
1995	45,858,029	0.97	3,883,880	1.15
1996	46,266,256	0.89	3,867,125	-0.43
1997	46,684,069	0.90	3,851,312	-0.41
1998	46,991,171	0.66	3,829,098	-0.58
1999	47,335,678	0.73	3,817,270	-0.31
2000	47,732,558	0.84	3,796,506	-0.54
2001	48,021,543	0.61	3,770,536	-0.68
2002	48,229,948	0.43	3,730,125	-1.07
2003	48,386,823	0.33	3,691,445	-1.04
2004	48,583,805	0.41	3,666,345	-0.68
2005	48,782,274	0.41	3,638,293	-0.77
2006	48,991,779	0.43	3,611,992	-0.72
2007	49,268,928	0.57	3,587,439	-0.68
2008	49,540,367	0.55	3,564,577	-0.64
2009	49,773,145	0.47	3,543,030	-0.60
2010	50,515,666	1.49	3,567,910	0.70
2011	50,734,284	0.43	3,550,963	-0.47
2012	50,948,272	0.42	3,538,484	-0.35
2013	51,141,463	0.38	3,527,635	-0.31
2014	51,327,916	0.36	3,519,401	-0.23
2015	51,529,338	0.39	3,513,777	-0.16
2016	51,696,216	0.32	3,498,529	-0.43
2017	51,778,544	0.16	3,470,653	-0.80
2018	51,826,059	0.09	3,441,453	-0.85
2019	51,826,287	0.00	3,438,259	-0.09
2020	51,847,509	0.04	3,411,819	-0.77

자료: 통계청, (2021v).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2 에서 2021.6.2.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7〉 부산광역시 세대별 인구 변화

(단위: 명, %)

구분	20세 미만		30세 미만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2010	520,742	-0.47	541,905	0.08	613,833	-0.13	563,221	0.40	568,140	0.29
2015	456,514	-0.08	493,958	-2.20	568,218	-1.46	619,703	-1.73	762,654	9.79
2020	430,988	-0.01	419,015	-0.04	511,149	-0.01	568,914	-0.02	957,514	0.04

자료: 통계청, (2021x).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에서 2021.6.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약점(Weakness)

□ 부산지역 내부에서도 편차가 큰 인구 분포

- 부산지역 내에서도 구도심(동구, 중구, 영도구, 서구)을 중심으로 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다수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도시재생 등에도 한계가 존재함
- 젊은 인구들은 가급적이면 정주여건이나 교육여건이 좋은 다른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을 보여, 구도심에는 빈집 등이 많이 존재함. 더욱이 구도심은 개발에 한계가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노인들이 산복도로 등에서 생활하며, 일상생활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 한때 구도심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는 사업 등을 시행했으나 선거구 감소 등 정치적인 상황으로 무산됨

□ 지속적인 집값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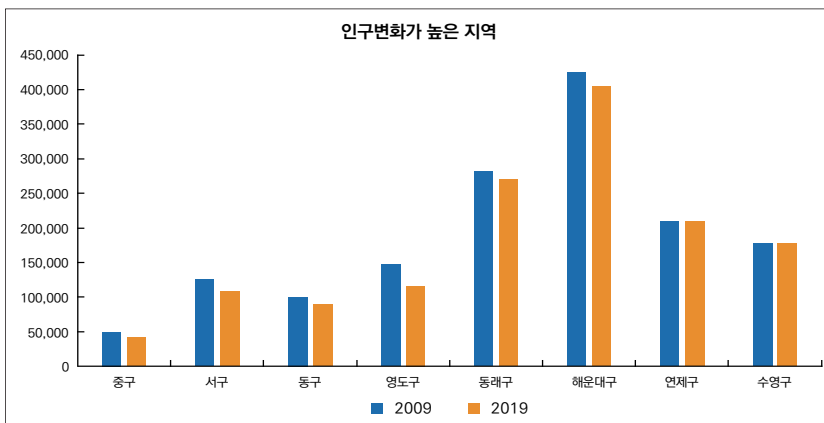
-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특히 해운대구, 수영구)을 중심으로 재개발 등이 추진되며 집값이 급속도로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이 지역을 선호하는 청년 부부나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생활하기 힘든 상황임

□ 가급적 취업에 유리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입학

- 부산광역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부산지역이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과거 지어졌던 산업시설의 지가 상승으로 땅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
- 부산광역시에 머물고 싶어도 높은 집값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근 울산, 창원 지역으로 청년층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하지만 최근 울산과 창원 지역까지 집값이 오르면서 수도권으로 옮겨 가는 현상
- 취업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입학해야 한다는 의식이 지속적으로 증가
- 결과적으로 부산광역시에 젊은 층이 거주를 유도할 수 있는 정주여건, 문화여건, 생활여건 등 모든 것이 부족

[그림 4-5] 지역 내 인구 변화(2009,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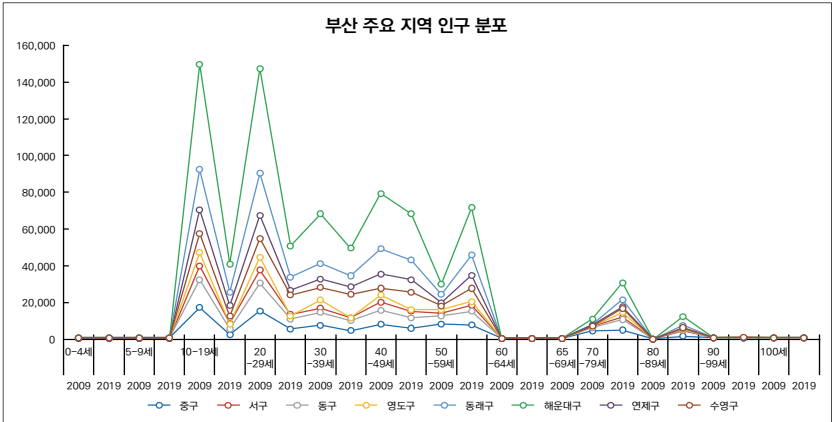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행정안전부. (2021).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데이터파일]. <https://jumin.moi.go.kr/#> 에서 2021.9.28. 인출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4-6] 부산광역시 자치구 연령별 분포(2009, 2019)

(단위: 명)



자료: 통계청. (2021x).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데이터파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에서 2021.6.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예산 부족으로 인한 청년 사업의 지원 부족

- 2021년 기준 부산광역시 생애주기별 예산의 총규모는 노년(41.0%), 1인당 지원액은 영유아(523만 원)가 최고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예산은 부산광역시 자체만의 예산이 아니며, 국·시비 매칭이 안 되는 사업 등은 사업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표 4-8〉 부산광역시 대상별 지출예산(2021)

(단위: 명, 원, %, 배)

구분	합계	영유아 (0~5세)	아동/청소년 (6~19세)	청년 (20~34세)	중장년 (35~64세)	노년(65세~)
인구(만 명)	341	13 (4.0%)	39 (12.0%)	63 (18.0%)	164 (48.0%)	62 (18.0%)
예산(억 원)	51,504	6,806 (13.0%)	8,265 (16.0%)	4,365 (8.0%)	11,003 (21.0%)	21,066 (41.0%)
연간 1인당 지원예산(만 원)		523	212	69	67	340
*중장년기준 예산 비교		7.8배	3.2배	1.0배	1.0배	5.1배

자료: 부산광역시. (2021).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 <https://www.busan.go.kr/nbtnewsBU/1498013>에서 2021.8.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지원 분야 예산을 보면, 생활·건강·보육·교육 분야에 총예산의 88%를 집중하고 있으며 그 외 주거나 돌봄/안전, 고용 등에는 크게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표 4-9〉 부산광역시 분야별 예산 현황(2021)

(단위: 원, %)

구분	합계	생활	건강	보육	교육	주거	돌봄/안전	고용	기타
예산 (억 원)	51,504 (100.0)	23,718 (46.0)	10,483 (20.0)	7,061 (14.0)	4,041 (8.0)	2,134 (4.0)	1,979 (4.0)	1,279 (2.0)	810 (2.0)

자료: 부산광역시. (2021).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 <https://www.busan.go.kr/nbtnewsBU/1498013> 에서 2021.8.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기회(Opportunity)

□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으로 이동 감소

-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지역에서도 일자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 부산광역시의 청년 유출이 다소 줄어들음. 이러한 기회를 살려 이들이 부산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책 마련(예: 월세 지원, 청년능력개발 지원 등)
- 청년 부부들에게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임대주택 및 주택청약을 지원하여 이들이 부산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

□ 2021년 9월경 초고령사회 진입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초기, 중기, 후기 노인의 욕구에 맞추어 새로운 시책 개발 및 지원이 필요

- 부산광역시 전체 부서에서 노인정책과 관련한 정책들을 제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새롭게 재개편하여 변화하는 노인 수요에 맞도록 사업을 수행
- 최근 고령사회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65세 노인뿐만 아니라 이전에 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50+(50~69세) 세대(전체 부산 인구 3,361,781명의 32.8%)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이러한 상황 속에 이들이 창업 등으로 불안정한 노후를 마주하지 않도록 지원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

〈표 4-10〉 부산광역시 65세 이상 인구의 연령구간별 증가율

(단위: 명, %)

구분	노인인구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2010	401,784	154,143	115,168	70,791	38,051	38,051	4,719	1,379	1,043
	(5.0)	(-0.4)	(5.9)	(9.4)	(7.4)	(11.6)	(20.5)	(40.7)	(8.73)
2015	514,630	184,875	140,328	99,313	54,727	24,401	7,782	1,715	1,489
	(4.37)	(6.07)	(-1.05)	(5.58)	(9.06)	(5.9)	(7.38)	(9.85)	(5.51)
2020	657,711	231,817	169,886	123,413	79,270	36,410	12,152	2,876	1,887
	(5.71)	(8.19)	(5.94)	(-0.74)	(6.03)	(9.82)	(6.03)	(7.93)	(5.14)

자료: 통계청. (2021x).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데이터파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 에서 2021.6.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11〉 부산광역시 50대 이상 연령별 비율(2021.7)

(단위: 명, %)

총인구	연령구간 인구수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100세 이상
3,361,781	1,531,744	556,481	544,644	294,713	120,274	14,876	756
	(45.6)	(16.6)	(16.2)	(8.8)	(3.6)	(0.4)	(0.02)

자료: 행정안전부. (2021).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데이터파일]. <https://jumin.mois.go.kr/#> 에서 2021.9.28.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위협(Threat)

□ 단기간 성과 위주의 정책

- 적어도 인구정책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상황들이 함께 제대로 작동해야 이루어질 수 있으나, 선출직 시장으로 무엇이든 단기간의 성과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임(예: 일자리, 정주여건, 교육환경, 인식개선, 돌봄과 부양부담 감소)
- 단기간의 성과는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보여주기식의 전시성 행정일 뿐이며, 정권이나 시장이 바뀌면 이전 시장의 정책은 모두 없애는 것이 많음. 인구정책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정책이나 이전 시장의 정책도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

- 하나의 정책을 만들면 다른 정책을 줄이는 제로섬 게임과 같이 국비 매칭 이외의 시비 사업은 전면 감소, 혹은 없애야 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현실임. 즉 국비 없이 시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으므로 아직 지방분권화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비로만 할 수 있는 정책이 거의 없는 상태임
- 또한, 전반적인 정책들이 국비 매칭으로 이루어져 국비 매칭을 하면 지방정부, 지자체로 갈수록 예산 부족 현상이 극심함
- 지역의 인구 상황 및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는 현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국비 사업인 지역통합돌봄 시범지역 2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7:3(1억. 시비:구비)으로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제5절 충북: 충북연구원

1. 충청북도 지역 인구 동태 관련 현안

□ 청년층 역의 유출⁸⁾

○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2007~2018, 1만 206명 표본)를 이용해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한 결과,

- 지난 11년 동안 수도권 거주자의 8.0%는 비수도권에서 유입됐고, 중부권은 12.8%, 호남권은 4.5%, 영남권은 3.5%가 타 권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중부권에서 타 지역 수도권으로 10.1%가 유출되었음

〈표 4-12〉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2007 → 2018)

(단위: %)

2018년 2007년	유입				2018년 2007년	유출			
	수도권 (N=3,681)	중부권 (N=842)	호남권 (N=616)	영남권 (N=1,806)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수도권	92.0	7.6	3.7	2.3	수도권 (N=3,516)	96.4	1.8	0.7	1.2
중부권	2.3	87.2	0.5	0.6	중부권 (N=832)	10.1	88.2	0.4	1.3
호남권	2.1	1.4	95.5	0.7	호남권 (N=688)	11.1	1.7	85.5	1.7
영남권	3.6	3.8	0.3	96.5	영남권 (N=1,909)	7.0	1.7	0.1	91.3

주: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중부권은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 호남권은 광주·전북·전남, 영남권은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지역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20.6.16.).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현황 및 특징. 고용조사브리프 봄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통계조사팀 보도자료. p.1. <https://www.keis.or.kr/user/bbs/main/137/3963/bbsDataView/46313.do> 에서 2021.8.20.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8) 청년층 역의 유출에 대한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2020.6.16.)의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현황 및 특성’과 임기찬 기자(2021.7.15.)의 ‘일터·쉼터·놀터 없는 충북, 청년인구 10년 새 7만명 줄었다’ 기사를 참조하여 정리함.

- ‘1회 충북인구포럼’ 발표자료(2021.7.14.)를 보면, 2020년 충청북도의 청년인구(15~39세)는 47만 341명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함
- 2011년 54만 1,445명으로 충청북도 전체 인구의 34.6%를 차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7만 1,104명(13.1%)이 감소하였고, 이는 일자리를 찾거나 학업 등의 이유로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점점 더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 지역별로 보면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 중 진천군을 제외하고 모두 청년인구가 감소했는데, 진천군은 2011년 2만 347명에서 2020년 2만 4,598명으로 유일하게 증가
 - 청주시는 2011년 25만 9,057명에서 2020년 28만 2,196명으로 늘었으나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증가로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이 39.1%에서 33.4%로 줄었음
 - 또한, 충주시(6만 8,774명 → 5만 7,486명), 제천시(4만 3,456명 → 3만 3,933명), 음성군(2만 8,730명 → 2만 3,163명), 보은군(8,248명 → 5,730명), 옥천군(1만 4,864명 → 1만 291명), 영동군(1만 3,479명 → 9,581명), 증평군(1만 2,002명 → 1만 896명), 괴산군(8,569명 → 7,112명), 단양군(8,179명 → 5,355명)에서도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이 감소함
 -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보은군 17.7%, 괴산군 18.1%, 단양군 18.4% 순으로 그만큼 이 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함을 의미함

〈표 4-13〉 충청북도의 청년인구 변화와 분포(2011, 2020)

(단위: 명, %)

구분	2011	2020
충청북도	541,445 (34.6)	470,341 (29.4)
청주시	259,057 (39.1)	282,196 (33.4)
충주시	68,774 (33.0)	57,486 (27.4)
제천시	43,456 (31.6)	33,933 (25.5)
보은군	8,248 (23.8)	5,730 (17.7)
옥천군	14,864 (27.8)	10,291 (20.4)
영동군	13,479 (26.6)	9,581 (20.2)
증평군	12,002 (35.3)	10,896 (29.6)
진천군	20,347 (32.3)	24,598 (29.4)
괴산군	8,569 (23.0)	7,112 (18.1)
음성군	28,730 (31.3)	23,163 (24.9)
단양군	8,179 (25.9)	5,335 (18.4)

주: 2015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는 전수조사를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함.

자료: 충청북도, (2021a). 제1차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 충북: 충북연구원. p.8
9. 〈그림 2-19〉 재인용.

- 인구 자연감소는 2018년부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시작
 - 2018년 사망자는 1만 1,334명으로 출생자 1만 586명을 앞질렀음
- 충청북도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0.84명보다 높은 0.98명(전국 8번째)이었으나 10년 이상 감소세를 보였음

□ 농촌지역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⁹⁾

○ 충청북도 내 시·군별 고령화율과 장수도

- 2019년 고령화율은 보은군 33.1%, 괴산군 32.0%, 영동군 30.0%, 단양군 29.1%, 옥천군 28.5%, 제천시 20.6%, 음성군 20.1% 순으로 나타남
- 노령화 지수 및 장수도
 - 노령화 지수는 2010년 충청북도 내 괴산군이 304.4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보은군은 250.7, 영동군은 212.6, 단양군은 189.8인 반면 청주시는 가장 낮은 43.7로 나타남
 - 2019년에는 괴산군이 524.6으로 가장 높고, 보은군 437.1, 단양군 384.4, 영동군 355.9 순으로 나타났음
→ 농촌지역일수록 유소년인구에 비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음을 의미함
 - 장수도는 2010년 보은군이 8.1%에서 2019년 13.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청북도 시·군별 장수도는 2010년에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충주시, 청주시, 음성군 순이며, 2019년에는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순으로 나타남

9) 농촌지역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2021a)의 '제1차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일부를 참조하여 정리함.

〈표 4-14〉 충청북도 시·군별 노령화 지수와 장수도 비교

(단위: %)

구분	2010			2015			2019		
	노령화 지수 ¹⁾	장수도 ²⁾	노령인구 비율	노령화 지수 ¹⁾	장수도 ²⁾	노령인구 비율	노령화 지수 ¹⁾	장수도 ²⁾	노령인구 비율
충청북도	81.0	7.2	13.2	107.2	8.9	14.8	136.2	10.7	17.1
청주시	43.7	7.1	8.0	68.6	8.7	10.7	89.8	10.0	12.7
충주시	93.3	7.2	14.4	128.8	8.5	16.3	163.8	10.7	18.9
제천시	99.9	6.8	14.8	142.4	8.3	17.3	187.6	9.4	20.6
청원군	85.5	7.5	14.4	-	-	-	-	-	-
보은군	250.7	8.1	27.2	328.5	10.7	29.5	427.1	13.8	33.1
옥천군	167.2	7.6	21.5	236.5	9.9	24.7	314.1	12.8	28.5
영동군	212.6	8.0	24.6	284.9	9.9	26.9	355.9	12.2	30.0
증평군	76.9	6.1	13.1	90.6	7.9	14.0	116.0	10.1	16.4
진천군	94.4	6.7	15.4	112.5	9.1	16.2	111.0	11.3	16.0
괴산군	304.4	7.8	28.0	400.6	9.4	29.5	524.6	12.1	32.0
음성군	102.5	7.1	15.9	132.4	9.4	17.1	185.6	11.5	20.1
단양군	189.8	6.8	22.1	275.9	8.7	25.5	384.4	10.5	29.1

주: 1) 노령화 지수는 15세 미만 유소년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년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2) 장수도는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8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충청북도, (2021a). 제1차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 충북: 충북연구원. p.7

1. 〈표 2-36〉 재인용.

○ 1인 가구 변화

- 2020년 충청북도 전체 가구(662천 가구) 중 1인 가구는 219천 가구로 약 3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176천 가구 대비 24.4% 증가한 것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등 시 지역에서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취업과 관련이 있으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 군 지역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은 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는 만혼, 이혼, 비혼 등 핵가족화와 기대수명의 연장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15〉 충청북도 1인 가구 변화(2015~2020)

(단위: 천 가구, %)			
구분	전체 가구(천 가구)	1인 가구(천 가구)	1인 가구 비율(%)
2015	603	176	29.2
2016	615	185	30.0
2017	625	191	30.5
2018	635	198	31.2
2019	651	212	32.6
2020	662	219	33.2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시도별 1인가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I002S&conn_path=I2 에서 2021.10.1.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충청북도 지역 인구 동태를 바탕으로 한 SWOT 분석¹⁰⁾

가. 강점(Strength)

□ 지역별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식 강화

-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촌 과소화 및 지방 위축 등 농촌 인구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과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
- 인구 유지 및 유지를 위한 충청북도 시·군 지역별 정책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별 인구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음

□ 국토의 중심인 입지조건과 자연·역사·문화 자원 우수

- 수도권과 가깝고 국토의 중심인 입지 여건과 깨끗한 자연자원,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음

10) 충청북도 지역의 SWOT 분석은 충청북도(2021b)의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과 우장명 외(2018)의 '농촌인구 감소대책 중점과제 발굴 연구용역'을 일부 참조하여 정리함.

나. 약점(Weakness)

□ 지역공동체 활력 및 지역 역량 부족

- 장기간에 걸친 농촌인구의 유출 및 저출산·고령화로 농촌 지역공동체의 활력이 떨어져 있으며, 새로운 농촌개발 및 인구문제에 대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이 필요

□ 청년층 인구 유입 정책의 부재

- 기존 인구 유입 연령이 40대 이후 중장년층의 귀농·귀촌에 치우쳐 있음
- 청년층의 농촌지역 정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농촌에 대한 투자 자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기존의 농촌 관련 정책은 종합적인 정책적 대응 중심의 추진체계가 부재한 상황
-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농촌에 대한 투자 자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이 부족

□ 농촌지역의 생활 서비스 여건이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환경보전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관련 시설 설치에 제한을 받음

다. 기회(Opportunity)

□ 수도권 인접성과 교통개선

- 고속전철 개통, 중부고속도로 확장 및 수도권 전철 확장 계획 등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 여건 개선
 - 청주 지역과 충청북도 북부권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 인구 유입, 소비시장 발달과 농업발전 등 연관된 기회요인이 발생
 -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혁신도시 건설로 음성, 진천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

□ 균형발전(지역분권) 강화 추세

-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확대되면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개발, 농촌개발 및 농촌인구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

라. 위협(Threat)

□ 농촌지역의 저출산 경향이 지속(낮은 출산율, 청년 및 가임여성인구 유출)되고 있음

- 충청북도 지역은 청년층 및 여성인구의 순유출과 장년층 이상의 순유입 경향을 동시에 보이고 있어 장기적으로 출생인구나 유소년인구 비율이 줄고 있음
- 보육 및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도·농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환경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출산율 제고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

□ 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활력 저하

-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산업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가 악화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도·농 소득 격차 확대 및 농업(농업인구) 비중의 감소

- 고령화된 농업인구와 농업의 경쟁력 감소로 농촌지역의 농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 산업으로써의 농업 비중 축소와 공동화 현상에 따라 도·농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음

□ 농촌 과소화 속에서 보육, 교육, 의료서비스 공급 약화

- 농촌 마을의 과소화가 진행되면서 보육, 교육, 의료, 교통 서비스 공급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표 4-16〉 충북 지역의 SWOT 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 지역별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식 강화	- 국토의 중심인 입지조건과 자연·역사·문화 자원 우수	- 지역공동체 활력 및 지역 역량 부족	- 청년층 인구 유입 정책의 부재
		- 농촌에 대한 투자 재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여건이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 수도권 인접성과 교통개선	- 균형발전(지역분권) 강화 추세와 지역별 인구정책 추진 조건 조성	- 농촌지역 저출산 경향이 지속(낮은 출산율, 청년 및 가임여성인구 유출)되고 있음	- 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활력 저하
		- 도·농 소득 격차 확대 및 농업(농업인구) 비중의 감소	
		- 농촌 과소화 속에서 보육, 교육, 의료서비스 공급이 약화되고 있음	

자료: 저자 작성.

3. 정책환경 관련 주요 특성 및 쟁점

가. 충청북도의 정책 환경

□ 지리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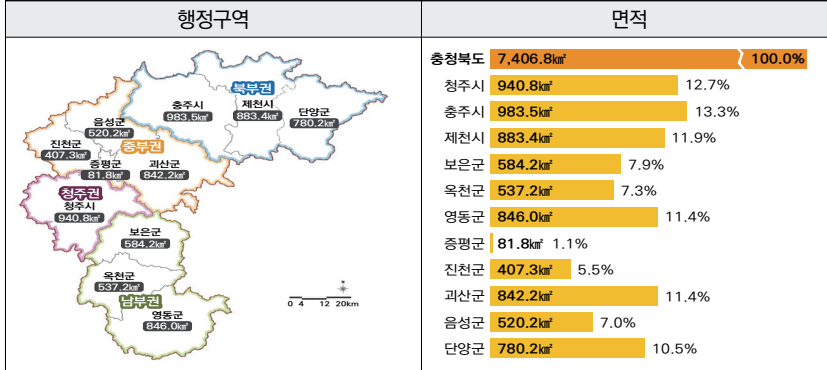
- 충청북도는 국토 공간상으로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지역 간 교류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개발압력을 1차적으로 흡수·완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문제 해결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으로 판단됨

□ 행정구역 및 면적

- 충청북도의 총면적은 7,406.8km²로 3개 시 지역(청주시, 충주시, 제천시)과 8개 군 지역(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으로 구성되어 있음
- 충청북도 내 전체 읍·면·동은 153개, 통·리는 4,975개임
- 시 지역의 면적은 2,807.7km², 군 지역의 면적은 4,599.1km²를 이루고 있음

[그림 4-7] 충청북도 행정구역 및 면적

(단위: %, km^2)



자료: 충청북도. (2021b).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충북: 충북연구원. p.28. <그림 1-5-4> 재인용.

□ 경제활동인구

○ 충청북도의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기준 919천 명으로 65.3%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 62.5%보다 2.8%p 높은 수치임

- 고용률은 63.2%로 전국(60.1%) 대비 3.1%p 높고, 실업률은 3.2%로 전국(4.0%) 대비 0.8%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충청북도 11개 시·군별 경제활동인구 수는 시 지역의 경우 청주시(445.4천 명), 충주시(118.3천 명), 제천시(74.3천 명) 순으로 높았고, 군 지역에서는 음성군(64.3천 명)과 진천군(51.8천 명)의 경제활동인구 수가 타 군 지역에 비해 약 2배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실업률도 진천군(68.7%), 음성군(68.3%) 순으로 군 지역에서 높았고, 충청북도 모든 시·군에서 실업률이 60%대로 높게 나타남

〈표 4-17〉 전국 및 충청북도의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¹⁾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15~64세 고용률
전국	2011	41,387	25,389	24,527	863	15,998	61.3	3.4	59.3	63.9
	2015	43,239	27,153	26,178	976	16,086	62.8	3.6	60.5	65.9
	2020	44,785	28,012	26,904	1,108	16,773	62.5	4.0	60.1	65.9
충북	2011	1,275	778	759	19	497	61.0	2.4	59.5	64.6
	2015	1,345	862	839	22	484	64.0	2.6	62.4	68.3
	2020	1,409	919	890	29	489	65.3	3.2	63.2	69.0

주: 1) 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도)별 경제활동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4S&conn_path=12 에서 2021.9.10.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18〉 충청북도 시·군별 경제활동인구(2018)

(단위: 천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15~64세 고용률
청주시	721.3	445.4	436.0	9.5	275.9	61.8	60.4	2.1	65.6
충주시	188.2	118.3	115.9	2.3	69.9	62.8	61.6	2.0	66.3
제천시	119.9	74.3	73.1	1.2	45.6	61.9	60.9	1.7	66.1
보은군	28.7	19.5	19.3	0.2	9.2	68.1	67.3	1.1	75.0
옥천군	44.2	29.6	29.2	0.1	14.6	67.0	66.0	1.4	72.6
영동군	43.2	26.3	26.2	0.1	16.9	60.8	60.5	0.5	65.1
증평군	31.2	20.7	20.2	0.5	10.5	66.3	64.6	2.6	68.9
진천군	74.5	51.8	51.2	0.7	22.6	69.6	68.7	1.3	72.7
괴산군	35.7	24.7	24.2	0.5	11.0	69.2	67.9	1.9	73.3
음성군	91.6	64.3	62.6	1.8	27.3	70.2	68.3	2.7	74.4
단양군	25.5	17.2	16.8	0.3	8.3	67.4	66.1	1.9	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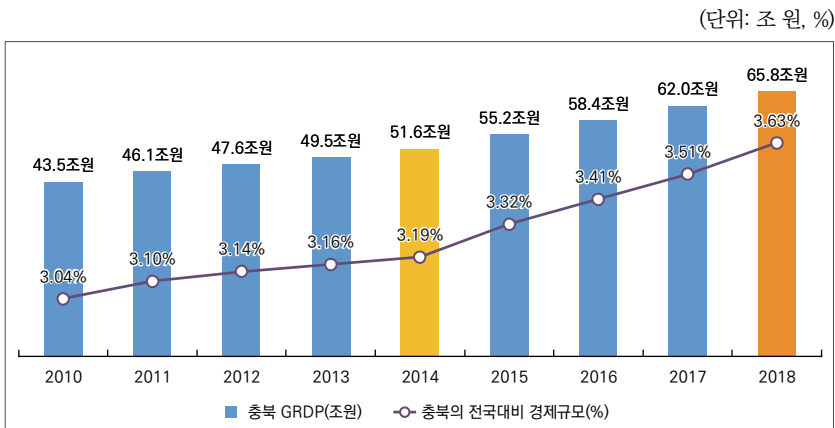
자료: 충청북도. (2021b).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충북: 충북연구원. p.37. 〈표 1-5-7〉 재인용.

□ 충청북도의 경제성장률 및 경제 규모 현황(GRDP 기준)

- 2018년 충청북도의 실질 GRDP(2015 기준연도 가격)는 총 65.8조 원으로 전국의 경제성장률 2.9%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 충청북도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4.2%(8위), 2015년 7.0%(3위), 2016년 5.8%(2위), 2017년 6.1%(2위), 2018년 6.3%(1위)로 변화함

- 충청북도의 경제 규모는 1986년 중반 이후 3.1% 내외에서 1996년 3.4%까지 점유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어 3.1~3.2% 수준에 정체되었고, 최근 들어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활동 등으로 인해 점유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
- 2018년 전국 대비 충청북도의 경제 규모 비중은 3.63% 수준이고, 전국 대비 충청북도의 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림 4-8] 전국 대비 충청북도의 경제 규모 변화 추이(2010~2018)



주: 2015년 기준연도 가격(연세)을 기준으로 전국 대비 충청북도의 경제 규모 변화 추이를 연도별로 산출하여 정리함.

자료: 통계청, (2021s). 국가통계포털-충청북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2&tblId=DT_2015Y33GRDP1&conn_path=12 에서 2021.9.1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충청북도의 1인당 생산/소득/민간소비 규모

- 2018년 기준 충청북도의 1인당 지역 총생산 규모는 4,302만 원으로 전국 평균(3,687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1인당 개인 소득은 1,844만 원으로 전국 평균(1,991만 원)을 하회하고 있으며, 1인당 민간소비는 1,558만 원으로 전국 평균(1,762만 원)을 하회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충청북도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1인당 개인소득과 민간소비 규모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

〈표 4-19〉 전국 17개 시·도별 1인당 생산/소득/민간소비 규모(2018)

(단위: 만 원, %)

구분	지역 내 총생산 ¹⁾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민간소비 ²⁾		
	현황	상대 수준		현황	상대 수준		현황	상대 수준		현황	상대 수준	
전국	3,687	100.0		3,701	100.0		1,991	100.0		1,762	100.0	
서울	4,366	118.4		4,836	130.7		2,332	117.1		2,131	120.9	
부산	2,646	71.8		2,829	76.4		1,887	94.8		1,766	100.2	
대구	2,315	62.8		2,700	73.0		1,856	93.2		1,721	97.6	
인천	3,019	81.9		3,136	84.7		1,866	93.7		1,609	91.3	
광주	2,665	72.3		2,976	80.4		1,987	99.8		1,784	101.2	
대전	2,721	73.8		3,053	82.5		1,965	98.7		1,755	99.6	
울산	6,379	173.0		5,269	142.4		2,166	108.8		1,809	102.6	
세종	3,657	99.2		3,724	100.6		2,099	105.4		1,692	96.0	
경기	3,682	99.9		3,915	105.8		1,991	100.0		1,728	98.0	
강원	3,086	83.7		2,847	76.9		1,845	92.7		1,657	94.0	
충북	4,302	116.7		3,367	91.0		1,844	92.6		1,558	88.4	
충남	5,301	143.8		3,994	107.9		1,846	92.7		1,587	90.1	
전북	2,780	75.4		2,678	72.4		1,814	91.1		1,572	89.2	
전남	4,213	114.3		3,516	95.0		1,821	91.4		1,560	88.5	
경북	4,068	110.3		3,453	93.3		1,819	91.3		1,585	89.9	
경남	3,299	89.5		3,099	83.7		1,847	92.7		1,607	91.2	
제주	3,072	83.3		3,119	84.3		1,846	92.7		1,664	94.4	

주: 1)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백만 원/명) = 지역 내 총생산(당해연도 가격) ÷ 추계인구

2) 1인당 민간 소비지출액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민간부문의 연간 소비지출을 국민 1인당 평균 수치로 나타낸 것을 의미함.

자료: 1) 통계청. (2021q). 국가통계포털-지역소득 1인당 GRDP(시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C86_02&conn_path=I2 에서 2021.9.1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통계청. (2021b). 국가통계포털-1인당 지역총소득(시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C86_03&conn_path=I2 에서 2021.9.1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통계청. (2021a). 국가통계포털-1인당 개인소득(시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C86_04&conn_path=I2 에서 2021.9.1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통계청. (2021c). 국가통계포털-1인당 민간소비지출액(시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C86_01&conn_path=I2 에서 2021.9.1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의 심화

- 청주시의 부가가치 점유율이 51.7%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남부 3군(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이 각종 규제와 성장 동력의 부재로 인해 중부권(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의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회함에 따라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있음

〈표 4-20〉 충청북도 시·군별 지역 내 총생산(GRDP)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GRDP				비중	YoY
	2000	2005	2010	2016		
충청북도	30.6	29.4	39.5	54.1	100.0	8.6
청주시	14.8	13.2	18.9	28.0	51.7	9.9
충주시	3.7	3.5	4.2	5.5	10.3	2.7
제천시	2.0	1.7	2.4	2.8	5.2	-0.8
보은군	0.7	0.6	1.0	0.9	1.7	3.9
옥천군	0.9	1.0	1.2	1.3	2.4	7.6
영동군	0.9	0.8	0.9	0.9	1.7	-0.8
증평군	-	0.7	0.8	0.9	1.7	6.7
진천군	2.6	2.9	3.9	5.1	9.4	15.1
괴산군	0.8	0.7	1.0	1.0	1.9	3.8
음성군	3.0	3.2	4.3	6.6	12.1	15
단양군	1.1	1.0	0.9	1.1	2.1	11.9

주: 비중은 2016년 실질 GRDP 기준이고, YoY는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을 의미함

자료: 충청북도, (2021b).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충북: 충북연구원. p.41. 〈표 I-5-10〉 재인용.

□ 사업체 현황

- 2019년 기준 충청북도 전체 사업체 수는 133,522개소, 종사자 수는 741,452명으로 도·소매업이 31,524개소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 수는 제조업이 212,108명으로 가장 많았음

〈표 4-21〉 충청북도 사업체별 현황(2019)

(단위: 개, 명)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체	133,522	741,452
농, 임업 및 어업	311	2,716
광업	86	1,062
제조업	14,273	212,10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01	1,539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82	5,454
건설업	5,594	50,322
도매 및 소매업	31,524	84,157
운수 및 창고업	11,790	30,878
숙박 및 음식점업	28,650	76,781
정보통신업	660	6,064
금융 및 보험업	1,258	15,852
부동산업	3,766	11,93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688	22,204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631	29,56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57	31,511
교육 서비스업	5,541	52,9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778	62,38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426	15,45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4,406	28,547

자료: 통계청. (2021). 국가통계포털-충청북도 사업체조사(충청북도·산업·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_H_1K52C02_33&conn_path=I2 에서 2021.9.20.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되어 보호 및 관리되고 있는 충청북도의 문화재는 2019년 기준 국가지정문화재 184개, 시·도 지정문화재 504개, 등록문화재 29개로 총 717개임
 - 충청북도는 시·도 지정문화재 중 유형문화재가 316개(6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청주시가 문화재 183개(국가지정문화재 40개, 시·도 지정문화재 116개, 문화재자료 15개, 등록문화재 12개)로 가장 많았으며, 충주시 105개, 보은군 91개, 단양군 87개, 괴산군 76개, 제천시 74개 순으로 조사됨

□ 문화공간

- 충청북도 내 공연시설은 공공 공연장이 31개, 민간 공연장은 11개, 영화관은 19개가 있으며, 전시실은 미술관이 11개, 화랑이 1개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충청북도 내 전체 시·군 지역 중 영화관이 없는 지역은 보은군, 증평군, 단양군임

〈표 4-22〉 충청북도 문화공간 현황(2019)

(단위: 개소)

구분	공연시설		전시실			지역문화복지시설			기타 시설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시·군·구민 회관	종합 복지 회관	청소년 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수 회관
충청북도	31	11	19	11	1	5	22	34	11	2	7
청주시	12	8	10	9	-	-	8	-	1	-	3
충주시	5	1	3	1	1	1	2	2	1	1	2
제천시	2	-	1	-	-	1	3	8	1	-	-
보은군	1	-	-	-	-	-	2	5	1	-	-
옥천군	2	-	1	-	-	-	1	1	1	-	-
영동군	3	1	1	-	-	-	2	3	1	1	-
증평군	1	-	-	-	-	-	-	-	1	-	-
진천군	1	-	1	1	-	1	3	3	1	-	2
괴산군	1	-	1	-	-	1	-	5	1	-	-
음성군	1	1	1	-	-	-	1	4	1	-	-
단양군	2	-	-	-	-	1	-	3	1	-	-

자료: 충청북도. (2021d). 충북통계연보. p.488~489. <https://www.chungbuk.go.kr/stat/selectBbsNttView.do?key=1407&bbsNo=182&nttNo=173317&searchCtgr=&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에서 2021.9.21.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복지 예산

- OECD SOCX 9개 정책기능 영역의 사회복지지출은 사회복지 분야 9개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과 보건

분야의 3개 부문(보건의료, 건강보험 지원, 식품의약 안전), 총 12개의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이러한 분류에 따라 충청북도의 사회복지 예산은 2010년 7,723억 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7년 전체 예산 3조 8,685억 원 중 35.09%(1조 3,575억 원)를 차지하며 2018년 1조 5,60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7.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 충청북도의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는 727천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6번째로 높음
-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비율은 30.8%이며,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확대 등으로 인해 유사 자치단체의 평균 28.6%보다 2.2%p 높은 것으로 나타남(제4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 2019a)

□ 의료시설

- 충청북도의 인구 1만 명당 입원 병상 수는 전국 수준(135개)과 비슷하지만, WHO 목표치인 25개보다 높은 수준임.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는 5개로 전국 평균(9개)에 비해 적어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 확대가 필요
- 충청북도의 임산부 1천 명당 산부인과 병상 수는 46.5개로 전국 수준(19.7개) 및 WHO 목표치(10개)보다 높으나 충청북도 내 시·군별 격차가 매우 심함
 - 특히 보은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지역 내 산부인과 병상 수가 WHO의 목표치(10개)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부족한 수준이며, 단양군은 산부인과 자체가 없음

- 장애인, 노인, 다문화 인구와 같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방 중심의 개입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요구됨
- 충청북도 내 시·군 지역 간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으로 분만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존재하고,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최근 들어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상승하고 있지만, 충북 지역에서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 등 종합병원으로의 선택진료 선호가 증가하고 있음

〈표 4-23〉 충청북도 시·군별 의료기관 현황(2019)

(단위: 개)

구분	합계 ¹⁾		종합 병원		병원 ²⁾		의원		특수 병원 ³⁾		요양병원		치과병 (의)원		한방 병원		한의원		조산소		부속의원		보건		보건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병상수
충청북도	1,835	21,347	13	4,701	37	4,402	880	2,395	7	2,392	44	6,915	435	-	7	462	400	44	1	3	11	33	-	14	96	159
청주시	1,026	10,318	7	3,240	22	2,378	485	936	2	477	17	2,947	253	-	5	320	227	17	1	3	7	-	-	4	15	25
충주시	233	2,648	2	610	3	328	122	578	-	-	7	1,014	50	-	1	72	46	13	-	-	2	33	-	1	13	16
재천시	167	2,353	2	428	1	99	83	430	1	460	6	852	39	-	1	70	34	14	-	-	-	-	-	1	8	11
보은군	33	697	-	-	2	316	16	29	-	-	2	352	6	-	-	7	-	-	-	-	-	-	-	1	8	15
옥천군	62	968	1	168	-	-	30	79	1	120	4	601	11	-	-	15	-	-	-	-	-	-	-	1	8	16
영동군	56	719	-	-	1	161	27	84	-	-	3	474	10	-	-	15	-	-	-	-	-	-	-	1	10	17
증평군	37	69	-	-	1	69	20	-	-	-	-	-	8	-	-	8	-	-	-	-	-	-	-	1	1	1
진천군	76	798	1	255	-	-	34	73	1	256	1	214	21	-	-	17	-	-	-	-	1	-	-	1	6	7
괴산군	24	398	-	-	2	209	9	23	1	166	-	-	5	-	-	6	-	-	-	-	1	-	-	1	12	17
음성군	102	2,154	-	-	4	768	47	109	1	913	3	364	26	-	-	21	-	-	-	-	-	-	-	1	8	19
단양군	19	225	-	-	1	74	7	54	-	-	1	97	6	-	-	4	-	-	-	-	-	-	-	1	7	15

주: 1) 보건의료원 이하 제외, 2) 군인병원 제외, 3) 정신병원, 결핵병원, 나병원, 노인전문병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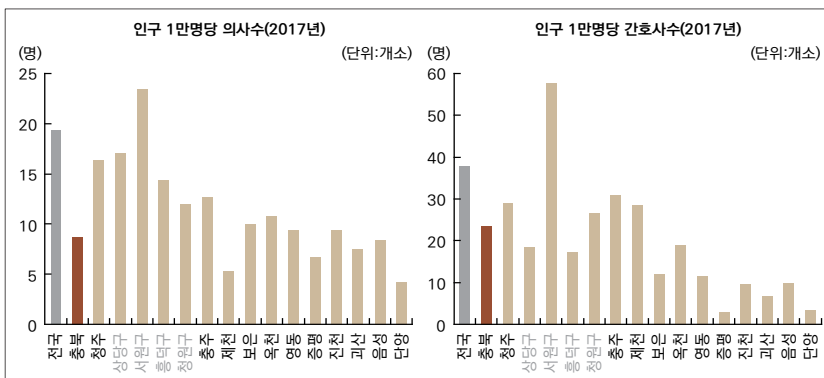
자료: 충청북도, (2021d). 충북통계연보, p.343~345. <https://www.chungbuk.go.kr/stat/selectBbsNrtView.do?key=1407&bbsNo=182&nttNo=173317&searchCgry=&searchCnd=all&searchKwd=&pageIndex=1> 에서 2021.9.21.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의료인력

- 충청북도의 인구 1만 명 당 의사 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국 평균(19.36명)보다 낮은 수준
-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전국(4.16명/1만 명 당) 대비 1.84명(1만 명 당)으로 극히 부족
- 간호사 수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국(35명/1만 명 당) 대비 24명(1만 명 당)으로 적은 수준
- 지역별로도 청주시 서원구를 제외한 충청북도 전체 지역에서 전국 대비 간호사 인력이 부족
- 의사, 간호사 등 핵심 의료인력이 부족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의 경우에는 의료인력 지수가 WHO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됨

[그림 4-9]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간호사 수(2017)

(단위: 명, 개소)



자료:충청북도, (2019b), 제7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 충북: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p.38. [그림 30], [그림 31] 재인용.

- 2019년 기준 충청북도의 의료인력은 의사 2,529명, 치과 의사 634명, 한의사 639명, 간호사 4,767명, 약사 1,110명, 물리치료사 1,261명, 작업치료사 189명, 사회복지사 129명 등 총 11,258명으로 조사됨
- 충청북도의 보건의료 인력은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인접 광역도인 충청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등과 비교하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4〉 전국 17개 시·도별 의료인력 비교(2019)

(단위: 명)

구분	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사회 복지사
전국	460,995	105,628	26,486	21,630	215,293	38,941	41,457	7,465	4,095
서울	114,861	30,359	7,308	5,018	52,727	9,385	8,240	1,269	555
부산	37,028	8,008	1,757	1,691	18,514	2,795	3,237	636	390
대구	26,087	5,908	1,330	1,146	12,557	2,083	2,274	576	213
인천	24,081	5,071	1,298	997	11,639	1,915	2,415	508	238
광주	17,835	3,658	1,009	723	8,949	1,276	1,734	309	177
대전	15,746	3,726	852	741	7,153	1,262	1,542	337	133
울산	8,950	1,754	504	410	4,612	724	731	133	82
세종	1,109	302	121	103	220	180	175	2	6
경기	91,723	21,210	5,788	4,512	39,694	8,797	8,915	1,869	938
강원	12,115	2,719	669	528	6,043	1,005	915	140	96
충북	11,258	2,529	634	639	4,767	1,110	1,261	189	129
충남	14,122	3,198	924	836	5,940	1,444	1,410	204	166
전북	16,821	3,689	917	934	7,652	1,427	1,730	287	185
전남	16,775	3,128	767	830	8,539	1,304	1,829	165	213
경북	19,165	3,662	957	1,027	9,577	1,625	1,836	231	250
경남	27,744	5,532	1,370	1,257	13,972	2,132	2,669	524	288
제주	5,575	1,175	281	238	2,738	477	544	86	36

자료: 통계청, (2021n). 국가통계포털-시도별 의료인력 현황[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3_A003&conn_path=I2 에서 2021.1 0.6.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주요 특성 및 쟁점

□ 청년층 유출

- 충북 지역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은 교육 및 일자리 기회의 상대적 부족에 기인
-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이 가속화되어야만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지방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모방한 짝퉁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아닌 지역적 특성을 살린 정주환경 개발이 필요
- 이는 지역이 가진 문화, 역사, 지리적 환경 등을 최대한 살린 정주 여건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주 지역으로 남을 것임

□ 1인 가구, 특히 독거노인 증가

- 2019년 12월 기준, 충청북도의 독거노인은 82,274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273,425명 대비 약 30.09%에 해당하는 수치임
 - 성별 현황을 보면, 여성 독거노인이 57,007명으로 남성 독거노인 25,267명에 비해 약 2배를 넘는 수치임
- 홀몸 노인가구 증가에 따른 우울, 자살, 고독사, 무연고자 장례 문제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돌봄 및 생명존중 관계망 구축 및 공동생활가정 확대 필요

〈표 4-25〉 충청북도의 독거노인 현황(2019)

(단위: 명)

구분	65세 이상 노인 수			독거노인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273,425	116,984	156,441	82,274	25,267	57,007	3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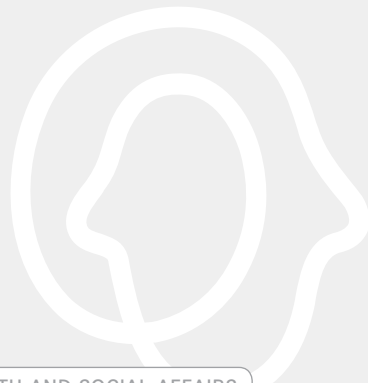
자료: 충청북도. (2021c).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계획 연구. 충북: 충북연구원. p.42. [표 3-8] 재인용.

□ 농촌지역 고령화 대응

○ 정책

-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 충족
 -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및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노인일자리 참여 등의 양적 질적 확대 필요
-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 서비스 구축
 - 일상생활 습관 개선, 생활체육 참여 증진, 사회참여를 통한 정신적, 정서적 건강 유지와 같은 예방적인 차원의 건강관리는 의료비 부담완화에 기여할 것임
- 재가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 필요
 - 재가(재택) 보호, 거주지 보호(Ageing in place)를 통해 노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꾀하며 요양시설 운영비, 노인 의료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됨
 - 다양한 재가보호서비스 급여보장, 주단기보호시설의 증설, 24시간 또는 휴일 서비스 제공시설의 확대 등 거주지 생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 필요
 - 요양보호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요양 인력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

- 복지용구, 치매예방기기 및 AI 인공지능 기기개발 및 보급 필요
 - 복지용구를 이용해 혼자서도 이동 및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보조기기 개발
 - 치매 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보건소 방문이 아니라 인지상태를 스스로 체크해 보거나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매 예방기기 개발
 -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비대면 인지 훈련과 정서케어 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 SOS를 통해 생명을 구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급 필요



제5장

지역별 향후 연구 및 정책과제 제안

제1절 강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제2절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제3절 광주전남: 광주전남연구원

제4절 부산: 부산복지개발원

제5절 충북: 충북연구원

제5장 지역별 향후 연구 및 정책과제 제안

제1절 강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1. 강원도 저출산 대책 향후 정책과제

가. 강원도 인구정책 실효성 강화 정책 방향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의 정책 지향을 반영한 저출산 대책의 지속 보완 및 발전 필요

- 출생아 수 증가뿐만 아니라 개인 삶의 질과 성평등 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 보완 필요
- 강원도 저출산 대책 역시 성평등한 돌봄과 노동정책 2가지 지향성이 요구됨

□ 영유아기 집중 투자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인구 유입·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청년과 귀농·어·귀촌 인구 대상 세분화된 정책 강화가 요구됨

- 첫째, 정책 분야에서는 4차산업 및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산업구조 개편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강화, 지원이 요구됨
- 둘째, 강원도 내 도시재생사업 및 빈집 증가에 따른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이 확대되어야 함

□ 강원도 저출산 대책 조직개편(안) 마련

- ‘지방소멸 위험’이 시급한 현안 해결과 강원도 저출산 대응 조직(인구정책팀)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직구조 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됨
- 현재 인구정책팀 담당 사무는 취합 기능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종합적인 기획기능 부재 및 관련 부서 간 실행사업 조율 기능이 미흡함
- 「2021 강원여성포럼(II)」 “저출산 패러다임의 변화, 극복 아닌 완화”(2021.3.11.)에서는 적극적인 강원도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및 부서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팀의 업무기능·위상 제고 필요성이 대두됨
- “저출산 완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 도구로써 강원도 도정의 비전과 목표, 핵심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행정 추진기관 강화가 요구됨
- 조직의 업무기능·위상을 강화하여 사업 추진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나.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역할

□ 중앙정부 인구정책 전담기구 설립

- 중앙정부 내 인구정책 전담부서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이 낮아 당초 설립 취지인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미함

- 한편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기획재정부 범부처 인구정책 TF 등간의 기능 중복
 -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부서 간 횡적 연결이 가능하고 종합적 정책을 시행해야 함

□ 중앙정부 차원의 저출산 개념 정립

- 저출산은 사회적 현상으로 앞으로 이전 1960년대 수준의 출산율을 기대하기란 비현실적임. 어느 수준까지가 저출산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과 문제 해결이 필요함

□ 출산장려 관련 수당지원에 대한 적정수준 제시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22년부터 아기수당, 양육수당 외에도 영아수당을 30만 원 지급하고 이를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점증 확대 추진을 발표함
- 지방소멸 위기 최전선에 있는 기초지자체에서 지급하기 시작한 출산지원금 등 현금지원 정책이 강원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등 광역지자체로 확대되고 있음
- 2020년 9월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 50%를 초과한 현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확대되고만 있는 현금성 수당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성 및 적정 지원금액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 저출산 정책유형별 효과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공통의견 제시

-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감사원, 2021)에 따르면 현금성 수

당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효과성 미비 및 중앙정부 취지와 상반된 의견을 발표함

- 중앙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4년 주기로 발표하지만, 실제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 검증은 부족한 현실임
- 감사원 발표 이전에 저출산 정책유형(현금, 조세감면, 시설 인프라, 휴가 지원 등)별 정기적인 효과성 검증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공통된 의견 제시가 요구됨

제2절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 ‘인구 늘리기’를 경북 도정의 주요 의제로 책정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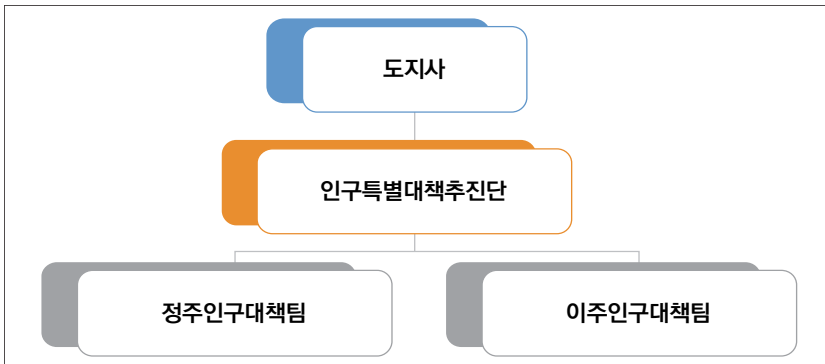
- 경상북도 및 대부분의 시·군에서 인구감소 경향 현저
- 경상북도 및 대부분의 시·군에서 세대수 증가 추세
- 인구 분포에서 지역 간 격차 심화
 - 인구문제는 지자체의 주요 정책 수립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과제 1. 인구정책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경상북도 조직개편

- 경상북도의 인구문제를 타 부서와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총괄부서 조직인 ‘인구특별대책추진단(안)’을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고, ‘정주인구대책팀’과 ‘이주인구대책팀’으로 구성·운영

- ‘정주인구대책팀’에서는 현재 경상북도의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관련 대책 수립 추진
- ‘이주인구대책팀’에서는 인구 유입을 통한 이주 인구 증가를 위한 관련 대책 수립 추진

[그림 5-1] ‘인구특별대책추진단(안)’ 구상



자료: 경상북도. (2021). 아이여성행복국 조직도(업무편람). https://www.gb.go.kr/Main/page.do?mnu_uid=6851&LARGE_CODE=720&MEDIUM_CODE=60&SMALL_CODE=40&SMALL_CODE2=20 에서 2021.10.20.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과제 2. 경상북도 인구정책 거버넌스 구축

- 시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 네트워크 구성(사례: 일본의 가나자와시 마을 만들기 시민연구기구)

2. 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 정책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과제

〈현안〉

- 최근 5년간 조혼인율·조출생률·합계출산율 감소, 조사망률 증가
- 2020년 기준, 경상북도 자연감소 현저
- 인구 유출 규모 증가
- 경상북도, 여성·30대 이하 순유출 및 60대 순유입 증가
 -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경상북도 인구의 자연적 및 사회적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과제 3. 경상북도 및 시·군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근거, 자연증가 및 사회적 증가를 촉진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설정이 필요

□ 과제 4. 인구정책 정책플랫폼 구축

-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생애주기별 수요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 및 정책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 과제 5. 인구의 사회적 증가를 촉진하기 위한 장기 정책과제 마련

- 순유출 심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시·군을 대상으로 원인 규명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순유출 방지 또는 순유출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및 이를 위한 제안이 필요
- 순유입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연구를 통해 순유입 지속 요인을 도출하여, 타 시·군의 적용 가능성 여부 검토가 필요

[그림 5-2] 인구의 사회적 증가 촉진을 위한 연구과제 지역 분류

순유출 심화지역	순유입 지속지역
· 포항시, 구미시, 영주시 · 영양군, 고령군	· 영천시, 경산시

자료: 통계청. (2021I). 국가통계포털-시군구별 이동자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_A01&conn_path=I2 에서 2021.6.10.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과제 6. 청년 및 자녀양육 세대 수요에 부합한 주거환경 조성 대책

- 자녀양육 세대 수요에 대응해서 일·가정 양립, 나아가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 마련
- 유희시설과 공간관리를 통한 청년층 안정적 생활 지원정책
- 원도심의 빈집 및 농촌지역 빈집을 활용한 청년층 주거공간 및 창업공간 임대

□ 과제 7. ‘관계인구’에 주목한 도·농 상생 활성화 정책

- 원도심 주민-방문객 체류 및 교류 공간조성
- 농촌주민과 도시주민 간의 다양한 협력/협업 과제 제안
- 농촌자원과 도시자원의 결합이라 할 수 있는 6차산업 전략 마련

□ 과제 8.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

- 귀농 및 귀촌을 계획하는 청년층과 신중년층의 정착 지원정책
- 이주 체험을 위한 ‘먼저 살아보기’ 정책 강화

3. 인구소멸 위기 지역 대응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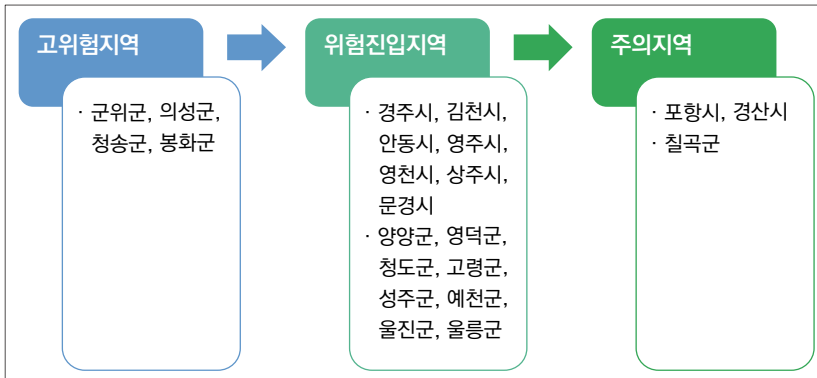
〈현안〉

- 경상북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 현저
- 2020년 기준, 전체 시·군의 83%가 초고령사회
- 경상북도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소멸위험 위기
→ 경상북도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 시급

□ 과제 9. 경상북도 인구소멸 위기 대응 중장기 로드맵 구축

- 인구소멸 위기 단계별 및 시·군별 대응 로드맵 작성

[그림 5-3] 인구소멸 위기 로드맵 작성 단계(안)



자료: 통계청. (2021y).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데이터파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에서 2021.6.3.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과제 10.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공공·생활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 경상북도 각 시·군별로 원도심 기능이 쇠퇴한 가운데, 생산가능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공공 및 생활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

생하고 있으며,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충분한 서비스 공급에 한계가 있음

-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사례 분석을 토대로, 경상북도 전체 시·군의 실정에 부합한 도시기능 유도구역 및 거주 유도구역, 입지적정화계획구역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과제가 필요

□ 과제 11. 작지만 편리하고 살기 좋은 ‘콤팩트 도시’ 추진

- 자동차화, 교외화로 인해 도심 기능이 쇠퇴하는 추세이므로 행정 및 상업 밀집지로서의 도시의 중심거점 기능을 복원하고, 거주지역을 공공교통 체계로 연결하는 콤팩트 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이 필요

□ 과제 12.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안전망 구축

- 경상북도는 행정구역 면적이 넓어,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이 필요
- 특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돌봄 강화 및 노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양질의 노인 일자리 정책 개발 필요

□ 과제 13. 텔레워크 희망자 지원정책

- 일본 홋카이도 아쓰마초의 경우, 지방에서 새로운 일과 삶을 희망하는 이주 인구를 위해 ‘위성 오피스(시범)’ 사업을 추진
- 미세먼지 및 코로나19 등 환경문제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면서 원격근무를 고려하는 수요가 대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연구 및 정책 마련 필요

□ **과제 14. 다양한 문화·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 경제·사회·문화 수준의 향상으로 문화·여가·레저활동에 대한 욕구 증가
- 생애주기별 문화 향유, 문화가 있는 삶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청년 및 경상북도 도민의 정착 지속성에 기여

□ **과제 15. 빈집 실태분석 및 활용방안 마련**

- 빈집 및 유휴 또는 방치된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활용방안 모색

4. 미래의 산업구조 및 일자리 전망 고려한 정책

〈현안〉

- 최근 7년간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전체 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가
- 인구의 순유입 현상이 현저한 지역의 경우, 최근 7년간 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 폭이 경상북도의 평균보다 높음
 - 경상북도의 산업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 추세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향후 미래 직업 변화 트렌드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제 제시

□ **과제 16. 경상북도 미래 일자리 전망을 위한 과제 수립**

- 기술 진보,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인구의 사회경제적 요인 변화 등을 고려한 경상북도의 산업구조 재편 비전 수립
- 이를 고려한 경상북도 일자리 트렌드 변화 전망 필요

〈과제 방향〉

- 고령층 관련 산업
- 생산성 증가를 통한 생산가능인구 부족 문제 대응
- 서비스업 확대 및 고부가가치화 가능성 제고
- 불안정한 고용환경 개선 및 사회보장 강화
- 기본소득 등 사회적 이익 재분배
- 기술 진보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비중 증가
- 평생교육 활성화
- 사회적 경제 관련 인식 확산을 위한 연구

5. ‘위드 코로나’ 대책

□ 과제 17. 코로나19가 경북 사회에 미친 영향 분석과 향후 과제

- 코로나19에 따른 돌봄, 소득, 고용 안정성 등 불평등이 부각됨
- 코로나19가 경상북도 도민의 고용 안정성, 돌봄 및 교육 양극화, 여성에게 부과된 가사양육 부담 과중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유의해야 할 대책 마련 필요

제3절 광주전남: 광주전남연구원

1. 인구 변화에 대응한 정책과제 제시

□ 거시적 접근 1: 인구 변화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제도마련

○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마련

- 지역의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기존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이것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마련을 통해 지방 인구정책을 지원
- 지역 인구는 지역의 매력도에 따라 결정되는 속성을 지니므로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일자리, 교육, 주거, 의료, 문화, 양육 환경, 자연 등 다양한 영역의 활성화 필요

〈표 5-1〉 인구감소위지역 지원 특별법 중심의 정책과제 개요

구분	내용
주요 내용	·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주거지원, 이주정책, 특례 적용, 교육재정, 의료시스템 등 · 경제회복 촉진을 위한 지역 활력산업 지원, 민간투자 활성화, 국책사업 유치, 청년 일자리 지원 등 · 공간혁신 창출을 위한 활성화 구역지원, ICT를 활용한 안전생활 공간조성, 지역간 네트워크, 스마트 모빌리티, 공공서비스시설 융·복합화, 지역 유흥시설 활용, 문화예술 향유권 증대 등 · 재정지원을 위한 특례와 보조율 차등 지원 등
정책 방향	· 인구구조 변화에의 지역 적응력을 높이는 국가 균형발전 제시 - 총 인구적 관점의 인식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의 적응력 강화 ·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 지속 -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적극적 균형발전 정책 실천 - 지역 위주의 상향식 사업 추진 · 지역 자체적 인구문제 진단과 인구정책 비전, 문제해결 방안 · 지역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활력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책 추진 · “연성적” 소프트웨어 사업 강화와 융·복합적 접근 · 인구 감소에 따라 공간과 일하는 방식을 전환, 압축+연계+협동 - 공간을 콤팩트하게 활용하고, 작은 거점들을 연계하여 기능을 나누는 등 지역의 공간 설계에 변화를 주고, 이러한 변화를 견인하도록 지원사업을 설계

구분	내용
	· 인구감소지역 인구, 경제, 공간 활력 지원과 지원체계 - 인구 감소 대응이 시급한 지역에 활력 촉진 지원책 마련 - 인구소멸위기 지역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범부처별 패키지 지원, 지자체 차원의 종합전략 수립과 실천을 위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 마련 - 중앙-지방간 상향식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인구 감소와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을 도모하는 등의 협력과 통합 추진체계 구축
새로운 지역정책 설계 추진	·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와 지자체 간 정책의제 발굴과 협업 · 지속 가능한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한 지역재편 논의와 도시경영 차원의 차별화된 정책설계 시도

자료: 저자 작성.

□ 거시적 접근 2: 인구 불균형에 대응한 신(新) 균형성장전략 추진

-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에 대응한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생활권역을 조성하여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대응 필요
- 네트워크형 공간조성
 - 지역 공간에 대한 재편 논의로서 거점별 특성에 맞는 경쟁력 강화전략을 마련
 - 중추도시-거점도시-농·산·어촌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형 균형발전 추진
- 네트워크형 발전전략
 -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 경제거점: 중추·혁신도시 등 기반을 갖춘 지역을 경제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별 혁신성장 거점 활용
 - 생활거점: 중소도시에 생활 인프라를 집중시키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
활거점 육성

- 농·산·어촌: 생활 SOC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한편, 귀촌·귀향을 촉진하는 농촌
뉴딜 추진

○ 광역교통망 확충

- 다극화된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적합한 초광역 연계교통망 확
충 및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중추거점도시 - 도심 융합특구

-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하여 산·
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 플랫폼 조성
- 도심 융합특구 후보지 선정, 인센티브 패키지 확정, 특별법 제
정 추진 등 도심 융합특구 조성 지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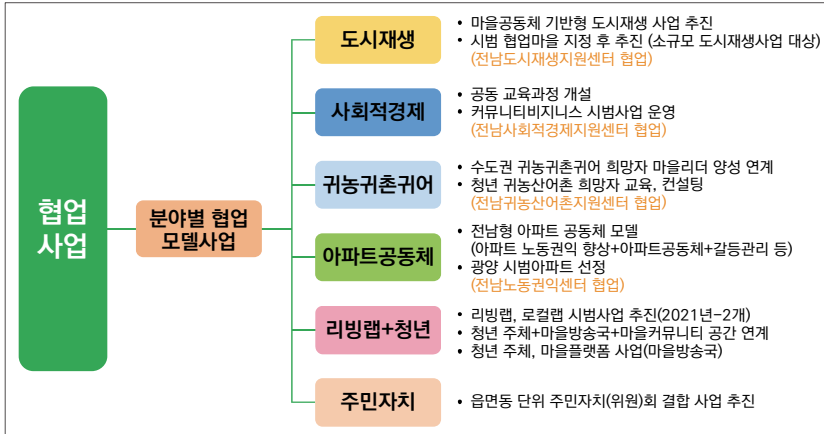
○ 지역균형 뉴딜 추진

- 한국판 뉴딜로서 지역균형 뉴딜이 추진 중이며, 2025년까지
예산 160조 원 중 75.3%가 지역에 투자될 계획
- 공모사업에 균형발전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 차등 가점을 부여
하고, 지자체 주도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국비를
지원토록 해야 함
- 지자체 간 연계협력 사업의 적극 발굴과 행·재정적 지원이 가
능하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을 개정하여 지원 근
거 마련

□ 지자체 인구정책 1: 더 나은 삶과 미래가 있는 인구 유입·계속 거주 전략

- 새로운 인구확장을 통한 글로벌 혁신 인재 유입 프로젝트 추진
 - 수도권 내 관계인구 연계창구 (지역안내소) 운영
 - 혁신인재지원센터-지역자원과 관계인구 매칭, 프로그램 운영, 교육
 - 전라남도 선도 관계인구 창출 시범사업
- 출생·보육·교육·가족지원 패키지 사업 발굴
 - 전라남도 “돌봄” 시스템 구축
 - 전라남도 출생 먼저 키우기 사업(공공기관 채용 및 지역 내 창업, 대학진학 지원)
 - 전라남도 농·산·어촌 창업형 유학 사업(가족 단위 이전 및 창업 인센티브)
- 전라남도 마을활력 1,800 프로젝트
 - 주민 생활 수요와 서비스 중개자 “마을 반장” 배치 및 운영(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배치, 주민 생활 편의성 제고 및 마을 홍보)
 - 청년 마을활력 촉진단 구성 및 운영
 - 지역문제 해결형 마을 리빙랩 사업(마을 수요-공급 해결책-일자리)

[그림 5-4] 전라남도의 인구 유입 정책



자료: 전라남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20). 전라남도의 인구 유입 정책 방안[내부자료].

○ 전라남도에서 오래 살기 프로젝트(전남에서 한 달 살아보기 확장 버전)

-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형 스마트타운 조성, 전남형 주거안정 지원
- 전라남도에서 계속 살기, 전남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
- 워라밸을 보장하는 전남형 일터·삶터

□ 지자체 인구정책 2: 광역인구정책 플랫폼 설치와 운영

- 전라남도 22개 시·군, 읍·면·동, 통·리 단위 인구 데이터 모니터링 분석
- 전라남도 인구정책 발굴 및 인가지표 개발·적용·관리
- 출산, 귀농·귀촌, 청년 정착 등 시범사업

[그림 5-5] 전라남도의 인구정책 플랫폼



자료: 전라남도 인구정책 협업 네트워크 간담회. (2021.3). 전라남도의 인구정책 플랫폼 방안[내부 자료].

□ 지자체 인구정책 3: 소멸위기 마을에 대한 새로운 정책 지향

- 마을 소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정책에서 재생/재편의 기준과 균형적 시각
-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지역 및 마을 단위 인구 및 마을 기능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지속적인 현장 조사와 관리
 - 농촌 계획에서 인구 변화, 마을 자원, 경제, 커뮤니티 실태 등 다양한 기초자료 파악이 필요
 - 2000년대 일본의 경우, 인구 센서스와 함께 농촌 집락 및 과소 집락 단위 조사를 실시하여 집락 실태, 집락 기능의 변화, 소멸 여부 및 소멸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전망 발표
- 소멸위기 마을과 일반 마을 사이의 격차와 소외 발생, 각종 공모사업의 경우 역량 중심의 공모사업 지원과 채택

- 소멸위기 마을이 일반 마을과 구별되는 정책대상으로 마을 지원 확대
- 재생과 재편정책의 핵심은 결국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에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접근이 중요
- 주민들의 합의 형성을 바탕으로 조건이 매우 열악한 마을 중심의 농촌 계획이 필요하며, 동시에 공간적 커뮤니티 재편 논의가 필요

제4절 부산: 부산복지개발원

1.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방향과 계획¹¹⁾

□ 인구 변화와 원인 분석

- 지속적인 인구 순유출
 - 경남으로의 유출: 도시 광역화에 따른 생활권역 확장이 원인
 - 경남, 울산과 함께 메가시티 구성에 대한 노력 중으로 부산권역(부산, 양산, 김해) 인구를 일정 규모(약 430만 명)로 유지 중이며, 동일 생활권 간의 활발한 인구이동은 도시의 역할 분담과 자원공유 등 지역 간의 협력과 상생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수도권으로 유출: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수도권 집중이 원인
 - 수도권에 주요 기업(100대 기업의 83%), 연구개발 투자(69%), 신규 투자(76%), 신규고용(65%), 교통(항공편 60%) 등 경제 산업, 혁신동력 집중으로 초일극화

11) 본 내용은 부산광역시(2021)의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에서 일부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임.

- 이로 인해 비수도권 5대 광역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5년 이후부터는 지역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유출세 확대
- 부산광역시도 주력산업 침체, 수도권 대학 선호 등 직업 및 교육요인으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중에서 20대의 유출 비중이 가장 높음
- 연 7천 명 이상의 부산지역 청년 인재가 수도권으로 일방적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수도권으로 유출된 청년의 지역 회귀율은 매우 낮음

○ 저출산 심화

-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비혼/만혼의 추세가 지속되며,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감소 추세를 보임
 - 2018년 기준 부산광역시의 경우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48%, 그중 여성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임여성 인구가 인구 유출, 저출산 등으로 1997년 이후 지속 감소

□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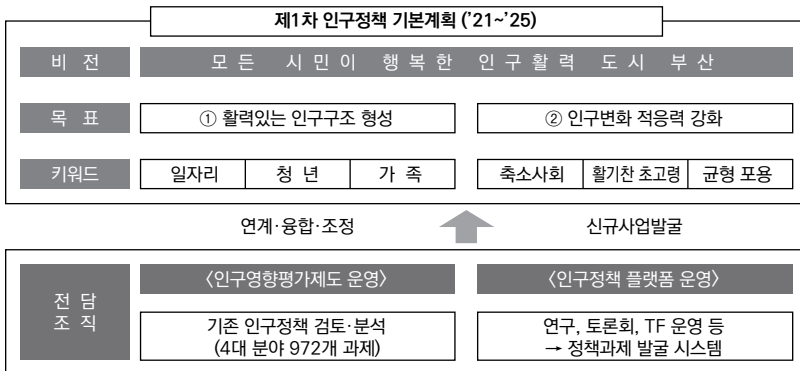
- 향후 10년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그간 사회경제적 통념 및 행·재정 여건상 표면화하기 어려웠던 주요 과제를 본격 논의하기 위한 시(市) 차원 최초 인구종합대책 제시

- 부산광역시의 인구 변화와 특성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기존의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추진과제를 재점검하고, 융·복합적인 인구정책 추진
- 기존의 추진체계 및 추진과제를 전면 부정 및 폐기보다는 기존의 인구정책을 보강·보완하고 새롭게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추가로 제시

□ 목표 ▷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 변화 적응력 강화’

- 인구 증감과 구조 변화는 사회·경제·문화·복지 등 전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순·계량화된 목표인구 수(구조) 등을 제시하기보다는
- 적극적인 미래세대 유인(출생률 제고, 젊은 층 유입 및 유출 억제) 정책을 통하여 ‘활력있는 인구구조’를 형성하고,
- 단기간에 인구 추세 반전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인구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

[그림 5-6]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방향



자료: 부산광역시. (2021).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 <https://www.busan.go.kr/nbtnewsBU/1498013> 에서 2021.8.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정책의 의의와 추진전략

□ 인구 패러다임 전환

○ 일자리 정책

- (As-is) 실질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기업 유치 정책 상대적으로 부족
- (To-be) 부산광역시는 일자리 증감과 인구 유출입 간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도시로 단기에 일자리 창출 성과를 위해 '산학 협력을 통한 창업 활성화'에 주력

○ 청년정책

- (As-is) 청년 성장·활동, 인재 양성과 청년 주거정책 관련 투자가 부족한 편
- (To-be) 청년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혁신 인재를 적극 육성·유입하는 한편, 이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주거 정책을 '내 집 마련'으로 확장

○ 저출산 대응 정책 분야

- (As-is) 저출산 대응 정책은 현금·바우처형 보육 지원에 집중
- (To-be)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일·생활 균형 분위기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 확대

○ 도시정책 분야

- (As-is)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성장과 확장' 중심의 도시계획 유지

- (To-be) 저성장과 인구감소 시대의 도래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스마트 & 콤팩트’ 도시관리로 정책 방향 전환

○ 초고령 대응 정책 분야

- (As-is) 초고령인구의 기초생활 지원 및 보호에 집중
- (To-be) 신중년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여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고령인구 증가를 기회 요인으로 활용

○ 균형·포용 정책 분야

- (As-is)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내 균형발전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 위주
- (To-be) 세대와 계층(외국인·다문화, 청소년 등) 중심의 균형·포용 정책 추진

[그림 5-7]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정책체제도



자료: 부산광역시. (2021).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 <https://www.busan.go.kr/nbtnewsBU/1498013> 에서 2021.8.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2〉 부산광역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별 주요 사업(1)

정책과제	세부 과제	주요 사업	비고
일하기 좋은 도시조성	패러다임 전환	1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창업 정책	- 기업 현장 연수기반 산학협력 체계 4차산업 기업 창업·유치지원
	중점 관리 과제	2 지역전략산업 창업 확대	-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 창업촉진지구 활성화 지원 -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지원
		3 R&D를 통한 기업 성장 및 신시장 선점	- SW융합클러스터 2.0 조성 - 부산형 히든챔피언 육성 - 지역주력산업 기술개발 지원
		4 지역기업 고용의 질 개선	-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 - 산단 내 행복주택 공급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	패러다임 전환	1 청년 지역 활동 기반조성	- 청년 성장·활동 지원 - 지역혁신 인재 육성 및 유입 - 부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
	중점 관리 과제	2 청년 자립 지원 확대	- 청년 월세 지원 - 청년 임대주택 공급 -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3 청년고용 진화 환경 조성	- 청년 취업 도전 프로젝트 - 청년 고용진화 MICE 생태계 조성 - U-Space BIFC 청년일자리 지원
		4 글로벌 대학도시 조성	- 대학혁신연구단지(I-URP) 조성 - 대학 R&D 씨앗기획 사업 - 공유대학 'Uni-Park' 운영
가족이 행복한 도시조성	패러다임 전환	1 가족 삶의 질 중심의 저출산 대응	- 맞벌이 부모의 유연근무 지원 -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조성
	중점 관리 과제	2 부산시민 주거복지망 확충	- 신혼부부 주택용자 및 이자 지원 - 주거복지센터 운영 - 부산형 공공주거 재생
		3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 생애초기 건강관리 방문 서비스 - 임신·출산 통합관리체계 구축 - 난임 부부 종합지원
		4 부모 안심 보육·교육 환경 조성	- 어린이집 보육 품질관리 강화 - 초등학생 돌봄 체계 확충 - 찾아가는 틈새 돌봄 - 지역 교육여건 개선

자료: 부산광역시. (2021).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 <https://www.busan.go.kr/nbtnewsBU/1498013> 에서 2021.8.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3〉 부산광역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별 주요 사업(II)

정책과제	세부 과제	주요 사업	비고
축소사회 선제 대응	패러다임 전환	❶ 스마트&컴팩트 도시정책	◦ 부산형 15분 스마트도시 조성 ◦ 컴팩트 도시조성
	중점 관리 과제	❷ 산업현장 인력 공급감소 대비	◦ 여성(경력단절)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 직업능력개발훈련 ◦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❸ 가족 축소(1인 가구) 및 가족 다양화 대비	◦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 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 ◦ 다자녀 개념 확대 및 지원 강화
		❹ 유희공간자원 활용	◦ 폐교 활용(부산환경체험교육관) ◦ 빈집 Light Up ◦ 유희 공공시설 활용
활기찬 초고령사회 구현	패러다임 전환	❶ 신중년 경제자립 통한 초고령 대응	◦ 50플러스 복합지원센터 구축 ◦ 인생 2막 정주 도시조성
	중점 관리 과제	❷ 장노년층 일자리 지원	◦ 노인 일자리 지원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❸ 고령자 맞춤 주거정책 추진	◦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 소규모 실버주택 확충 ◦ 포용 빌리지 조성
		❹ 사회적 돌봄 서비스 강화	◦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 노인보호구역 개선 ◦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 부산형 통합돌봄 실시
		❺ 고령친화산업 육성	◦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 산업 육성 ◦ 고령친화산업 육성
균형 포용적 도시조성	패러다임 전환	❶ 세대·계층 균형·포용 정책	◦ 외국인·다문화 부산시민 지원 ◦ 부산 청소년 성장지원 ◦ 세대·계층 맞춤형 인구교육
	중점 관리 과제	❷ 수도권 일극화 대응	◦ 가덕도 신공항 조속 건설 ◦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 광역교통망 확충
		❸ 지역 내 균형발전	◦ (원도심) 복합 항만재개발 추진 ◦ (서부산권)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 ◦ (동부산권) 센텀2지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❹ 포용사회 구현	◦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 ◦ 말기 환자 호스피스 사업

자료: 부산광역시. (2021).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 <https://www.busan.go.kr/nbtnewsBU/1498013> 에서 2021.8.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주요 과제

□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창업 활성화

○ (기업 현장 연수기반 산학협력 체계) 현장실습 기업에 인건비 지원 및 현장실습 평가 도입으로 기존 현장실습 내실화를 추진하고 부산형 직무연수, 코업(Co-op) 프로그램¹²⁾ 도입으로 실무 역량 강화

- 주요 내용: 현장실습 내실화, 부산형 직무연수 인턴 사업, 워털루형 부산 코업(Co-op) 프로그램, 부산시 현장실습 교육지원센터 구축 등

○ (4차산업 기업 창업·유치지원) 4차산업 분야 스타트업 발굴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신성장 동력 마련

- 주요 내용 : 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신산업 혁신거점 마련, 창업-투자-성장-엑시트-재투자 선순환 구조 마련, 4차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 청년 지역 활동 기반조성

○ (부산 청년주간 운영)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 주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년 이슈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부산 청년주간 운영

- 주요 내용: 청년정책 콘퍼런스, 청년 활동 박람회, 전국 청년교류회 등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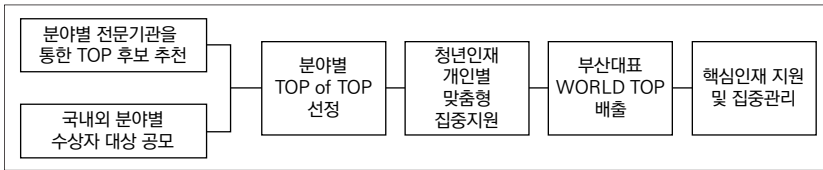
12) 캐나다의 워털루대학 공대에서 필수로 실시하고 있는 코업(Co-op) 프로그램이란, 캠퍼스에 기업과 동일한 환경을 마련하여 실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방식으로, 학습과 현장실습을 번갈아 수행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의미함.

○ (청년 리빙랩 운영)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문제 인식과 지역사회 문제를 청년의 시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청년이 주도하는 사회혁신’ 연구실 운영 및 프로젝트 추진

- 주요 내용: 청년 생활실험 프로젝트, 청년 리빙랩 공간 운영 및 아카데미 등

○ (월드클래스 육성 10년 프로젝트) 부산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잠재력이 높은 분야별 젊은 인재를 맞춤형 지원하여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고, ‘월드클래스 부산 청년’의 브랜드화 및 핵심 인재로 집중 관리

[그림 5-8] 부산광역시 청년 지역 활동 기반조성 흐름도



자료: 부산광역시. (2021).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 <https://www.busan.go.kr/nbtnewsBU/1498013> 에서 2021.8.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Brain Busan 21 Plus 사업) 지역 대학의 연구·직무 인재 육성 지원으로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대학의 지역사회 연계 과제 수행 및 협력 활동을 통한 지역인재 정주 유도

- 주요 내용: 지역 대학(교수, 학생, 기업)에서 지역 현안과 연계한 사업과제(공모 선정) 수행 시 사업경비 및 참여 학생 장학금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대학 위기 극복과 국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기숙사·커뮤니티 등 융복합 지원시설 건립

- 주요 내용: 해운대구 좌동, 300명 수용 규모 거점센터(연면적 5,400㎡)

○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지원) 임대지원(임대주택, 임대료) 위주의 시(市) 주거정책을 ‘내 집 마련’으로 확장하여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신혼부부의 혼인·출산과 지역 정착을 지원

- 주요 내용: 부산광역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3개월 전 ~ 7년 이내) 대상 주택 구입자금(2억)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 (부산 청년 유턴 프로젝트 추진)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유턴하는 청년 및 부산광역시 이전 수도권 소재 기업 임직원에 대한 일자리 및 주거 패키지 지원을 통한 유턴 활성화 및 안정적 지역 정착지원

- 유턴 청년: ‘귀환 청년 일자리’, ‘내 집 마련 융자(이자)’ 패키지 지원
- 이전기업: 보조금 및 입지지원, 세제지원
- 이전기업 임직원: 내 집 마련 융자(이자) 지원

□ 가족의 삶의 질 중심의 저출산 대응

○ (맞벌이 부모 유연근무 지원) 유연근무에 대해 기업·근로자 모두 만족도가 높으나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의 유연근무 시행은 저조한 편임. 이에 대한 지원으로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임직원 유연근무 시행을 유도

- 주요 내용: 기업이 ‘맞벌이 부모’ 임직원의 유연근무 시행 시 인건비 보조

-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중소기업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지원으로 부모의 직접 돌봄에 따른 영유아 건전 성장,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남성 양육·돌봄 확산
 - 주요 내용: 13개월~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중소기업(300인 미만)에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월 30만 원(최대 1년)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확대)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여 자기계발·취미·육아 등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스마트워크 등의 활성화를 위한 일·생활 균형 인프라 조성
 - (사업 1) 기업의 스마트워크 시행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 비용 지원
 - (사업 2) 대단지 아파트 커뮤니티, 도심 중심지 등에 공공형 공유 오피스 보급

□ 스마트 & 콤팩트 도시정책

- (부산형 15분 스마트도시 구축) 15분 안에 직장, 근린시설, 쇼핑, 문화, 의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15분 도시조성을 위하여 교통·헬스케어·안전관리 등 관련 분야에 IoT, AI 등 스마트 기술 도입
 - 주요 내용: 스마트 교통체계 조성,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안전관리 추진
- (역세권 콤팩트 시티 조성) 도심 활성화와 효율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역세권 중심으로 콤팩트 시티 조성
 - 주요 내용: 역세권 개발 시 용도지역을 일반 주거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상향하여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기여 받아 오피스, 상가, 주택 등 공공
임대 시설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등 생활 SOC
시설로 조성(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방안, 2019.6.)

- (도시 수용력을 고려한 도시계획)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비현실적인 계획인구(410만 명)의 현실적 재설정 및 합리적인 도시관리 계획 마련

- 주요 내용: 도시 수용력을 고려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

-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비효율적인 도심 개발과 관리로 인한 도심 공동화와 지속적 인구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도시기반 시설의 유지관리와 재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도심재생 추진

- 대표사업: 사상 공업지역 내 삼락중학교·솔빛학교 2곳을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혁신 거점 공간으로 조성

- 입지규제 최소구역: 전략적 관리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개발행위, 기반시설, 건축 규제(건폐율, 용적률 등)를 특례 적용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도심 내 저이용 대규모 유휴부지를 공·민간이 협상을 통해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해당 부지를 고밀 개발하여 도시의 이용효율 제고

- 대표사업: (구) 한진 CY 부지(재송동)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추진

□ 신중년 경제자립을 통한 초고령사회 대응

- (신중년 경제자립 플랫폼) 신중년(50~69세) 세대의 노동시장(재취업·창업) 참여를 지원하여 이들이 스스로 노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지원
 - 주요 내용: 신중년의 재취업·창업, 여가·커뮤니티 등 복합공간(8,000㎡ 정도, 폐교·대학 캠퍼스 등 활용) 조성 및 운영
- (인생 2막 정주 도시조성)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위기)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거·의료·신산업 등 분야의 사회경제 기반 마련
 - (글로벌 의료관광 육성) 외국인 단기 치료프로그램 운영, 의료관광객 체류·체험 시설 조성, 의료통역사 양성 등
 - (의료·요양도시) 요양시설 확대 및 老老케어(젊은 노인 일자리) 전략, 공공형 요양시범타운, 은퇴자 주거복합단지 등 조성

□ 세대·계층의 균형·포용 정책

- (외국인·다문화 부산시민 지원)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생활 상담, 통·번역, 정보 제공, 교육, 의료지원 등 부산시민으로 안정적 정착지원
 - 주요 내용: 부산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및 진료 통역 등
- (부산 청소년 성장지원) 시(市)의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정책은 주로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보육·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세대 균형과 중·고교생 세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지원정책 필요

- 주요 내용: 부산광역시 청소년 성장지원 카드(바우처) 발급(연 10만 원)

○ (세대·계층별 맞춤형 인구교육) 인구 변화에 따른 고령자 부양, 공공서비스 수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대·계층의 불평등과 갈등의 해소 방안으로서 인구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

- 주요 내용: 인구 변화에 따른 개인·사회적 준비, 결혼·출산·가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 등 세대·계층(신혼 부부, 노인, 청년, 공무원 등)별 맞춤형 교육

4.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부산광역시 정책

□ 고령화 원인

- (부산광역시의 상황) 부산광역시의 급속한 성장은 수도권으로의 청년 유출 및 저출산 기조 확대로 이어짐
 -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 연장
 -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 **출산율 저하**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비 부담의 증가로 인해 경제적 요인 및 사회적 갈등 유발
- 고령화의 심화는 단순한 경제적·인구적 문제를 넘어 도시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며,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고령화 영향

○ 도시·공간적 영향

-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 부산광역시의 원도심(중·서·동·영도구) 지역은 최근 4년 동안 위험지역에 진입하여, 지역소멸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음
 - 중구 2018년, 서구 2020년, 동·영도구는 2016년에 진입
 - 부산광역시에서는 강서구가 유일하게 양호지역이며, 나머지는 모두 주의지역
-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빈집문제 심화) 전국의 65세 고령인구 증가와 빈집 수를 비교하면 일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고령인구의 사후 빈집이 증가하는 연쇄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2019년 기준 전국 빈집 수는 1,517,815개

○ 경제·산업적 영향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 유소년인구에 비해 고령인구의 증가 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부산광역시의 인구구조는 자연적 인구 증감에 의한 영향과 함께 청년인구의 유출에 따른 영향이 큰 상황임
- 고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2.0%(2018년 기준)로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빈곤율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 시급

〈표 5-4〉 부산광역시 노인빈곤율(2018)

(단위: %)

구분	근로연령인구(18~65세)					노인인구	은퇴연령인구(66세 이상)		
	전체	18~25세	26~40세	41~50세	51~65세	65세 이상	전체	66~75세	76세 이상
비율	11.8	11.3	9.6	11.6	13.7	42.0	43.4	34.6	55.1

자료: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2021b). 부산광역시 2018년 노인빈곤율[내부자료].

○ 사회·문화적 영향

- 적정인구 감소로 지역의 사회서비스 시스템 붕괴 위험
-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인력 부족 등 대응책 필요
- 노인혐오 및 노인차별 등 증가
- 청년 일자리 문제로 인한 정년연장 등 세대별 사회갈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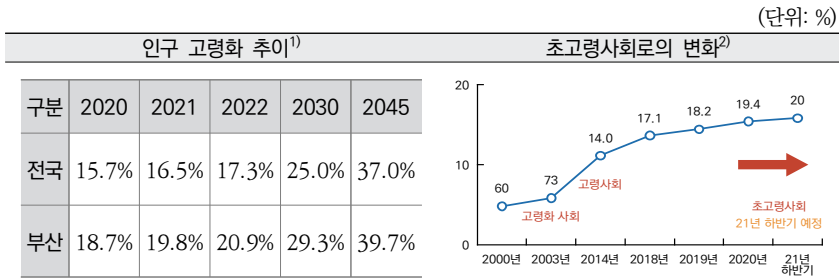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 고령화 현황

○ 부산광역시는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超)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 예상

- 고령화 사회('03, 7.3%) → 고령사회('14, 14.0%) → 초고령사회('21)

☞ 2021년 8월 기준, 부산광역시의 노인인구 비율은 통계청 추계 예상치를 넘어서는 19.99%임

[그림 5-9] 부산광역시 인구 고령화 추이(2020~2045)



자료: 1) 통계청. (2019.6.27.).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5555&pageNo=1&rowNum=10&navCount=10¤tPage=&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EC%9E%A5%EB%9E%98%EC%9D%B8%EA%B5%AC%EC%B6%94%EA%B3%84 에서 2021.6.9.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행정안전부. (2021).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데이터파일]. <https://jumin.mois.go.kr/> 에서 2021.9.28.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혼자 사는 노인들의 증가로 인한 고독사 발생 등 증가

- 사회적 부양부담 증가, 보호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 필요

- 2021년 8월 기준, 독거노인 192,785명(노인인구 대비 28.9%)

[그림 5-10]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영향



자료: 이재정, 김수영, 이민홍. (2018).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기 노인복지실행계획(2019~2023). 부산: 부산광역시·부산복지개발원.

- 2021년 8월 기준, 부산광역시의 신중년(50~69세) 인구 비율이 32.8%로 전국 최고(전국 평균 30.2%)이며,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대량 퇴직에 직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인프라와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

〈표 5-5〉 부산광역시 노인인구 현황(2015~2021.8)

(단위: 명,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8
65세 이상 인구	516,210 14.5	536,064 15.3	565,527 16.3	589,961 17.1	620,123 18.2	657,711 19.4	671,625 19.9
독거노인	126,724 24.5	132,609 24.7	145,236 25.7	160,552 27.2	170,768 27.8	198,846 30.2	192,785 28.9
신중년 세대 (50~69세)	1,052,602 30.0	1,064,851 30.4	1,072,161 30.9	1,081,316 31.4	1,090,346 31.9	1,100,533 32.4	1,102,111 32.8

주: 부산광역시 노인인구의 비율은 해당 연령구간 인구수를 총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2021).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데이터파일]. <https://jumin.moi.go.kr/> 에서 2021.9.28.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부산광역시 구·군별 격차 발생

○ 부산광역시 구·군별 고령화율 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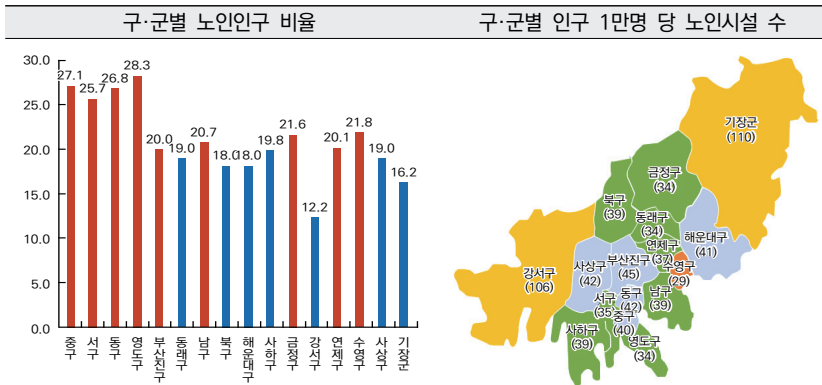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원도심 4개 구(중·서·동·영도구)는 노인 인구 비율이 25.0% 이상이며, 9개 구가 초고령사회에 기(既) 진입
- 원도심 등 노인인구 밀집 지역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필요
 - 노인인구 비율이 20.0% 이상(9개 구)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2개 구) → 강서구(12.2%), 기장군(16.2%)

○ 높은 노인인구 대비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현상 발생

-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서구, 영도구, 남구, 금정구, 수영구 등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노인복지시설 수가 30개 정도에 불과

[그림 5-11] 부산광역시 구·군별 노인인구 비율 및 시설 현황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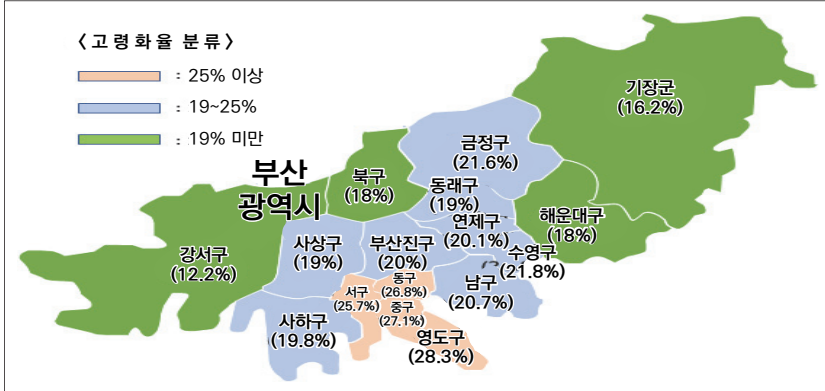


자료: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2021a). 모든 시민에게 힘이 되는 고령친화 행복도시 조성계획.¹³⁾

13)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27개 부서와 재)부산연구원, 재)부산복지개발원 2개 연구기관이 함께 초고령사회 T/F를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함.

[그림 5-12] 부산광역시 구·군별 고령화를 편차

(단위: %)



자료: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2021a). 모든 시민에게 힘이 되는 고령친화 행복도시 조성계획.

□ 정책대상별 맞춤형 정책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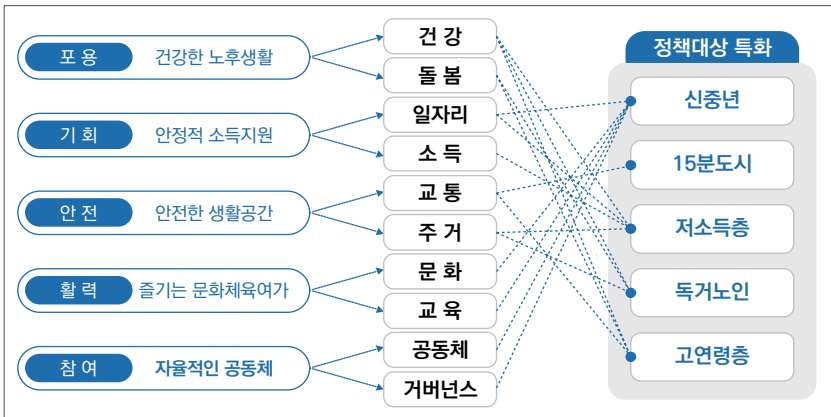
- 길어진 노년기에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연계, 뉴시니어 세대부터 후기 노령자의 욕구에 맞는 연령별 맞춤형 정책의 추진
- 다양한 능력을 보유한 신중년층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교육 및 취업 연계, 인생 재설계를 위한 50+복합센터 설치 지원 필요
- 지역사회 내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부산형 커뮤니티 사업 등 지원 확대
- 15분 도시 연계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에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주체적 삶으로의 전환 → 노인의 삶의 질 고취 및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비용 절감

〈표 5-6〉 부산광역시의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분야	내용
[포용] 커뮤니티 중심의 생활 지원	(← 복지, 건강)
[기회] 경제적 독립을 위한 지원	(← 일자리)
[안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구축	(← 도시, 교통)
[활력] 노인 친화형 라이프스타일 지원	(← 문화, 평생교육)
[참여] 함께하는 사회통합 공동체	(← 사회, 봉사)

자료: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2021a). 모든 시민에게 힘이 되는 고령친화 행복도시 조성계획.

〔그림 5-13〕 정책대상별 필요한 서비스 맞춤형 연결



자료: 부산연구원. (2021). 초고령사회 ‘슈퍼시니어’를 맞이하는 부산의 준비. p.83.

○ 노인인구가 높은 지역 등 부산광역시의 동별 인구구조 현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표 5-7〉 부산광역시 인구구조 유형별 특화사업

유형	분류(고령화율)	특화 사업
건강·돌봄 특화형	25% 이상(서, 중, 동, 영도구)	- 부산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 노인가사활동서비스 시범 실시 - 인공지능 AI 감성케어 확대 - 찾아가는 이동의료서비스 시범
공동체 조성 특화형	19~25% (금정, 동래, 연제, 수영, 부산진, 남, 사상, 사하구)	- 고령친화(정든마을), 대안가족 사업 확대 실시 - 고령친화 주거안전 지원사업 - 경로당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

유형	분류(고령화율)	특화 사업
여가·봉사 특화형	19% 이하 (강서, 기장, 해운대, 북구)	◦ 어르신을 위한 복합힐링파크 조성 ◦ 선배시민 양성사업 확대, 노인관광 가이드 양성

자료: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2021a). 모든 시민에게 힘이 되는 고령친화 행복도시 조성계획.

- 노인들이 수혜의 대상자로 인식되는 수동적인 대상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노인으로 자리매김 → 자기 주도적인 자원 봉사활동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 신중년 세대를 활용하여 노인들이 공공 일자리 사업의 수혜자에서 벗어나 돌봄 케어 인력 양성을 통한 돌봄 활동가(돌봄 사각지대 노인지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성 → 고용 없는 성장시대,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 4차산업 ICT 활용한 비대면 노인돌봄 서비스 확대, 스마트 기기 보급, 로봇 재활훈련기구 등 이용 촉진 지원
-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콘텐츠 다양화, 다양한 디바이스 개발, AI 의료 접목, 스마트홈 모델 등 활용 실버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

제5절 충북: 충북연구원

1. 정책과제

가. 출산율 제고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추진목표: 고용안정을 통한 출산율 증진
- 추진 배경 및 목적
 - 젊은 층은 고용불안으로 결혼 및 임신을 미루거나 꺼리게 됨
 -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장려금, 주거비 보조 및 신혼주택 제공, 양육비 보조와 같은 지원정책보다는 기본적으로 고용안정에 집중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안
 - 충청북도 내 비정규직의 실태 파악
 -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비정규직의 실직이나 무급휴직이 늘어나는 상황 조사
 - 지자체 내에서 그리고 산하 기관에서 우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천

□ 산모 도우미제 도입

- 추진목표: 신생아 돌봄 지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 출산 후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을 지원해 줄 사람이 핵가족

화로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출산 및 신생아 돌봄의 지원 필요성 대두

○ 사업 추진방안

- 국가 의료보험에서 산모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모유수유, 신생아 목욕 및 건강관리를 체크하고 돌봄

나. 농촌 돌봄서비스

□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확대

○ 추진목표: 시·군 돌봄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추진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감염병과 돌봄 인력의 부족으로 점점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노인층을 대상으로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취약계층의 소통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WHO의 국제적 공중 비상사태 선포 이후 대상자의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량 급증
- ‘소식 톡톡’ 서비스를 통해 국내 코로나19 현황 및 예방 수칙 등을 안내하였으며, 활동 제한에 따른 외로움과 고독감 완화를 위한 안부 메시지, 레시피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전달
- SK텔레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신이 지친 노인들을 위해 표현예술치료, 언어치료 전문가와 협력해 개발한 ‘마음제조’ 서비스를 2020년 8월부터 제공
 - ‘마음제조’는 치매 예방에 유용한 체조로 노인들이 음성 안

내에 따라 쉽고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도록 총 62종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 추진방안

- 민·관 협력에 기반한 행복 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
 - 정부(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지자체 및 공공기관): 지자체 계약 및 운영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각 지자체 의견 취합 및 공유
 - 사회적 기업(행복 커넥트):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통합 모니터링, 월별 데이터 분석 및 공유
 - 대기업(SK텔레콤): ICT 케어 매니저 고용 및 관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 지원, 신규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의 효과성 검토
- 도 차원에서 도 내 지자체에 전면 보급을 위한 지원(경상남도의 예 참조)

〈표 5-8〉 충북 영동군 사례

구분	내용
개요	· 2020년 영동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4,200만 원의 예산을 들어 인공지능 스피커를 치매 환자, 경도인지장애 노인 100개 가정에 보급
수행기관	· 영동군, 사회적 기업(대전 행복커넥트), SKT - 영동군 치매안심센터: 치매센터 운영사업비에서 사업예산 지급 - 행복커넥트: 기기, 프로그램 보급 - SKT: 통신 담당
역할과 효과	· 충청북도 내 최초 보급한 인공지능 스피커 “아리아”가 비대면 인지훈련과 정서케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속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까지 지키는 파수꾼 역할 · 음악 및 라디오 감상, 날씨, 운세 등 기본서비스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마음체조, 복약시간 알림 문자,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소식 톡톡, 긴급 SOS 등 다양한 기능 제공 · 프로그램은 SOS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이 첨가될 시는 이용료가 높아짐 · 특히 SOS 기능은 위급한 상황에서 음성 인식을 통해 긴급 SOS 메시지가 처리되어 119를 통해 병원에 이송되어 노인들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많음

구분	내용
애로점	· 기기 사용에 노인분들이 어려움이 종종 있어서 희망근로 일자리 창출사업의 단기 근로자와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지도를 위해 현장에 투입
향후 계획	· 영동군은 정서케어와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추후 사업성과 효과를 분석해 추가 보급을 검토할 계획

자료: 1) 이기국. (2021.7.2.). 영동군, 아리아! ... 아리아? - AI 스피커 활용 노인 건강.. 안전 챙기기, 치매대상자 꼼꼼한 비대면 돌봄. CTN 교육신문. <http://www.ctnews.kr/article.php?aid=1625189467295242076> 에서 2021.11.10. 인출.
2) 영동군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 면담을 토대로 저자 작성.

□ ICT 교육을 통한 경제·사회참여 강화

- 추진목표: 고령 인력 디지털 환경 적응 역량 제고 및 격차 해소
- 추진 배경 및 목적
 - 고령층은 디지털 기반 사회에 진입 이후 디지털 환경의 활용도가 떨어져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보임. 이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의 활용 역량 강화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사업 내용
 - 디지털 환경 적응 취약계층 대상 역량 강화
 - 지역 대학, 공공기관과 연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전개
 - 스마트 기기 및 공공 키오스크 사용법, SNS 활용법 등
 - 정부의 디지털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운영
 - 디지털 정보교육 강사 육성(복지관 및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연계)

□ 무연고자 공영장제

- 사업 목표 : 존엄한 생의 마무리 및 사후 복지 구현
-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빈곤, 가족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 증가
- 무연고 사망 시 존엄한 의례 없이 화장되고 연고자의 시신 포기·무빈소 장례 확산
-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75만 원의 장제비를 받고 무연고자는 화장 및 봉안에 드는 무료 서비스를 받음
- 무연고 사망자, 고독사 등의 증가로 사후 처리가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
- 따라서 무연고사 지원 합리화 및 저소득층 사망 시 검소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 및 유족 등 연고자의 사회적 통합 제고
- 사회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죽음에 대한 경건 등 사자에 대한 예우 필요

○ 사업 내용

- 가족해체·빈곤 등으로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례비 지원

다. 도·농 상생

□ 충북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추진목표: (2022년) 치유농장 5개소 → (2025년) 20개소 ↑

○ 추진 배경 및 목적

- 농업·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장주, 건강보호기관, 사회보호기관, 프로그램 참여자 간의

협력방안과 다양한 사람들에게 농업을 통해 건강, 사회적 이익, 교육적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사업 내용

- 농촌체험·치유농업 활용한 치매 예방, 보호 작업, 평생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농장¹⁴⁾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 코로나19 대응 인력 대상 힐링·체험 프로그램 제공

〈표 5-9〉 코로나 우울(블루) 극복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농장 현황(안)

소재지	법인명	코로나19 대응 인력 대상	발달장애인 가족 대상
충북	보은 농업회사법인 성원	○	○
	청주 농업회사법인 (주)닥나무와 종이	○	-
충남	홍성 협동조합 행복농장	○	○
	공주 농업회사법인 (주)공주 아띠	-	○
전북	청양 농업회사법인 (주)청양푸드	○	○
	무주 반햇소 영농조합법인	○	○
	완주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
	키울협동조합	-	○
	임실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	○	-
	익산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	○
	우리들의정원		
전남	영광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	○	-
	나주 화탑 영농조합법인	○	○
경북	청송 청송해뜨는농장 농업회사법인(주)	○	-
	경산 영농조합법인 바람햇살농장	-	○
경남	거창 영농조합법인 수승대발효마을	○	○
	함양 (주)호미랑 농업회사법인	○	○
세종	진여울 영농조합법인	○	○
	목인동 영농조합법인	○	○
인천	강화 농업회사법인 (주)콩세알	○	○
대전	유성 (주)손수레	-	○
울산	울주 금곡영농조합법인	-	○
합계(개소)		15	1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0.10.22.). 코로나 우울[블루] 극복, 사회적농장이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 가족, 코로나19 대응 인력 대상 힐링 프로그램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584> 에서 2021.11.20. 인출.

14) 사회적 농장이란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함.

□ **충북형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 도시농업**

○ 추진목표: 주말농장 운영으로 농업 친화형 도시 구축

○ 추진 배경 및 목적

- 독일은 도시민에게 주말기간 동안 도시민 도시농업을 위한 농지를 대여하며 각종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선진국형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임대 분양함
- 도시 주변에서 농작물 재배에 흥미를 느끼도록 유도하여 향후 귀농·귀촌에 거부감이 없도록 농업 친화형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사업 내용

- 도시에서 영농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활성화와 텃밭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생 학습 프로그램 확충

○ 추진계획

- 2022년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추가면적 확보 및 홍보 방안 개발
- 2022~2025년 도시농업 프로그램 확대 지원
-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1제좌당 1년/300㎡ 대여

□ **재능 나눔 생산적 일손 봉사 확대 지원**

○ 추진목표: 생산적 일손 봉사 총괄 시스템 구축 운영

○ 추진 배경 및 목적

- 생산적 일손 봉사는 지난 2016년 7월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중소기업에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업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극심한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와 중소기업에 큰 보탬이 됐을 것으로 보임
- 고령사회로 진입한 충청북도는 노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일자리 마련이 중요함
- 노인뿐만 아니라 직장인, 대학생까지 경제적 목적과 더불어 사회적 나눔의 의미도 가짐
- 숙련된 노인의 재능과 기술을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 농촌 등에 지원함으로써 노년의 삶을 윤택하게 함

○ 사업 내용

- 충북형 생산적 일손 봉사에 대한 확대 운영, 노인 등 유휴인력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 50세 이상 연령별 일자리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운영
- 학력, 능력, 기능, 재능에 따른 자원봉사, 일손 봉사, 인력연결, 파견, 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장기 학교 운영
- 지역 내 영세기업, 부족한 농촌에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함
- 충청북도 내 시·군의 생산적 일손 봉사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센터에 관리인력 지원

라. 농촌 연계 청년 일자리

□ 도시 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구축

- 추진목표: 도시 청년의 농촌 정착

○ 추진 배경 및 목적

-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은 인력 부족, 도시에서는 청년층의 일자리가 부족하므로 도시 청년층 우수 인력들이 농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

○ 사업 내용

- 선도농업인, 농가·농업법인 등으로 구성된 초보 농부 농업·농촌 진입 플랫폼 조성
- 농촌에 연고가 없는 도시 청년이 농업·농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실습 가능한 농장들로 구성하여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훈련 기반 조성
- 농업·농촌을 배우고자 하는 도시 청년들에게 농업·농촌에 진입하기 위한 영농여건 탐색 및 디딤돌 교육 추진

○ 사업 규모

- 플랫폼 훈련기관 1개소 이상, 실습생 4~5명

○ 사업대상

- 만 18~40세(사업신청일 기준) 농·산업 창업(예정)자
- 도시 청년 농업·농촌캠프 참석자, 창농에 관심 있는 도시 청년 등

○ 추진계획(추진 일정, 향후 계획)

- 1단계: 영농여건 탐색 기간(품목, 경영 능력 등)
 - 초보 농부의 관심 품목 및 훈련농장 선택을 위하여 훈련농장을 순회하면서 단기 영농인턴 실시

- 2단계: 훈련농장 지정 및 영농인턴 실시(9개월)
 - 초보 농부가 희망하는 농장을 훈련농장으로 지정하여 9개월 동안 영농인턴을 하면서 기술습득, 정착 과정 상담 및 멘토-멘티 등 지원
 - 영농인턴을 이수하는 초보 농부에게는 월 80만 원의 교육훈련비 지급
 - 영농인턴을 실시하는 초보 농부 플랫폼(훈련농장)에게는 월 40만 원의 연수(멘토)수당 지급
 - 영농인턴은 노동(작업)보다는 학습지원, 기술이전, 창농 역량에 역점 추진하여 초보 농부의 교육효과 극대화를 목표로 운영

□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 사업 목표: 청년들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회 제공
-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는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산업 분야에 젊은 신규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선발된 청년들(만 18~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은 2019년 5월 말부터 법인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선도 농업법인에서 생산 실무, 기획, 온라인 마케팅 등을 담당
 - 인건비 월 200만 원(지원 90%, 업체부담 10%)과 안정적인 고

용 유지를 위한 복리후생비(건강검진비, 도+시·군비)와 2년 뒤 창농하면 1,000만 원을 지원받음

- 또한, 충청북도는 생산에서부터 제조·가공, 유통 등 전 단계에 걸쳐 실무를 익히고 창농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킹 및 컨설팅, 교육도 함께 지원
- 청년 농부들이 2년간 선도 농업법인에서 실무경험을 쌓아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사업 내용

- 경상북도처럼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를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의 도·농 복합지역에서부터 참여기관 및 업체 선정, 이후 청년 선발
- 충청북도의 도·농 복합지역인 청주시(이전 청원군 포함), 충주시, 제천시는 청년들이 자가에서 출퇴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 있음
- 이후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한 후 농촌지역으로 확대

마. 농촌 정주 서비스 개선

□ 농촌 과소화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 사업 목표: 농촌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주민의 교통비 부담경감 및 교육·의료·복지 접근성 확대로 삶의 질 향상

○ 추진 배경 및 목적

- 충청북도는 2015년 7월부터 시내버스가 오가지 않는 충청북

도 내 11개 시·군 150여 개 오지 시골마을의 교통난을 덜기 위해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에 들어감

-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청북도 내 모든 시·군에서 행복택시가 동시 운행된 것은 충청북도가 최초(지영수, 2016. 5.9.)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2019~2022년(민선 7기 공약사업)
- 사업대상: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농촌 오지마을 310개 마을
- 주요 사업
 -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시골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수준의 행복택시 운영

바. 충청북도 내 인구 균형발전

□ 청주권과 비청주권의 인구 불균형 구조 개선

○ 사업 목표: 충청북도 군 축소도시 전략 모색

○ 추진 배경 및 목적

- 충청북도 괴산·증평·옥천·영동·단양·보은군은 인구 유출로 축소도시에 해당
- 인구와 산업, 개발 수요가 청주권역 등에 집중되어 있어 불균형 문제가 대두
- 수도권,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에 대한 비판은 많지만 정작

충청북도 내 청주권과 비청주권 간의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지적이 적음

- 효율적인 인구 유입 정책 차원에서 우선 정부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처럼 청주권과 비청주권 간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2022~2026년(민선 8기 사업)
- 주요 사업
 -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충청북도 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충청도청 및 교육청 산하 기관의 도 내 다른 시·군으로 이전 추진

〈표 5-10〉 충청북도 영역별 추진과제

분류		사업
삶의 질 개선	출산율 제고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산모 도우미제 도입(정부 건의 사업)
	(농촌) 돌봄 서비스	-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확대 - ICT 교육을 통한 경제·사회참여 강화 - 무연고자 공영장례(정부 건의 사업)
인구구조의 불균형 개선	도·농 상생	- 생산직 농촌 일손 봉사 확대 지원 - 도시 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구축 -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도 내 인구 균형발전	- 청주와 비청주권의 인구 불균형 구조 개선

자료: 저자 작성.



제6장

종합 및 결론

제1절 종합: 지역 인구 변화 주요 특성과 중앙정부
정책 대응 고찰, 향후 정책 방향
제2절 차후 연구사항

제6장 종합 및 결론

제1절 종합: 지역 인구 변화 주요 특성과 중앙정부 정책 대응 고찰, 향후 정책 방향¹⁵⁾

1. 지역 인구 변화의 주요 특성

가. 지역 인구 감소 심화

- 2000~2020년의 관측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2000~2001년(관측기간 초기)과 2019~2020년(최근)으로 구분하여 시군구 단위 이들 기간의 연평균 인구 증감률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 관측기간 초기 수도권 지역은 증가하는 지역이 더 많았으나 최근 감소하는 지역이 더 많아졌으며, 비수도권은 감소하는 지역 비중이 초기에 비하여 더 많아짐.
 - 보다 구체적으로, 2000~2001년 인구감소지역은 228개 시군구¹⁶⁾ 중 142개 지역이며, 이 중 117개 지역이 비수도권, 25개 지역이 수도권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9~2020년 인구감소지역은 2000~2001년의 142개 지역보다 19개가 증

15) 본 절은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인 2021.11.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인수 부연구위원이 종합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재정리한 것임을 밝힘.

16) 2012년 이전 기간의 세종특별자치시는 연기군으로 상정하여 산출하였음.

가한 161개 지역이며, 이 중 비수도권 지역이 125개, 수도권 지역이 36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및 비수도권 공히 인구감소지역의 수가 관측기간 초기에 비하여 최근 더욱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지역 비중은 수도권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6-1〉 기간별(2000~2001년, 2019~2020년) 권역별 인구 증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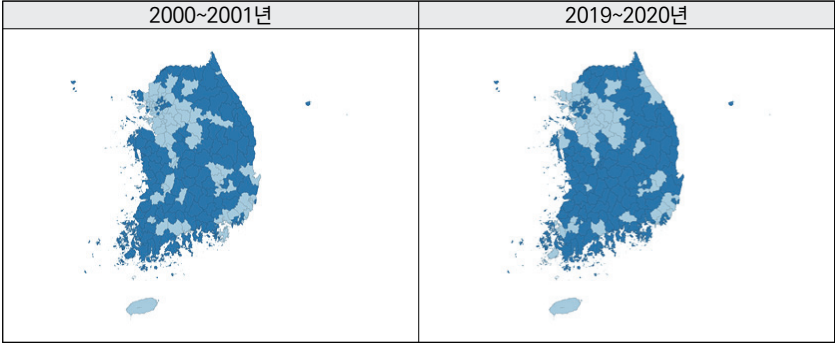
(단위: 개, %)

2000~2001년				2019~2020년			
구분	인구 증가	인구 감소	소계	구분	인구 증가	인구 감소	소계
수도권	41 (62.12)	25 (37.88)	66 (100.00)	수도권	30 (45.45)	36 (54.55)	66 (100.00)
비수도권	45 (27.78)	117 (72.22)	162 (100.00)	비수도권	37 (22.84)	125 (77.16)	162 (100.00)
소계	86 (37.72)	142 (62.28)	228 (100.00)	소계	67 (29.39)	161 (70.61)	228 (100.00)

자료: 통계청. (2021h).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인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00~2001년(관측기간 초기), 2019~2020년(최근) 시군구 단위 연평균 인구 증감률의 공간적 분포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최근 인구 감소 지역이 더 많아진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두 기간 모두 서울 주변 수도권, 지방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 감소 특성이 관측되고 있음.

[그림 6-1] 기간별(2000~2001년, 2019~2020년), 권역별 인구 증감의 공간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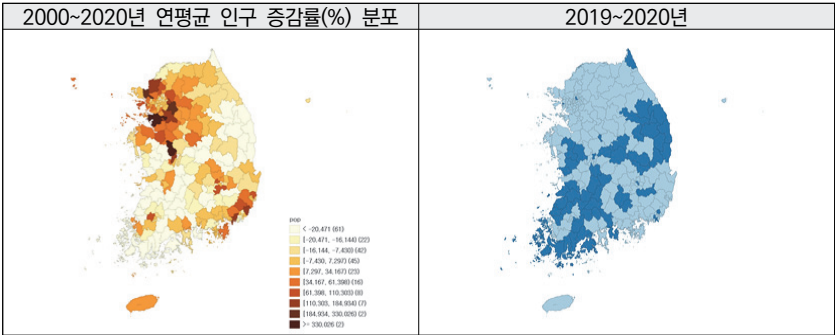


주: 짙은 음영 지역은 연평균 인구 증감률이 0 미만인 지역이며, 옅은 음영 지역은 연평균 인구 증감률이 0 초과 지역임.

자료: 통계청. (2021h).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인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00~2020년 연평균 인구 증감률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과 비 수도권 간 인구 증감 양상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음.
- 즉, 수도권(서울 근교 경기도)은 인구 증가 양상이,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 양상이 뚜렷하게 관측됨.
 - 특히, 2000~2020년 인구 규모 20% 이상 감소 지역의 대부분은 비수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2] 2000~2020년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 규모 20% 이상 감소지역의 분포



주: 오른쪽 그림의 짙은 음영 지역은 2000~2020년 연평균 인구 증감률이 -20% 이상인 지역임.

자료: 통계청. (2021h).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인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사회적 변화의 큰 기여도

- 228개 지역 인구 규모는 2000~2020년 간 평균 약 16,733명 증가하였고, 자연적으로는 약 16,894명 증가한 반면, 사회적으로는 약 16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000~2020년 간 인구 규모가 감소한 지역은 평균 약 23,755명 감소하였고, 자연적으로는 8,290명 증가한 반면, 사회적으로는 약 32,04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228개 지역의 2000~2020년 간 인구 규모 변화의 평균 자연적 변화 측면의 기여도는 51.99%, 사회적 변화 기여도는 48.01%인 반면, 연평균 인구 증감률이 0 미만인 153개 지역의 인구 규모 변화의 평균 자연적 변화 기여도는 -39.35%, 사회적 변화 기여도는 139.35%인 것으로 나타남.
- 연평균 인구 증감률이 0 미만인 153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변화 기여도 특성은 이들 지역의 인구 감소이 자연적 변화가 평균적으로 0을 초과하는 소위 자연적 증가 특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감소가 이를 압도하여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가 나타났음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표 6-2〉 2000~2020년 전체 지역과 연평균 인구 증감률 0 미만인 지역의 인구 변화 특성

(단위: 명, %)

지역	2020년 인구 규모	인구 증감률	인구 규모 변화	자연적 변화	사회적 변화	자연적 변화 기여도	사회적 변화 기여도
전국 평균 (총 228개 지역)	225,216	5.15	16,732.72	16,893.63	-160.93	51.99	48.01
인구 증감률(-) 지역 (총 153개 지역)	159,895	-17.52	-23,754.52	8,290.13	32,044.65	-39.35	139.35

자료: 통계청(2021h).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인출자료; 통계청(2021r). 출생아 수(시도/시/군/구) 인출자료; 통계청(2021f). 시군구/성/연령(5세)별 사망자수(1997~), 사망률(1998~) 인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지역 인구 규모 변화를 1기간(2000~2009년), 2기간(2010~2020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인구 감소 지역은 1기간(2000~2009년), 2기간(2010~2020년) 공히 사회적 감소가 크게 나타남.
-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지역(인구 증감률 20% 이상 지역)은 1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감소가 크게, 2기간에는 자연적 감소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특성은 이들 지역의 1기간의 사회적 감소에 대한 젊은 층의 기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보다 구체적으로, 1기간의 젊은 층의 유출이 결과적으로 2기간 출생아 수 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바로 그것임. 2기간의 인구 고령화는 이들 지역에 남는 이들의 특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장인수, 우해봉, 박종서, 정찬우, 2021).

○ 이러한 인구의 사회적 감소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목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즉,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이들 지역의 젊은 층의 순유출 특성은 관련 대응 정책의 낮은 실효성 및 대응 정책이 미비함을 의미하는 것인 지, 아니면 절대 인구 규모의 감소에 따른 젊은 층 및 다른 연령층의 유출 인구 규모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바로 그것임. 이들 지역에서 뚜렷하게 관측되고 있는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1기간 사회적 감소의 큰 기여도와 2기간 사회적 감소의 작은 기여도가 바로 이러한 연구 문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6-3〉 2000~2020년 기간별(1기간: 2000~2009년, 2기간: 2010~2020년) 전체 지역과 연평균 인구 증감률 0 미만인 지역, 연평균 인구 증감률 20% 이상인 지역의 인구 변화 특성

(단위: 명)

지역	1기간 인구 규모 변화	2기간 인구 규모 변화	1기간 자연적 변화	2기간 자연적 변화	1기간 사회적 변화	2기간 사회적 변화
전국 평균 (총 228개 지역)	9309.79	6444.61	10985.19	5908.44	-1675.40	536.22
인구 증감률 (-)지역 (총 153개 지역)	-9962.97	-12969.10	6666.61	1623.52	-16629.58	-14592.54
인구 증감률 -20% 이상 지역 (총 64개 지역)	-14340.72	-8836.39	-720.36	-3054.75	-13620.36	-578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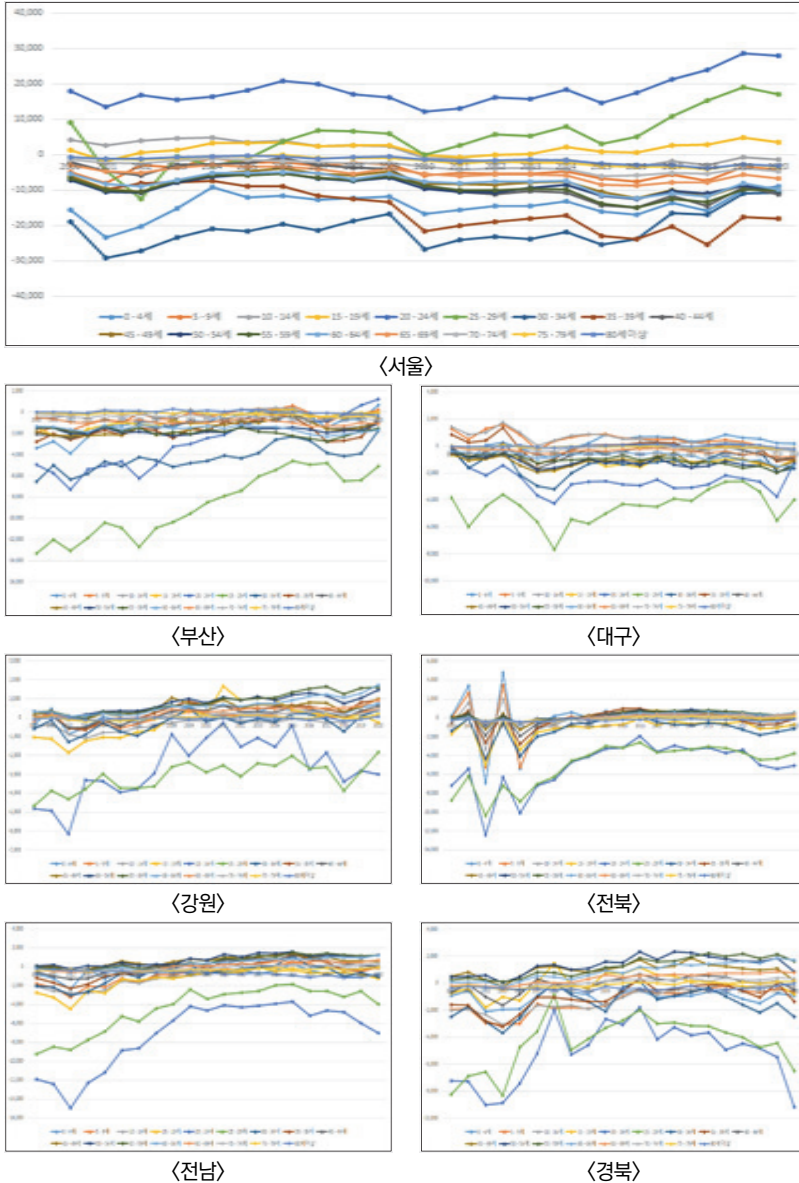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1h).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인출자료; 통계청(2021r). 출생아수(시도/시/군/구) 인출자료; 통계청(2021f). 시군구/성/연령(5세)별 사망자수(1997~), 사망률(1998~) 인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 지역 간 연령대별 사회적 변화 차이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인구 감소는 대체적으로 사회적 감소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감소의 연령별 특성은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지역을 살펴본 결과,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특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별 지역의 연령대별 사회적 특성은 큰 차이를 보임.
- 보다 구체적으로, 서울(2000~2020년 인구 규모 7.33% 감소, 이하 관측기간 동일)은 20대 연령층의 순유입 규모가 큰 반면, 부산(11.57% 감소), 대구(4.17% 감소), 강원(1.74% 감소), 전북(10.20% 감소), 전남(13.77% 감소), 경북(5.96% 감소)은 공통적으로 20대 연령층의 순유출 규모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큰 특성이 관측됨.

[그림 6-3] 2000~2020년 지역별 연령대별(5세 단위) 순이동 특성

(단위: 명)



자료: 통계청. (2021g). 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수 인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라. 지역 간 초고령화 격차 심화

- 앞서 살펴본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의 65, 75, 8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에 비하여 비수도권의 인구 고령화/초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비수도권은 인구 고령화 특성이 관측기간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증가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남.
- 2000~2020년 지역별 65, 75, 85세 이상 인구 비율 추세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최근으로 올수록 지역별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4〉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의 65, 75, 85세 이상 인구 비율(2000,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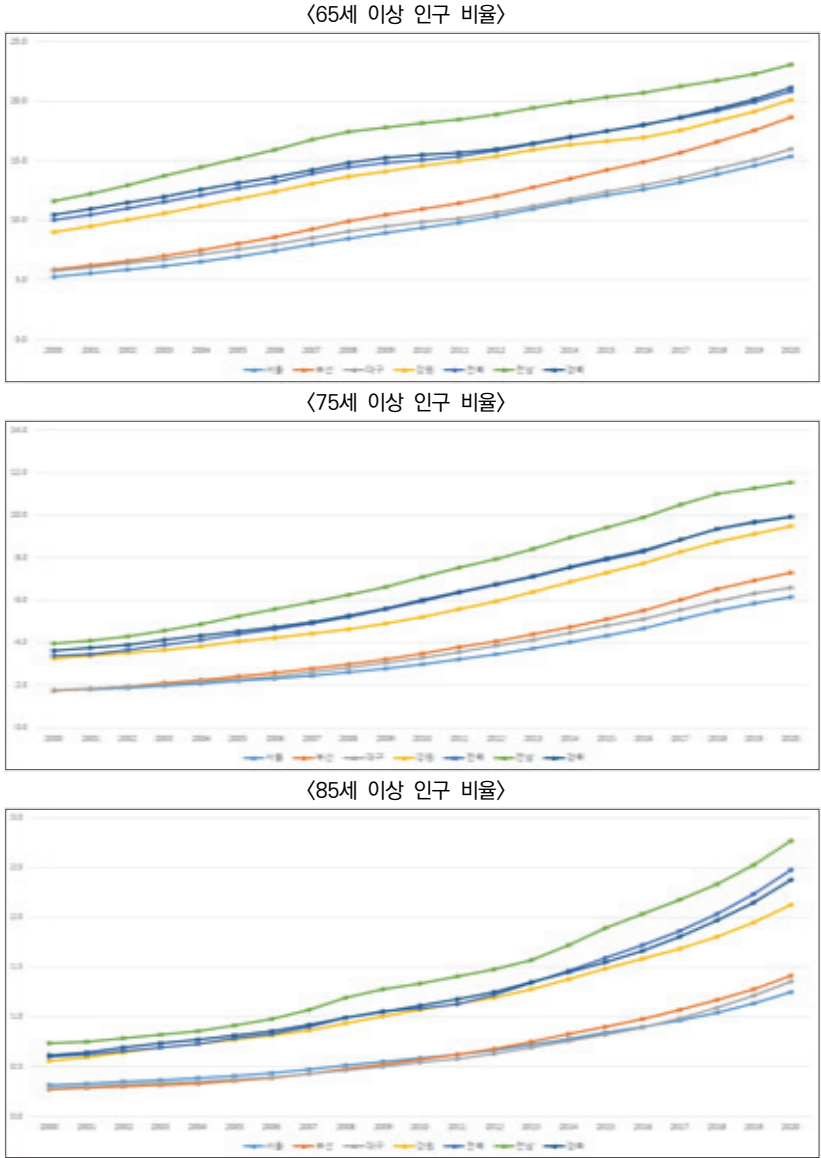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65세 이상 인구 비율			75세 이상 인구 비율			85세 이상 인구 비율		
	2000년 (A)	2020년 (B)	차이 (B-A)	2000년 (C)	2020년 (D)	차이 (D-C)	2000년 (E)	2020년 (F)	차이 (F-E)
서울	5.28	15.41	10.12	1.77	6.16	4.39	0.32	1.25	0.93
부산	5.85	18.65	12.80	1.73	7.30	5.57	0.27	1.41	1.14
대구	5.75	16.00	10.25	1.78	6.60	4.82	0.29	1.36	1.07
강원	9.05	20.10	11.06	3.26	9.48	6.22	0.55	2.13	1.57
전북	10.06	20.86	10.80	3.38	9.92	6.55	0.60	2.47	1.87
전남	11.63	23.05	11.42	3.95	11.55	7.60	0.73	2.77	2.03
경북	10.50	21.15	10.64	3.62	9.93	6.31	0.62	2.38	1.76

자료: 통계청. (2021h).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인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4] 2000~2020년 지역별 65, 75, 8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추세

(단위: %)



자료: 통계청. (2021h).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인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정책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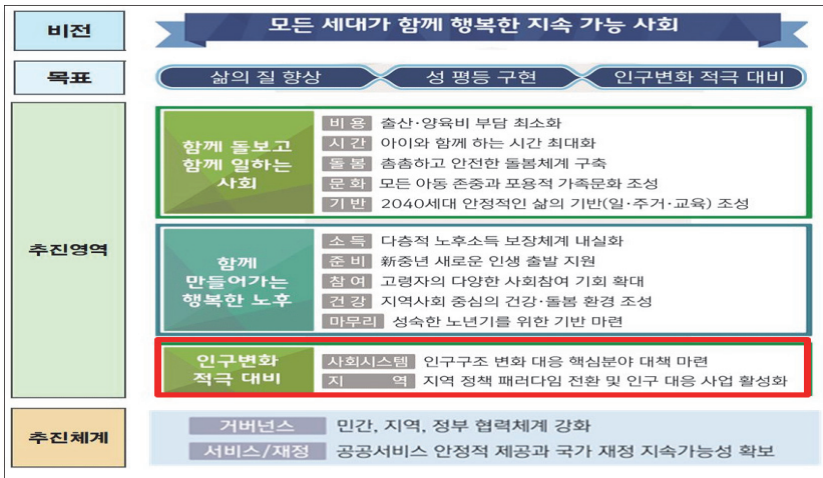
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2018.12):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하여,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기본계획이 시행된 이후 대체적으로 지역 인구 변화에 대한 논의는 세부 사업별, 국지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이후 2018년 12월 지역 인구 변화에 대한 시의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내 최초로 지역 정책 패러다임이 언급됨.

- 즉, 인구 변화 적극 대비 영역에서 지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인구 대응 사업 활성화 논의가 제기됨.

○ 다만, 지역 인구 위기가 꽤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을 고려하면, 최근의 중앙정부 정책 대응 시기가 과연 적기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그림 6-5]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2018.12)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p.3의 원자료를 그대로 재인용함.

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부터 추진)

- 앞서 살펴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과 맞물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분야 내 “지역상생 기반 구축” 영역이 구성되었으며, 이는 지역 인구 변화 대응 정책의 시의성과 중요성을 인식한 움직임으로 이해되고 있음.
- 지역상생 기반 구축 영역은 삶의 여건의 공간적 균형 회복, 세대 공존 지역사회 조성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즉, 지역 청년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사회 활동 계좌제 도입 검토, 인구감소지역 지역공모사업 우선 할당제 시범 도입 등 선별적 지원 강화임.
- 다만, 이러한 움직임의 면면은 현재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움직임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노정되고 있음.

[그림 6-6]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지역 인구 대응 정책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①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②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③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④	지역상생 기반 구축
⑤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p.43의 원자료 일부를 그대로 재인용함.

다. 2021년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021년도 시행계획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상생 기반 구축 영역 내 지역 인구 대응 사업이 제시되고 있는 바, 이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공모사업, 청년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 예정인 세부 사업들은 하기 표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6-5〉 2021년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내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정책

구분	내용
서비스 집약화	- 생활 SOC 복합화(복수(2개 이상)의 생활 SOC 관련 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리모델링 포함)) 사업 신규 대상 선정 및 비도시지역 생활 SOC 공급을 위한 ‘생활권 계획’ 수립방안 마련
선별적 지원 강화	-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공모사업(6개소 선정·지원) 및 공모사업 우대(할당제) 추진
지역정착 유도	- 지역의 문화와 특성과 연계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청년 마을 조성 등 지자체 주도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농어촌 등 주택 취득자 비과세 특례 요건 폐지 및 일몰 연장(‘20년 →’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500가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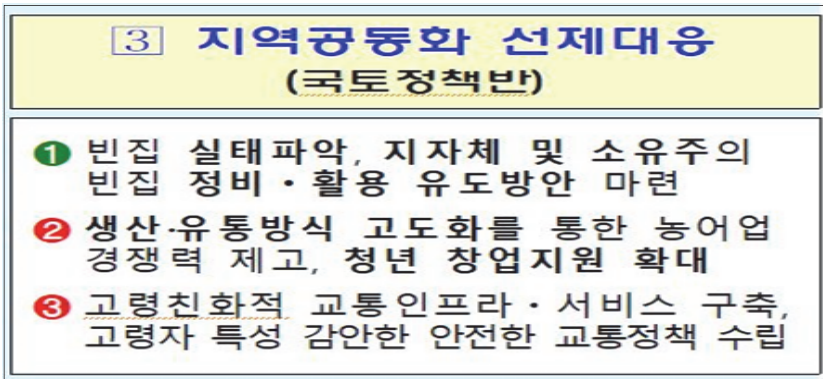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p.22의 내용을 표로 재정리하여 그대로 제시함.

라. 관계부처 합동 인구정책 TF

- 관계부처 합동 제2기 인구정책 TF(2020년) 추진정책 중 “지역 공동화 선제 대응” 정책
- 2020년 관계부처 합동 제2기 인구정책 TF에서는 지역 공동화 선제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제시됨.

-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통한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ICT 활용을 통한 농어촌 경쟁력 강화 및 교통인프라의 고령친화적 개편을 통한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그림 6-7] 관계부처 합동 제2기 인구정책 TF(2020년) 지역 인구 대응 정책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0.8.27.). 「제2기 인구정책 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발표. p.6의 원 자료 일부를 그대로 재인용함.

□ 관계부처 합동 제3기 인구정책 TF(2020년) 추진정책 중 “지역소멸화 선제 대응” 정책

○ 2021년 관계부처 합동 제3기 인구정책 TF에서는 지역소멸 선제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제시됨.

- 권역별 거점도시 집중 육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방지-혁신도시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 확충
- 이들 사업은 2020년 제2기 인구정책 TF에서의 지역 인구 변화 대응 정책과 비교하여 볼 때, 보다 강력한 중앙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6-8] 관계부처 합동 제3기 인구정책 TF(2020년) 지역 인구 대응 정책

구조 변화	
3. 지역소멸 선제 대응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 거점도시중심 발전전략 수립 ▶ 지방이전 인센티브 강화
인구과소지역 압축도시화 추진	▶ 도시기능 집약전략 수립 ▶ 이용도 낮은 인프라 정비 및 주변부 난개발 방지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 주변지역과의 상생기반 조성 ▶ 혁신도시 민간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1.1.27.).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p.3의 원자료 일부를 그대로 재인용함.

3. 결론: 향후 정책 방향

- 지금까지 살펴본 지역 인구 변화의 주요 특성과 이에 대응하는 중앙정부 정책은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양극화 및 격차 심화를 완화하기 위한 중앙정부, 지역의 대응이 더욱 강력하고 명확하게 추진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특히, 지역 인구 위기로 대변되는 지역 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저해 등의 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움직임의 시기는 이미 오래 전 발생되고 예견되고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지역 인구 위기의 특성을 상기할 때, 과연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또한 시의성이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등 지역 주도적, 자립적 기반 마련을 모도 하는 정책이 국가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살펴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및 인구정책 TF 등의 추진 사업이 어느 정도 상기 기조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임.
- 현재의 지역 인구 위기와 이에 따른 지역 양극화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적인 자립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음. 즉, 중앙정부의 강력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지역이 자체적인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함.
-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지역 인구 변화 대응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필요

- 지역 인구 감소 양상의 다양성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낙후지역으로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관리, 평가 체계 구축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개발에 의한 지역경제 성장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하여 배후지(hinderland)의 특성 탐색과 지역 간 인구 이동의 패턴 등이 보다 면밀하게 선제적으로 관측되고 관리될 필요(장인수 외, 2021).
- 특히, 최근의 중앙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리 움직임(행정안전부, 2021.10.18.)은 낙후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움직임으로서 의미가 있음.

□ 중소기업, 대기업(생산시설) 지방세제 감면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입지 유인

- 이는 인구감소지역에의 기업(생산시설 포함) 입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감면 정책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의 20대 연령층의 순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들 지역에의 중소기업, 대기업(생산시설)의 지방세를 감면하여 기업 입지를 적극 장려할 필요
- 무엇보다도, 국비로 감면 부분을 충당하는 동시에, 기업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유입 유인 동기가 적극 장려될 수 있는 수준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함.
- 인구 감소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양적/질적 제고가 중요하며, 이는 우선적으로 기업/생산시설의 입지가 선결될 필요
- 청년층의 유입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업(중기업 이상)의 입지 유인이 보장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

□ 중앙정부, 지역 인구 정책 추진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 체계 구축 필요

- 지역 인구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향후 추진되어야 할 다양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세부 사업별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장인수 외, 2021).
- 앞서 살펴본 관계부처 합동 제3기 인구정책 TF(2021년) 추진정책은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음. 다만, 상기 정책의 실효성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평가 체계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구축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자치분권 계획과 같은 중앙정부의 지역 인구 변화 대응 정책 및 각 지역별 인구 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성과평가 추진 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보이며, 보다 내실 있는 지역 인구 변화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사후 평가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장인수 외, 2021).

제2절 차후 연구사항

1. 본 연구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

- 본 연구는 지역 인구구조 변화 요인 중 가장 중요하게 이해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측면에서 각 지역의 인구 동태에 대한 심도 있는 관측을 포함하여, 시의성 있는 현안 도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 지속적인 지역 인구 동태 관측을 포함한 지역 인구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구정책으로서 이해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추진, 현재 4차 기본계획 추진 중)은 중앙정부 중심의 접근으로 지역별 인구 구성 및 변동의 특성이 심도 있게 고려되기 쉽지 않음.

- 상기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인구 동태에 대한 심도 있는 관측을 포함하여, 시의성 있는 현안 도출이 중요함.
- 지역별 다양한 인구 동태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제반 특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개입이 요구되고 있음.
- 우리나라 시도 단위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내 정책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각 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을 연구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현재 수립 및 추진되고 있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지역 상생 기반 구축 과제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각 지역의 다양한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화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별 연구기관과 협력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향후 연구 방향

- 지역 인구 동태 및 관련 연구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원내·외 연구진 및 자문위원 검토 및 정책 현안 수요 파악
- 지역 인구문제 및 동향에 대한 중앙정부-지자체 등 정책담당자 및 사회적 수요를 복합적으로 고려
- 지역 인구 동태와 관련하여,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지역 특수적 원인 및 관련 현안,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및 발표, 논의

- 1차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극 고려할 필요
 - 지역 인구 동태에 대한 생태학적(ecological), 원자학적(atomic) 특수성
 - 지역 인구 동태 관련 집계자료의 한계점 보완 논의
 -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의제 논의
 - 정책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환류 체계 구축 관련: 주제, 관리체계, 내용 등
- 지역의 다양한 인구 동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분석,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하여 각 지역별 지역 전문가들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 지역 연구기관 중 관련 연구 주제 및 정책 현안 수요 특징이 정책 시의성에 보다 부합하는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협력 연구 수행
 - 보다 명확하고 책임성 있는 협력 연구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 연구기관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방법도 고려될 필요



- 감사원. (2021).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서울: 감사원.
- 강원도. (2020). 2020년 강원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https://provin.gangwon.kr/gw/portal/sub05_01?articleSeq=166723&mode=readForm&curPage=40&boardCode=BDAADD02 에서 2021.6.2. 인출.
- _____. (2021). 2021년 강원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https://provin.gangwon.kr/gw/portal/sub05_01?articleSeq=225071&mode=readForm&curPage=1&boardCode=BDAADD02 에서 2021.6.15. 인출.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021.3.11.). 2021 강원여성포럼(II): 저출산 패러다임의 변화, 극복이 아닌 완화. 강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강원도청 홈페이지. (2021). 강원도 조직도(2021년 6월 기준). https://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3_04_03 에서 2021.8.10. 인출.
- 경상북도. (2021). 아이여성행복국 조직도(업무편람). https://www.gb.go.kr/Main/page.do?mnu_uid=6851&LARGE_CODE=720&MEDIUM_CODE=60&SMALL_CODE=40&SMALL_CODE2=20& 에서 2021.10.20. 인출.
- 관계부처 합동. (2020.8.27.). 「제2기 인구정책 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발표.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42059&menuNo=4010100 에서 2020.9.1. 인출.
- _____.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17> 에서 2021.7.1. 인출.
- _____. (2021.1.27.).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28-2.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

- iew.do?docId=39286 에서 2021.4.30. 인출.
- 광주광역시. (2020.11.).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2017~2037년).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70106&pageId=www194&searchSn=5 에서 2021.6.7. 인출.
- 광주광역시, 경기산업연구원. (2020.5.). 광주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http://www.gwangju.go.kr/public/boardView.do?boardId=BD_0000000468&pageId=public13&searchSn=187 에서 2021.6.17. 인출.
- 김경수, 하정화, 이재정. (2019). 부산시 인구감소 대응방안. 부산: 부산연구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
- 농림축산식품부. (2020.10.22.). 코로나 우울[블루] 극복, 사회적농장이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 가족, 코로나19 대응 인력 대상 힐링 프로그램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584> 에서 2021.11.20. 인출.
- 대한민국 정부. (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basicPlanDetail.do?articleId=105&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 에서 2021.12.2. 인출.
- _____.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basicPlanDetail.do?articleId=106&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 에서 2021.12.2. 인출.
- 민연경, 이소영. (2020).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효과성 분석. 강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박태우. (2021.6.1.). 지방소멸 위험 ‘인구감소지역’ 올 하반기에 공식 지정.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97508.html 에서 2021.6.4. 인출.
- 부산광역시. (2021).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 <https://www.busan.go.kr/nbtnewsBU/1498013> 에서 2021.8.5. 인출.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2021a). 모든 시민에게 힘이 되는 고령친화 행복도시 조성계획.
- _____. (2021b). 부산광역시 2018년 노인빈곤율[내부자료].
- 부산연구원. (2021). 초고령사회 '슈퍼시니어'를 맞이하는 부산의 준비.
- 서울시. (2019.6.).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방안.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3385> 에서 2021.9.2. 인출.
- 우장명, 박종섭, 설영훈, 남윤명, 최시영. (2018). 농촌인구 감소대책 중점과제 발굴 연구용역. 충북: 충북연구원. <https://www.chungbuk.go.kr/www/selectBbsNttView.do?key=282&bbsNo=31&nttNo=66428> 에서 2021.8.5. 인출.
- 이기국. (2021.7.2.). 영동군, 아리아! ... 아리아? - AI 스피커 활용 노인 건강.. 안전 챙기기, 치매대상자 꼼꼼한 비대면 돌봄. CTN 교육신문. <http://www.ctnews.kr/article.php?aid=1625189467295242076> 에서 2021.11.10. 인출.
- 이상호. (2018). 주요 고용이슈 심층 분석-한국의 지방소멸 2018(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이재정, 김수영, 이민홍. (2018).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기 노인복지 실행계획(2019~2023). 부산: 부산광역시·부산복지개발원.
- 임기찬. (2021.7.15.). '일터·쉼터·놀터' 없는 충북, 청년인구 10년 새 7만 명 줄었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71745> 에서 2021.9.14. 인출.
- 장인수, 우해봉, 박종서, 정찬우. (2021). 2021년 인구변동 모니터링과 정책 과제: 지역 인구 감소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UH1_00000123969206&kwd= 에서 2021.12.2. 인출.

전라남도. (2018). 인구정책종합계획.

_____. (2020). 2017~2037 전남 시군별 장래인구특별추계. <https://www.jeonnam.go.kr/M4695/boardView.do?seq=1915574&menuId=jeonnam0508070000&boardId=M4695> 에서 2021.6.11. 인출.

_____. (2020.5.). 2020년 전라남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https://www.jeonnam.go.kr/T6461183/boardView.do?seq=30&menuId=jeonnam0923030000&boardId=T6461183> 에서 2021.6.3. 인출.

전라남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20). 전라남도의 인구 유입 정책 방안[내부자료].

전라남도 인구정책 협업 네트워크 간담회. (2021.3). 전라남도의 인구정책 플랫폼 방안[내부자료].

지역발전위원회. (2018).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http://policy.nl.go.kr/cmmn/FileDown.do?atchFileId=219035&fileSn=60444> 에서 2020.10.20. 인출.

지영수. (2016.5.9.). 충북 행복택시 운행 버스 벽지노선 확대 추진. 동양일보.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722> 에서 2021.10.15. 인출.

충청북도. (2019a). 제4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 http://www.kccwp.or.kr/kccwp/board_view.asp?b_idx=131&pageno=1&startpage=&table_code=3vgb 에서 2021.10.1. 인출.

_____. (2019b). 제7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 충북: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https://www.chungbuk.go.kr/www/selectBbsNttView.do?key=282&bbsNo=31&nttNo=66384&searchCtgr=&searchCnd=SJ&searchKrwrd=%EB%B3%B4%EA%B1%B4%EC%9D%98%EB%A3%8C&pageIndex=1> 에서 2021.8.4. 인출.

_____. (2021a). 제1차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 충북: 충북연구원. <https://www.chungbuk.go.kr/www/selectBbsNttView.do?key=282&bbsNo=31&nttNo=178290&searchCtgr=&searchCnd=>

- SJ&searchKrwd=%EC%A0%9C1%EC%B0%A8%20%EC%9D%B8%EA%B5%AC%EC%A0%95%EC%B1%85%20%EA%B8%B0%EB%B3%B8%EA%B3%84%ED%9A%8D&pageIndex=1 에서 2021.8.5. 인출.
- _____. (2021b).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충북: 충북연구원. <https://www.chungbuk.go.kr/www/selectBbsNttView.do?key=214&bbsNo=5&nttNo=185477> 에서 2021.8.5. 인출.
- _____. (2021c).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계획 연구. 충북: 충북연구원. <https://www.chungbuk.go.kr/www/selectBbsNttView.do?key=282&bbsNo=31&nttNo=185123&searchCtgr=&searchCnd=SJ&searchKrwd=%EC%82%AC%ED%9A%8C%EC%84%9C%EB%B9%84%EC%8A%A4%EC%9B%90&pageIndex=1> 에서 2021.8.10. 인출.
- _____. (2021d). 충북통계연보. <https://www.chungbuk.go.kr/stat/selectBbsNttView.do?key=1407&bbsNo=182&nttNo=173317&searchCtgr=&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에서 2021.9.21. 인출.
- _____. (2021.7.14.). 인구 절벽시대, 해법을 찾다! 제1회 충북인구포럼 발표 자료[내부자료]. 충북: 충청북도·충청북도교육청·한국교원대학교·정정순 국회의원실.
- 통계청. (2019.6.27.).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555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EC%9E%A5%EB%9E%98%EC%9D%B8%EA%B5%AC%EC%B6%94%EA%B3%84 에서 2021.6.9. 인출.
- _____. (2020a). 국가통계포털-시군구/성/연령(5세)별 사망자 수(1997~), 사망률(1998~)[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18&conn_path=I3 에서 2021.4.25. 인출.
- _____. (2020b). 국가통계포털-출생아 수(시도/시/군/구)[데이터파일]. <https://k>

- 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1A01&conn_path=I2 에서 2021.4.25. 인출.
- _____. (2021a). 국가통계포털-1인당 개인소득(시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C86_04&conn_path=I2 에서 2021.9.15. 인출.
- _____. (2021b). 국가통계포털-1인당 지역총소득(시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C86_03&conn_path=I2 에서 2021.9.15. 인출.
- _____. (2021c). 국가통계포털-1인당 민간소비지출액(시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C86_01&conn_path=I2 에서 2021.9.15. 인출.
- _____. (2021d). 국가통계포털-고령인구 비율(시도/시/군/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 에서 2021.4.25. 인출.
- _____. (2021e). 국가통계포털-세대당 인구수 및 인구밀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2&tblId=JT_B02&conn_path=I2 에서 2021.8.3. 인출.
- _____. (2021f). 국가통계포털-시군구/성/연령(5세)별 사망자수(1997~), 사망률(1998~)[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18&conn_path=I3 에서 2021.12.2. 인출.
- _____. (2021g). 국가통계포털-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 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1 에서 2021.4.25. 인출.
- _____. (2021h). 국가통계포털-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 에서 2021.4.25. 인출.
- _____. (2021i). 국가통계포털-시군구/성별 이동자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_A02&c

- onn_path=I2 에서 2021.6.14. 인출.
- _____. (2021j). 국가통계포털-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2 에서 2021.6.9. 인출.
- _____. (2021k). 국가통계포털-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 에서 2021.6.10. 인출.
- _____. (2021l). 국가통계포털-시군구별 이동자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_A01&conn_path=I2 에서 2021.6.10. 인출.
- _____. (2021m). 국가통계포털-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H&conn_path=I2 에서 2021.6.8. 인출.
- _____. (2021n). 국가통계포털-시도별 의료인력 현황[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3_A003&conn_path=I2 에서 2021.10.6. 인출.
- _____. (2021o). 국가통계포털-연령 및 성별 인구(읍면동 및 시군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3&conn_path=I2 에서 2021.8.10. 인출.
- _____. (2021p). 국가통계포털-전출지/전입지(시도)별 이동자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3_A01&conn_path=I2 에서 2021.6.11. 인출.
- _____. (2021q). 국가통계포털-지역소득 1인당 GRDP(시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C86_02&conn_path=I2 에서 2021.9.15. 인출.
- _____. (2021r). 국가통계포털-출생아 수(시도/시/군/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1A01&conn_path=I2 에서 2021.12.2. 인출.

- _____. (2021s). 국가통계포털-충청북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2&tblId=DT_2015Y33GRDP1&conn_path=I2 에서 2021.9.13. 인출.
- _____. (2021t). 국가통계포털-충청북도 사업체조사(충청북도·산업·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K52C02_33&conn_path=I2 에서 2021.9.20. 인출.
- _____. (2021u). 국가통계포털-합계출산율(시도/시/군/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1A17&conn_path=I2 에서 2021.6.13. 인출.
- _____. (2021v).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2 에서 2021.6.2. 인출.
- _____. (2021w).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세대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conn_path=I2 에서 2021.6.3. 인출.
- _____. (2021x).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 에서 2021.6.3. 인출.
- _____. (2021y).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N&conn_path=I2 에서 2021.6.4. 인출.
- _____.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시도별 1인가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I002S&conn_path=I2 에서 2021.10.1. 인출.
- _____.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 에서 2021.6.8. 인출.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각 연도), 귀농어·귀촌인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8/11/index.board 에서 2021.6.15. 인출.

한국고용정보원. (2020.6.16.).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현황 및 특징. 고용조사브리프 봄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통계조사팀 보도자료. <https://www.keis.or.kr/user/bbs/main/137/3963/bbsDataView/46313.do> 에서 2021.8.20. 인출.

행정안전부. (2021).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데이터파일]. <https://jumin.mois.go.kr/#> 에서 2021.9.28. 인출.



[부록 1] 세미나별 회의록

1. 지역 인구 동태와 현안 발굴(1차 세미나)

□ 연구 진행과정 논의

- 키포프 회의에서 논의된 방향과 큰 변화 없이 진행할 것이며, 향후에는 기관 간 상이한 입장을 조율 및 반영하여 진행할 예정임. 세미나 자료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7/6(화) 메일을 참고하기 바람.
- 예산은 각 기관별로 연구를 위해 자유롭게 사용하고, 과제종료 1개월 이전(2021.11.9.)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측에 예산변경 관련하여 요청해주시기를 바람.

□ 기관 간 MOU 체결 관련 입장

- 기관 간 MOU 체결에 대해 모든 기관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임. 조만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체 입장과 인구정책연구실 입장을 고려하여 MOU 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후 각 기관에 공유할 예정임.

1) 광주전남연구원(민현정 박사)

-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의견 수렴 차원에서 기관 간 MOU를 체결하자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함.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측에서 기관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고 타 기관에서 모두 참여한다면 기관 간 MOU 체결에 관해 고려해볼 수 있음.

2) 충북연구원(최승호 박사)

- 인구의 날(7월) 즈음에 기관 간 MOU를 체결하는 것은 시기가 다소 촉박함. 이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9~10월경으로 일정을 조율하여 추진하였으면 함.

3)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민연경 박사)

- 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해 저출산 분야의 주도적인 위치로 나아가기 위한 기관장님의 의지가 강력함.

4) 경북여성정책개발원(정서린 박사)

- 국책연구기관과의 MOU 체결 관련 지표가 경영평가에 포함되어, 향후 MOU 체결 시 연구주제와 관련된 방향으로 논의되었으면 함.

5) 부산복지개발원(이재정 박사)

- 현재 기관장님이 부재한 상황이며, 오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MOU를 체결한 경험이 있음.

□ 1차 세미나 발표 및 토론

1)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민연경 박사)

- 지역소멸 위험지역, 출산율, 육아기본수당의 쟁점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향후 세미나 자료 작성 시 각 요인에 대한 인과성 탐색과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함.
- 강원도 지역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인구이동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대 이후부터는 혁신도시 지정 등으로 인해 강원도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함.
- 강원도 지역은 수도권 지역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시도 간

이동이 활발하며 청년층의 이탈이 심각한 상황임. 특히 청년 여성의 인구 유출은 가임여성인구의 감소와 맞물려 저출산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며, 더 나아가 초저출산과 인구감소의 가속화 원인으로 주목함.

- 강원도 지역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에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하였고, 육아기본수당 효과성 연구를 통해 합계출산율 증가 등 유의미한 정책 효과를 검증하여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월 40만 원으로 확대함.

2) 경북여성정책개발원(정서린 박사)

- 2020년 기준 경북 지역은 인구소멸 위험지수 ‘주의’ 단계로,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해있음.
- 최근 5년간 경북의 인구수는 감소하는 반면, 세대 수는 증가함. 인구와 세대수가 함께 증가하는 지역은 4개 지역(김천시, 영천시, 경산시, 예천군)으로 예천군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예천군은 안동시와 도로 하나를 경계로 인접한 지역으로 경북도청이 위치해 있고, 30대 이하 인구 구성이 높음. 향후 세미나 자료 작성 시 인구수와 세대 수의 지역별 수치가 상반되는 경향은 재확인이 필요함.
- 경북 지역은 합계출산율(연평균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양호한 수준이지만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로, 최근 5년간 7개 지역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반면, 16개 시·군에서는 감소 추세를 보임. 또한 최근 5년간 예천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에서 조혼인율의 가파른 감소 추세를 보임.

- 최근 5년간 경북 지역은 순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순유출 규모가 가장 큼. 특히 타 시도로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연령별, 성별 순유입/유출 규모를 점검할 계획임.
- 경북 지역은 청년 조례가 시행 중이며, 커뮤니티 형성과 사업 구축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임. 구체적으로 경북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의성군의 ‘월급받는 청년 농부제’

- 경북 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창농의 꿈을 가진 청년들이 월급을 받으며 영농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임.
- 사업 시행연도 기준 경상북도에 거주하며,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이 농업 법인에 취업할 때 인건비와 정착지원비를 지원함.
- 2년간 지원하며, 사업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청년에게 1,000만 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원함.
- 월급 받으며 지역 선도 농업법인에서 일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지원: <http://www.청년농부.com/>

3) 광주전남연구원(민현정 박사)

-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이동의 흐름을 보면, 학창시절에는 전남 지역에서 광주광역시로, 성인이 되어 대학교 진학 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임. 특히 읍·면 단위로 인구 유출이 심각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도 상당함. 예를 들어 고흥군 읍 소재지의 인구 유출이 높아 마을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됨.

- 최근 인프라 통합과 공간 재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나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우려됨. 이에 대해 해양자원이 뛰어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초-중-고, 직업까지 연계한 관련 교육기관의 운영과 정주인구에서 관계인구로의 변화를 고려해볼 수 있음.
- 관계인구란 2016년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촌 등 특정 지역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의미함.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일본에서는 관광안내소를 관계안내소로 확대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임.
- 한국도 물리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경제와 연계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애착 형성과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
-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전남 지역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의 진행과 공간 재편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유했으며, 인구감소에 순응하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 달 살기’ 등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전남 지역에 중점을 두고 살펴볼 예정임.

※ 출산장려금과 육아기본수당

- 광주·전남: 한시적으로 출산장려금이 도입되었고, 눈에 띄는 효과를 보임. 다만, 현금성 지원의 세밀한 검증은 추후 필요함.
- 강원도: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육아기본수당은 출생 월부터 48개월(4년간) 1인당 매월 40만 원을 현금성 수당으로 지급함.

4) 부산복지개발원(이재정 박사)

- 부산광역시시는 서울 외에 인구 400만 명이 넘는 제2의 도시이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폐교 위기에 직면하며 인구 400만 명이 붕괴됨.
- 청년은 학군이 좋고 생활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반면, 노인은 그 지역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음.
- 부산광역시에서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대체로 고지대임. 특히 산업단지가 없어지면서 이탈하는 1인 가구가 재개발 지역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향이 뚜렷함. 반송동의 경우 도시재생이 어렵고 빈 집이 많음.
- 인구정책 관련 행정조직 비교: 부산(과 단위) vs 강원도(팀 단위)

5) 충북연구원(최승호 박사)

- 전국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충청북도 내 인구는 소폭 증가하는 경향임.
- 충북 지역은 ‘청주 > 진천, 음성 > 제천, 충주 > 단양, 영동, 보은’ 순으로 인구수가 많으며, 강원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 중장년층이 살기에는 좋은 지역이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답답한 경향이 있음. 기업 이전에서 청년 인구 유입으로 정책의 방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삶의 질 개선이 낮은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종합의견(실장님 제안 3가지)

1) 인구 문제에 관한 각 지역의 관점 검토

○ 인구 문제가 무엇이며, 각 지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 ‘레벨, 층위, 시계’가 복합적
 - 양적(구조, 분포, 혼인/출산 등), 인구 총격, 출산율 제고 (미시)
 - 전국, 시도 내 분포 등 이동 패턴
- 각 지역에서 바라보는 인구 문제의 관점을 ‘연구자와 기관,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일관된 틀을 정하여 정리하거나, 동일 시점에서 인구 현황을 정리한다면 객관화 가능성 ↑

2) ‘인구소멸’의 용어 사용

○ ‘인구소멸’이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 ‘지역소멸, 지역 축소’라는 용어는 정책 효과를 전략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나, 국민들에게 부정적 공포를 조성할 수도 있음.
- 소멸 지수는 인구구조 측면에서 인구 위기를 지수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하지만, 이 지수는 인구구조 측면에서 다루어질 뿐 아니라 산식이 복잡하고 가임 연령을 대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음.

$\text{※ 지방소멸지수} = (\text{지역 15~49세 여성 인구} / \text{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times 100$
--

-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 인구 위기’ 등 중립적인 용어로 통일하고, 향후에는 소멸 지수의 용어를 다른 자료 인용 등의 각주

로 활용하기를 바랍. 상세한 내용은 7/6(화) 안내드린 메일을 참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총 부양비는 지역 인구 연령 구조와 경제적 특성 등을 직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지표로,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로 구분됨.
- 75세 이상, 8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현재의 고령인구 비율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보다 지역의 연령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임.
- 인구의 자연적/사회적 증감은 지역 인구 규모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3) 추진 체계와 거버넌스

○ 지역 연구기관에서 추진 중인 계획과 관련 사례를 정리

- 현재 복지부와 행안부 등 정부 부처의 다양한 경로로 관련 계획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각 지자체에 이관되어 추진, 진행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인구정책에 관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계획의 명칭이 다른 상황임. 이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라인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역별 기본계획의 명칭과 추진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지자체의 역할 수립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데 행안부 관련 계획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가령 관련 지침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명확하지 않아 전반적인 정리가 필요함.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향후 계획

- 1차 세미나 회의록 및 가이드라인 공유(7월 중순)
- 2차 세미나: 8월 중순에 웨비나(Zoom)로 진행할 예정
 - 2차 세미나 관련 제반 사항을 8월 첫째 주까지 공지하여 모든 연구진이 참석 가능한 시간을 취합, 진행할 예정임.
 - 내용: 1차 세미나에서 관측 및 분석한 지역 인구 동태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 인구 특성, 정책 환경의 ‘SWOT 분석’ 정리
 - 정책 환경 분석은 지역 인구 동태 측면을 중심으로 주요 부문에 대한 연한과 쟁점 위주로 다루어 주시기를 요청함. 이 부분의 참고 목차는 ‘지역 인구 동태 관련 현안, 지역 인구 동태를 바탕으로 한 SWOT 분석, 정책 환경 관련 주요 특성 및 쟁점’ 순임.

2. 지역 인구 동태와 현안 발굴을 통한 SWOT 분석(2차 세미나)

□ 2차 세미나 발표 및 토론

○ 부산복지개발원(이재정 박사)

1) 부산지역의 SWOT 분석

구분		내용
내 부	강점 (S)	① 인구 감소에 대한 인지와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② 저출산, 청년, 일자리 정책을 함께 고려 ·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저출산 정책과 청년 정책을 연계 ·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젊은 인구 유입과 기존 청년들의 이주를 방지하는 ‘청년’ 정책 수립(ex. 일자리, 정주여건 등 적극적인 지원 노력) ③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지역 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인식 · 특·광역시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 ↑ · 부산시 노인복지기본계획 수립부터 14개 관련 부처가 동시에 고령화 문제에 대응
	약점 (W)	① 지역 내 편차가 큰 인구 분포 · 부산지역의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토지 매매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 · 구도심 지역: 빈집 등이 다수 존재하고, 도시재생 및 개발에 한계(하나의 지역으로 묶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정치적 상황으로 무산) ② 재개발 등의 추진으로 지속적인 집값 상승 ·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해운대구, 수영구 지역을 선호하는 젊은 층이 지역 내에서 생활하기 힘든 상황 ex. 기장군의 정관지역: 출산율, 젊은 층 거주비율 ↑

구분	내용
	③ 취업에 유리한 서울권 대학 진학 · 부산지역의 높은 집값, 일자리 부족으로 인근 지역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나 인근 지역 또한 집값이 상승하며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 발생 · 부산지역에 젊은 층의 거주를 유도할 수 있는 정주여건 등이 부족하여, 취업을 위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야 한다는 의식이 지속적으로 증가
외부	기회 (O) ①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으로 이동 감소 · 수도권 지역의 일자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과 주택청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부산지역의 지속적인 거주 유도 ② 2021년 9월경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대응 · 현재 부산시의 노인 관련 정책을 전담부서를 재개편하여, 변화하는 노인들의 수요에 맞도록 사업 수행 · 인구정책 기금 운용에 대한 고민과 신증년(50+) 세대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제도적 지원 노력 필요
위협 (T)	① 단기간 성과 위주의 정책 · 선출직 시장의 공약사항과 연계된 단기간의 성과는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보여주기식의 전시성 행정임 · 인구정책은 장기간 여러 상황들이 맞물려 제대로 작동해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이전 시장의 정책이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속될 필요가 있음 ②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 · 정책의 제로섬 정책의 제로섬(Zero-sum) 성격으로 추진되는 지방 재정현실의 실태를 살펴볼 때, 지방분권화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제한 ※ 국비 사업인 지역통합돌봄 시범지역 2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시 자체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시행 · 인구 현황과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2) 추가 의견

- 최근 부산지역은 청년 세대 외에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신중년(50+) 세대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 중임. 이때 특·광역시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부산지역에 베이비붐 세대가 많은 것이 정책 효과에 기인하는 것인지, 지역 내 인구 규모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 의한 것인지를 쟁점으로 파악하여 향후 정책 개발 시 반영하면 좋을 듯함.
- 전반적으로 정책 효과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책의 효과성이 있는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를 바람.

○ 충북연구원(최승호 박사)

1) SWOT 분석

구분		내용
내부	강점 (S)	① 지역별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식 강화 · 농촌 과소화 및 지방 위축 등 농촌인구 문제 심각 · 인구 유지 및 유지를 위한 시·군 지역별 정책 대응의 중요성 대두 ②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국토의 중심인 입지여건, 깨끗한 자연자원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보유
	약점 (W)	① 청년층 인구 유입 정책의 부재와 지역공동체 활력 및 지역 역량 부족 · 기존 정책은 40대 이후 중장년층 유입에 편중되어 있고, 청년층의 농촌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는 부족한 실정임 · 농촌인구의 유출이 장기간 지속되며, 새로운 농촌개발과 인구문제에 대응한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② 농촌에 대한 투자 자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③ 농촌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관련 시설의 설치에 제한을 겪는 등 생활서비스 여건이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

구분		내용
외부	기회 (O)	① 수도권 인접성과 교통여건 개선 · 청주지역, 충청북도 북부권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 인구 유입, 소비시장 및 농업발전 등 기회요인 발생 ② 균형발전(지역분권) 강화 추세와 지역별 인구정책 추진여건 조성
	위협 (T)	① 농촌 지역의 저출산 경향 지속,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활력 저하 ② 도·농 소득 격차 확대 및 농업인구 비중의 감소 · 고령화된 농업인구와 농업의 경쟁력 감소로 농업의 기반 약화 · 특히 농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지역의 공동화 현상에 따른 도시-농촌 지역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인구 유출이 지속 ③ 농촌의 과소화 속에서 보육, 교육, 의료, 교통 서비스 공급 약화
주요 특성 및 쟁점	주요 특성	① 경제성장률, 경제 규모 현황(GRDP 기준) · 2018년 충청북도 실질 GRDP(2015년 기준연도 가격)는 총 65.8조 원으로 전국의 경제성장률 2.9%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 충청북도는 향후 경제 규모를 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계획 중임 ② 의료자원의 불균형으로 수도권으로 이동 ↑, 의료접근성 문제 지속 · 충청북도 차원에서 의료자원의 확보를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계
	주요 쟁점	① 청년층의 교육 및 일자리 기회의 부족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유출 ② 독거노인 증가: 지역사회 돌봄 및 생명존중 관계망 구축 등 모색 필요 ③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 충족,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 서비스 구축, 재가 중심의 서비스로의 전환 외에 복지용구, 치매예방기기 및 AI 인공지능 기기개발 및 보급에 대한 고민 필요

2) 추가 의견

- 충북지역의 1인당 생산/소득/민간소비 규모가 전국의 경제규모와 괴리가 있어, 지역의 불균형 양상을 주요 쟁점으로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하면 좋을 듯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심 있는 쟁점과 각 지역의 심각한 문제를 순차적으로 언급하여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작성을 요청드립니다.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정서린 박사)

1) SWOT 분석

구분		내용
내부	강점 (S)	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장기비전 수립 등 경북도정의 적극적 의지 ②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35곳)을 중심으로 원도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 중임 ③ 경상북도 인구정책 제도적 기반 구축 · 경상북도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관련 사항을 규정한 ‘인구정책 기본조례(2019)’를 근거로 경상북도 인구정책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중임 · 청년의 지속적인 정착과 유입을 위해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2013)’,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2016)’,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2017)’를 순차적으로 발의, 제정하여 운영 중임 ④ 인구정책 전담부서 구성 및 예산 증가 · 아이여성행복국: 인구정책과, 아이세상지원과, 여성가족행복과
	약점 (W)	①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 · 경상북도는 전 국토의 19.1%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지하며, 지역별로 지리적 여건이 매우 달라 문화, 교육, 산업환경 또한 다양함. 따라서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정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음.

구분	내용
	·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일자리 부족과 이용주민의 감소로 인해 생활편의서비스 수준이 저하되고, 유흥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악순환 발생
외부	② 초고령사회 심화: 인구소멸 고위험(4곳), 위험진입(15곳) 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인구 동태 분석을 수행하여 지역별 의제발굴 노력 ② 성평등 사회에 대한 공감대 확산: 경북지역의 낮은 성평등 지수(15~16위) ③ 사회적 경제 관련 센터의 설립 및 지원 ※ 사회적 경제란,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업·빈곤 등 사회경제 문제의 극복을 지향 ④ 코로나19 이후 변화 · 환경: 기후 온난화에 관한 위기의식이 심화되며 지구환경 보존의 관심 증대 · 사회경제: 비대면 산업생태계 전환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 발생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 기타: 통합 신공항 건설을 경북 발전의 기회로 여겨 적극적인 지원 노력
	① 코로나19 위험사회에 대한 고용불안 확산 ② Gig 경제(Gig economy),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 형태의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정 ③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한 불안감 확산 ·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혁신이 관련 직종의 성장에는 긍정적 기대감을 보이지만, 노동자의 대량해고 등 다수의 직종이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야기
주요 쟁점	① 지역별 거점도시 육성과 권역별 지역생활권 조성 ②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보편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의한 산업 및 고용 형태의 변화, 코로나19에 따른 가속화 대처 ③ 초고령사회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합의점 모색

2) 추가 의견

- “*순유출 후 순유입으로 전환된 지역은 예천군 1개에 불과하며, 지속적으로 순유입 추세에 있는 지역은 영천시와 경산시 2개 시 지역(4p)*”
→ 이때 영산시와 경산시에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원인을 검토, 보완하여 3차 세미나에서 공유되기를 바람.
- 추가로 경북지역의 인구정책 담당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

○ 광주전남연구원(민현정 박사)

1) 전남 지역으로의 분석지역 구체화

-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전남 지역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의 진행과 공간 재편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유하고 있음.
- 대도시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를 견인하고 있는 키워드는 공히 비슷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시급성이 있는 전남 지역에 중점을 두고 살펴볼 예정임.

2) SWOT 분석

구분		내용
내부	강점 (S)	① 청정 전남: 깨끗한 지역환경, 풍부한 자연자원 등 · 저렴하고 풍부한 식자재, 미래수요에 따른 많은 기회 요소는 Well-ageing 등 산업화 노력의 진행과 함께 지역의 애착 및 공동체성 확보에 영향
	약점 (W)	① 섬 지역이 40%를 차지하는 지리적 여건 · 부족한 의료, 생활편의 및 문화여가 인프라 · 인력수급, 인재 육성이 어려운 상황 · 취약한 보육 및 교육환경, 산업구조

구분		내용
외 부	기회 (O)	① 다양한 지역 매력도 ② 인구감소 지역의 지원에 관한 제도화: 지역의 선정기준 마련 법 일 부 개정 ③ 지역 간 연대협력을 촉진하는 분위기 형성 및 상생 관계 구축을 위 한 논의 ④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 새로운 근무환경이 도입되며, 일-거주 병행 ↑ ⑤ 고령화에 대응한 산업과 비즈니스: 기업 본사, 관계인구 유치 등
	위협 (T)	①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마을소멸 등 과소화 진행 ② 지역의 대응력 낮은 정책 ·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낮은 반면, 복지예산의 비중은 높아 정책설 계 과정에서 중앙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 ③ 필수 인프라의 유지관리가 어려움에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분 산투자 진행 ④ 지역 간, 광주광역시와의 경쟁 외에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함
	주요 쟁점	① 새로운 유입 흐름 형성 및 변화된 인구구조에의 대응 집중 ② 생애주기별, 지역별 선택과 집중 ③ 젊은 세대 유입·정착 지원으로 건강한 인구구조 형성 ④ 아이와 청년이 행복한 환경 조성 ⑤ 양질의 일자리 지속 확대·창출 ⑥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3) 추가 의견

- 전남 지역의 동부권(여수, 순천, 광양)은 산업단지가 많아 연령
대가 젊고 거주 만족도도 높음. 반면, 서부권(목포, 무안)은 광
주광역시 인근 지역을 제외할 때 거주 등 어려움이 많음.
- 이때 산업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은 농산어촌의 경우 지역소
멸과 맞물려 진행되어 아웃소싱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구체화
된 정책결정 필요에 대한 한계에 직면함.

- 순천시의 인구가 자연·사회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증가요인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간 연대와 협력에 대한 공감도가 큰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에 따른 지자체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러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자체의 유인 동기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기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민연경 박사)

1) SWOT 분석

구분		내용
내부	강점 (S)	① 인구정책 방향: 저출산 완화, 출산을 제고 · 민선 7기부터 현금성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워 경제적 부담경감 지원정책을 활발히 진행 중임 · 정책대상을 세분화하여 생애주기 맞춤형 체계의 구축 노력, 관련 예산액이 급증 ② 정책 분야: 여성, 청년, 귀촌, 고령, 인식개선 포괄 · 2021년에는 인구 유입 및 정착에 중점을 두어 청년, 귀농·어·촌 집단, 다문화, 외국인 4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 확대
	약점 (W)	① 청년층 순유출로 인한 인구증가 한계 · 서비스 업종에 5인 미만 사업체가 많아 코로나19 상황에서 육아휴직, 긴급돌봄 등 제도권 밖에 위치한 사람들이 많은 편임 ※ 강원도 취업자 모두 월평균 임금이 전국의 85% 수준이며, 여성은 임시근로자 비중이 약 70%, 근로 안정성 ↓ → 강원도 인구정책과: 저출산 정책의 현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 ②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일·가정 양립정책, 성평등 노동영역 미흡 · 일·가정 양립과 성평등 부분을 놓치고 있어 강원도 자체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필요

구분		내용
외부		③ 저출산 대응 전담부서: 실행기능 부재, 관련 부서 다원화, 위상 한계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인구정책팀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을 총괄(9개 팀 존재) · 2018년 주무실국을 기획조정실로 옮겨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조정 기능이 부족하여 강원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구, 저출산 정책의 추진기반과 중요도를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기회 (O)	① 인구 과소지역 압축 도시화로 수도권-비수도권의 양면대응 필요성 대두 ·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Two track 대응을 공표함 · (육아기본수당 사업 추진) 강원도 입장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영아수당이 공표되어 부담되었던 예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양면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고무적이라고 판단
	위협 (T)	① 코로나19로 인한 자녀돌봄 가중, 경력단절여성 확대에 따른 부정적 충격 ↑ · 산업구조 기반이 취약하고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임시근로자 비율이 높은 강원도 지역은 대부분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 제도권 밖에 위치하여 돌봄의 문제가 악화된 것으로 보임 ② 초고령화 진입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 저출산 대응 방향, 예산 마련에 대한 조정
주요 쟁점		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지향성을 반영한 저출산 대응 정책 지속 보완 및 발전 필요 ② 청년층 유출 방지 및 정주기반 강화를 위한 일자리 정책 강화, 장년층 유입 촉진을 위한 신증년 일자리 지원, 귀농·산 어촌 지원정책의 확대 필요 ③ 강원도 저출산 대응조직(인구정책팀)의 재구조화 · 현재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인구정책팀 구조의 기능과 권한은 인구정책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한계에 노출됨 ·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의 추진기반을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업무기능, 위상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기관별 QnA

○ (강원도) 조직개편 연구를 수행하는 중이며, 중앙정부에서도 인구 부 신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보사연에서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중인지요?

- 현재 '인구 모니터링 관련 과제'를 진행 중이며, 추후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진에게 공유할 예정임.
- 전반적으로 인구정책 관련 부서들의 위상이 낮고 인터뷰 진행 시 한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고, 책임감보다 잠깐 거쳐 가는 느낌이 강함.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 기본계획 등을 전달하는 체계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 이외의 영역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였기에 관련 영역의 거버넌스 및 인프라 측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광주전남) 협업 연구의 취지는 지역 간 네트워크와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의제를 구축하는 데 있음.

- 5개 기관에서 지역 인구 동태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 인구 특성, 정책환경의 SWOT 분석을 진행하였음. 다만, 기관별로 SWOT 분석영역에 차이가 있어 현재까지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분석범위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지자체 연구기관 모두 연구를 진행하며 탐색한 자료들을 연구진 간 공유하면 좋을 듯함. ex. 제1회 충북인구포럼(2021.7.14.)

□ 향후 계획

○ 3차 세미나: 10월 경 2차 세미나와 동일하게 웨비나(Zoom)로
진행할 예정

- MOU 건과 관련하여 인구정책연구실장님과 논의 후 각 기관
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내달 중 잠정적인 안을 공유할 예정
- 연구진 실시간 의견 공유를 위한 카카오톡 대화방 개설
 - 잔디 등 일정 관리가 유용한 플랫폼을 찾아 연구진과 공유하
여 개설할 예정
- 내용: 2차 세미나에서 분석한 지역별 인구 변화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및 정책과제/방향 제안
 - 향후 제안할 내용은 ㉠ 해당 지역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고
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영역의 우선순위, ㉡ 지역
입장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 중앙정부 및 위임
사무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바람직한 역할 등을 포함하여 주
시기를 바랍.

3. 지역별 인구 변화 관측 결과를 통한 제안(3차 세미나)

□ MOU 체결 및 종합세미나 관련 의견

1) 1부 행사: 협력 기관 간 MOU 체결

○ 1차 세미나부터 지역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소통체계 마련 및 협력 연구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MOU 체결을 논의 하였음.

-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이 모두 모여 MOU를 체결하고, 종합세미나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임.

○ MOU 일정 및 진행방식에 대한 의견

- (강원도) ‘MOU 체결 및 종합세미나’가 예정된 11월 하순에는 대체로 의회가 폐회된 시점이기에 기관장님의 참석이 가능하나, 가급적 행사 일정을 빠르게 확정하여 기관별로 안내해주시기를 요청함.
- (광주전남) 그동안 다른 기관과 MOU를 진행하며, 기관 간 협정 및 협약의 상징성은 확인하였으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관례를 경험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MOU 체결을 제안하였을 당시의 배경을 고려하여, MOU 체결의 의의를 되짚어봄으로써 MOU 협약서에 정형화된 문구가 아닌 각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면 함.

※ MOU 관련 진행 상황(10/12 기준)

- 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대외홍보팀과 MOU 문구 등 초안 작업을 진행 중임.
- ② 10월 말 MOU 초안이 완성되는 즉시 각 기관에 공유하여, 각 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MOU 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피드백 과정을 통해 진행할 예정임.

2) 2부 행사: 협동 연구 종합세미나

- 그동안 1~3차 세미나에서 논의한 사항을 요약 및 종합하는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인구변화 특성과 정책환경의 SWOT 분석을 수행하고, 그 지역의 진단 결과를 통해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종합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함.

○ 종합세미나 진행방식

- 실질적으로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이 중요하기에 종합세미나는 정형화된 방식보다 자유롭게, 일회적인 세미나보다 실효성 있는 형태로 진행하면 좋을 것임.

○ 종합세미나 내용 및 발표 주제

- 하나의 주제 또는 영역을 세분화하여 발표하는 방안
 - (충북) 종합세미나가 진행되는 시기의 특성상 기존 논의에서 발전한 형태로 진행하였으면 함.
 - (경북) 각 기관이 10분씩 발표하여도 1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금까지 세미나에서 논의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들을 제안 및 협의하는 자리로 구성하기를 바람.

- (광주전남) 올해 각 지역에서 고민 중인 인구감소 영역에 대한 현안과 쟁점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발제하거나, 향후 협력 연구 주제를 제안하는 토크(talk)쇼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함.

※ 종합세미나 잠정(안) 기준

- ① 내용: 지역의 인구변화 특성, 정책환경(정책 추진/재정 여건, 지자체 조직(연계-협력 정도) 등)에 대한 SWOT 분석 수행, 해당 지역의 SWOT 분석 결과를 정교하게 구분하여 현재의 인구변화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 인구변화 진단 결과를 통한 향후 연구 및 정책과제 제시
- ② 주제: 지역별 인구변화에 따른 긴급 현안과 대응 현황, 정책 개선사항(중앙정부 건의, 협력 요구 등)

□ 기관별 QnA

○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 (광주전남) 협업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가 느슨하게라도 작동해야 추후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어, 느슨하더라도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함.

○ 주관기관의 연구 체계 변경으로 인한 협력 연구 추진의 지속성

- (경북 및 충북) 올해 수행 중인 협력 네트워크 연구와 유사한 성격의 연구가 내년에도 계획 중인지, 그동안 MOU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 연구를 추진한 경험이 있는지요?
- 현재 수행 중인 기관 간 협력 연구가 내년에도 연계하여 진행된다면, 앞서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1~3차 세미나에서 도출된 결과 및 이슈들을 간략하게 제안하고

토크(talk)쇼 형식으로 내년에 어떤 형식으로 협력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세미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종합 정리

○ MOU 체결 및 종합세미나 관련

- 각 지역별로 마주한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회적으로 본 연구에서 모두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모든 기관에서 전반적으로 공감함. 이러한 공통된 문제의식 하에 각 지역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돈독히 하는 차원에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연구를 지속할 예정임.
- MOU 체결
 - MOU는 공동 연구, 자원의 공유, 인적인 교류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하며, 대표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생산한 양적인 데이터를 공유한다거나 지역 연구기관의 자원을 교류한다는 등의 내용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따라서 MOU 협약서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상호 고민이 필요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입장 외에 각 기관의 입장이 협약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서 어떠한 문구들을 협약서에 반영하고 싶은지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면,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조정할 계획임.

- 종합세미나

- 각 지역별로 마주한 현안 및 대응방안에 대해 관련 쟁점들을 명확하게 살펴보려는 취지에서 종합세미나의 제목을 잠정적으로 '지역 인구변화 대응 중앙-지방 상생 기반 구축 방안 모색'이라 정하였음.
- 종합세미나에서는 1~3차 세미나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해당 지역의 인구 현황과 문제점, 정책 추진 현황 등을 간략히 포함하여 그 지역에서 중점 현안으로 생각하는 것에 집중할 계획임.
- 종합세미나를 위한 주제를 새로 발굴하는 것이 아닌, 1~2가지 쟁점에 대해 '◇◇ 지역의 현황은 이러하며, ◇◇ 지역에서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형식으로 각 기관에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종합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견 종합

- ① 2022년에도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연구책임자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참여하는 협력 기관은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이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향후 연구책임자의 보직이 바뀌어도 지역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필요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지만, 참여 연구기관은 매년 사업의 특성상 조금씩 변경될 수도 있음. 전국의 연구기관과 한 번씩 계속 순회하며 순차적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 ‘지속적인 연구 체계 구축’이 각 기관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의 체계가 변화하여도 다음 담당자가 연계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② 종합세미나에서 그동안 논의한 내용들을 모두 다루기에는 다소 촉박함.

- 동일한 성격의 협력 연구가 계속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종합세미나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논의하고, 차후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종합세미나의 구체적인 안을 조만간 각 기관에 공유할 계획임.

□ 향후 계획

○ MOU 체결 및 종합세미나 관련 수정(안) 공유 예정

- MOU 초안은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외홍보팀과 함께 작성 중이며,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각 연구기관에 회람할 예정임.
- 앞서 공유드린 잠정(안)을 토대로 진행하되,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가 확정되면 각 기관별로 기관장님께서 참석 가능하신지, 그리고 참석자의 범위와 희망하시는 토론자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측에 회신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4. 지역인구 변동 이슈 고찰과 대응 현황 및 개선과제(종합세미나)

□ MOU 체결 및 종합세미나 관련 의견

1) 1부 행사: 협력 기관 간 MOU 체결(양자협약 형태로 진행)

○ 한국 사회의 인구변동은 매우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특성이 상이하게 도출되고 있음.

- 2020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7개 지자체 연구기관을 순회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이를 계기로 지역의 인구 문제는 지방소멸 담론의 확산 이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정책의제가 됨.

구분	내용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 강원도는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 최근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새롭게 쟁점으로 부각되었음. · 강원도 의회에서는 육아기본수당의 지속을 의결하였고, 강원도 재원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함에도 효과성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경북 여성정책개발원	· 경상북도 역시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 과제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한 걸음 내디뎠다고 판단함. · 저출산 방지, 예산 투입 차원에서 Two-track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희망함.
광주전남연구원	· 인구 문제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이 분야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은 매우 작은 상황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그동안 국내외 수많은 MOU를 체결했으나 내실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MOU 추진 시 내실을 가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구분	내용
	· 인구 문제가 한 세대를 내다 보지 못하고 매몰된 경향을 보여 성찰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호혜적인 관계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 2부 행사: 협동 연구 종합세미나(토론 중심)

① 지역 인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향후 방향성 정립에 대한 논의(중앙정부의 역할 포함)

- (김종훈 연구위원) 최근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장 및 지역 차원에서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자 노력 중임. 이러한 인구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에 아쉬움이 있음.
- 균형발전센터 등 많은 기관들이 존재하지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전체 합계보다는 인구 유출에 방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음. 특히 지역 간 유출은 Zero-sum 게임 형태로 나타나며, 정책으로 연계되지 않고 지역에서 먼저 구현되는 경향이 있음.
- 최근 지역 인구 관련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시적 측면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살펴본 이 연구는 적시성 있다고 생각함.
- 각 지역마다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지역의 특성과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도 함. 지역별로 청년 인구의 유출에 공통된 관심을 보이거나, 출생과 청년, 고령 등을 강조하는 지역도 있음. 이는 지역별로 인구 문제에 대해 인지하는 문제

의식은 동일하나 접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단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함.

- 중앙정부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의 도출이 어렵다는 점이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음.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은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인데, 지역별 경쟁이 심한 정책은 정책의 효과성이 얼마나 파악될지 의문이 제기됨.
- 특히 중앙정부의 현금성 지원의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각 지역별로 중앙정부에 대해 아쉬움이 있는 공통된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음. 향후 이에 대해 구체적인 도구와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면, 이 연구는 가치 있고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 판단함.
- 지역의 불균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나타남.
- 인구 이동은 좋은 일자리, 정주여건 고려 시 지역 내 유출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초점과 분업’의 결합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임.

② 사회복지 전달 체계 측면에서 제안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 논의

- (김희성 부연구위원 의견) 중앙정부는 지역 문제에 절박하지 않은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는 관료들의 성향과 인접 부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등) 모두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낮은 수직적 거버넌스 제도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임.

- 향후 이 연구의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제안하기 위한 2가지 방법은 크게 ‘기존 정책을 개선하거나, 지역의 공통된 의견을 정리하여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즉, 국가와 시·도, 시·군·구 차원에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한편, 사회적 유출이 심한 지역에 정주하는 이들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 머무르는 것인지, 긍정적인 outlier를 탐색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보장과의 고리를 마련하여 지역에 애착을 형성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미흡한 소프트웨어를 보완하고, 더 나아가 세부 정책 설계 시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손에 잡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기관별 QnA

- (경북) 이 연구는 각 지자체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정책 제안을 할 것인지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됨.
- 급격한 ‘저출산·고령사회’의 진행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현황을 진단하고 현장감 있는 정책 제안을 위해 시·군 의회/지자체 차원에서 논의하는 장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 20대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향상이 1순위가 되어야 하지만, 지역별로 정주여건의 형태는 상이함. 향후 과제에서는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하는 장으로 구성하기를 제안함.

○ (부산) 지방세 감소로 인해 기업이 움직일까?

- 균형발전 측면에서 공기업 등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가족이 모두 이동하거나 본인 혼자 근무지로 이동하고 가족은 서울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음.
- 부산은 서울과 가장 거리가 먼 곳으로, 충북까지 수도권이라 생각함. 이때 지방소멸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거리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임.
- 기업은 이전지역에서 지방세를 감소하여도 이전지역으로 내려가면 인재가 없어 서울에 있는 인재들을 데리고 이전지역으로 이동할 것임. 더욱이 이들은 혼자 이전지역으로 이동할 것이기에 인구 문제는 반복되는 양상을 보임. 단순히 혜택을 부여한다는 제안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어떻게 지역의 인재를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 인구 문제는 전체 생애주기를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종합 정리 및 향후 계획

○ (광주전남) 종합세미나는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의제를 구축하는 데 있음.

- 특히 연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중간 지원조직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그 결과 혁신도시인 빛가람동에서만 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였음. 비록 naive한 내용이지만 이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 과제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최종보고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해주시기를 요청함.

○ (박종서 인구정책연구실장) 올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지역에서의 인구 및 정책의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각 지역에서 주로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음.

- 지역별로 핵심 쟁점을 2~3가지 정도 뽑아 대응 현황을 정리하고 이후 과제 등을 요청하는 전반적인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음.
- 이를 통해 자료를 취합한 후 정부 부처와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및 추가 제안을 진행하고자 함. 특히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접 위원회(균형발전위원회, 자치발전위원회)에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최종 보고서 집필 시 대응 과제 등 지자체 수준 및 중앙정부에 기대하는 과제들을 반영해주시면 좋을 것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인접 위원회의 과제들에서 현재 부족하고 구체화되지 않은 점은 무엇인지 연구기관 입장에서 의견을 주시기를 요청함.
- 12/10(금) 기관계약이 종료되므로, 최종보고서 작성 관련 가이드라인을 빠른 시일 내 공유할 예정임.

[부록 2] 종합세미나 발표자료

1.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국책-지자체 연구기관 협동연구

강원도 인구변화와 저출산 대책 향후 과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목차

- | | |
|---|-------------------------|
| 1 | 강원도 인구변화 특성 |
| 2 | 강원도 저출산 정책환경 주요 특성 및 쟁점 |
| 3 | 저출산 대책 향후 과제 |

1. 강원도 인구변화 특성

3/19

강원도인구연구원

1) 강원도 시군 '인구소멸위험지역' (2020.5.기준)

■ 2020년 강원도 18개 시군 중 15개 '인구소멸위험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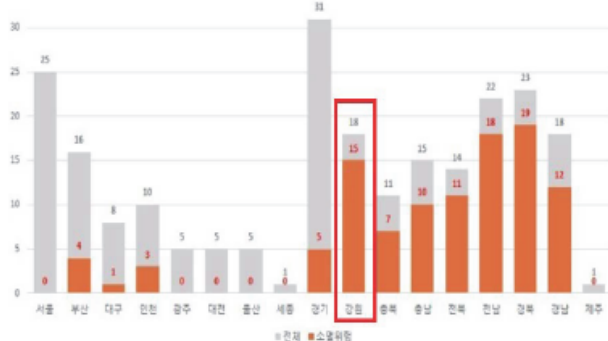


4/19

강원도인구연구원

2) 전국 대비 강원도 '인구소멸위험지역' (2020.5.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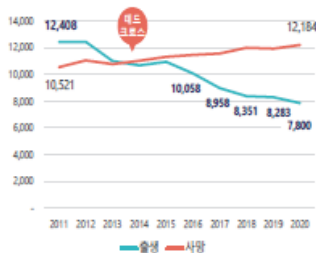
■ '인구소멸위험지역' 비율 : 강원도(83.3%) > 경북(82.6%) > 전남(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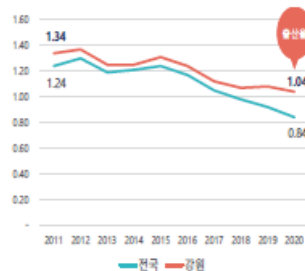
5/19

315페이지

3) 최근 10년 강원도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추이



인구자연 감소(출생-사망) 지속
 '14년 인구 데드크로스 발생
 '20년 출생아수 : '11년의 2/3 수준
 '17년 출생아수 1만명 무너져



전국대비 높은 출산율
 '20년 강원도(1.04명) > 전국(0.84명)
 최근 10년 동안 강원도 출산율, 전국보다 높아

6/19

315페이지

4) 전국 대비 강원도 합계출산율

■ 2019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시행(19년 태어난 아이 대상 월 30만원/48개월 지원)

2019년 합계출산율 전국 유일 증가('18년 1.07명 → '19년 1.0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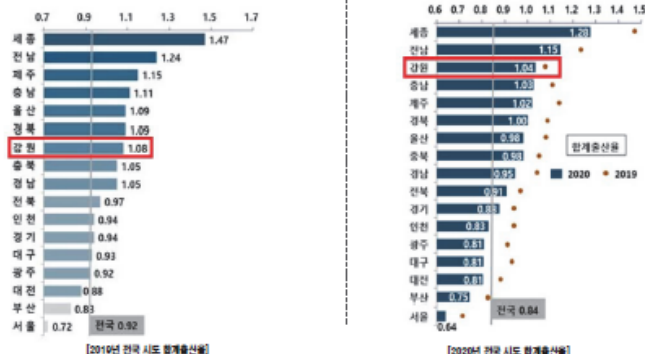
7/19

185%145%

4) 전국 대비 강원도 합계출산율

■ 2020년 강원도 합계출산율 순위 상승('19년 전국 7위 → '20년 전국 3위)

■ 2020년 강원도 합계출산율 감소폭 가장 낮아('19년 1.08명 → '20년 1.04명/-3.8%)



8/19

185%145%

5) 인구유출과 유입

A 청년여성 인구유출

- (1) 20년 시도간 순유입 인구 5,457명
- (2) 연평균 20년 청년인구에서한
4,829명 순유출
- (3) 최근 10년 20대 청년여성
순유출 인구, 남성보다 약 1.5배 많아

B 외국인주민자녀, 결혼이민자

- (1) 20년 도내 등록외국인
1만 7,332명
- (2) 외국인 10명 중 4명,
= 외국인주민자녀(19.2%),
결혼이민자(17.8%)

C 귀농어·귀촌인구

- (1) 20년 도내 귀농어귀촌인구
5만 6,100명, 13년 대비 약 2.1배 증가
- (2) 전국 귀농어귀촌인구 10명 1명
강원도 이주
- (3) 귀촌인구가 98.2%

9/19

강원도연구원

2. 강원도 저출산 정책환경 주요 특성 및 쟁점

10/19

강원도연구원

1) 강원도 저출산 정책환경 : 강점요인(s)

1

강원도 인구정책 방향 : 적극적인 저출산 완화, 출산을 대책마

2

민선7기 공약 및 2021년 강원도정 역점사업 : 저출산고령화 대응 기반

- 1) 민선 7기 공약 : 육아기본수당, 청년 취직 사회책임제 등
- 2) 2021년 강원도정 역점사업 :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실현
- 육아기본수당, 초등돌봄·다함께돌봄사업 확대, 여성·가족·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공동사회 조성

3

강원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정책방향 및 대상

- 1) 정책방향 : 4+1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추진
- 결혼→출산→양육→일·가정양립+청년 정주여건 기반 조성
- 2) 정책대상 : 여성과 청년, 귀농·귀촌인구 포함,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

11/19



2) 강원도 저출산 정책환경 : 약점요인(w)

1

인구변화 : 청년인구 순유출 증가 → 인구증가 한계점

2

취약한 산업구조

- 1) 높은 서비스업/5인 미만 종사자 비율 → 육아휴직 등 제도권 사각지대
- 2) 높은 여성 임시근로자 비율 → 근무안정성 낮음, 경제적 취약성 높음
- 3) 광역저밀 지리적 특성 → 보육시설 취약

3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지향점 : 일·가정, 성평등 노동정

조

4

저출산 대응 전담부서(인구정책팀) :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 및 위상

12/19



2) 강원도 저출산 정책환경 : 약점요인(w)

■ 컨트롤타워 위상 미흡

- 인구정책 전담부서 : 인구정책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인구정책팀
- 민선 7기 공약, 21년 도정 약속시책
- 3~4명 인력, 팀 단위 조직 위상 낮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3. 저출산 대책 향후 과제

15/19



1) 강원도 저출산 대책 향후 과제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방향 반영 강원도 저출산
보완

- 1) 출생아수 증가 뿐만 아니라 개인 삶의 질, 성평등 향상 초점 정책보완
- 2) 성공등한 돌봄과 성공등한 노동정책 2가지 지향성 요구

2

인구유입, 정주여건 강화 위해 청년과 귀농·귀촌인구 대상 세분화된
강화

3

강원도 저출산 대응 조직구조와 기능개편 방안 마련

- 1) 2021 강원여성포럼(2) "저출산 패러다임의 변화, 극복 아닌 완화"(2021.3.11.)
- 저출산 대책 적극 추진 및 부서 협력강화 위해 인구정책팀 기능위상 제고 필요
- 2) "저출산 완화" 미션 달성 효율적 정책도구로써 도정 비전과 목표, 핵심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행정 추진기반 강화 요구

16/19



2) 중앙정부 저출산 대책 향후 과제

1 중앙정부 인구정책 전담기구 설립

- 1) 정부 인구정책 전담부서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 및 위상 낮아 당초 설립 취지인 컨트롤타워 역할 미미
- 2)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기획재정부 법무처 인구정책 TF 기능 중복

2 중앙정부 차원의 저출산 개념 정립

- 1) 저출산은 사회적 현상으로 앞으로 1960년대 수준의 출산을 기대는 비현실적임.
- 2) 어느 수준까지가 저출산 인지에 대한 개념정립이 요구됨.

17/19



2) 중앙정부 저출산 대책 향후 과제

3 출산장려 관련 현금지원 적정수준 제시

- 1)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동수당, 양육수당, 2022년부터 영아수당 지급 발표
- 2) 출산지원금 지급 단위 : 기초지자체 → 광역시도(강원도, 광주, 충남 등) 확대
- 3) 20년 9월 기준 수도권 인구 50% 초과, 낮은 재정자립도 비수도권 수당지원사업에 대한 적정지원금액 가이드라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비 필요

4 저출산 정책유형별 효과성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공통의견 제시

- 1) 감사원(21)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현금성 수당 지원 포함 다양한 저출산 정책에 대한 효과성 미비 결과 발표 → 중앙정부 취지와 상반된 의견
- 1)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하지만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 검증 부족
- 2) 저출산 정책유형별 정기적인 효과성 검증과 범정부차원 공통된 의견제시 요구

18/19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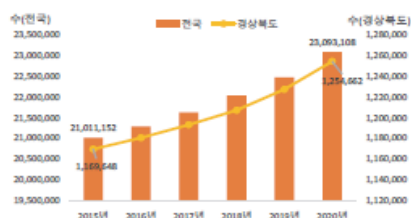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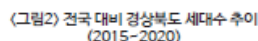
2.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 경상북도 인구 및 세대수 추이



〈그림1〉 전국 대비 경상북도 인구수 추이
(2015-2020)



1 경상북도 인구 및 세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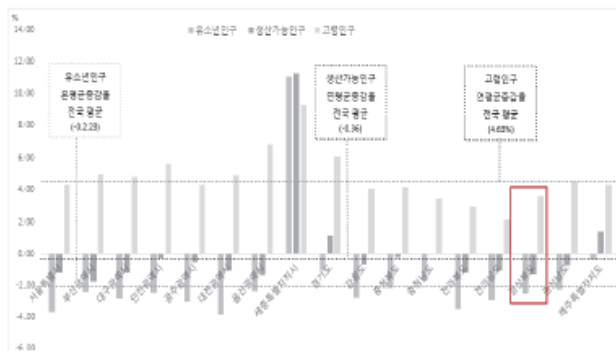


1 경상북도 인구 및 세대수 추이



〈그림5〉 경상북도 시군별 인구, 세대수, 1세대당 인구수 연평균증감율(2015~2020)

2 경상북도 인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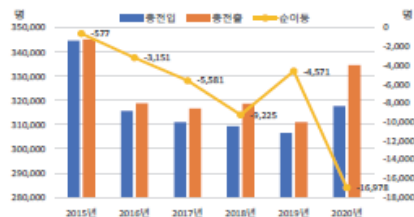
〈그림6〉 시도별 인구구성 연평균증감율(2015-2020)

2 경상북도 인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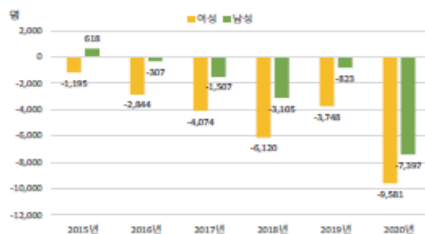


〈그림7〉 경상북도 시군별 인구구성 연평균증감률(2015~2020)

3 경상북도 인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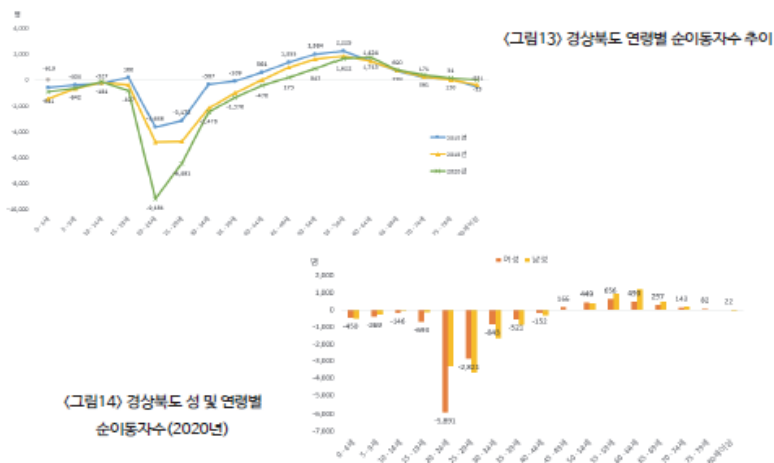


〈그림11〉 경상북도 전출입 및 순이동자수 추이



〈그림12〉 경상북도 성별 순이동자수 추이

3 경상북도 인구 이동



4 경상북도 산업구조 특성

최근 7년간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전체 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가

- 2012~2019년 전체산업의 사업체수가 199,547개에서 236,807개로 연평균 2.48% 포인트 증가
 - 금융 및 보험업은 0.25% 포인트 감소,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10.53% 포인트 증가
- 2012~2019년 전체산업의 종사자수는 966,347명에서 1,150,047명으로 연평균 2.52 포인트 증가
 - 광업은 0.63% 포인트,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08% 포인트, 금융 및 보험업 0.71% 포인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0.93% 포인트 감소

인구의 순유입 현상이 현저한 지역의 사업체 및 종사자수 연평균 증가폭이 경북 평균 상회

- 예천군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15.71% 포인트, 부동산업 11.32% 포인트 증가, 종사자수에 있어서는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17.91% 포인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83% 포인트, 부동산업 10.83% 포인트 증가
- 영천시, 경산시 또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연평균증가율이 경북 평균 상회

5 경상북도 인구정책

- 경상북도 인구정책 관련 제도 정비
 - 인구관련조례 28개, 규칙 4개, 규정 4개, 지침 1개
- 인구정책담당부서 1국 3과 12팀으로 구성

아이여성행복국

인구정책과	아이세상지원과	여성가족행복과
인구정책팀 지방소통·대응팀 0·넷사촌시정개발팀	돌봄정책팀 보육팀 아동복지팀 아동안전팀 청소년팀	여성정책팀 여성정책홍보팀 가족복지팀 다문화팀

- 경상북도 전체예산의 약 9%, 전년대비 증가
- 전년대비 아이여성행복국은 0.4% 포인트 증가,
이 가운데 인구정책과는 32.6% 포인트, 아이채생지원과는 0.78%
포인트 여성가족정책과는 1.9% 포인트 증가

주요 정책

- 인구정책면에서는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미래세대 인구교육을 비롯한 17개 사업을 추진 중
- 자립소멸대응면에서는 '경상북도 자립소멸대응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자립소멸대응정책포럼 등 3개 사업을 수행 중
- 이웃시촌시마을협력에서는 이웃시·촌 시·마을청년연출사업, 농·어촌지역인구유치·이주지원사업, 농·어촌지역인구유치·이주지원사업

2021 인구정책 관련 대표적인 자체 사업 현황

[illegible]

6 경상북도 인구 동태를 바탕으로 한 SWOT 분석

내부환경	외부환경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 지역의 특수성 고려한 자율성 확대책 마련 지원 - 성형외과에 대한 공공대입산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지구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 증대 - COVID-19이후 사회적경제전환	- COVID-19이후, 위험사회에 대한 불안 확산 - 각 경제/물류경제 등 형태의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 4차산업혁명에 대응되는 기술 확산에 따른 일자리변화 - 수도권으로의 지속적인 집중화
강점(Strength)	<div>S-O전략 (강점기반 기회활용)</div> <div>S-T전략 (강점기반 위협대처)</div> <div data-kind="ghost"></div> <div data-kind="ghost"></div>		
-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기비전 수립 등 정책 도정의 적극적 의지 -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35억) - 경상북도 연구정책 제도적 기반 구축 - 경상북도 청년 지원 관련 조례 제정 - 연구정책 전담부서 구성 및 예산 증가	- 중앙정부의 정책적 적극 활용, 국회비호 대응 -도시재생, 문화도시, 청년마을공동체기 지원사업 - 지역경제에 맞춘 연구정책, 자립소멸 대응 정책 시행 - 성형외과에 기반한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		
약점(Weakness)	<div>W-O전략 (약점기반 기회활용)</div> <div>W-T전략 (약점기반 위협대처)</div> <div data-kind="ghost"></div> <div data-kind="ghost"></div>		
- 지역적인 연구인프라 부족 - 유스인턴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험 현저 - 효율성보다 실효성 - 대부분이 연구유기 지역 - 조용인을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감소추세, 지역적인 자연인구 감소 - 순유입 인구 증가, 사회인구 현저	- 다지밀경제 및 청년구로 활용된 연구유입 전략 수립 - 생태 및 환경 중심한 지역발전전략 수립 - 가무양로, 남상진성 경북에서 생령 등 경북으로 전환		

7 정책환경 관련 주요 특성 및 쟁점

특성 및 쟁점

- ▶ 지역별 거점도시 육성 및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지역생활권 조성
- ▶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보편화, 4차산업혁명기술에 의한 산업 및 고용형태의 변화와 COVID-19에 따른 가속화 대처
- ▶ 초고령사회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합의점 모색



정책방향

- '인구늘리기' 주요어젠다책정
- 인구감소, 인구고령화정책 위한 중장기 비전 및 과제
- 인구소멸위기지역대응정책
- 미래의산업구조및일자리전망 고려한 정책

8 경상북도 인구감소,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지역 대응 방향

1. '인구늘리기' 주요 어젠다 책정

- 경상북도 대부분의 시군에서 인구감소 경향 현저, 세대수는 증가 추세
- 인구분포에 있어 지역간 격차 심화

과제1 인구정책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경북도 조직 개편



과제2 경북 인구정책 거버넌스 구축

8

경상북도 인구감소,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지역 대응 방향

2. 인구감소, 인구고령화 정책 위한 중장기 비전 및 과제

- 최근 5년간 조혼인율·조출생율·합계출산율 감소, 조사망율 증가
- 2020년 현재 자연감소 현저
- 여성 30대 이하 순유출 및 60대 순유입 증가

과제3 시군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제4 인구정책플랫폼 구축

과제5 인구의 사회적 증가 축진을 위한 장기 정책과제 마련

순유출심화지역

포항시, 구미시, 영주시, 영암군, 고령군

순유입지속지역

영천시, 경산시

과제6 청년 및 자녀양육 세대 수요에 부합하는 주거환경 조성 대책

과제7 '관계인구'에 주목한 도농상생 활성화 정책

과제8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

8

경상북도 인구감소,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지역 대응 방향

3. 인구소멸위기 지역 대응 정책

-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 현저
- 전체 시군의 83%가 초고령 사회

과제9 인구위기 대응 중장기 로드맵 구축

과제10 시군별 공공·생활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과제11 '콤팩트 도시' 추진

과제12 촌촌한 돌봄안전망 구축

과제13 텔레워크 희망자 지원 정책

과제14 문화여가활동 기회 제공 정책

과제15 빈집 실태분석 및 활용 방안 마련

고위험지역

• 군위군, 영암군
영안군, 봉곡군

위험진입지역

• 경주시, 김천시,
영천시, 영주시,
영천시, 영주시,
영주시
• 영암군, 영덕군,
영도군, 고령군,
영주군, 예천군,
영진군, 봉곡군

우회지역

• 포항시, 경산시
• 김천군

경상북도 인구감소,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지역 대응 방향

4. 미래의 산업구조 및 일자리 전망 고려한 정책

- 최근 7년간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전체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가
- 인구의 순유입 현상이 현저한 지역의 경우, 최근 7년간 사업체 및 종사자수 연평균 증가폭이 경북 평균 상회

과제16 경북 미래 일자리 전망을 위한 과제 수립

생산성 증가를 통한 생산가능 인구 부족 문제 대응

서비스업 확대 및 고부가가치화 가능성 제고

기술진보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비중 증가

고령층 관련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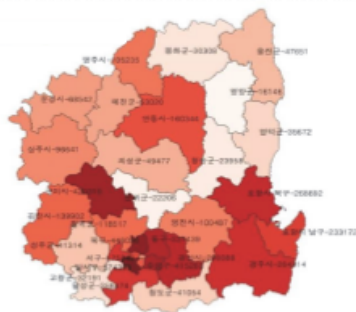
기본소득 등 사회적 이익 재분배

불안정한 고용환경 개선 및 사회보장 강화

평생교육 활성화

사회적경제 관련 인식 확산을 위한 인구

감사합니다



전남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한 『문헌』 2011년 4월호

3. 광주전남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지자체 연구기관 협동연구 종합세미나
2021. 11. 30(화) 14:00

초저출산고령화 속 전라남도 현안과제와 전환적 대응정책 제안

2021.11.30(화)

광주전남연구원

민현정 책임연구원(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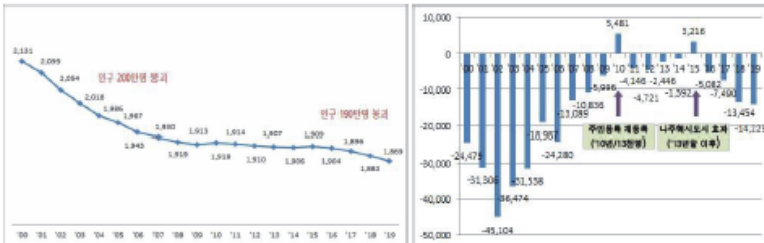
목 차

- 1 전라남도 인구 현황: 인구구조변화와 지역쇠퇴
- 2 전환적 대응 정책: 특별법 제정, 신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보장
- 3 새로운 지역 설계와 정책 개발 제안

1 전라남도 인구 현황

I 전라남도 인구 현황

- ✓ 2021년, 전남 인구는 1,840,921명(전국 3.6% 수준)으로 지난 2004년 인구 200만명 붐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 2000년 이후 약 26만명 감소 (2010년과 2015년 전년대비 증가, 주민등록 재등록 및 혁신도시 일시효과)
- ✓ 2012년 초고령사회 진입, 2013년부터 **데드크로스** 발생으로 자연감소세 가속화
(전남은 '12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년 현재 23.7%, 초고령화 지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부산)
- ✓ 20~30대 청년 유출 심화: 전출인구 9,685명, 전입인구 88,069명, 순이동 - 8,788명, 40대 미만 순유출, 40대 이상 순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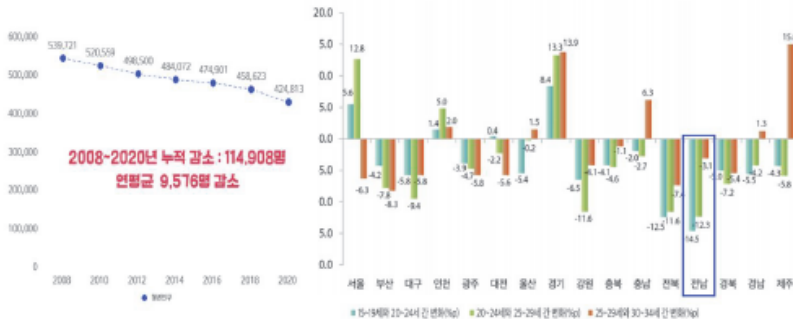
자료: 전남 인구추이(2000~2019), 전라남도, 2020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I 전라남도 인구 현황

✓ 전남지역 청년(424,813명, 22.9%, 2020)의 사회적 유출 : 대학진학과 취업 시기에 청년인구 대규모 발생

✓ 대학진학 시기: 20~24세 청년인구 감소 - 15~19세 시점과 비교할 때 -14.5%

✓ 취업 시기: 25~29세 청년인구 감소 - 20~24세 시점과 비교할 때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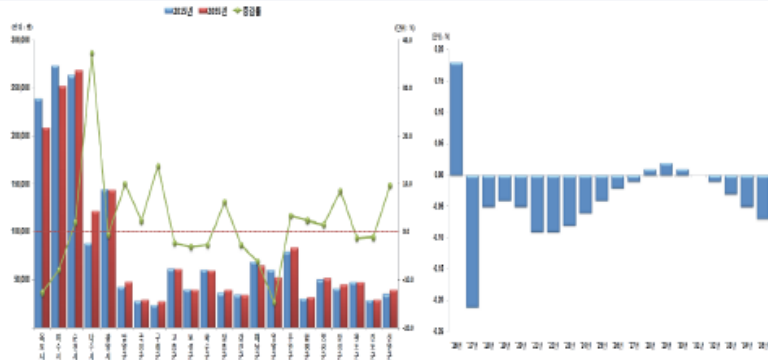


15

I 전라남도 인구 현황

✓ 전남 인구는 매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전망

✓ 2017년 대비 2037년 인구가 증가하는 지자체는 순천, 나주, 담양, 곡성, 구례, 장흥,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신안 등 11개, 나머지 11개 지자체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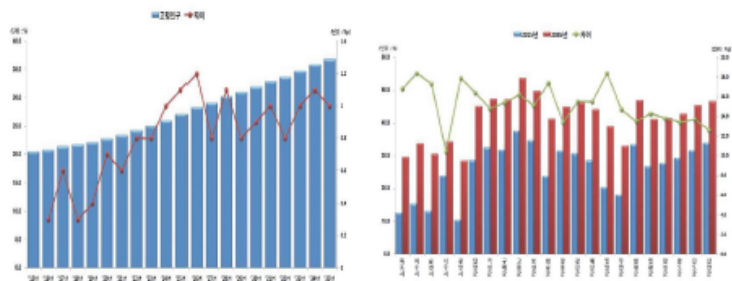


자료: 전남 시군별 인구추계 결과(2017~2037), 전라남도 시군별 장래인구특별추계 보고서, p.26, p.29

16

I 전라남도 인구 현황

- ✓ 전남은 2012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 고령화율이 36.9%에 달해 2015년 대비 16.3%p 증가할 것으로 추계
- ✓ 인구추계 결과 여수시는 2022년, 목포시와 순천시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28년 광양시를 마지막으로 22개 모든 지자체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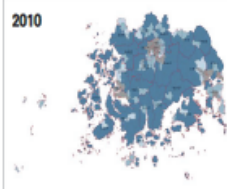
자료: 전남 시군별 인구추계 결과(2017~2037), 전라남도 시군별 장래인구특별추계 보고서, p.47

17

I 전라남도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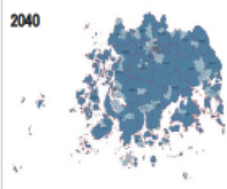
패러다임 변화

- 경제 성숙 단계로 진입하면서 성장세 하락, 사회 안전망 미흡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양극화 현상 발생
-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패러다임이 변화



전남 범례(Total : 295개소)

1.0 이상	소멸 저위험 지역 (34개소)
1.0 미만	소멸 주의 지역 (34개소)
0.5 미만	소멸 위험 지역 (37개소)
0.2 미만	소멸 고위험 지역 (190개소)



전남 범례(Total : 297개소)

1.0 이상	소멸 저위험 지역 (0개소)
1.0 미만	소멸 주의 지역 (1개소)
0.5 미만	소멸 위험 지역 (67개소)
0.2 미만	소멸 고위험 지역 (229개소)



〈문화여가 지출률〉



〈1인당 여행일수〉

18

I

전라남도 인구 현황

전남 인구 감소 시나리오



○ 현재 인구특성 지속, 2040년 150만 붕괴 가능(서울대, 2018)

19

2

전환적 대응 정책

정책 전환적 시각, 제도, 균형발전, 삶의 질

II

전환적 대응 정책 (정책적 시각)

✓ 국가 차원의 규모 중심, 인구유출 제로섬 게임의 인식 전환

- 국가 차원에서 총인구를 유지하는 전략에 포커스를 둔 출산율 제고정책의 한계
- 지방 인구문제는 **저출산보다 사회유출에 기인**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중소도시 농촌에서 대도시로의 사회적 유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기

✓ 인구구조의 불균형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시각에서의 대책 마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개발 및 자연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농어촌 정비법, 귀농귀촌, 성장촉진지역 정책의 한계
- 정부의 인구구조변화 적용력 강화 정책: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완화, 복지지출증가관리, 고령인구 증가 적용
-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지원 한계가 분명. 국가인구정책과 지방인구정책의 고려 인식과 대응

✓ 지방 인구유지와 동력 찾기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법제도 마련 필요

- 지역인구 위기대응을 위한 젊은 연령층 유입 촉진 지원
- 지역 성장과 공간적 재편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책 마련 필요

11

II

전환적 대응 정책 (특별법 제정)

① 추진 배경과 경과

✓ 새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적 정책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국토불균형과 지방소멸
기존 제도의 한계, 지방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

✓ 추진경과

-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발의(강석호, 17.6.30)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 지역활력특별법안 제정 추진
-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발의 (서삼석, 20.6.01)

- 전남-경북 상생교류 협약 체결, 특별법 제정 협의 19.12
-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 20.3~9
- 자문단 구성운영 20. 6
- 특별법제정 공론화 전문가 정책토론회(서울) 20. 7.29
- 특별법 제정 공청회(국회) 20. 8. 18
- 국회의원 발의 20. 9

(전남)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 9. 2. 28명 공동발의)

(경북)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20. 9. 1)

12

II

전환적 대응 정책 (특별법 제정)

지방소멸위aggi지역 지천 특별법 제정 연구 중 발췌(2020.09)

2 특별법 주요 내용

✓ 지방소멸위aggi지역의 인구, 경제, 공간의 활력 촉진에 중점

- ‘지방소멸위aggi지역’은 단순히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인구감소대응대책이 시급한 지역을 의미
- 즉,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가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서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어 타 지역에 비해 **살의 질** 수준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
- 지방소멸위aggi지역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사람)활력, 경제활력, 공간활력을 도모
- 새로운 인구의 유입촉진 및 지역활력 촉진, 지역활력산업 육성 및 경제산업 활력회복, 공간혁신 및 정보통신 등 신기술 접목으로 인구회소를 상쇄할 수 있는 시책의 지원에 중점

✓ 국가의 지원체계

- 국가 지방소멸위aggi지역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지방소멸위aggi지역 지정 및 특별대책 수립
- 범부처별 패키지 지원
- 지방 종합전략 마련을 위한 행정정책 인센티브 제공

I 13

II

전환적 대응 정책 (특별법 제정)

지방소멸위aggi지역 지천 특별법 제정 연구 중 발췌(2020.09)

2 특별법 주요 내용

비전	인구감소사태의 포용적 성장 및 주민 삶의 질 증진	
목표	지방소멸위aggi지역의 활력촉진	
추진 전략 및 과제	인구활력 촉진	① 새로운 인구유입 및 정착 지원 ② 육아·돌봄·교육·의료·여건 증진
	경제회복 촉진	① 지역활력산업 육성 및 소득증대 ②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공간혁신 창출	① 스마트 생활환경구축 ② 커뮤니티 혁신공간조성
기반 구축	특별법 제정	통합 추진체계 구축
		재정지원 및 특례마련

I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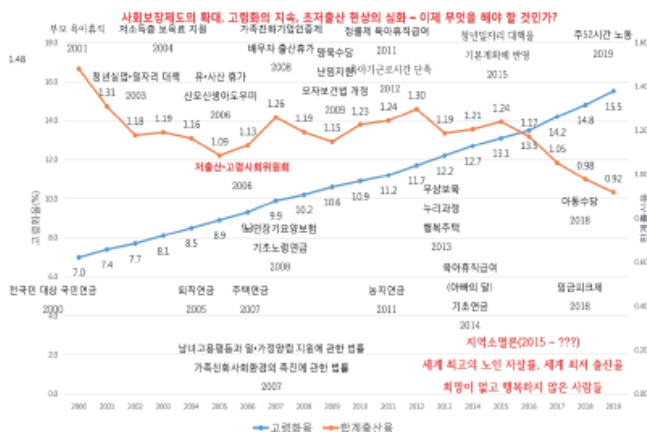
II 전환적 대응 정책 (특별법 제정)	
1. 인구활력 증진 ✓ 지방소멸위aggi지역 주민의 주거지원강화 ✓ 비농어업인 이주정책 지원 ✓ 지방소멸위aggi지역 거스를 둔 사람에 대한 특례 적용 ✓ 지방소멸위aggi지역 교육재정에 대한 특별 지원 ✓ 지방소멸위aggi지역 특성출 반영한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지원 ✓ 지방소멸위aggi지역 맞춤형 의료시스템 구축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2. 경제회복 촉진 ✓ 지역활력산업 지원 (내생적 지역활력산업 육성 등) ✓ 지방소멸위aggi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 ✓ 국책사업 유치 (공모심사시 가점 부여, 지방비 부담비율 축소) ✓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 청년 일자리 지원 (지역정책형 일자리 사업지원, 창업지원 등) ✓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지원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3. 공간혁신 창출 ✓ 지방소멸위aggi지역 활성화 구역 지원사업 ✓ ICT 활용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 지역간 연계 네트워크 지원 ✓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편의 제공 ✓ 지역 공공서비스시설 기능복합화로 효율성 증진 ✓ 지역유흥시설의 활용 ✓ 문화예술시설 확충 주민문화예술 향유권 증대	4. 재정지원 방안 ✓ 국고보조사업의 자동보조율제도 도입 ✓ 지방소멸위aggi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강화 ✓ 지방교부세 특례제도 도입

115

II 전환적 대응 정책 (신규형발전)	
“지역주도” “정책과 사업 실행력” “정부간 연대와 협력”	
1. 네트워크형 공간조성 ✓ 네트워크 발전전략, 지방성장 잠재력 극대화 • 경제거점 - 중추혁신도시 지역별 혁신성장 거점 • 생활거점 - 중소도시 생활인프라 집중 • 농산어촌 - 생활SOC 접근성 개선, 삶의 질 보장 ✓ 광역교통망 확충 ✓ 중추거점도시의 도심융합특구화, 혁신도시시존2 ✓ 농산어촌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사업	2. 초광역협력사업 ✓ 지역주도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추진 • 프로젝트 지속발굴과 지원 ✓ 법적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 군특법 개정, 초광역 발전계획 수립절차 규정, 예산제도 개선
3. 지방대학 혁신 ✓ 지역대학 육성 및 역할정립 등 근본적인 변화 필요 • 지방대학 집중 육성, 대학간 자원역량 공유 등 협력체제 • 지역수요 및 산업에 대응한 맞춤형 인력양성 ✓ 수도권 주요대학 수준 지역대학 집중 육성	4. 지역균형뉴딜 ✓ 균형발전지표 활용 인구감소지역 차등가점 부여 ✓ 지자체 주도 지역균형뉴딜사업 추가발굴과 국비지원 ✓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적극 발굴 • 일자리, 주거, 생활문화 융합으로 지역정착 유도 ✓ 군특법 개정을 통한 지역균형뉴딜 지원근거 마련

II 전환적 대응 정책 (주민 삶의 질)

- 2000년 이후, 사회보장제도 확대, 고령화 지속, 초저출산 심화와 제도 확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대연대포럼 자료 인용(2021)

117

II 전환적 대응 정책 (주민 삶의 질)

- 초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전환적 정책 설계

✓ 정책의 구조적 대응을 위한 협업

- 저출산 요인에 대한 구조적 대응 필요성 인식, 정책간 협업 강화

✓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택과 집중

*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구조에 적응하는 사회시스템 마련*

✓ 정책의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정책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

✓ 출산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지속, 장기적으로 주거인프라 일자리 등에 노력, 사회구조적 접근을 통한 근본적 출산지원

지자체의 재정안정성과 현금지원 정책의 균형 필요

✓ 협력방안 - 광역지자체는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시·도 단위의 위원회 구성, 인구영향평가 등 담당, 기초지자체는 지역주민 밀착형 정책개발과 시행에 주력

118

3

정책 제안

새로운 지역 설계와 정책 제안



정책 제안(새로운 지역 설계와 정책 제안)

- ✓ 지역인구 정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 단순히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만으로 지역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한계
- ✓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재정·세제 등 다양한 지원정책 수립해야...**
- ✓ 인구과소지역을 지역 실정에 맞춰 생활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의 시의성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입법과 제도 개선**

“신국가균형 전략과 지속가능한 지역 설계”

- ✓ 지방소멸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인구유출 완화와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 ✓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설계는 지자체간(광역, 준광역) 협력적 대응으로 마련**



정책 제안(새로운 지역 설계와 정책 제안)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마련과 계속 거주 환경 조성”

- ✓ 지역인구의 증감은 그 자체가 독립변수가 아니라 이를 끌어들이거나(pull factor) 다른 지역으로 이탈시키는 요소(push factor)인 **지역의 매력도**에 따라 결정되는 속성을 보유
- ✓ **지역의 매력도**는 **일자리, 교육, 주거, 의료, 문화, 양육환경, 자연** 등 다양한 영역
- ✓ **다극체제형 균형발전: 네트워크형 공간조성, 초광역협력사업, 지역대학혁신, 지역균형뉴딜**
-중추도시-거점도시-주변도시-농산어촌을 잇는 전략
- ✓ 지방의 인구활력을 촉진할 지역정책- 지역인구활력 촉진 지원시책
- ✓ **지자체간 협력적 대응: 광역-준광역 차원의 균형성장 아젠다 발굴과 실천**
- ✓ **관계인구, 기업본사 지방이전, 고향사랑기부금제 등의 적극적 검토와 제도 마련**

예시) 현재의 예비타당성제도, 보조금제도, 공모방식은 전면 재검토가 우선적 필요

I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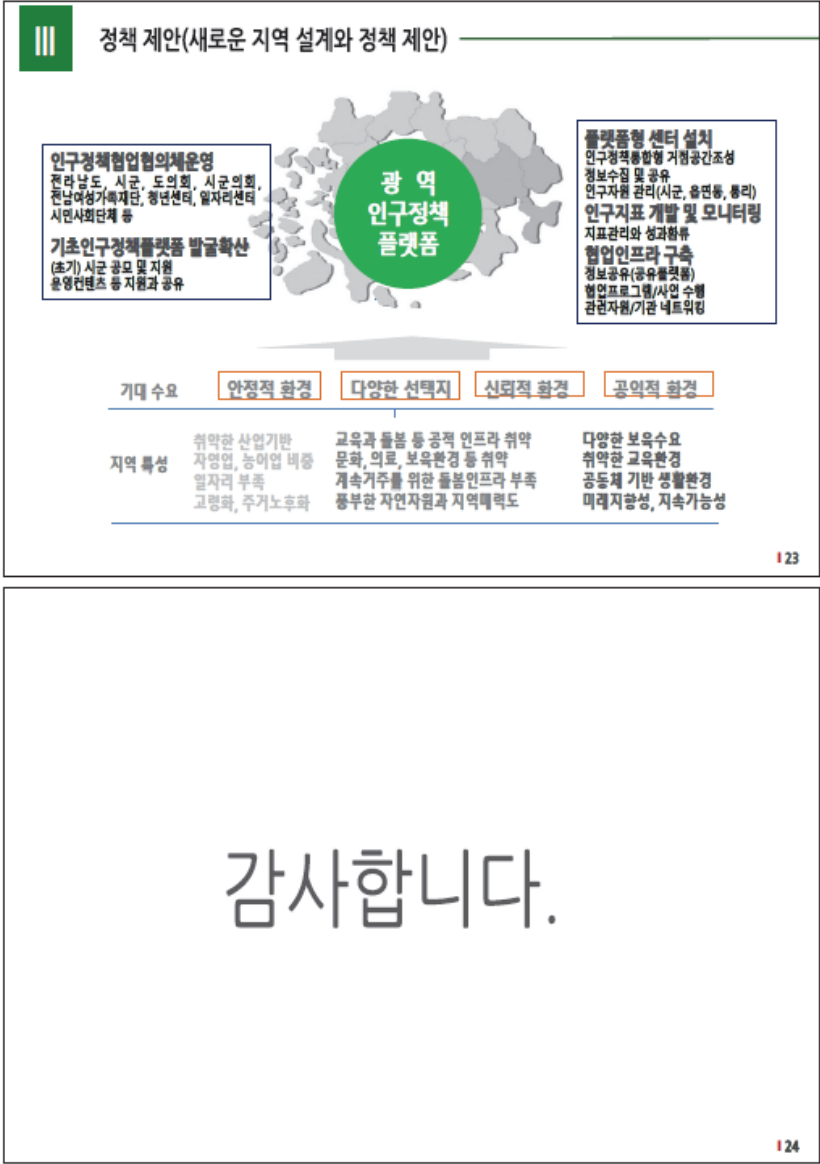


정책 제안(새로운 지역 설계와 정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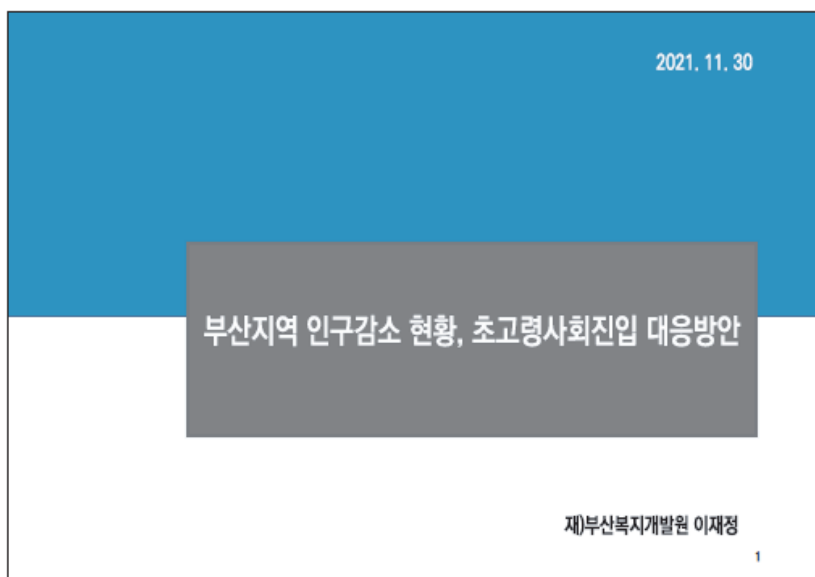
“정책 협업과 인구 거버넌스, 생애주기 맞춤형 패키지 지원”

- ✓ **지방정부 정책의 구조적 대응을 위한 협업**
“저출산과 사회적 유출에 대한 구조적 대응, 필요성 인식, 정책간 협업 강화”
-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우선순위 도출, 선택과 집중이 있는 “지역혁신 인구거버넌스”**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구조에 적응하는 사회시스템 마련”, “체감적이고 지지 받는 정책에의 집중”
- ✓ **정책의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지속 반영**
“정책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선 방안 마련”, “정책 시의성과 실효성 진단과 평가”
- ✓ **지자체의 재정안정성과 현금지원 정책의 균형 필요**
- ✓ **본질적 지원사업을 수요자 생애주기에 맞춰 패키지형으로 지속 지원**
- ✓ **광역과 기초 협력방안**- 광역지자체는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거버넌스체계, 시범사업, 인구영향평가 등 기초지자체는 지역주민 밀착형 정책개발과 시행, 지역 애착형성에 집중

I 22



4. 부산복지개발원



목차	1. 연구목적 2. 부산시 인구 변화 3. 생산인구급감, 빠른 고령화 4. 부산시 인구 향후 추계 5. 부산시 인구관련 사업 현황 6. 부산시 인구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7.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8. 부산시 초고령사회 현황 9. 부산시 초고령사회 비전 10. 초고령사회 비전 주요 내용 11. 사업추진의 한계
----	---

연구 목적

1.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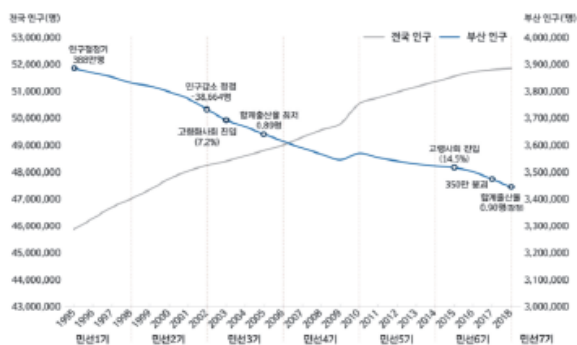
- ✓ 부산지역의 지난 10년간 인구 변화와 원인 파악
- ✓ 인구유출의 경향성 파악
- ✓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대안
- ✓ 초고령사회(21.9월)에 따른 대응 방안 등 마련

3

부산시 인구 추이 변화

전국 및 부산광역시 등록인구추이(1995~2018)

전국 인구는 증가율은 둔화되어도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부산시 인구는 1995년 388.3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350만명 이하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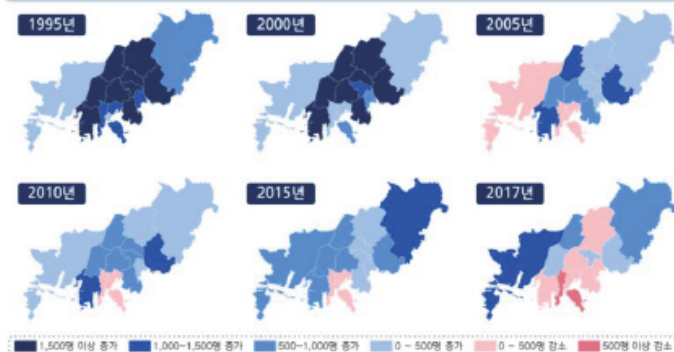


4

부산시 인구 추이 변화

부산지역 내 출생률 감소 심화

- 2000년 이후 부산 지역 내 대부분의 자치구 인구 자연증가 규모 감소
- 2017년 영도구, 중구, 동구, 서구, 금정구 등 중부산권 전역 자연 감소 전환(출생아수<사망자수)



5

부산시 인구 추이 변화(2011~2020)

구분	순이동자	경남		수도권		기타지역		참고(수도권 도시별)		
		순이동자	비중	순이동자	비중	순이동자	비중	서울	인천	경기
전체연령	-206,085	-93,216	-45.2%	-85,318	-41.4%	-27,551	-13.4%	-49,653	-4,770	-30,795
0~4세	-2,353	-4,754	-2.3%	1,902	0.9%	499	0.2%	1,623	81	193
5~9세	89	-503	-0.2%	145	0.1%	447	0.2%	141	-83	87
10~14세	-235	-1	0.0%	-464	-0.2%	230	0.1%	-248	-111	-105
15~19세	-1,584	1,433	0.7%	-7,433	-3.6%	4,406	2.1%	-6,019	-127	-12,87
20~24세	-5,385	12,732	6.2%	-28,595	-13.9%	10,579	5.1%	-21,180	-1,127	-6,388
25~29세	-59,125	-13,037	-6.3%	-36,047	-17.5%	-10,041	-4.9%	-22,232	-1,560	-12,176
30~34세	-33,509	-17,545	-8.5%	-8,315	-4.0%	-7,549	-3.7%	-2,977	-627	-4,711

6

부산시 인구 추이 변화(2011-2020)

부산지역 인구 이동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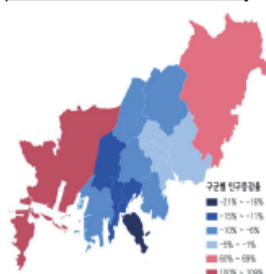
구분	순이동자	경남		수도권		기타지역		참고(수도권 도시별)		
		순이동자	비중	순이동자	비중	순이동자	비중	서울	인천	경기
전체연령	-206,085	-93,216	-45.2%	-85,318	-41.4%	-27,551	-13.4%	-49,653	-4,770	-30,795
35~39세	-13,196	-9,673	-4.7%	-194	-0.1%	-3,329	-1.6%	1,054	-251	-997
40~44세	-7,907	-5,640	-2.7%	241	0.1%	-2,508	-1.2%	728	-169	-318
45~49세	-10,770	-7,732	-3.8%	-432	-0.2%	-2,606	-1.3%	-218	-50	-164
50~54세	-15,981	-11,275	-5.5%	-711	-0.3%	-3,995	-1.9%	-219	-153	-339
55~59세	-20,116	-13,431	-6.5%	-1,165	-0.6%	-5,520	-2.7%	16	-7.4	-1,107
60~64세	-17,153	-11,025	-5.3%	-1,385	-0.7%	-4,743	-2.3%	-94	-157	-1,134
65세~	-18,860	-12,775	-6.2%	-2,765	-1.3%	-3,320	-1.6%	-42	-362	-2,361

7

부산시 인구 추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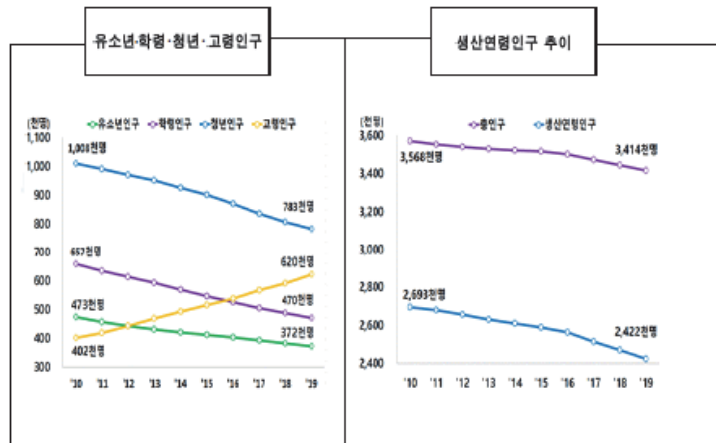
지역별 인구증감 현황 대비
'증감현황'

구분	지역
-21% ~ -16%	영도구(-21%)
-15% ~ -11%	중구(-15%), 사상구(-15%), 서구(-14%), 동구(-13%)
-10% ~ -6%	사하구(-11%), 부산진구(-10%), 남구(-8%), 북구(-7%), 금정구(-6%)
-5% ~ -1%	해운대구(-5%), 동래구(-4%), 연제구(-2%), 수영구(-1%)
증가지역	기장군(61%), 강서구(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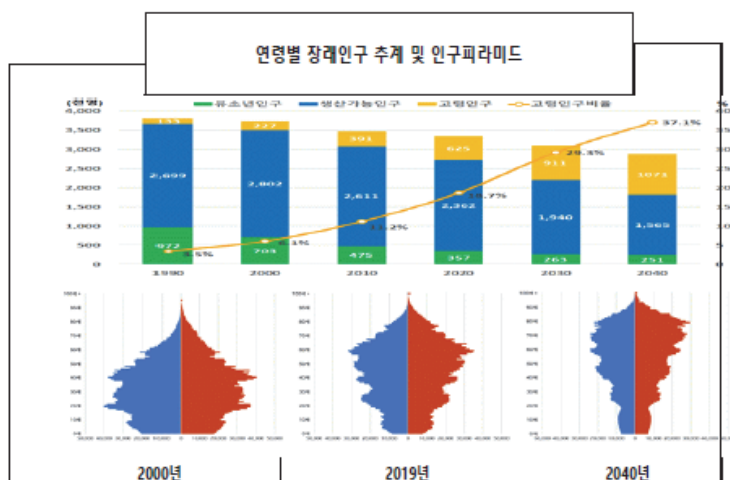
8

유소년·학령·청년·생산연령인구 급감, 빠른 고령화



9

부산지역 인구 추계(~2040)



10

부산시 인구관련 사업 현황									
1) 부산시 인구관련 정책 사업 »총 4조 7,333억 원 규모 (21. 본예산 중 13조 3천억원 중 35.6% 규모)									
구분	계	일자리		저출산 대응		초고령 대응		정주환경 개선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예산(억원)	4조 7,339	3,287	7%	1조 6,031	34%	1조8,791	40%	9,230	19%
사업수	972건	334건		137건		71건		430건	

11

부산시 인구관련 사업 현황

인구규모

2) 부산시 인구 대상별 소요예산('21. 생애주기별 시민예산 현황)

구 분	합계	영유아 (0-5세)	아동청소년 (6-19세)	청년 (20-34세)	중장년 (35-64세)	노년 (65세-)
인 구(만명)	341	13(4%)	39(12%)	63(18%)	164(48%)	62(18%)
예 산(억원)	51,504	6,806(13%)	8,265(16%)	4,365(8%)	11,003(21%)	21,066(41%)
연간 1인당 지원예산(만원)		523	212	69	67	340
*중장년기준 예산비교		7.8배	3.2배	1.0배	1.0배	5.1배

12

12

부산시 인구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 과밀부산

인구밀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최소화와 아울러 삶의 질 개선 등 긍정적 측면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 재정립

■ 적정인구

저성장·인구감소시대 대응 지속발전 가능한 부산 구현을 위해 도시 수용력을 고려한 적정 인구의 개발용량 파악 및 이에 따른 도시관리방향 모색

- 추진내용 환경생태·시설·서비스 수용력 현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한 수용가능 인구 개발용량을 산정하고 도시수용력을 고려한 도시관리방향 도출

13

부산시 인구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 균형인구: 20·30세대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 및 고령화 심화로 인한 도시활력 저하에 대응하여 균형인구 관점에서 인구정책 추진

(연령대별 균형인구) 인구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유소년·청년층 회복에 정책 중점

(개방적인 균형인구) 국내외 인구가동성이 커지고 있어 해외이주자 수용정책 적극 전개

(생애주기별 균형정책) 생애주기·분야별 예산지원 현황을 분석, 균형 잡힌 지원정책 전개

■ 발전전략 전환: 장기간 지속된 인구감소 추세는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래 인구변화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 모색

(중전) 인구증가를 전제(도시계획인구 410만명)로 양적성장·인프라 지향, 분산·확장형 정책 추진

(향후)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를 전제로 삶의 질 지향, 스마트 축소형·통합형 정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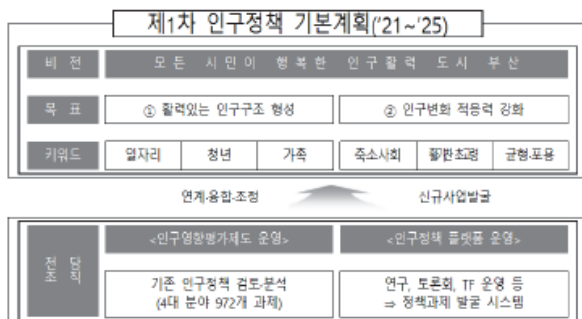
14

부산시 인구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 새로운 정책과제: 학령인구 감소, 빠른 고령화, 1인가구 및 외국인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생되는 정책과제 및 행정수요에 능동 대처
(공간) 도심 유희시설(카페, 공공시설, 산업시설 등)을 도심지역의 재활력거점으로 조성
(사회) 1인가구의 복지·안전망 강화(고령·여성 중점), 외국인 지역 정착 및 경제활동 지원
(산업) 고령화 대응 스마트헬스케어/고령친화식품산업 육성, 1인가구 대응 공유경제 활성화

15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 계획



16

부산시 초고령사회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30년	2045년
전국	15.7%	16.5%	17.3%	25.0%	37.0%
부산	18.7%	19.8%	20.9%	29.3%	39.7%



17

부산시 초고령사회 비전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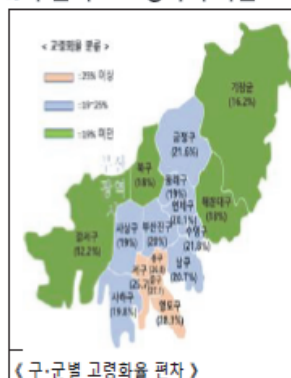
초고령사회 비전 주요 내용



19

초고령사회 비전 주요 내용

4. 부산시 초고령사회 비전



〈 구·구경 고령화를 편차 〉

유형	분류 (고령자율)	특화 사업
① 건강·돌봄 특화형	25% 이상 (여론 동요도)	·분산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노인가사활동서비스 시범실시 ·간접지출비 감경제가 확대 ·장여가는 이음로터서비스 사업
② 공동체 조성 특화형	15%~25% (공동체·공동 수용인식도 사상/사후)	·고령친화(정·문·도) 대안가족 사업 확대 실시 ·노년교실 주·간접형 지원사업 ·장모담 커뮤니티 클럽화 사업 사업
③ 여가·문화 특화형	15% 미만 (문화·여가 해소도·특수)	·여민선을 위한 문화활동지원금 조성 ·선비세움 평생학습 확대, 노인 건강 가이도 사업

《 구·군별 특화사업 추진 》

20

초고령사회 비전 주요 내용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점 추진사업

- (원스톱 통합돌봄 창구) 부산형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
 - 전체 205개 읍면동사무소에 '통합돌봄창구' 설치 ▶ '21년 106개소→'25년 205개
 - 신중년, 노인 등 전문퇴직자 채용(장노년일자리사업 연계)
 - 통합돌봄 서비스의 원스톱 상담·접수·안내 → 마을건강센터, 복지관 등 연계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모빌리티 기반 헬스케어 유연의료서비스
 - 고령자 일일·의료접근성 취약지역(요양시설, 경로당 등) ▶ '21년 시범 → '22년 플랫폼 개발 및 확대
 - 이동차량(의료버스)을 활용한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 (부산노인 건강지원 포인트 사업) 부산노인 실버앱 구축
 - 위치기반서비스, 정보제공, 건강보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앱호출) 집 근처 노인복지시설 등 검색 → 고령자적합 경로 안내 → 선택장소이동(안내) → 보상 지원 포인트 지급(동백전)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르신 건강증진
 - (교육연계) 어르신 정보화 교육 확대 연계 사용법 교육



21

사업 추진상의 한계

■ 과도한 중앙정부 위주의 사업 실행

-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 대도시 중 가장 먼저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된 곳도 상위 3~5개 지역이나 있지만 대부분의 복지 사업이 중앙정부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 시에서는 매칭에 급급한 상황임

■ 국비 매칭 위주의 사업으로 다른 사업 수행 한계

- 부산지역내에서도 고령화가 다르게 진행되는 등 지역의 여러 특성이 존재,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 각 지자체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국비가 있는 사업 이외는 서울이외 자체 사업을 만들어 수행할 수 없음

22

사업 추진상의 한계

■ 지역통합돌봄 시범사업의 한계

- 향후 정부는 2025년 전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시기에 지역통합돌봄을 확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음.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로 지역별 격차가 심화하여 시비와 구군 매칭(1억)으로 사업을 시행, 국가 시범사업간 서비스내용, 품질, 인프라 등에 큰 격차가 나타남

■ 국비 매칭 위주의 사업으로 다른 사업 수행 한계

- 부산지역내에서도 고령화가 다르게 진행되는 등 지역의 여러 특성이 존재,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 각 지자체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국비가 있는 사업 이외는 서울시외 자체 사업을 만들어 수행할 수 없음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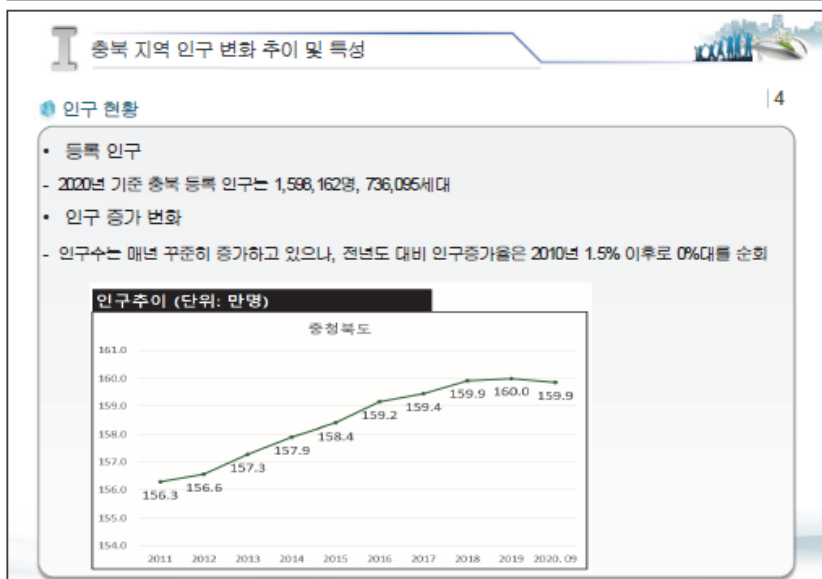
감 사 합 니 다.

24

5. 충북연구원



Contents	
I. 충북 지역 인구 변화 추이 및 특성	03
II. 현안 및 쟁점	10
III. 향후 정책 과제	17



I 총북 지역 인구 변화 추이 및 특성



1 인구 현황

| 5

• 인구 자연감소와 합계출산율

- 2018년 사망자는 1만 1,334명으로 출생자 1만 586명을 앞질렀음(데드크로스 현상)
- 총북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0.84명보다 높은 0.98명이었으나 10년 이상 감소세를 보임
- > 인구 순전입이 미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망자 증가로 전체 지역인구는 2018년 이후 감소세

I 총북 지역 인구 변화 추이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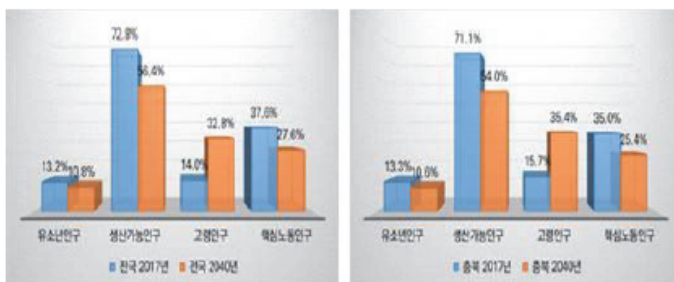


1 2040년 인구 구조 전망

| 6

• 인구 구조 전망

- 총북의 인구 구조는 2017년 8월 말 유소년인구 13.3%, 생산가능인구 71.1%, 고령인구 15.7%에서 2040년에는 유소년인구 10.6%, 생산가능인구 54.0%, 고령인구 35.4%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됨



I 충북 지역 인구 변화 추이 및 특성

| 7

❶ 시·군별 인구 현황 및 분포

- **등록 인구**
 - 2020년 기준 도청 소재지인 청주시의 등록 인구는 843,782명으로 370,694세대가 거주하며 인구밀도는 887%로 나타남
 - 전체 군 지역 중 혁신도시가 입주하고 있는 음성군(94,179명)과 진천군(81,949명)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시·군별 고령화율**
 - 고령인구 비율은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을 제외한 5개 군지역이 매우 높음
 - 2020년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괴산군(34.4%), 그 다음으로 보은군(34.4%), 영동군(31.5%), 단양군(30.7%), 옥천군(29.7%) 순임
- **연령별 인구분포**
 - 2018년 전국 평균 연령은 41.8세, 충북의 평균연령은 42.4세로 전국 평균연령 대비 0.6세 높음
 - 충북의 생산활동인구의 15~64세 인구는 1,116,894명, 비생산활동 인구 중 15세 미만 인구는 197,718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83,550명으로 나타남

I 충북 지역 인구변화 추이 및 특성

| 8

❶ 지역 인구 이동

- **연도별**
 -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충청북도로 전입한 인구는 5,473,347명, 전출한 인구는 5,243,420명으로 229,927명이 순전입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까지는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를 초과하였으나,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인구 순유입세를 유지, 단 최근 증가폭은 미세
- **성별**
 - 1998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은 18,254명의 순전입, 여성은 4,409명의 순전출이 있었음
- **연령별**
 -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순유출의 경우 15~19세와 20~29세에서 일어났으며, 순유입은 50~59세, 40~49세와 30~39세의 순으로 나타남

❷ 지역별 순이동 변화

-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충청북도의 지역별 순이동 변화는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로의 인구유출 발생
- 기관별로 보면 2010년 이전에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많았으나, 2010년 이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등 인근지역으로의 유출이 많았음

I 충북 지역 인구 변화 추이 및 특성



9

지역 인구 동태를 바탕으로 한 SWOT 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 지역별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식 강화 - 국토의 중심인 입지조건과 자연·역사·문화 자원 우수	- 지역공동체 활력 및 지역 역량 부족 - 청년층 인구 유입 정책의 부재 - 농촌에 대한 투자 자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 농촌 지역의 생활서비스 여건이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기회(O) ⇒ 포착	위험(T) ⇒ 제거
- 수도권 인접성과 교통개선 - 균형발전(지역분권) 강화 추세와 지역별 인구정책 추진 조건 조성	- 농촌지역 저출산 경향이 지속(낮은 출산율, 청년 및 기임여성 인구 유출되고 있음) - 고령화(생산가능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활력 저하 - 도농소속격차 확대 및 농업(농업인구) 비용의 감소 - 농촌 과소화 속에서 보육, 교육, 의료 서비스 공급이 약화되고 있음

■ 약점

- 청년층 인구 유입 정책의 부재
- 기존 인구유입 연방이 40대 이후 중장년층의 귀농 귀촌에 치우쳐 있음
- 청년층의 농촌지역 정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농촌에 대한 투자 자원 분야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기존의 농촌 종합적인 정책적 대응 관련 추진체계가 부재한 상황
- 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농촌에 대한 투자 자원 관련 분야 전문인력 부족

II 현안 및 쟁점



II

현안 및 쟁점



11

청년층 역외 유출

• 현황

- 2021년 7월 14일 '1회 충북인구포럼' 발표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북의 청년인구(15~39세)는 47만 341명으로 전체의 29.4% 차지
- 2011년 54만 1,445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의 34.6%를 차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7만 1,104명, 13.1%가 줄었음
- 일자리를 찾거나 학업 등 이유로 수도권으로 유출이 점점 더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II

현안 및 쟁점



12

청년층 역외 유출

• 지역별

- 진천은 청년인구 비중이 2011년 2만 347명에서 2020년 2만 4,588명으로 도내에서 유일 증가
- 청주는 2011년 25만 9,057명에서 2020년 28만 2,196명으로 늘었으나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증가로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39.1%에서 33.4%로 줄었음
- 같은 기간에 충주 6만 8,774명→5만 7,486명, 제천 4만 3,456명→3만 3,933명, 음성 2만 8,730명→2만 3,163명으로 줄었음
-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보은 17.7%, 괴산 18.1%, 단양 18.4% 순으로 그만큼 이 지역 고령화가 심각함을 의미함
- >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육성시 지방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모방한 팍푹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아닌 지역적 특성을 살린 정주환경 개발이 필요
- > 이는 지역이 가진 문화, 역사, 지리적 환경 등을 최대한 살린 정주여건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주지역으로 남을 것임

II

현안 및 쟁점



13

청년층 역외 유출

- 지방대학 위기 대응 논의 중
- 지방대학 위기는 청년 인구의 수도권으로 순유출을 의미
- 원인
 - ▲대학입학 자원의 감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격차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문제점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한계점 등임
- 제시된 해법
 -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 우수 지역인재 육성 → 지역 정주여건 개선 →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 지역발전 → 지역으로 우수인재 유입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의 선순환 체계 확립임
 - ▶ 법제도적 차원에서
 - √ 권역별 대학정원 관리화(쿼터제) √ 지자체 대학 간 공동 오너십(지역단위 거버넌스 구축)
 - √ 지역내 대학 역할 분담 모델 구축(연구중심대학, 학부중심대학, 지역교육대학 등)
 - √ 중앙정부-지방정부-지방대학 간 협업 활성화 및 상생 유도 법 개정 등 요구

II

현안 및 쟁점



14

1인 가구, 특히 독거노인 지원 및 보호

- 1인 가구 변화(제1차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 2025년) 수립연구)
- 2019년 충북 전체 가구는 651천 가구 중 1인 가구는 212천 가구로 약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176천 가구 대비 20.5% 증가한 것임
-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등은 취업 관련,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 군 지역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은 고령화와 밀접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는 만혼, 이혼, 비혼 등 핵가족화와 기대수명의 연장이 원인으로 판단됨
- 독거노인
 - 2019년 12월 기준 충북 독거노인은 82,274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273,425명 대비 약 30.09%에 해당하는 수치임
 - 성별로는 여성 독거노인이 57,007명으로 남성 독거노인 25,267명에 비해 약 2배를 넘는 수치
- > 출생 노인가구 증가에 따른 우울, 자살, 고독사, 무연고자 장례문제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돌봄 및 생명존중 관계망 구축 및 공동생활가정 확대 필요

II

현안 및 쟁점



15

농촌지역 고령화 대응

고령화율

- 2019년 고령화율은 보은 33.1%, 괴산 32.0%, 영동 30.0%, 단양 29.1%, 옥천 28.5%, 제천 20.6%, 음성 20.1% 순으로 나타남

-> 농촌 지역일수록 유소년 인구에 비해 노년인구의 비율이 높음

장수도

- 장수도(65세 이상 인구 대비 85세 이상 인구 비율)는 2010년 보은군 8.1%에서 2019년 13.8%로 가장 높음
- 2010년에 시·군별 장수도는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충주시, 청주시, 음성군 순이며, 2019년에는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순으로 나타남
- 대응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 충족(노인일자리, 자원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예방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 구축, 재가 중심의 요양서비스로 전환, 복지융합, 치매예방기기 및 AI인공지능기기개발 및 보급 등을 제안할 수 있음

II

현안 및 쟁점



16

인구 불균형 구조 개선

수도권 집중 현상 개선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인구는 2020년 11월 기준 2,604만 300명으로 전년 2,588만 300명 대비 0.6%(15만 1,000명) 증가해 전체인구의 (5,177만 9,000명) 50.2%를 차지
-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 대응 행안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그 중 충북은 6곳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제천, 단양이 해당

청주와 비청주권 인구 불균형 구조

수도권과 비수도권처럼 청주와 비청주권의 인구 불균형 구조 개선이 필요

- 2020년 기준 청주시의 등록인구수가 843,782명으로 도 전체 인구 1,568,162명 대비 약 53%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밀도도 높음



III

향후 정책 과제

18

④ 영역별 추진 과제

〈표 1〉 충북 저출산고령화 관련 향후 정책사업 제안

분류	사업
출산율 제고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산모도우미제 도입(정부 건의 사업)
(농촌) 돌봄 서비스	■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확대 ■ ICT교육을 통한 경제·사회참여 강화 ■ 무연고자 공영장례(정부 건의 사업)
도농상생	■ 생산적 농촌 일손 봉사 확대 지원 ■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구축 ■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도내 인구 균형발전	■ 청주와 비청주권의 인구 불균형 구조 개선



향후 정책 과제



19

출산을 제고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추진 목표 : 고용안정을 통한 출산을 증진
 - 추진 배경 및 목적
 - 고용불안은 젊은 층이 당연히 결혼 및 임신을 미루거나 꺼리게 됨
 -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장려금, 주거비 보조 및 신혼주택 제공, 양육비 보조 같은 지원정책 보다는 기본적으로 고용안정에 집중하여야 함
 - 사업 추진 방안
 - 도내 비정규직 실태 파악과 함께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비정규직의 실적이나 무·유급 휴직 상황 조사
 - 지자체 내에서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우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현



향후 정책 과제



20

출산을 제고

- 산모도우미제 도입(정부 건의 사업)
 - 추진 목표 : 신생아 돌봄 지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 출산 후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을 지원해 줄 사람이 핵가족화로 점점 없어지는 상황
 -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출산 및 신생아 돌봄을 지원할 필요성 대두
 - 사업 추진 방안
 - 국가의 의료보험에서 산모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모유수유, 아이 목욕 및 건강관리를 체크하고 돌봄



향후 정책 과제



21

❶ (농촌) 돌봄 서비스

■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확대

- 추진 목표 : 사·군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 추진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감염증과 돌봄인력의 부족으로 정정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히 노년층을 위해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소통을 도와야 함
 - 코로나19로 인한 WHO 국제적 공중비상사태 선포 이후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량 급증
- 사업 추진 방안
 - 민·관협력에 기반한 예로 SK텔레콤의 행복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사업 추진
 - 지자체(대상자 선정 지원), 사회적 기업(콜센터데이터 분석 및 공유, ICT케어 매니저 고용 및 관리), 대기업(SK텔레콤의 기술지원, 사업의 효과성 검토) 협력
 - 도 차원에서 도내 지자체에 전면 보급을 위한 지원(예로 경남 참조)



향후 정책 과제



22

❶ (농촌) 돌봄 서비스

■ ICT교육을 통한 경제·사회참여 강화

- 추진 목표 : 고령인력 디지털 환경적응 역량 제고 및 격차 해소
- 추진 배경 및 목적
 - 디지털 기반 사회가 되면서 고령자 계층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 취약하여 활용도가 떨어져 사회적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강화를 통해 디지털 격차 완화 노력이 요구됨
- 사업 추진 방안
 - 지역대학, 공공기관과 연계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전개
 - 스마트 기기 및 공공 키오스크 사용법, SNS 활용법 등
 - 정부의 디지털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운영
 - 디지털 정보교육 강사 육성(복지관 및 총북평생교육진흥원과도 연계)



향후 정책 과제



23

(농촌) 돌봄 서비스

■ 무연고자 공영장례(정부 건의 사업)

- 추진 목표 : 존엄한 생의 마무리 및 사후 복지 구현
- 추진 배경 및 목적
 - 빈곤, 가족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 증가
 - 무연고 사망시 존엄한 의례없이 화장하고 연고자의 시신 포기·무빈소 장례 확산
 - 무연고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데 전국 지자체 245곳 중 공영장례 지원은 단 74곳이며 지원법위도 지자체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2021 국감자료)
 - 무연고사 지원 합리화 및 저소득층 사망시 감소하고 품격있는 장례 지원 필요
- 사업 추진 방안
 - 정부 차원에서 무연고 장례를 공적 영역에서 보장하고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
 - 정부는 지자체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영장례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제도화



향후 정책 과제



24

도농상생

■ 생산적 농촌 일손 봉사 확대 지원

- 추진 목표 : 생산적 일손 봉사 총괄 시스템 구축 운영
- 추진 배경 및 목적
 - 생산적 일손봉사는 지난 2016년 7월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중소기업에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업
 -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극심한 일손부족을 겪는 농가와 중소기업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임
 - 이 사업은 노인뿐만 아니라 직장인, 대학생까지 경제적 목적과 더불어 사회적 나눔의 의미도 가짐
- 사업 추진 방안
 - 총괄형 생산적 일손봉사 확대운영, 노인 등 유류 인력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 일손 봉사에 50세 이상 연령별 일자리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를 타워 운영



향후 정책 과제



25

도농상생

■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구축

- 추진 목표 : 도시청년의 농촌 정착
- 추진 배경 및 목적
 - 고향화로 농촌에 인력 부족, 반면 도시에서는 청년층 일자리가 부족하므로 도시 청년층 우수 인력들에게 농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
- 사업 추진 방안
 - 선도농업인, 농가·농업법인 등으로 구성된 초보농부 농업·농촌 진입 플랫폼 조성
 - 농촌 연고가 없는 도시청년이 농업·농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실습 가능한 농장들로 구성하여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훈련 기반 조성
 - 사업대상은 만18~40세 농산업 창업(예정)자와 도시청년 농업농촌캠프 참석자, 향농에 관심 있는 도시 청년 등임



향후 정책 과제



26

도농상생

■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 사업 목표 : 청년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회 제공
- 추진 배경 및 목적
 -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영농정착을 돕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산업 분야에 젊은 신규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임
- 선발된 청년들(만18~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은 2019년 5월 말부터 법인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선도 농업법인에서 생산실무, 기획, 온라인 마케팅 등 담당
- 인건비 월200만원(지원 90%, 업체부담 10%)과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복리후생비(건강검진비, 도+시군비)와 2년 뒤 향농하면 1,000만원을 지원 받음
- 또한, 도는 생산에서부터 제조·가공, 유통 등 전 단계에 걸쳐 실무를 익히고 향농 역할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킹 및 컨설팅, 교육도 함께 지원하고 있음



향후 정책 과제



27

도농상생

■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 사업내용

- 경북도처럼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를 청주, 충주, 제천의 도농복합지역부터 참여기관 및 업체 선정, 이후 청년 선발
- 충북의 도농복합지역 거주 청년들은 자가에서 출퇴근이 용이하므로 상당한 장점이 있음
- 이후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한 후 도내 전 농촌지역으로 사업 확대



향후 정책 과제



28

도내 인구 균형 발전

■ 청주와 비청주권의 인구 불균형 구조 개선

• 사업목표 : 충북 군의 인구 축소지역 전략 모색

• 추진 배경 및 목적

- 인구와 산업, 개발 수요가 청주권역에 집중 돼 불균형 문제 대두
- 수도권, 비수도권 불균형 발전에 대한 비판은 많지만 정작 도내 청주와 비청주권 간의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지적이 적음
- 효율적인 인구 유입정책 차원에서 우선 정부 주요기관의 지방 이전처럼 청주와 비청주권 간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

• 사업 내용

-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도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충북도청 및 교육청 산하 기관의 도내 다른 시군으로 이전 추진

참고문헌



29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행복커뮤니티 사업 1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의 현재와 과제”, 2020.9.22
- 제1차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연구
- 충청북도, 농촌인구 감소대책 중점과제 발굴 연구용역, 2018.3.
- 충청북도, 제 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 충청북도,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 연구, 2021.7.
- 충청비즈, 지방대학·시민단체 ‘입 맞춘’ “지방대학 위기는 지역 위기 ... 대학·지자체·시민사회단체·지역사회 공동 대응”, 2021.9.2 “<http://www.cbiz.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7>”
- 코리아방송, 경남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지역관행뉴딜 공모 최종 선정, 2021.7.19.
<http://www.hnlife.kr/news/articlePrint.html?idxno=99697>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https://www.chungbuk.go.kr/stat/selectBbsNttList.do?bbsNo=182&key=1407>
-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감사합니다.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 01 지역 인구 변화의 주요 특성
- 02 지역 인구 변화 대응 정책 고찰
- 03 결론



01. 지역 인구 변화의 주요 특성

지역 인구 변화 주요 특성 1: 인구 감소 심화

▶ 지역 인구 규모 감소

- 2000-2001년(관측기간 초기), 2019-2020년(최근) 시군구 단위 연평균 인구증감율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관측기간 초기 수도권 지역은 증가하는 지역이 더 많았으나 최근 감소하는 지역이 더 많아졌으며, 비수도권은 감소하는 지역 비중이 초기에 비하여 더 많아짐.

-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이 많아졌으며,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지역 비중은 수도권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구 증감 현황

2000-2001년				2019-2020년			
	인구증가	인구감소	소계		인구증가	인구감소	소계
수도권	41(62.12)	25(37.88)	66(100.00)	수도권	30(45.45)	36(54.55)	66(100.00)
비수도권	45(27.78)	117(72.22)	162(100.00)	비수도권	37(22.84)	125(77.16)	162(100.00)
소계	86(37.72)	142(62.28)	228(100.00)	소계	67(29.39)	161(70.61)	228(100.00)

자료: 통계청(2021a).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인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지역 인구 변화 주요 특성 1: 인구 감소 심화

▶ 지역 인구 규모 감소

- 2000~2001년(관측기간 초기), 2019~2020년(최근) 시군구 단위 연평균 인구증감율의 공간적 분포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음. 즉, 서울 주변 수도권, 지방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 감소 특성이 관측되고 있음.

인구 증감 현황

2000-2001년



2019-2020년



자료: 통계청(2021a).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인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5

지역 인구 변화 주요 특성 1: 인구 감소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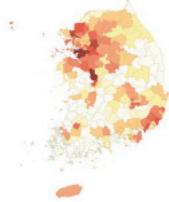
▶ 지역 인구 규모 감소

- 2000~2020년 연평균 인구증감율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증감 양상이 명확하게 구분(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인구증가 양상,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양상이 뚜렷하게 관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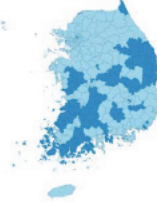
- 2000~2020년 인구 규모 20% 이상 감소 지역의 대부분은 비수도권에 위치

인구 증감 현황

2000-2020년 연평균 인구 증감율(%) 분포



2000-2020년 인구 규모 20% 이상 감소 지역



자료: 통계청(2021a).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인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6

지역 인구 변화 주요 특성 2: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사회적 변화의 큰 기여도

- ▶ 228개 지역 인구 규모는 2000~2020년 간 평균 약 16,733명 증가하였고, 자연적으로는 약 16,894명 증가한 반면, 사회적으로는 약 16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2000~2020년 간 인구 규모가 감소한 지역은 평균 약 23,755명 감소하였고, 자연적으로는 8,290명 증가한 반면, 사회적으로는 약 32,04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지역	2020년 인구 규모(명)	인구증감률(%)	인구규모변화 (명)	자연적변화(명)	사회적변화(명)	자연적변화 기여도(%)	사회적변화 기여도(%)
전국 평균 (총 228개 지역)	225,216	5.15	16,732.72	16,893.63	-160.93	51.99	48.01
인구증감률(-) 지역 (총 153개 지역)	159,895	-17.52	-23,754.52	8,290.13	32,044.65	-39.35	139.35

자료: 통계청(2021a),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방인구 인출자료; 통계청(2021b), 출생아수(시도/시/군/구) 인출자료; 통계청(2021c), 시군구/성/연령(5세)별 사망자수(1997~), 사망률(1998~)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7

지역 인구 변화 주요 특성 2: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사회적 변화의 큰 기여도

- ▶ 지역 인구 변화를 기간별로 살펴본 결과, 인구 감소 지역은 1기간(2000~2009년), 2기간(2010~2020년) 공히 사회적 감소가 크게 나타남.
- ▶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지역은 1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감소가 크게, 2기간에는 자연적 감소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특성은 1기간의 사회적 감소에 대한 젊은층의 기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개연성
1기간 젊은층의 유출 → 2기간 출생아수 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수 증가
- ▶ 인구의 사회적 감소에 대한 대응 정책의 낮은 실효성? 대응 정책 미비? 인구 규모의 감소에 따른 유출 인구 규모의 감소 :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1기간 사회적 감소의 큰 기여도와 2기간 사회적 감소의 작은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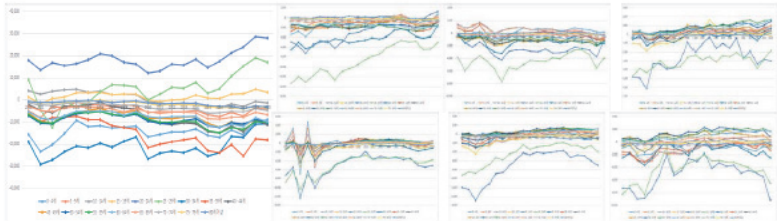
지역	1기간 인구 규모 변화 (명)	2기간 인구 규모 변화(명)	1기간 자연적 변화(명)	2기간 자연적 변화(명)	1기간 사회적 변화(명)	2기간 사회적 변화(명)
전국 평균 (총 228개 지역)	9309.79	6444.61	10985.19	5908.44	-1675.40	536.22
인구증감률(-) 지역 (총 153개 지역)	-9962.97	-12969.10	6666.61	1623.52	-16629.58	-14592.54
인구증감률 > -20% 이상 지역 (총 64개 지역)	-14340.72	-8836.39	-720.36	-3054.75	-13620.36	-5781.53

자료: 통계청(2021a),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방인구 인출자료; 통계청(2021b), 출생아수(시도/시/군/구) 인출자료; 통계청(2021c), 시군구/성/연령(5세)별 사망자수(1997~), 사망률(1998~)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8

지역 인구 변화 주요 특성 3: 연령대별 사회적 변화 차이

-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연령대별 사회적 변화의 차이
- 같은 인구 감소 지역이라도, 서울과 비수도권의 연령대별 사회적 변화의 양상은 큰 차이를 보임. 즉, 서울(7.33% 감소)은 20대 연령층의 순유입 규모가 큰 반면, 부산(11.57% 감소)/대구(4.17% 감소)/강원(1.74% 감소)/전북(10.20% 감소)/전남(13.77% 감소)/경북(5.96% 감소)은 20대 연령층의 순유출 규모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큰 특성이 관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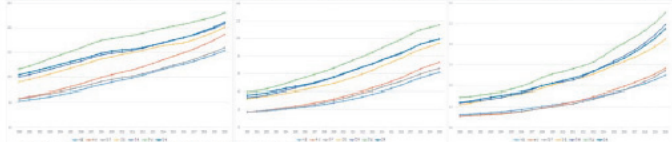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1d), 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수 인출자도를 활용하여 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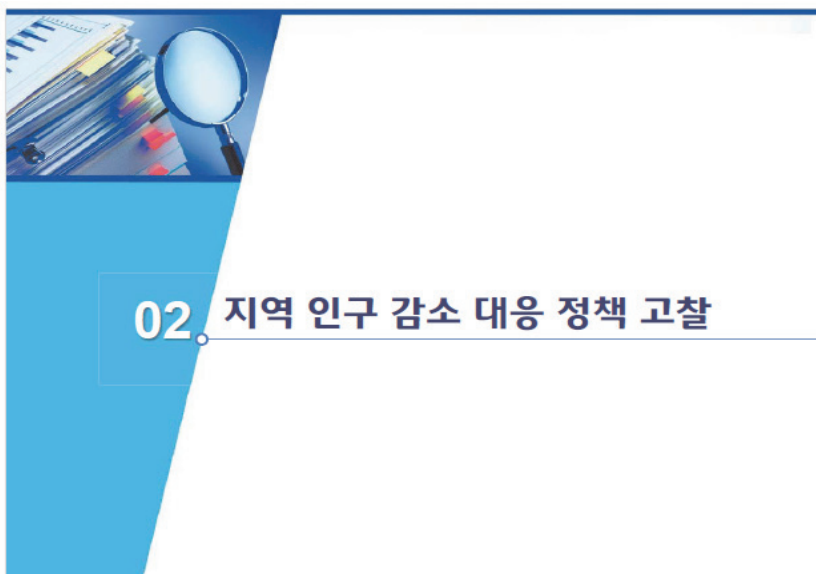
지역 인구 변화 주요 특성 4: 지역 간 초고령화 격차 심화

- ▶ 지역 간 초고령화 격차 심화
- 앞서 살펴본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의 65, 75, 85세 이상 인구비율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에 비하여 비수도권의 인구 고령화/초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비수도권은 인구 고령화특성이 관측기간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증가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남.

	65세 이상인구비율(%)			75세 이상인구비율(%)			85세 이상인구비율(%)		
	2000년(A)	2020년(B)	차이(B-A)	2000년(C)	2020년(D)	차이(D-C)	2000년(E)	2020년(F)	차이(F-E)
서울	5.28	15.41	10.12	1.77	6.16	4.39	0.32	1.25	0.93
부산	5.85	18.65	12.80	1.73	7.30	5.57	0.27	1.41	1.14
대구	5.75	16.00	10.25	1.78	6.60	4.82	0.29	1.36	1.07
강원	9.05	20.10	11.06	3.26	9.48	6.22	0.55	2.13	1.57
전북	10.06	20.86	10.80	3.38	9.92	6.55	0.60	2.47	1.87
전남	11.63	23.05	11.42	3.95	11.55	7.60	0.73	2.77	2.03
경북	10.50	21.15	10.64	3.62	9.93	6.31	0.62	2.38	1.76



자료: 통계청(2021a),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인출자도를 활용하여 지자 작성.



02.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정책 고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2018.12):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인구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내 최초로 지역 정책 패러다임이 언급됨. 이전까지는 세부사업별, 국지적으로 고려됨. 다만, 지역 인구 위기가 꽤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을 고려하면, 최근의 중앙정부 정책 대응 시기가 과연 적기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목표	삶의 질 향상	성장 동력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
추진영역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비전]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전략]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확대 [중점] 출생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중점]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중점] 2040년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 [중점]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중점] 활동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중점]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중점]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활동 환경 조성 [중점]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2번 학습	인구변화 적극 대비 [중점] 인구구조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 핵심분야 대역 마련 [중점] 지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인구 대응 사업 활성화
	추진체계 거버넌스 : 민간, 지역, 정부 협력체계 강화 서비스/재정 : 공공서비스 안정적 제공과 국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에서 재인용.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정책 추진 현황

▶ 관계부처합동 제2기 인구정책 TF(2020년) 추진정책 중 “지역공동화 선제 대응” 정책

-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통한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ICT 활용을 통한 농어촌 경쟁력 강화 및 교통인프라의 고령친화적 개편을 통한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③ 지역공동화 선제대응 (국토정책반)

- ① 빈집 실태 파악, 지자체 및 소유주의 빈집 정비·활용 유도방안 마련
- ② 생산·유통방식 고도화를 통한 농어업 경쟁력 제고, 청년 창업지원 확대
- ③ 고령친화적 교통인프라·서비스 구축, 고령자 특성 감안한 안전한 교통정책 수립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에서 재인용.

13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정책 추진 현황

▶ 관계부처합동 제3기 인구정책 TF(2021년) 추진정책 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정책

- 권역별 거점도시 집중 육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방지
- 혁신도시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확충

구조 변화

3. 지역소멸 선제 대응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 거점도시중심 발전전략 수립 ▶ 지방이전 인센티브 강화
인구과소지역 압축도시화 추진	▶ 도시기능 집약전략 수립 ▶ 이음도 낮은 인프라 정비 및 주변부 난개발 방지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 주변지역과의 상생기반 조성 ▶ 혁신도시 민간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자료: 관계부처합동(2021)에서 재인용.

14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정책 추진 현황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 2021년부터 추진)

- 지역 상생 기반 구축: 삶의 여건의 공간적 균형 회복, 세대 공존 지역사회 조성
- 지역청년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사회 활동 계좌제 도입 검토
- 인구감소지역 지역공모사업 우선 할당제 시범 도입 등 선별적 지원 강화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①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 ②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 ③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 ④ 지역상생 기반 구축
- ⑤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자료: 대한민국정부(2020)에서 재인용.

15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정책 추진 현황

▶ 2021년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 (서비스 집약화)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신규 대상 선정 및 비도시지역생활SOC 공급을 위한 '생활권 계획' 수립방안 마련
 - * 복합화 사업: 복수(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리모델링 포함)
- (선별적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공모사업(6개소 선정·지원) 및 공모사업 우대(할당제) 추진
- (지역정착 유도) 지역의 문화와 특성과 연계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청년마을 조성 등 지자체 주도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농어촌 등 주택 취득자 비과세 특례 요건 폐지 및 일몰 연장('20년 → '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500가구 지원

자료: 대한민국정부(2021, p.22)에서 재인용.

16



04. 결론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양극화, 격차 심화 완화 대응

-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필요

▶ 인구 감소 지역(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속적 관리 필요

- 지역 인구 감소 양상의 다양성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낙후지역으로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관리, 평가 체계 구축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추진될 필요
- 이러한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개발에 의한 지역경제성장 효과를 보다 극대화 하기 위하여 배후지(hinderland)의 특성 탐색과 지역 간 인구 이동의 패턴 등이 보다 면밀하게 선제적으로 관측되고 관리될 필요
- 2021. 10.18. 중앙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리 움직임은 낙후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움직임으로서 의미가 있음.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양극화, 격차 심화 완화 대응

- 중소기업, 대기업(생산시설) 지방세제 감면 필요

▶ 인구감소지역에의 기업(생산시설 포함) 입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세 감면 정책 추진

- 지방의 20대 연평균의 순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들 지역의 중소기업, 대기업(생산시설)의 지방세를 감면하여 기업 입지를 적극 장려할 필요
- 국비로 감면 부분을 충당하는 동시에, 기업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유입 유인 동기가 적극 장려될 수 있는 수준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함.
- 인구 감소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의 양적/질적 계고가 중요하며, 이는 우선적으로 기업/생산시설의 입지가 선결될 필요
- 청년층의 유입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업(중기업 이상)의 입지 유인이 보장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

19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양극화, 격차 심화 완화 대응

- 중앙정부, 지역 인구 정책 추진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 체계 구축 필요

▶ 다양한 세부사업별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 앞서 살펴본 관계부처합동 제3기 인구정책 TF(2021년) 추진정책은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상기 정책의 실효성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평가 체계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구축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자치분권 계획과 같은 중앙정부의 지역 인구 변화 대응 정책 및 각 지역별 인구 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성과평가 추진 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보임.
- 보다 내실 있는 지역 인구 변화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사후 평가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20